

# 2023

# 공공기관 현황편람



2023. 11.

# 2023 공공기관 현황편람

2023. 11.

기 획 재 정 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간사

우리나라는 지난 몇 년간 정부재정 중심의 다양한 정책 시행의 결과, 공공부문의 비대화 및 비효율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23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을 설정하고 경제·사회적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노력을 전 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의 비대화와 비효율성 개선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공공기관 효율화 및 재무건전성 확보와 함께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기관 역량 강화에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를 시작으로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자율·책임·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연이어 발표하며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적극적 동참을 독려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이행성과 발표 및 점검을 통해 공공기관의 동참 노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기준 347개의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전기, 가스, 도로·공항·항만, 금융, 의료·사회복지서비스, 4대보험, 안전관련 공적검사, R&D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기반 구축부터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 전반에 밀접하게 자리 잡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공기관이 본연의 고유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사업수행을 통한 성과가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방만함은 없는지 등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공공기관의 실질적 주인인 국민에게 공공기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국민에 의한 일상적 감시가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6년부터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alio.go.kr)’을 통해 개별 기관의 경영정보를 상세히 제공하는 한편 2019년부터는 ‘공공기관 혁신 포털(ALIOPUS+, www.alioplus.go.kr)’을 개통하여 국민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각종 고유 사업, 서비스 및 시설물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습니다.

『공공기관 현황편람』은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주요 정보를 국민이 보다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가 공동으로 발간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본 책자를 통해 공공기관 일반현황과 최근 시행된 주요 공공기관 관리 정책을 소개함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다양한 경영정보 중 국민의 관심이 높고 경영관리적 측면에서 유의미한 주요 정보를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민에 의한 공공기관 모니터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일반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분석 및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매년 『공공기관 현황편람』을 발간하고 지속적으로 내용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본 책자를 통하여 일반국민의 공공기관 주요 정보로의 접근 용이성과 경영정보의 비교가능성을 보다 제고하고 더 나아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확대시켜 공공기관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본 책자가 향후 공공기관 관리정책과 연구의 기초자료로써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목 차

## I 2023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1.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구분 제도	17
가. 공공기관의 지정	17
나. 공공기관의 유형 구분	18
다. 공공기관의 지정 절차	24
2. 2023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25
가. 2023년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구분 결과	25
나. 전년 대비 주요 변동내역	32
다. 2023년 공공기관 변동	36

## II 공공기관 관리정책 주요 동향

1.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41
가. 추진배경 및 전략	41
나. 예산효율화 계획	43
다. 복리후생 개선 계획	44
라. 자산효율화 계획	46
마.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48
바.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	56
2.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59
가. 추진배경 및 개편방향	59
나.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 개선	60

다. 공공기관 유형별 관리 차별화 ..... 63

라.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인사·조직관리 강화 ..... 75

마.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 강화 ..... 81

3. 민간 – 공공기관 협력 강화 ..... 95

가.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 95

나. 세부 분야별 추진방안 ..... 98

다. 분야별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 106

**Ⅲ 2023년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정보**

1. 일반현황 ..... 117

가.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분포 ..... 117

나. 공공기관 설립형태 ..... 121

다. 공공기관 자회사 현황 ..... 133

라. 공공기관의 지역별 분포 및 지역발전계획 주요 내용 ..... 136

2. 인력현황 ..... 147

가. 임직원 수 현황 ..... 147

나. 신규채용 현황 ..... 154

3. 재무현황 ..... 161

가. 총평 ..... 161

나. 부채 현황 ..... 164

다. 자산 현황 ..... 174

4. 손익현황 ..... 179

5. 보수수준 ..... 186

가. 직원 평균보수 수준 ..... 186

나. 상임임원 연봉 수준 ..... 189

다. 복리후생비 수준 .....	197
6. 외부 평가결과 .....	203
가.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	203
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227
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	255
라.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	279
참고문헌 .....	300
〈부록 1〉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현황 .....	307
〈부록 2〉 공공기관 일반현황 .....	313
〈부록 3〉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 현황 .....	376
〈부록 4〉 2022년도 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체계 .....	384

## 표 차례

<표 I-1> 공공기관 유형 구분 요건 .....	19
<표 I-2> 「공운법」상 공공기관 유형 구분 기준 .....	20
<표 I-3> 2023년 공공기관(347개, 2023년 1월 기준) .....	26
<표 I-4> 2023년 공공기관 유형별 기관 현황(2023년 1월 기준) .....	30
<표 I-5> 2023년 연구개발목적기관(71개) .....	30
<표 I-6> 공공기관 부설기관(분원) 현황(15개 기관, 2023년 4월 말 기준) .....	31
<표 I-7> 공공기관 유형별 기관 수 변동(2023년 1월 기준) .....	32
<표 I-8> 2023년 공공기관 지정 변동 내역(2023년 1월 기준) .....	34
<표 I-9> 2023년 신규 지정 공공기관 .....	35
<표 II-1>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추진 근거법령 .....	42
<표 II-2> 주요 공공기관 경상경비 절감계획 .....	44
<표 II-3>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내 공공기관 복리후생 근거 조항 .....	45
<표 II-4> 복리후생 혁신계획 최종 결과 .....	45
<표 II-5> 비핵심 부동산 정비대상 및 규모 .....	46
<표 II-6> 불요불급한 여타 정비대상 및 규모 .....	47
<표 II-7> 비핵심 및 부실 출자회사 지분 정비대상 및 규모 .....	47
<표 II-8> 청사효율화 계획 및 예상 수익 .....	48
<표 II-9> 공기업 정원 조정 계획안 .....	50
<표 II-10> 준정부기관 정원 조정 계획안 .....	52
<표 II-11> 기타공기업 정원 조정 계획안 .....	55
<표 II-12> 자산 효율화 유형별 세부 이행실적 .....	57
<표 II-13> 청사 효율화 이행실적 .....	58
<표 II-14>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유형별 이행률 .....	58
<표 II-15>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관련 「공운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개정사항 .....	61
<표 II-16> 「공운법」 시행령 제7조 개정에 따른 2023년 공공기관 유형변경 현황 .....	62

<표 II-17>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관련 「공운법」 시행령 제25조의3 개정사항 ...	64
<표 II-18>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4조 개정사항 .....	66
<표 II-19> '재무성과관리' 관련 평가지표 수정사항(2022년 수정 편람 기준) .....	69
<표 II-20> 공기업의 '재무예산성과' 관련 세부 평가지표 현황 .....	70
<표 II-21> 준정부기관 '재무예산성과' 관련 세부 평가지표 현황 .....	70
<표 II-22> 2022년도 연공성 완화 우수기관 사례 .....	80
<표 II-23>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 지침」 제5조 개정사항 .....	82
<표 II-24> ESG 공시 강화를 위한 공시항목 개정사항 .....	87
<표 II-25> 온실가스 배출 유형 .....	87
<표 II-26> 국정과제 및 공시여건 변화를 반영한 공시항목 개정사항 .....	89
<표 II-27> 불성실공시에 대한 별점기준 중 중과실 관련 개정사항 .....	91
<표 II-28> 우수공시·공시향상기관 지정요건 개정사항 .....	91
<표 II-29> 윤리경영 강화 관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 .....	93
<표 II-30>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세부 분야별 추진 방향 .....	98
<표 II-31> 주요 공공기관별 데이터 개방 현황 .....	98
<표 II-32> 공공기관 기술마켓 플랫폼 운영 현황 .....	103
<표 II-33> 주요 공공기관별 데이터 개방 활용사례 .....	107
<표 II-34> 무료나눔 특허·실용신안권(505건) 분류 .....	109
<표 II-35> 공공기관 보유 시설 개방 현황 .....	109
<표 II-36> 분야별 기술마켓 구매실적(2023년 1월 기준) .....	111
<표 III-1>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분포(2023년 1월 기준) .....	117
<표 III-2> 주무부처별 연구개발목적기관 분포(2023년 1월 기준) .....	120
<표 III-3> 2023년 주무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수 변동 내역 .....	120
<표 III-4> 「민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30개 기관) .....	124
<표 III-5>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27개 기관) .....	125
<표 III-6>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공공기관(64개 기관) .....	127
<표 III-7> 상장 공공기관 개요 .....	128
<표 III-8> 출자 주체별 보유지분 현황(2022년 12월 말 기준) .....	129
<표 III-9>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공공기관 구분(설립 근거법령 기준) .....	132

<표 III-10> 공공기관 자회사 현황(29개 기관) .....	135
<표 III-11> 지역별 이전대상 공공기관 분포(2023년 공공기관 기준) .....	137
<표 III-12> 지역별 공공기관 분포(2023년 4월 기준) .....	139
<표 III-13>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주요 수립 항목 .....	141
<표 III-14> 2022년 지역별 추진실적 .....	142
<표 III-15> 2023년 지역별 발전계획 .....	144
<표 III-16> 2023년 지역별 발전계획 주요 내용 .....	145
<표 III-17> 공공기관 임직원 및 국가행정공무원 현황(2018~2022년) .....	147
<표 III-18> 공공기관 유형별 임직원 수 현황(2018~2022년) .....	149
<표 III-19>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임직원 수 현황(2018~2022년) .....	150
<표 III-20> 2022년 인력증원 100명 이상인 기관 .....	152
<표 III-21> 2022년 인력 감원 기관 .....	153
<표 III-22>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2018~2022년) .....	154
<표 III-23> 신규채용 현황(2018~2022년) .....	155
<표 III-24>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신규채용 현황(2018~2022년) .....	156
<표 III-25> 2022년 신규채용 규모 상위 10개 기관 .....	158
<표 III-26> 2022년 신규채용 100명 이상 증가한 기관 .....	159
<표 III-27> 사회형평적 채용 규모(2018~2022년) .....	160
<표 III-28> 공공기관의 자산, 부채 및 자본 현황(2018~2022년) .....	162
<표 III-29> 부채 규모 및 부채비율 현황(2018~2022년) .....	165
<표 III-30>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부채 현황(2018~2022년) .....	171
<표 III-31> 2022년도 부채 규모 상위기관 현황 .....	173
<표 III-32>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현황(2018~2022년) .....	174
<표 III-33>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자산 현황(2018~2022년) .....	177
<표 III-34> 2022년도 자산 규모 상위기관 현황 .....	178
<표 III-35> 당기순이익 현황(2018~2022년) .....	180
<표 III-36> 2022년도 당기순이익·순손실 상위기관 현황 .....	182
<표 III-37> 정부 배당수입 추이(2019~2023년) .....	183
<표 III-38> 39개 정부출자기관의 정부배당 현황 .....	184
<표 III-39> 직원 평균보수 현황(2018~2022년, 정규직 기준) .....	187

<표 III-40> 상임임원 평균연봉 현황(2018~2022년) .....	191
<표 III-41> 기관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현황(2018~2022년) .....	198
<표 III-42> 복리후생비 주요 항목 현황(2018~2022년) .....	201
<표 III-43>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2018~2022년) .....	202
<표 III-44> 2022년도 경영실적 평가 대상기관(130개) .....	205
<표 III-45> 2022년도 평가유형별 종합등급 분포 .....	209
<표 III-46> 2022년도 종합등급별 기관 현황 .....	210
<표 III-47> 전년 대비 2022년도 평가등급 변동 요약 .....	214
<표 III-48> 전년 대비 2022년도 평가등급 변동 현황 .....	215
<표 III-49> 2022년도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평가등급 분포 .....	216
<표 III-50> 2022년도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평가등급 현황 .....	217
<표 III-51> 2022년도 기관 평가결과 현황(공기업 유형) .....	221
<표 III-52> 2022년도 기관 평가결과 현황(위탁집행형·기금관리형 유형) .....	222
<표 III-53> 2022년도 기관 평가결과 현황(중소형 유형) .....	224
<표 III-54> 2022년도 경영실적 평가 성과급 지급률(공기업·준정부기관) .....	227
<표 III-55> 「공운법」 제13조 .....	228
<표 III-56> PCSI 모델과 PCSI 2.0 모델 비교 .....	230
<표 III-57>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통합조사 경영실적평가 반영안 .....	232
<표 III-58> 사회적가치 기여도 조사와 국민인식도 조사 비교 .....	233
<표 III-59> 202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기관 현황 .....	235
<표 III-60> 202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수검기관(2023년 4월 기준) .....	236
<표 III-61> 2022년도 고객만족도 절대등급별 해당 기관 .....	239
<표 III-62> 202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요약(절대등급) .....	242
<표 III-63> 전년 대비 2022년도 고객만족도 절대등급 변동 비교 .....	244
<표 III-64> 전년 대비 2022년도 고객만족도 절대등급 변동 현황 .....	245
<표 III-65> 2022년도 고객만족도 절대등급 변동 해당 기관(전년 대비) .....	245
<표 III-66> 202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목표달성도 등급별 해당 기관 .....	248
<표 III-67> 202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요약(목표달성도) .....	250
<표 III-68> 전년 대비 2022년도 고객만족도 목표달성도 비교 .....	251
<표 III-69> 전년 대비 2022년도 고객만족도 목표달성도 등급 변동 해당 기관 ..	252

<표 III-70> 2022년도 절대등급과 목표달성도 비교 .....	254
<표 III-71> 20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유형별 대상기관 분포 .....	257
<표 III-72>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 .....	260
<표 III-73> 2022년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 .....	261
<표 III-74> 2022년도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 .....	262
<표 III-75> 20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 공공기관 분포 .....	263
<표 III-76> 2021년 측정대상 공공기관 중 2022년 변동사항이 있는 기관 .....	264
<표 III-77> 2022년도 유형별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 공공기관 .....	265
<표 III-78> 20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 유형 변경 현황 .....	267
<표 III-79> 2021년도 및 2022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비교 .....	269
<표 III-80> 2022년도 청렴도 평가 유형별 종합청렴도 등급 현황 .....	270
<표 III-81> 2022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	272
<표 III-82>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등급 현황 .....	273
<표 III-83>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의 2022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	275
<표 III-84>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의 2022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현황 .....	276
<표 III-85> 공공기관 통합공시항목 관련 「공운법」 조항 및 주요 변동내역 .....	280
<표 III-86> 공공기관 통합공시항목 구분(2023년 9월 기준) .....	282
<표 III-87>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별점 부과 체계 .....	287
<표 III-88> 통합공시 점검 별점에 따른 사후조치 .....	288
<표 III-89> 우수공시기관과 공시향상기관 지정 요건 및 사후조치 .....	289
<표 III-90> 2022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항목 .....	290
<표 III-91> 공공기관 통합공시 별점 현황(2014~2022년) .....	291
<표 III-92> 2022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	293
<표 III-93> 2022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별점 분포 현황 .....	295
<표 III-94>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의 2022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별점 분포 ..	296
<표 III-95> 2022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전년 대비 변동 현황 .....	298

## 그림 차례

[그림 I-1] 공공기관 지정 추이(2007~2023년) .....	25
[그림 II-1] 2008~2023년 공공기관 정원 추이 및 전망 .....	49
[그림 II-2] 출자·출연 계획 사전협의 절차 .....	66
[그림 II-3] 통합공시 분류체계 개편내용 .....	85
[그림 II-4]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 추진체계 .....	97
[그림 II-5] 민간 수요 맞춤형 개방 체계 .....	99
[그림 II-6] 협업데이터 공동생산 및 제공 체계 .....	100
[그림 III-1] 공공기관 설립형태 분포(설립 근거법령 기준) .....	122
[그림 III-2] 공공기관 임직원 및 국가행정공무원 현황(2018~2022년) .....	147
[그림 III-3] 사회형평적 채용 추이(2018~2022년) .....	160
[그림 III-4] 공공기관의 자본 및 부채 규모 추이(2018~2022년) .....	163
[그림 III-5] 공공기관의 자산, 부채 및 자본 증감액 추이(2019~2022년) .....	163
[그림 III-6] 부채 규모 추이(2018~2022년) .....	166
[그림 III-7] 부채 증감 추이(2019~2022년) .....	166
[그림 III-8] 부채비율 추이(2018~2022년) .....	167
[그림 III-9] 부채비율 증감 추이(2019~2022년) .....	167
[그림 III-10]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 현황(2018~2022년) .....	168
[그림 III-11]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 증가율 추이(2019~2022년) .....	169
[그림 III-12]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비율 현황(2018~2022년) .....	170
[그림 III-13]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비율 증감 추이(2019~2022년) .....	170
[그림 III-14]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현황(2018~2022년) .....	175
[그림 III-15]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증가율 추이(2019~2022년) .....	176
[그림 III-16] 공공기관 유형별 당기순이익 추이(2018~2022년) .....	180
[그림 III-17] 직원 평균보수 추이(2018~2022년, 정규직 기준) .....	187

[그림 III-18] 직원 평균보수 증가율 추이(2019~2022년, 정규직 기준) ..... 189

[그림 III-19] 기관장(상임) 평균연봉 추이(2018~2022년) ..... 194

[그림 III-20] 상임이사 평균연봉 추이(2018~2022년) ..... 194

[그림 III-21] 상임감사 평균연봉 추이(2018~2022년) ..... 195

[그림 III-22] 기관장(상임) 평균연봉 증감률(2019~2022년) ..... 196

[그림 III-23] 상임이사 평균연봉 증감률(2019~2022년) ..... 196

[그림 III-24] 상임감사 평균연봉 증감률(2019~2022년) ..... 197

[그림 III-25]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현황(2018~2022년, 무상지원 기준) ..... 199

[그림 III-26]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증감률 추이(2019~2022년, 무상지원 기준) · 200

[그림 III-27]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2018~2022년) ..... 202

[그림 III-28] 전년 대비 2022년도 평가등급별 분포 ..... 211

[그림 III-29] 최근 3년 평균 대비 2022년도 평가등급별 분포 ..... 211

[그림 III-30] 2022년도 평가유형별 등급 분포 ..... 213

[그림 III-31] 평가유형별 전년 대비 평가등급 분포 비교 ..... 213

[그림 III-32]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개편(2018년) ..... 232

[그림 III-33] 202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절대등급 분포 ..... 243

[그림 III-34] 20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도 ..... 256

[그림 III-35] 2022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 273

[그림 III-36] 공공기관 통합공시 평균 벌점(2014~2022년) ..... 291

[그림 III-37]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현황(2014~2022년) · 292

[그림 III-38] 2022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벌점 분포 현황(전체 기관) ..... 295

[그림 III-39] 2022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벌점 분포 현황(유형별) ..... 296



2023 공공기관 현황편람

# I

## 2023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1.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구분 제도
2. 2023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 I 2023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 1.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구분 제도

#### 가. 공공기관의 지정

-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함.
  - 「공운법」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서 개별기관의 설립근거 및 설립주체, 개별기관에 대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지원 형태와 규모 등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법 시행령 제2조~제6조 및 <별표 1>을 통해 공공기관 지정요건별 산정기준 및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있음.
  
- 「공운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에 이르는 공공기관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음.
  - 제1호에 의한 공공기관: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1회 이상)한 기관
  - 제2호에 의한 공공기관: 정부지원액<sup>1)</sup>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정부지원액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기관)
  - 제3호에 의한 공공기관: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예산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제4호에 의한 공공기관: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예산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1) 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

- 제5호에 의한 공공기관: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 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예산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제6호에 의한 공공기관: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기관이 출연(1회 이상)한 기관
- 그러나 「공운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라 할지라도 동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됨.
- 구성원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대표적인 기관으로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등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으로 지방공기업이 이에 해당함.
  -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이에 해당함.
-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은 「공운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관리의 대상이 됨.
-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공통적으로 동법 제11조의 경영공시, 제12조의 통합공시, 제13조의 고객현장과 고객만족도조사, 제14조의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제15조의 공공기관의 혁신, 제52조의3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52조의4 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제52조의5 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 제52조의6 인사감사 등의 적용대상이 됨.
    - 이 외에도 「공운법」 보칙 제53조에서 제53조의3에 이르는 규정과 별칙 조항(제55조 및 제56조)을 적용받음.
  -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된 기관은 「공운법」에 따른 공통된 관리·감독대상이 되지 않고 소관 주무부처의 재량적 관리대상이 됨.

## 나. 공공기관의 유형 구분

- 「공운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기관의 규모 및 업무 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지배구조와 관리·감독 수준의 설계를 위해 동법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됨.

- 공공기관의 유형에 따라 「공운법」 적용범위가 달라짐.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상기한 공통사항<sup>2)</sup> 이외에도 이사회, 임원 임명 및 구성, 예산회계, 경영감독 등 「공운법」 제16조에서 제52조의2에 이르는 규정과 보칙 제54조의 적용대상이 됨.
- 공공기관 유형 구분 요건을 살펴보면 <표 I-1>과 <표 I-2>와 같음.
  -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구분 기준과 유형별 세부 유형 구분 요건 등은 「공운법」 제5조와 이에 근거한 시행령 제7조 및 제7조의2에서 구체적으로 정함.

<표 I-1> 공공기관 유형 구분 요건

유형 구분	지정요건	
① 공기업	직원 정원이 300인 이상, 총수입액이 200억 원 이상, 그리고 자산규모가 30억 원 이상인 공공기관 중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시장형	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준시장형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② 준정부기관	직원 정원이 300인 이상, 총수입액이 200억 원 이상, 그리고 자산규모가 30억 원 이상인 공공기관 중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미만(「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경우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미만)인 공공기관	
	기금관리형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기술보증기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장학재단 등)
③ 기타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 「공운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공공기관 - 「공운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시행령 제7조의2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기관의 성격 및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공공기관 현황정보'와 「공운법」 및 동법 시행령을 참고하여 작성

2) 전체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공운법」 조항은 제3장 공공기관의 경영공시등(제11조~제15조), 제4장의2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제52조의3~제52조의6), 보칙 제53조~제53조3 및 벌칙 제55조~제56조임

〈표 I-2〉 「공운법」상 공공기관 유형 구분 기준

현행 「공운법」(시행 2022. 8. 4.) [법률 제18795호, 2022. 2. 3., 일부개정]	「공운법」 시행령(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078호, 2022. 12. 10., 일부개정]
<p><b>제5조(공공기관의 구분)</b>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li> <li>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li> </ol> <p>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p> <p>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기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시장형 공기업: 자산규모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li> <li>나. 준시장형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li> </ol> </li> <li>2. 준정부기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li> <li>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li> </ol> </li> </ol> <p>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p>	<p><b>제7조(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b>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직원 정원: 300명 이상</li> <li>2. 수입액(총수입액을 말한다): 200억 원 이상</li> <li>3. 자산규모: 30억 원 이상</li> </ol> <p>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경우 100분의 85)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으로 지정한다.</p> <p>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산규모: 2조 원</li> <li>2.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 100분의 85</li> </ol> <p><b>제7조의2(기타공공기관의 지정기준)</b>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li> <li>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li> <li>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li> <li>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별도의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li> </ol> </li> </ol>

〈표 I-2〉의 계속

현행 「공운법」(시행 2022. 8. 4.) [법률 제18795호, 2022. 2. 3., 일부개정]	「공운법」 시행령(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078호, 2022. 12. 10., 일부개정]
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수입액 및 총수입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종류와 분류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공공기관이 출연 또는 출자하여 설립한 교육기관 나. 법무·준사법 업무, 합의·조정 업무나 국제 규범이 적용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다.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고려해 자율경영 필요성이 높은 기관 라. 연구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서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의 필요성이 높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서 법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3. 그 밖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법령 > 법령명 (law.go.kr))

- 공공기관은 「공운법」 제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됨.
- 「공운법」은 동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구분하기 위해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의 기관 규모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 중 직원 정원 300인, 총수입액 200억 원, 그리고 자산규모 30억 원 이상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구분함.
  - 「공운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우선 분류됨.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공운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기준에 따라 세부 유형을 구분함.
- 공기업은 직원 정원 300인, 총수입액 200억 원 및 자산규모 30억 원 이상인 공공기관 중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으로 지정하며 아래 기준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유형을 세분함.
    - 시장형 공기업: 공기업 중 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85% 이상인 기관
    - 준시장형 공기업: 시장형 공업을 제외한 나머지 공기업
  -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 300인, 총수입액 200억 원 및 자산규모 30억 원 이상인 공공기관 중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미만(「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sup>3)</sup>의 경우 100분의 85미만)인 기관으로 지정하며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을 세분함.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 공공기관 중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 아닌 나머지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함.
- 「공운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직원 정원(300인 이상), 총수입액(200억 원 이상) 및 자산규모(30억 원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우선 구분됨.
  - 「공운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모 기준(직원 정원, 총수입액, 자산규모)을 충족하는 기관일지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및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은 동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됨.

3) 「국가재정법」 제5조 및 [별표2]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총 68개로 이 중 36개 기금을 공공기관이 직접 또는 위탁 관리하고 있음(<부록 3> 참고)

- 제5조 제2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표 I-2>와 같이 동법 시행령 제7조2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에 규정되어 있음.

□ 기타공공기관은 「공운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음.

- 기타공공기관의 세부유형인 연구개발목적기관을 구분하는 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규정되어 있음.
  - 제1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제2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제3호: 그 밖의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관
- 제3호에 의한 연구개발목적기관은 설립 근거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고유업무와 실제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업무의 비중(예산,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류함.
- 기획재정부는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이하 「공공기관 혁신지침」)」의 일부 조항에서 연구개발목적기관에 대한 고려사항과 예외적용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지침 제6조 제5항은 연구개발목적기관의 기능조정 계획 수립 및 경영혁신 추진 시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도록 함.
  - 지침 제10조 제2항은 연구개발목적기관의 경영혁신 진단 시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무기관의 장에게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경영혁신 진단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지침 제19조 제2항에서는 고객만족도조사 기본계획 수립 시에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성격과 업무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지침 제22조 제3항은 공정채용을 위한 채용 면접 시 지원자의 인적사항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개발목적기관은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이 정보 수집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sup>4)</sup>

- 지침 제22조의 4항은 공정채용을 위해 직원 채용 시 외부위원을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동일한 채용의 여러 전형 중 하나의 전형에만 참여하도록 하였으나 연구개발목적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위원의 구성 및 중복 참여 허용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sup>5)</sup>
- 지침 제24조는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운영을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연구개발목적기관에서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 등은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비정규직과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지침 제46조 제9항은 복리후생 제도와 관련하여 연구개발목적기관의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해외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주무기관의 장과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을 협의하여 별도의 주거지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 공공기관의 지정 절차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운법」 제6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하며,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음.
  - 「공운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설된 경우, 해당 기관을 신규 지정함.
  -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민영화, 기관의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련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공운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지정을 해제하거나 유형을 변경하여 지정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침.

4)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2022. 8. 18.)」 관련 후속조치로 2022년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2022. 11. 3.)에서 공공기관 혁신지침 개정(조문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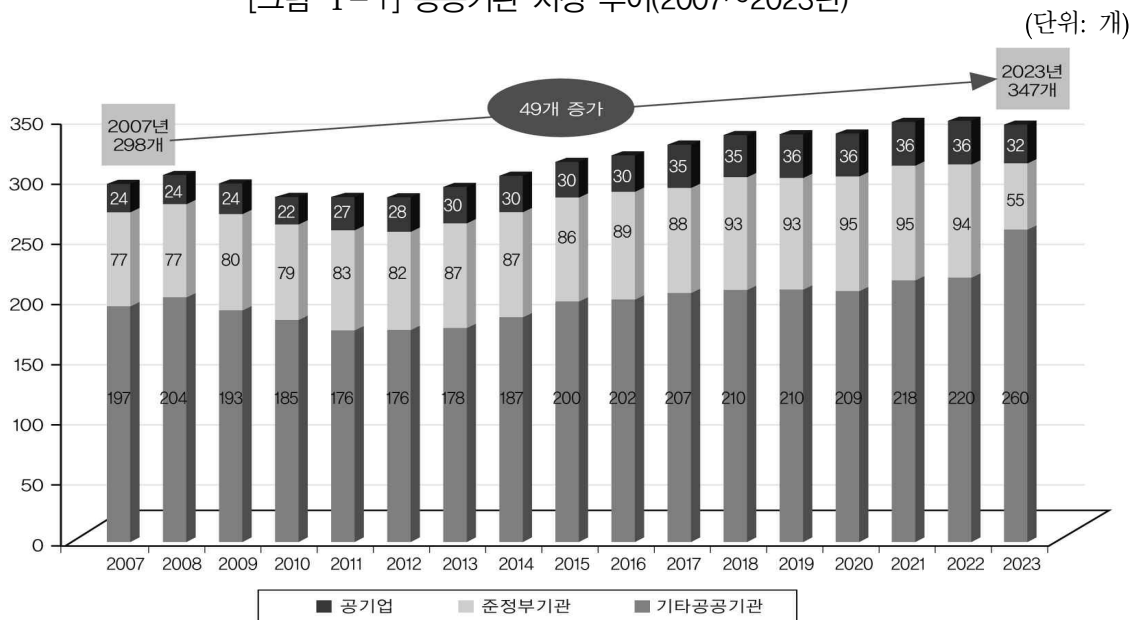
5)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2022. 8. 18.)」 관련 후속조치로 2022년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2022. 11. 3.)에서 공공기관 혁신지침 개정(조항 신설)

## 2. 2023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sup>6)</sup>

### 가. 2023년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구분 결과

- 2023년 1월 총 347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인 공공기관으로 지정됨.
  - 2023년 공공기관의 수(347개)는 「공운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최초로 지정된 2007년의 298개보다 49개 기관이 증가한 것임.
    - 2007년 최초 지정부터 2023년 1월까지의 공공기관 지정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I-1]과 같음.
  - 2023년 공공기관 수는 2022년(350개, 12월 기준) 대비 3개 기관이 감소함.
    - 2023년 공공기관 지정결과, 2022년 공공기관 중 4개 기관이 지정 해제되고 1개 기관<sup>7)</sup>이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년 대비 3개 기관이 감소함.
  - 2023년 1월 현재 공공기관(347개)은 <표 I-3>과 같음.

[그림 I-1] 공공기관 지정 추이(2007~2023년)



주: 2016년, 2017년 및 2021년은 연중 수시 또는 변경 지정된 공공기관을 반영한 12월 말 기준 기관 수로, 당해 연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수와 다름

자료: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공공기관 현황 편람』, 2022. 11. 및 기획재정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3. 1. 30.을 참고하여 작성

6) 기획재정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3. 1. 30., 기획재정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3. 1. 30., 기획재정부, 「재외동포재단 지정해제 및 재외동포협력센터 신규지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3. 6. 9. 를 참고하여 작성

7) <표 I-7> 참고

〈표 I-3〉 2023년 공공기관(347개, 2023년 1월 기준)

유형 구분	기관명
시장형 공기업 (13개)	(산업부) (주)강원랜드,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9개)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부)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 한전KPS(주)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수부) 해양환경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1개)	(문체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산업부) 한국무역보험공사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4개)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과기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보훈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해수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표 I-3〉의 계속

유형 구분	기관명
기타공공기관 (260개)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과기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외교부) 재외동포재단(2023.6월 해산), 한국국제교류재단 (통일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행안부)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보훈부) 88관광개발(주), 독립기념관 (문체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단법인 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농식품부) (재)축산환경관리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품검역인증원,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식진흥원 (산업부)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전MCS(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표 I-3〉의 계속

유형 구분	기관명
기타공공기관 (260개)	(복지부)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학진흥원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환경보전협회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새만금개발공사,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항공안전기술원
	(해수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중기부) (주)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국조실) 건축공간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표 I-3〉의 계속

유형 구분	기관명
기타공공기관 (260개)	(관세청) 한국원산지정보원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단 (농진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정보원 (기상청) (재)APEC기후센터,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주: 1. 2023년 6월 「재외동포재단법」 폐지로 재외동포재단이 해산되고 제정 법률인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라 신설 출범한 재외동포협력센터(재외동포청 산하)는 2023년 6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수시지정됨  
 2. 밑줄 표시된 기관(한국특허기술진흥원, 1개)은 2023년 1월 신규 지정된 기관임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3. 1. 30., 기획재정부, 「재외동포재단 지정해제 및 재외동포 협력센터 신규지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3. 6. 9.를 참고하여 작성

□ 2023년 공공기관 유형별 기관 분포(<표 I-4>)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공기업은 총 32개 기관으로 이 중 시장형 공기업이 13개 기관이고, 준시장형 공기업이 19개 기관임.
- 준정부기관은 총 55개 기관으로 이 중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11개 기관이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44개 기관임.
- 기타공공기관은 260개 기관이며 이 중 연구개발목적기관(<표 I-5>)은 71개로 전년 대비 4개<sup>8)</sup> 기관 감소하였음.
  - 연구개발목적기관의 66.2%인 47개 기관은 연구회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공운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의 1호<sup>9)</sup>와 제2호<sup>10)</sup>에 해당하는 기관임.
  - 이외 24개의 연구개발목적기관은 「공운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의 제3호에 따라 공운위 의결을 거쳐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된 부처 직할 연구기관에 해당함.

8)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 4개 기관이 2023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되어 연구개발목적기관도 전년 대비 4개 기관 감소함

9) 「정부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

10)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21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표 I-4〉 2023년 공공기관 유형별 기관 현황(2023년 1월 기준)

(단위: 개, %)

전체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소계	시장형	준시장형	소계	기금 관리형	위탁 집행형	소계	연구개발 목적기관
347 (100)	32 (9.2)	13 (3.7)	19 (5.5)	55 (15.9)	11 (3.2)	44 (12.7)	260 (74.9)	71 (20.5)

주: ( ) 안은 비중임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3. 1. 30.

〈표 I-5〉 2023년 연구개발목적기관(71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기관(25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속기관(22개)	부처 직할 연구원 등 기타기관(24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재)APEC기후센터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산업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통일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환경연구원		

주: 연구개발목적기관은 기타공공기관에 해당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3. 1. 30.

□ 2023년 지정된 347개 공공기관 중 13개 기관이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15개 부설기관에 대한 경영정보를 공시하고 있으며 2023년 4월 기준 공공기관 부설기관 현황<sup>11)</sup>을 요약하면, <표 I-6>과 같음.

- 공공기관 부설기관의 수는 전년 대비 5개 감소하였음.
  - 2023년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 4개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됨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의 부설기관 3개<sup>12)</sup>,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부설기관 1개<sup>13)</sup>가 공공기관 부설기관에서 제외됨.
  - 한국특허정보원의 부설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가 2022년 8월 4일자로 모기관으로부터 분리되어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특허기술진흥원으로 신규 출범함에 따라 부설기관 수가 1개 감소함.

<표 I-6> 공공기관 부설기관(분원) 현황(15개 기관, 2023년 4월 말 기준)

부설기관명	주무부처	모기관인 공공기관	
		기관명	공공기관 유형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육부	서울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타공공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기초과학연구원	기타공공기관 (연구개발목적기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타공공기관 (연구개발목적기관)
국가녹색기술연구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타공공기관 (연구개발목적기관)
세계김치연구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식품연구원	기타공공기관 (연구개발목적기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원자력의학원	기타공공기관
안전성평가연구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화학연구원	기타공공기관 (연구개발목적기관)

11) 알리오시스템에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공공기관 부설기관을 대상으로 정리하였으며, 부설기관 일반현황은 <부록 2> 참고

12) 고등과학원, 나노종합기술원, 한국과학영재학교 등 3개 부설기관 해당

13) 한국뇌연구원 해당

〈표 I-6〉의 계속

부설기관명	주무부처	모기관인 공공기관	
		기관명	공공기관 유형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서울요양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타공공기관 (연구개발목적기관)
KDI국제정책대학원	국무조정실	한국개발연구원	기타공공기관 (연구개발목적기관)
육아정책연구소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타공공기관 (연구개발목적기관)

주: 밑줄 친 국가녹색기술연구소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기관으로 2022년 12월 녹색기술센터에서 현재 기관명으로 변경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 일반현황'의 기관별 공시내용(2023. 4. 28. 기준)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 나. 전년 대비 주요 변동내역

- 2023년 공공기관 수는 2022년 기준 350개보다 3개 기관 감소한 347개임.
  - 2022년 공공기관 중 4개 기관이 지정 해제되고, 1개 기관이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2023년 공공기관 수는 전년 대비 3개 감소함.
  - 2022년 12월 대비 2023년 1월 공공기관 유형별 기관 수와 신규지정, 지정해제, 유형 변경 등 기관 수 변동은 <표 I-7>과 같음.

〈표 I-7〉 공공기관 유형별 기관 수 변동(2023년 1월 기준)

(단위: 개)

유형 구분	2022년 (A)	2023년 (B)	증감 (B-A)	(전년 대비 변동내역)		
				신규	해제	유형 변경
① 공기업	36	32	△4	-	-	△4
시장형	15	13	△2	-	-	△2
준시장형	21	19	△2	-	-	△2
② 준정부기관	94	55	△39	-	-	△39
기금관리형	13	11	△2	-	-	△2
위탁집행형	81	44	△37	-	-	△37
③ 기타공공기관	220	260	+40	+1	△4	+43
계	350	347	△3	+1	△4	-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3. 1. 30.

-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2022년 8월)에 따라 상향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을 2023년 공공기관 지정 시 최초로 적용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3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됨.
- 공공기관 중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구분하는 양적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운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 개정 전에는 공공기관 중 직원정원 50명 이상이고, 수입액 30억 원 이상, 자산 규모 10억 원 이상인 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함.
    - 개정 후에는 공공기관 중 직원정원 300명 이상이고, 수입액 200억 원 이상, 자산 규모 30억 원 이상인 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함.
  - 2023년 공공기관 지정 시,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변경된 유형 구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43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함.
  - 해당 「공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기관유형이 변경됨으로써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성이 확대되고,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함.
- 공공기관 유형별로 기관 수 변화 및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공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3년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및 기금 관리형 준정부기관 유형의 기관수는 2022년 대비 각각 2개씩 감소함.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공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7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됨.
  - 2023년 기타공공기관은 「공운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형변경(43건)과 신규 지정(1건), 그리고 지정 해제(4건)가 발생하여 전년 대비 기관 수가 40개 증가함.
    - 연구 기능과 고등 교육 기능을 동시에 가진 과학기술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등 4개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함으로써, 자율적 연구 및 교육환경을 보장하여 과학기술 기초연구 역량을 향상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할 것을 기대함.
    - 2023년 신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등 1개 기관임.
  - 2023년 공공기관 지정 변동 내역은 <표 I-8>과 같음.

〈표 I-8〉 2023년 공공기관 지정 변동 내역(2023년 1월 기준)

구분	주무부처	기관명	지정 결과	비고
신규 지정 (1개)	특허청	한국특허기술진흥원	기타공공기관	-
지정 해제 (4개)	과기부	한국과학기술원	지정해제	연구 기능과 고등교육 기능을 동시에 가진 과학기술원의 특수성 고려하여 지정해제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유형 변경 (43개)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기타공공기관	(2022) 시장형 공기업
		인천항만공사		(2022) 준시장형 공기업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기타공공기관	(2022)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문체부	한국언론진흥재단	기타공공기관	(202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과기부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과기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보훈부	독립기념관		
	문체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산업부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표 I-8〉의 계속

구분	주무부처	기관명	지정 결과	비고
유형 변경 (43개)	국토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타공공기관	(202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해수부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식약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농진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특허청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3. 1. 30.

- 2023년 공공기관으로 신규지정된 1개 기관의 현황을 요약하면 <표 I-9>와 같음.
-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당초 한국특허정보원의 부설기관이었으나, 2022년 8월 모 기관으로부터 분리되어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독립 출범한 기관임.
- 지식재산 심사행정을 종합지원하고, 지식재산의 활용 및 확산을 선도하여 국가 산업 기술 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표 I-9〉 2023년 신규 지정 공공기관

(단위: 명, 백만 원)

주무부처	기관명	공공기관 유형	설립 시기	설립근거	기관규모('22년 말)	
					직원 정원	자산 규모
특허청	한국특허기술진흥원	기타 공공 기관	'22. 8월	「민법」 제32조	436	59,417

주: '직원 정원'은 2023년 4월 말 알리오시스템에 공개된 2022년 말 기준 일반 정규직 정원(무기계약직 정원 불포함)으로 2023년 3분기 현재 일반 정규직 정원과 다를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의 기관별 공시정보(2023. 4. 28.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다. 2023년 공공기관 변동

- 공공기관은 관계법령 개정이나 정부 정책에 따라 청산·해산, 기관 통폐합 등이 추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운법」상의 공공기관 지위도 달라짐.
  - 기관이 청산 또는 해산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공운법」상 공공기관에서 자동적으로 해제됨.
  - 복수의 공공기관이 통합하여 신설 출범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되, 통합기관의 규모와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 유형을 새로이 분류한 후 당해 연도에 수시 지정<sup>14)</sup>하거나 차년도에 지정함.
  
- 2023년 1월 지정된 347개의 공공기관 중 재외동포재단(외교부 산하)이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기관이 해산되고, 신설 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로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2023년 6월 신설 기관에 대한 수시 지정이 이루어짐.
  - 정부는 체계적인 재외동포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이에 후속하여 재외동포재단 해산 및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신설을 완료함.
    - 재외동포재단의 설립 근거 법률인 「재외동포재단법」이 폐지됨에 따라, 재외동포 재단은 2023년 6월 해산됨.
    - 후속하여 2023년 제정된 「재외동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재외동포협력센터가 2023년 6월 재외동포청 산하에 설립됨.
  - 구 재외동포재단의 기능 중 정책수립 및 심사업무는 재외동포청으로, 초청행사·연수·교육 등 각종 협력사업은 재외동포협력센터로 이관됨.
    - 재외동포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조직 설치의 필요성 및 원활한 고용 승계 등을 고려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신설함.
  - 신설 출범한 재외동포협력센터는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의 거점으로서 각종 초청행사 및 연수를 진행하고, 차세대 동포를 대상으로 한 정체성 교육을 수행하며, 해외이주 역사유물 전시관 운영을 주요 기능으로 함.
  -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수행업무와 수입구조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검토한 결과 기타공공기관 요건에 해당하여 2023년 6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수시 지정함.

14) 「공운법」 제6조에 근거

-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한 재외동포재단의 해산과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신규 지정을 고려할 때, 2023년 7월 현재 공공기관의 수는 1월 정기 지정 기준 347개에서 변화 없음.



2023 공공기관 현황편람

## Ⅱ

# 공공기관 관리정책 주요 동향

1.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2.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3. 민간 - 공공기관 협력 강화



## II 공공기관 관리정책 주요 동향

### 1.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 가. 추진배경 및 전략<sup>15)</sup>

##### 1) 추진배경

-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팽창으로 인해 국민 부담과 민간부문 위축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었으며, 효율적인 공공기관 운영을 통한 대국민서비스 제고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공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 그간 정부는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해 왔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수는 2017년 330개에서 2021년 349개로 19개 증가하였으며, 인력은 2017년 34.5만 명에서 2021년 44.3만 명으로 9.8만 명이 증가함.
  - 부채규모의 지속적인 증가와 적자 기관 확대 등으로 인해 재무위험이 증대되었으며 공공기관의 사내대출 등 과도한 복리후생에 대한 외부 비판이 지속됨.
  - 또한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관리체계가 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이에 기획재정부는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 및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를 위해 2022년 7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에 시달하고 모든 공공기관에 기관별 혁신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15) 기획재정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확정」, 보도자료, 2022. 7. 29.,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 추진방향」,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2. 6. 3. 참고

〈표 II-1〉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추진 근거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1]**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8조의1]**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추진계획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및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2022. 11. 3.

## 2) 추진방향 및 추진 전략

-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과 주무부처가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작성한 혁신계획은 공운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됨.
  - 2022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50개 전체 공공기관은 기관별 특성·여건을 고려한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주무부처에 제출하고, 주무부처는 혁신계획의 적정성을 점검 및 협의·조정 후 기획재정부에 제출함.
  - 기획재정부는 주무부처가 제출한 기관별 혁신계획을 점검·조정하고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함.
  - 기획재정부는 기관별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기별로 공운위에 보고함.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5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함.
  - 공공기관의 기능 및 업무 중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경합하는 기능, 핵심 업무 및 국민 수요가 감소하는 기능,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등을 축소하고자 함.
  -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에 따른 인력을 감축하고, 정·현원차 최소화, 상위직 축소, 대부서화 등을 통해 조직 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함.
  -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여비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보수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여 예산을 효율화하고자 함.
  -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부실한 출자회사, 과도한 청사·사무실 등을 정비하여 자산을 정비하고자 함.
  - 공공기관의 복리후생을 점검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함.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과 주무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경영평가, 정부업무평가 등 정책적 수단을 활용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임.
-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 가점(5점)’ 지표를 신설하여 성과급과 연계하고, 주무부처의 정부업무평가 지표에 유관 지표를 신설하여 주무부처와 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 나. 예산효율화 계획<sup>16)</sup>

- 공공기관은 예산을 기준으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2022년과 2023년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한 절감·삭감 기준을 상회하여 혁신계획을 마련함.
-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2020년 하반기에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절감하여야하고, 2023년에는 전년 대비 경상경비 3% 이상과 업무추진비 10% 이상을 삭감해야 함.
-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2022년 하반기 경상경비 예산(약 7조 원)의 10.2%에 해당하는 7천 142억 원과 하반기 업무추진비 예산(약 389억 원)의 15.9%에 해당하는 63억 원(당초 목표대비 5.9%p 추가 감축)을 절감할 계획을 수립함.
- 또한 2023년에는 경상경비를 2022년 예산(약 14조 원) 대비 3.1%(약 4,316억 원)를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도 2022년 예산(약 786억 원) 대비 10.4%(약 82억 원)를 삭감할 계획임.
-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에 따르면, 2022~2023년 발생한 경상경비 및 업무추진비 등 예산 절감(삭감) 규모는 약 1.1조 원 수준으로, 이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공공기관별 예산효율화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발전사와 같이 경상경비 규모가 큰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조경공사 최소화, 국내산 자재 활용, 사택·사옥 관리비 절감 등을 통해 2022년 하반기 경상경비를 10% 이상 절감함.
    - 11개 에너지 공기업의 경상경비 5.8조 원이 2022년 전체 공공기관의 경상경비 예산 14.0조 원의 41%를 차지함.

16)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예산효율화·복리후생 개선 계획 확정」, 보도자료, 2022. 10. 17.,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예산효율화 개선 계획」,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2. 10. 17. 참고

- SOC 공기업의 경우 회의·행사비, 인쇄비, 소모품 구매비 등 일반수용비 위주의 절감을 추진함.
- 금융 공공기관은 국내·외 여비, 통신비, 전산업무비, 교육훈련비, 용역비 등에서 사업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지출효율화를 달성하고자 함.

〈표 II-2〉 주요 공공기관 경상경비 절감계획

(단위: 억 원)

구분	기관명	절감 금액
에너지 공기업	한국남부발전(주)	645
	한국중부발전(주)	490
	한국가스공사	236
	한국수력원자력(주)	100
SOC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358
	한국철도공사	241
	한국도로공사	90
금융 공공기관	중소기업은행	644
	한국주택금융공사	46
	신용보증기금	46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예산효율화·복리후생 개선 계획 확정」, 보도자료, 2022. 10. 17. 참고하여 작성

#### 다. 복리후생 개선 계획<sup>17)</sup>

- 정부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복리후생이 과도하지 않도록 관리해 왔으나 일부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운영에 대해 국회, 언론, 감사원 등의 외부 지적이 계속됨.
- 이에 정부는 기관의 자체 개선 노력이 필수적인 복리후생제도 특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자율혁신 유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기관이 자체점검을 통해 자율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외부점검단을 통해 점검결과의 적정성을 사후 확인할 계획임.

17)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복리후생 개선 계획」,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2.10. 17.,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예산효율화·복리후생 개선 계획 확정」, 보도자료, 2022. 10. 17. 참고

〈표 II-3〉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내 공공기관 복리후생 근거 조항

[제37조] ①공공기관은 임직원에게 대해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고, 국가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운영도록 함 ②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운영되지 않는 복리후생제도를 원칙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동일 복리후생 항목에 예산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중복지출을 금함

[제38~46조] 퇴직금, 교육비·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 및 기념품, 휴가 및 휴직 제도, 사내 대출 등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2022. 11. 3.

- 전체 350개 공공기관 중 282개 기관이 사내대출, 학자금 등 15개 항목, 715건의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수립함.
  - 학자금, 경조사비, 기념품비 등 복리후생 비용 관련 9개 항목<sup>18)</sup>에서는 206개 기관이 360건의 개선 계획을 수립함.
    - 휴가·휴직제도, 사내대출 등 여타 복리후생 제도 6개 항목<sup>19)</sup>에 대해서는 207개 기관이 355건의 개선 계획을 수립함.
  -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2023년 복리후생비는 2021년 대비 약 2.2%(약 191억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표 II-4〉 복리후생 혁신계획 최종 결과

(단위: 건)

복리후생비 관련 계획						여타 제도개선 계획			
항목	건수	항목	건수	항목	건수	항목	건수	항목	건수
학자금	102	문화여가비	33	의료비	22	창립기념일	161	휴직	27
경조사비	55	선택적복지비	32	보육비	3	사내대출	96	퇴직금	25
기념품비	40	행사지원비	27	기타	46	휴가	32	기타	14
합계					360	합계			355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예산효율화·복리후생 개선 계획 확정」, 보도자료, 2022. 10. 17.

18) 무상지급액 기준으로 학자금, 경조사비, 기념품비, 문화여가비, 선택적복지비, 행사지원비, 의료비, 보육비, 기타 등이 포함됨

19)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운영, 사내대출, 휴가, 휴직, 퇴직금 제도, 기타 제도 규정 등

라. 자산효율화 계획<sup>20)</sup>

- 공공기관의 자산효율화 계획은 비핵심 부동산, 불요불급한 여타 자산,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청사효율화 등을 대상으로 마련되었으며 177개 공공기관에서 약 14.5조 원 수준의 자산효율화 계획을 제출함.
- 먼저 비핵심 부동산에 대한 자산효율화 계획을 살펴보면 전체 공공기관 중 124개 기관이 총 330건의 비핵심 부동산에 대한 매각 계획을 제출했으며 이는 약 11.6조 원 규모임.
- 구 본사 및 지사 통폐합에 따른 유휴 청사, 본사 인근 사택, 2년 이상 미사용 유휴부동산, 불요불급한 업무지원 시설 등 비핵심 부동산 정비 대상과 항목별 정비규모는 <표 II-5>와 같음.

<표 II-5> 비핵심 부동산 정비대상 및 규모

(단위: 건, 조 원)

항목	청사	사택	유휴 부동산	업무지원 시설 등
정비대상	한국교육개발원 서울청사, 중소기업은행 6개 지점, 한국전력공사 12개 지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내 상업시설 등	한전 KPS(주) 노후주택(보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택(보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외부기숙사(임차), 한국자산관리공사 숙소(임차) 등	한국철도공사 용산역세권 부지, 공무원연금공단 도로부지, 한국마사회 서초부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건제사업단 부지 등	경북대학교병원 양남연수원,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한국수자원공사 연수시설(부지), 대한적십자사 검천연수원 등
정비규모 (건수)	56	132	107	35
정비규모 (금액)	1.0	0.3	9.4	0.9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 본격화 한다 -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 확정」, 보도자료, 2022. 11. 11. 참고하여 작성

- 불요불급한 여타 자산에 대한 효율화 계획을 살펴보면, 107개 공공기관이 골프회 원권, 콘도·리조트회원권, 유휴 기계·설비 등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총 189건으로 약 0.7조 원 규모임.

20)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 본격화 한다 -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 확정」, 보도자료, 2022. 11. 11.,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2. 11. 11. 참고

○ 불요불급한 여타 자산 정비대상과 항목별 정비규모는 <표 II-6>과 같음.

<표 II-6> 불요불급한 여타 정비대상 및 규모

(단위: 구좌, 건, 억 원)

항목	골프 회원권	콘도·리조트 회원권	유휴 기계·설비	기타 유휴자산
정비대상	한국수출입은행(1구좌), 신용보증기금(3구좌), 한국산업은행(2구좌), 한국전력공사(4구좌) 등	한국전력공사(792구좌), 한국마사회(148구좌), 한국조폐공사(336구좌), 한국도로공사(60구좌) 등	한국중부발전(주) 서천본부 및 보령 1·2호기 폐지 설비, 부산항만공사 노후 컨테이너크레인 2기 등	한국수산자원공단 시험조사선, 한국해양환경공단 선박 3개, (재)우체국물류지원단 노후차량, 중소기업은행 ATM기 등
정비규모 (구좌, 건)	8개 기관 15구좌	92개 기관 2,298구좌	24건	20건
정비규모 (금액)	74	430	801	6,000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 본격화 한다 -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 확정」, 보도자료, 2022. 11. 11. 참고하여 작성

□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과 관련한 자산효율화 계획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에서 목적 달성, 핵심·고유업무 무관, 3년 연속 적자 등 비핵심 및 부실 출자회사 지분에 대한 매각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총 275건으로 약 2.2조 원 규모임.

○ 비핵심 및 부실 출자회사 지분 정비대상과 항목별 정비규모는 <표 II-7>과 같음.

<표 II-7> 비핵심 및 부실 출자회사 지분 정비대상 및 규모

(단위: 건, 조 원)

항목	목적 달성	업무 무관	손실 확대	기타
정비대상	캡코 일리한 (한국전력공사), 한국투자금융지주 (중소기업은행) 등	YTN (한전KDN·한국마사회), 드림라인(주) (한국도로공사), 한국우사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시민프로축구단 (경북대학교병원) 등	KOGAS Akkas (한국가스공사), 수자원환경산업진흥 (한국수자원공사), (주)캡코우데 (한국전력공사 외 7개사), 하이원엔터 (강원랜드) 등	인니 바안광산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DENISON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정비규모 (건수)	105	72	85	13
정비규모 (금액)	0.7	0.3	0.2	1.0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 본격화 한다 -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 확정」, 보도자료, 2022. 11. 11.

-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은 <표 II-8>과 같이 79개<sup>21)</sup> 기관의 본사 및 지사 204개소에 대한 매각, 신규임대, 임대면적 축소 등을 포함한 청사효율화 계획을 마련함.
- 청사효율화 계획 중 매각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구 본사 매각(3개소) 및 지사 통폐합(44개소), 불요불급 시설 매각(2개소), 기타 유휴면적 일부 매각(2개소) 및 노후청사 매각(5개소) 등 총 56개소에 대한 매각이 진행할 계획임.
  - 자체청사 업무면적 정비를 통해 확보된 62개소의 유휴면적을 신규 임대함으로써 연간 125억 원의 수입이 추가 발생할 것이 예상됨.
  - 임대청사 업무면적 정비를 통해 86개소에 대한 임차면적을 축소함으로써 연간 116억 원의 비용 절감이 기대됨.
  - 150개 기관의 기관장·상임임원 사무실 면적 축소 계획을 마련함.

<표 II-8> 청사효율화 계획 및 예상 수익

(단위: 개, 억 원)

구분	정비 형태	기관	개소	예상 수익
자체청사	매각	26	56	10,224억 원
	임대 제공	27	62	125억 원/연
임차청사	면적 축소	51	86	116억 원/연
합계		79	204	

주: 22개 기관에서 청사정비계획 복수 제출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 본격화 한다 -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 확정」, 보도자료, 2022. 11. 11. 참고하여 작성

- 공공기관은 자율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되, 자산 매각 시 투자심의회, 이사회 의결 등 내규 등에서 규정된 매각 절차를 준수해야 함.

**마.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sup>2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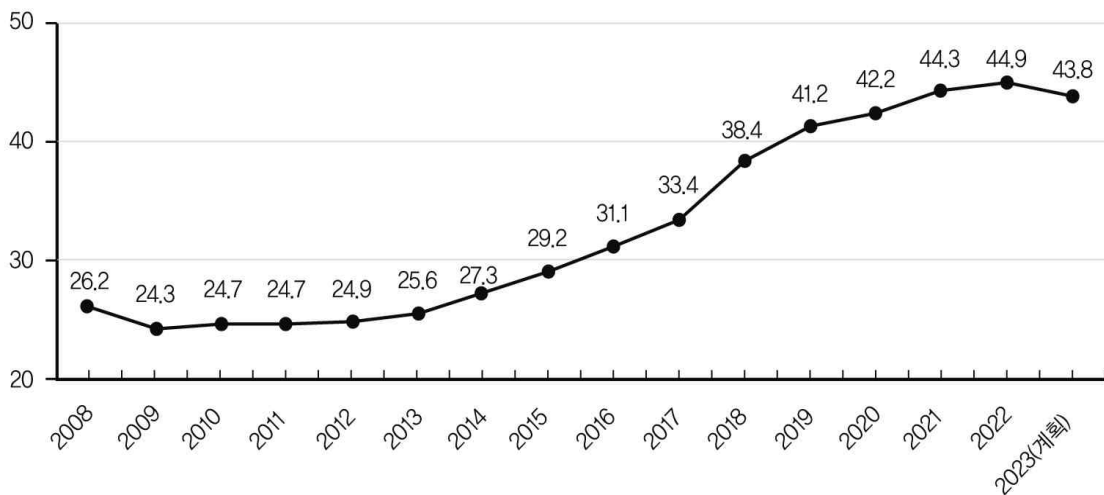
- 기획재정부는 2022년 12월 26일 개최된 제18차 공운위에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의결·확정함.
  - 이에 따라 공공기관 전체 정원의 2.8%인 정원 1만 2,442명<sup>23)</sup>을 조정하기로 함.

21) 22개 기관에서 청사정비계획 복수 제출  
 22)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2. 12. 26.,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계획 최종안 확정」, 보도자료, 2022. 12. 26. 참고  
 23) 1만 7,230명 정원감축과 4,788명 재배치

- 정원 조정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3년에는 1만 1,081명, 2024년에는 738명, 2025년에는 623명을 조정할 계획임.
- 이는 [그림 II-1]과 같이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 만에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원은 2022년 44.9만 명에서 2023년 43.8만 명으로 감소할 예정임.

[그림 II-1] 2008~2023년 공공기관 정원 추이 및 전망

(단위: 만 명)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계획 최종안 확정」, 보도자료, 2022. 12. 26.

-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은 기능조정 7,231명, 조직·인력효율화 4,867명, 정·현원차 축소 5,132명 등 총 1만 7,230명을 축소하고 4,788명을 재배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233개 기관에서 민간·지자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 감소 또는 사업종료 업무,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717건을 정비하여 7,231명을 조정할 계획임.
  - 조직 통합·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인력 조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228개 기관에서 4,867명을 조정할 계획임.
  -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의 요인을 감안한 후에도 기관별로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현원차에 대해 157개 기관에서 5,132명을 축소할 계획임.
  - 핵심 국정과제 수행, 필수시설 운영, 안전, 법령 제·개정 등 필수소요 인력과 관련하여 223개 기관에서 4,788명을 재배치할 계획임.

- 공공기관이 효율화를 진행하되 안전인력 강화에 힘쓰도록 안전인력은 정원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수 안전 관련 재배치 요구는 모두 수용하여 총 646명을 안전분야에 재배치함.
- 기획재정부는 인력 조정과 관련하여, 기관별 기능·조직, 재무상황 등 기관별 특성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관별 차별화된 검토를 실시하고자 함.
  - 예컨대 공공병원·연구개발목적기관의 경우, 기관의 특수성과 코로나 상황 등에 따라 부처 및 기관에서 요청한 공공병원 코로나 한시 정원 반납, 연구개발목적 기관의 장기결원을 감안한 정·현원차 축소를 중심으로 조정함.
- 또한 기획재정부는 정원 조정으로 초과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이직 등의 자연감소를 활용하고, 향후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초과 현원을 해소함으로써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지양하고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
- 공공기관 유형별 정원 조정 계획안을 살펴보면 <표 II-9>, <표 II-10>, <표 II-11>과 같음.

<표 II-9> 공기업 정원 조정 계획안

(단위: 명, %)

구분	기관명	기존 정원	조정규모(조정률)		기능 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정·현원차 조정	재배치
			조정규모	(조정률)				
1	한국철도공사	32,508	△722	(△2.2)	△621	△801	△144	844
2	한국전력공사	23,728	△496	(△2.1)	△83	△527	-	114
3	한국수력원자력(주)	12,821	△37	(△0.3)	△212	△159	-	334
4	한국도로공사	9,166	△188	(△2.1)	△209	△67	△92	180
5	한국토지주택공사	8,991	△220	(△2.4)	△156	△64	-	-
6	한전KPS(주)	6,712	△87	(△1.3)	△30	△26	△61	30
7	한국수자원공사	6,584	△221	(△3.4)	△151	△17	△67	14
8	한국가스공사	4,320	△102	(△2.4)	△7	△101	△30	36
9	(주)강원랜드	3,778	△90	(△2.4)	△15	△8	△79	12
10	한국마사회	3,175	△373	(△11.7)	△100	△108	△190	25
11	한전KDN	3,040	△28	(△0.9)	△7	-	△21	-

〈표 II-9〉의 계속

(단위: 명, %)

구분	기관명	기존 정원	조정규모(조정률)		기능 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정·현원차 조정	재배치
12	한국남동발전(주)	2,929	△87	(△3.0)	△5	△91	△27	36
13	한국중부발전(주)	2,898	△91	(△3.1)	△5	△79	△37	30
14	한국서부발전(주)	2,842	△77	(△2.7)	△9	△167	△26	125
15	한국공항공사	2,762	△59	(△2.1)	△3	△46	△15	5
16	한국남부발전(주)	2,738	△68	(△2.5)	△8	△82	-	22
17	한국동서발전(주)	2,585	△80	(△3.1)	△5	△68	△30	23
18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2,417	△85	(△3.5)	△41	△33	△15	4
19	(주)한국가스기술공사	2,265	△23	(△1.0)	△11	△8	△14	10
20	한국지역난방공사	2,186	△80	(△3.7)	△48	△71	-	39
21	인천국제공항공사	1,967	△37	(△1.9)	△17	△15	△8	3
22	그랜드코리아레저(주)	1,827	△55	(△3.0)	-	△41	△14	-
23	한국조폐공사	1,517	△118	(△7.8)	△67	△51	-	-
24	한국석유공사	1,454	△47	(△3.2)	△68	△31	△13	65
25	한국부동산원	1,181	△26	(△2.2)	△7	△1	△18	-
26	주택도시보증공사	1,063	△23	(△2.2)	△23	-	-	-
27	한국광해광업공단	808	△23	(△2.8)	△49	-	-	26
28	해양환경공단	747	△34	(△4.6)	△10	△10	△19	5
29	주식회사 에스알	686	△27	(△3.9)	△10	△27	-	10
30	대한석탄공사	655	△139	(△21.2)	△139	-	-	-
3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85	△32	(△8.3)	△36	△12	△3	19
3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317	△15	(△4.7)	△13	△6	-	4
33	인천항만공사	289	△15	(△5.0)	△3	△2	△12	2
34	부산항만공사	284	△15	(△5.3)	△7	△5	△5	2
35	여수광양항만공사	177	△9	(△5.1)	△3	△7	△1	2
36	울산항만공사	129	△6	(△4.7)	△3	△4	-	1

주: 공공기관 분류는 2022년 1월 공공기관 지정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계획 최종안 확정」, 보도자료, 2022. 12. 26.

〈표 II-10〉 준정부기관 정원 조정 계획안

(단위: 명, %)

구분	기관명	기존 정원	조정규모(조정률)		기능 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정·현원차 조정	재배치
1	국민건강보험공단	19,114	△343	(△1.8)	△174	△96	△86	13
2	근로복지공단	10,244	△200	(△2.0)	△119	△20	△61	-
3	국민연금공단	7,596	△152	(△2.0)	△112	△122	△21	103
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7,570	△189	(△2.5)	△167	△39	△17	34
5	한국농어촌공사	6,748	△239	(△3.5)	△169	△70	-	-
6	한국국토정보공사	4,704	△154	(△3.3)	△127	-	△44	17
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032	△89	(△2.2)	△73	△12	△58	54
8	한국환경공단	3,316	△144	(△4.3)	△51	△12	△100	19
9	한국전기안전공사	3,237	△158	(△4.9)	△398	△53	-	293
10	도로교통공단	3,112	△97	(△3.1)	△23	△35	△49	10
11	신용보증기금	2,948	△64	(△2.2)	△10	△10	△64	20
12	국립공원공단	2,674	△135	(△5.0)	△80	△20	△36	1
1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250	△28	(△1.2)	△67	△24	△31	94
14	국가철도공단	2,224	△40	(△1.8)	△36	△16	△8	20
15	한국산업인력공단	1,911	△39	(△2.0)	-	△64	△30	55
16	한국교통안전공단	1,898	△55	(△2.9)	△48	△7	-	-
17	한국자산관리공사	1,846	△21	(△1.1)	△19	△33	-	31
18	한국가스안전공사	1,758	△49	(△2.8)	△43	△17	△24	35
19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663	△9	(△0.5)	△27	△16	△9	43
20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1,646	△172	(△10.4)	△91	△19	△65	3
21	기술보증기금	1,589	△33	(△2.1)	△26	△13	-	6
22	(재)우체국물류지원단	1,564	△87	(△5.6)	△4	△3	△82	2
2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494	△48	(△3.2)	△83	△5	-	40
2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476	△53	(△3.6)	△18	△3	△45	13
2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295	△35	(△2.7)	△27	△80	△25	97
26	국토안전관리원	1,046	△11	(△1.1)	△31	△1	-	21
27	한국주택금융공사	1,021	△24	(△2.4)	△8	△6	△14	4
28	한국연구재단	988	△20	(△2.0)	△5	△2	△18	5
2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923	△34	(△3.7)	△8	△50	-	24
30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921	△23	(△2.5)	△17	△21	△5	20
31	예금보험공사	868	△34	(△3.9)	△51	△8	△4	29
32	(재)우체국금융개발원	868	△21	(△2.4)	△20	△22	-	21

〈표 II-10〉의 계속

(단위: 명, %)

구분	기관명	기존 정원	조정규모(조정률)		기능 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정·현원차 조정	재배치
33	한국무역보험공사	804	△10	(△1.2)	-	△16	△6	12
34	한국인터넷진흥원	790	△18	(△2.3)	△11	△21	△8	22
35	한국관광공사	773	△16	(△2.1)	△8	△14	-	6
36	한국에너지공단	756	△15	(△2.0)	△6	△14	-	5
37	한국사회보장정보원	740	△13	(△1.8)	△15	-	△2	4
38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721	△12	(△1.7)	△11	△7	△4	10
39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90	△26	(△3.8)	△4	△15	△24	17
40	공무원연금공단	687	△17	(△2.5)	△5	△10	△9	7
41	국립생태원	650	△27	(△4.2)	△6	△16	△13	8
42	한국산업단지공단	650	△20	(△3.1)	△16	△3	△11	10
43	한국국제협력단	604	△13	(△2.2)	△9	△6	△10	12
44	한국전력거래소	561	△22	(△3.9)	△2	△6	△14	-
45	한국소비자원	561	△19	(△3.4)	△11	△18	-	10
46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557	△17	(△3.1)	△8	△13	△6	10
47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550	△10	(△1.8)	△5	△10	△3	8
48	한국장학재단	541	△26	(△4.8)	△20	△12	△19	25
49	한국콘텐츠진흥원	533	△14	(△2.6)	△4	△5	△10	5
50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531	△27	(△5.1)	△1	△23	△3	-
5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13	△10	(△1.9)	△6	△14	△4	14
52	한국고용정보원	510	△20	(△3.9)	△20	△6	-	6
53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484	△32	(△6.6)	△32	△17	-	17
54	한국산림복지진흥원	477	△24	(△5.0)	△25	△25	-	26
55	축산물품질평가원	476	△19	(△4.0)	-	△18	△4	3
56	한국석유관리원	462	△14	(△3.0)	△6	△8	-	-
57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442	△13	(△2.8)	-	△11	△7	5
5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23	-	-	△2	-	-	2
59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416	△23	(△5.5)	△16	△22	-	15
60	한국원자력환경공단	413	△5	(△1.2)	-	△6	-	1
6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10	△10	(△2.4)	△4	△3	△6	3
62	한국보육진흥원	371	△4	(△1.1)	-	-	△4	-
63	한국수산자원공단	361	△17	(△4.7)	△3	△13	△2	1
6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353	△13	(△3.7)	△2	△5	△12	6

〈표 II-10〉의 계속

(단위: 명, %)

구분	기관명	기존 정원	조정규모(조정률)	기능 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정·현원차 조정	재배치
65	한국농업기술진흥원	343	△19 (△5.5)	△15	△7	△13	16
66	한국소방산업기술원	329	△13 (△4.0)	△6	△7	-	-
67	서민금융진흥원	328	△7 (△2.1)	△9	△10	△6	18
68	한국재정정보원	326	△28 (△8.6)	△13	△15	-	-
69	한국해양수산연수원	304	△12 (△3.9)	△6	△12	-	6
70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97	△5 (△1.7)	△3	△7	△2	7
71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79	△5 (△1.8)	△4	-	△5	4
72	한국임업진흥원	274	△9 (△3.3)	△14	△9	-	14
7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69	△9 (△3.3)	△3	△9	-	3
7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68	△10 (△3.7)	△7	△2	△3	2
75	시청자미디어재단	267	△7 (△2.6)	△4	△7	-	4
76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55	△6 (△2.4)	-	△6	-	-
77	한국특허전략개발원	249	△8 (△3.2)	△8	△2	△1	3
78	창업진흥원	245	△12 (△4.9)	△7	△17	-	12
79	국제방송교류재단	229	△3 (△1.3)	△1	△7	-	5
80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224	△4 (△1.8)	△13	-	-	9
81	한국언론진흥재단	219	△6 (△2.7)	△3	△6	-	3
8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91	△1 (△0.5)	-	△2	-	1
83	한국건강가정진흥원	187	△7 (△3.7)	-	△7	-	-
84	한국디자인진흥원	187	△6 (△3.2)	△6	△1	△6	7
85	한국과학창의재단	184	△4 (△2.2)	-	△4	-	-
86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83	△3 (△1.6)	△7	-	-	4
87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180	△8 (△4.4)	△9	△6	△2	9
88	한국기상산업기술원	175	△12 (△6.9)	△2	△16	-	6
89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75	△5 (△2.9)	△2	△5	△2	4
90	한국건강증진개발원	165	△1 (△0.6)	-	△4	-	3
91	독립기념관	157	△7 (△4.5)	△8	△1	-	2
92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55	△3 (△1.9)	△5	-	-	2
93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01	△5 (△5.0)	△3	△2	△1	1
94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100	△3 (△3.0)	△1	△1	△1	-

주: 공공기관 분류는 2022년 1월 공공기관 지정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계획 최종안 확정」, 보도자료, 2022. 12. 26.

〈표 II-11〉 기타공기업 정원 조정 계획안

(단위: 명, %)

구분	기관명	기존 정원	조정규모(조정률)		기능 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정·현원차 조정	재배치
1	중소기업은행	13,965	△390	(△2.8)	△36	△186	△168	-
2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6,317	△1,041	(△16.5)	△421	-	△971	351
3	코레일테크(주)	5,395	△127	(△2.4)	△42	△1	△85	1
4	한전MCS(주)	4,973	△612	(△12.3)	△143	△29	△440	-
5	한국산업은행	3,406	-	-	-	-	-	-
6	주택관리공단(주)	2,777	△72	(△2.6)	△175	-	-	103
7	학교법인한국폴리텍	2,756	△27	(△1.0)	△20	-	△7	-
8	(재)우체국시설관리단	2,709	△445	(△16.4)	△28	△1	△417	1
9	코레일네트웍스(주)	1,916	△236	(△12.3)	△170	△12	△58	4
10	한국체육산업개발(주)	1,468	△288	(△19.6)	△271	△2	△15	-
11	코레일관광개발(주)	1,403	△101	(△7.2)	△14	△7	△80	-
12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276	△8	(△0.6)	△37	-	△8	37
13	한국수출입은행	1,249	△27	(△2.2)	△22	△5	-	-
14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주)	1,184	△14	(△1.2)	-	△7	△10	3
15	대한법률구조공단	892	△23	(△2.6)	-	△3	△23	3
16	코레일로지스(주)	839	△296	(△35.3)	-	-	△296	-
17	한국기술교육대학교	646	△7	(△1.1)	△1	△5	△4	3
18	코레일유통(주)	507	△30	(△5.9)	△30	-	-	-
19	한국특허정보원	429	△6	(△1.4)	△13	-	-	7
20	(주)공영홈쇼핑	400	△18	(△4.5)	-	△1	△17	-
21	한국문화재단	397	△9	(△2.3)	△8	△2	-	1
22	한국장애인개발원	397	△10	(△2.4)	-	△6	△10	6
23	예술의전당	393	△10	(△2.5)	-	-	△10	-
2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391	△8	(△2.0)	-	△16	-	8
2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61	△16	(△4.4)	△5	△12	△12	13
26	한국투자공사	327	△10	(△3.1)	-	△10	-	-
27	노사발전재단	304	△4	(△1.3)	-	△1	△8	5

주: 1. 공공기관 분류는 2022년 1월 공공기관 지정 기준으로 작성함

2. 기타공공기관 중 정원 300명 이상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함(병원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계획 최종안 확정」, 보도자료, 2022. 12. 26.

## 바.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sup>24)</sup>

- 정부는 2022년 중 각 분야별로 발표된 기관별 혁신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2023년부터 기관별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발표할 계획임.
- 주무부처는 분기마다 소관 공공기관에 대해 혁신계획 이행실적을 취합하여 사전 점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가 이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함.
- 기획재정부는 2023년 4월 최초의 분야별 이행 실적점검 결과를 발표함.
  - 기획재정부는 당초 혁신계획을 제출한 350개 기관 중 2023년 지정해제된 한국과학기술원 등 4개 기관<sup>25)</sup>을 제외한 346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함.
  - 아래에서는 2023년 1분기 기준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대한 점검결과를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 1) 예산 효율화

- 346개 공공기관은 2022년에 사업성 경비 등을 제외한 경상경비 1조 5,439억 원을 절감하여 절감계획(7,142억 원) 대비 216%의 이행률을 달성함.
  - 업무추진비는 172억 원을 절감하여 절감계획(63억 원) 대비 273%를 달성함.
  - 일부 기관은 계획 수립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재산세·법인세 등 법정소요, 긴급한 유지보수 등 추가지출 등의 사유로 계획을 달성하지 못함.
- 공공기관은 2022년 12월 9일 발표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전년대비 경상경비 3% 및 업무추진비 10%를 삭감하여 2023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는 추후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임.

### 2) 복리후생 개선

- 기획재정부의 점검결과에 따르면,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제출한 기관 중 188개 공공기관이 개선대상 복리후생 제도(636건)의 51.4%에 해당하는 327건을 정비한

24)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계획은 차질없이 추진중입니다 - 공공기관 혁신계획 '23년 1분기 이행실적 점검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3. 4. 20. 참고

25)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것으로 확인됨.

- 개선 사례별로 살펴보면, 복리후생 개선 항목 중 콘도 숙박비 지원 폐지와 같은 문화여가비 개선실적이 78.6%로 가장 높았음.
- 또한 유급휴일로 운영하던 창립기념일을 무급휴일로 전환하는 창립기념일 정비 실적은 노사합의가 필요한 점 등으로 인해 개선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23.4%로 확인됨.
- 사내대출과 관련해서는 59개 기관에서 2023년까지 개선하기로 계획을 제출한 바 있으며, 이 중 26개 기관이 1분기까지 노사합의를 거쳐 대여한도 축소(주택 7천만 원, 생활안정 2천만 원) 및 시장 변동금리(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등을 적용해 대출 제도를 개선함.

### 3) 자산 효율화

- 자산 효율화의 경우, 2023년 3월 말 기준 2022~2023년 이행목표인 6.8조 원의 20.6%에 해당하는 1.4조 원(208건)을 이행 완료함.
- 유형별 세부 이행실적은 <표 II-12>와 같음.

<표 II-12> 자산 효율화 유형별 세부 이행실적

(단위: 건, 억 원)

구분	유형별 조정현황			합계
	부동산	부동산 외	지분정비	
건수	108	54	46	208
금액	11,518	1,089	1,725	14,332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계획은 차질없이 추진중입니다 -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1분기 이행실적 점검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3. 4. 20.

- 공공기관의 업무공간 축소를 통한 민감 임대 또는 임대 청사 면적 축소를 통한 임대료 절감 등 2023년 사무실 효율화 계획 109개 중 46개 사무실을 정비하여 임대료 수익 11억 원과 절감액 36억 원을 포함한 연간 46억 원의 비용을 절감함.
- 또한 임원사무실 개선대상 282개 중 170개 사무실을 축소하여 직원들의 사무공간과 회의실로 재사용함.

〈표 II-13〉 청사 효율화 이행실적

(단위: 개소, 억 원)

정비 형태	2023년 계획		2023년 1분기 실적	
	개소	연 수익	개소	연 수익
임대 수익	56	122	15	11
임대료 절감	53	47	31	36
소계	109	169	46	47
임원사무실 축소	282	-	170	-
합계	391	169	216	47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계획은 차질없이 추진중입니다 -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1분기 이행실적 점검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3. 4. 20. 참고하여 작성

#### 4)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 2023년 1분기 기준, 291개 공공기관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와 관련된 직제 개편을 통해 기관 정원 1만 721명을 감축하였으며, 2023년 계획 대비 96.8%의 이행률을 달성함.
-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비핵심·수요감소 업무 축소(398건) 관련 3,866명, 민간-지차제 경합 기능의 이관(128건) 관련 1,560명 등 총 187개 기관의 5,483명(552건)을 감축함.
- 조직·인력 효율화 추진 과정에서 조직통합·대부서화(113개)를 통한 896명, 사업 수요를 감안한 지방·해외조직 축소(34개)를 통한 1,003명 등을 조정하여 189개 기관에서 4,440명을 감축함.
- 129개 기관에서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의 요인으로 상당 기간 지속되어온 정·현원차를 개선하여 총 4,818명을 축소함.
- 핵심 국정과제·법령 제·개정, 안전·필수시설 운영 등 필수소요 인력에 대해 188개 기관에서 4,020명을 재배치함.

〈표 II-14〉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유형별 이행률

(단위: 명, %)

구분	조정규모	유형별 조정현황			
		정·현원차	기능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재배치
계획(a)	△11,072	△5,095	△5,744	△4,805	4,572
실적(b)	△10,721	△4,818	△5,483	△4,440	4,020
이행률(b/a)	96.8	94.6	95.5	92.4	87.9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계획은 차질없이 추진중입니다 -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1분기 이행실적 점검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3. 4. 20.

## 2.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 가. 추진배경 및 개편방향<sup>26)</sup>

-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그간 비대화된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① 생산성 제고 ② 관리체계 개편 ③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등 3대 혁신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 부채규모는 확대된 반면, 수익성·생산성 지표가 악화됨에 따라 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임.
  - 공공기관 인력규모는 지난 5년간 11.5만 명 증가하였고, 부채규모는 5년간 83.6조 원이 확대되었음.<sup>27)</sup>
  - 반면, 공기업의 영업이익은 2017년 13.5조 원에서 2021년 0.7조 원으로 대폭 하락하였으며, 공기업 중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 미만인 기관 수도 2017년 5개에서 2021년 18개로 대폭 증가하였음.<sup>28)</sup>
-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이 경과하여 「공운법」 상 관리체계가 안정화된 현 상황에 부합하게 공공기관 유형 구분 기준 및 기획재정부·주무부처의 관리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은 그간 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2007년 「공운법」 제정 당시 정원 기준(50명)을 현재까지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존재하여 현 공공기관 관리체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공운법」 및 하위 각종 지침 등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영감독은 기관유형, 관리항목에 따라 기획재정부 및 주무부처가 담당하고 있으며 사업감독은 관계법령에 따라 주무부처가 담당하고 있음.
- 기존 공공기관 관리체계가 사전규제 중심이고 일률적 기준 적용으로 기관의 자율적인 업무추진과 책임경영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음.

26) 기획재정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확정」, 보도자료, 2022. 7. 29, 기획재정부, 「자율·책임·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2. 8. 18.을 참고하여 작성

27) 공공기관 인력: '17.5월 33.4만 명 → '22.5월 44.9만 명(+11.5만 명)  
공공기관 부채규모: '16년 말 499.4조 원 → '21년 말 583.0조 원(+83.6조 원)

28)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마련」, 보도자료, 2022. 8. 18.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총사업비 1천 억 원이고 기관·정부부담액 500억 원 이상)이 기관 수행사업의 대형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개별 사업별 출자·출연시 정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사전통제 위주로 재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연구개발목적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 기타 소규모기관 등 규모 및 업무성격이 상이한 다수의 기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타공공기관’이라는 단일 유형으로 관리되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움.
  - 기존 공공기관 보수·인사 및 조직관리 체계가 업무량 및 직무 난이도와 무관하게 근속연수에 의존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공정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 직무급 도입 기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공감대 부족 등으로 노사 합의가 어렵고 직무 중심의 인사·조직 관리로의 확산도 미흡한 상황임.
  -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같은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사회 등 지배구조와 경영공시의 역할 확대가 필요함.
- 기획재정부는 2022년 8월 18일, 제10차 공운위를 통해 새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함.<sup>29)</sup>
- 기관별로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 중인 혁신계획의 취지에 따라 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립과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어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공공기관 지정부터 내부운영(조직·인사·재무관리 등), 경영실적 평가를 통한 성과관리 등을 포괄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범위 및 책임 확대, 기관 성격을 반영한 차별화된 관리, 경영투명성 강화를 추진하고자 함.
    - 공공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성과 중심의 조직운영, 경영실적평가 시 재무성과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함.

## 나.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 개선<sup>30)</sup>

- 기획재정부가 2022년 8월 발표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공공기관

29)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마련」, 보도자료, 2022. 8. 18.

30) 기획재정부, 「자율·책임·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2. 8. 18.

관리대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무부처 및 기관의 감독 범위 및 권한을 확대하고자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을 규정한 「공운법」 시행령 제7조의 개정을 추진함.

- 구 「중소기업기본법」 상 업종별 중소기업 분류기준<sup>31)</sup>과 경영실적평가 ‘중소형’ 구분기준<sup>32)</sup>을 고려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원기준을 기존의 50명에서 300명으로 상향함.<sup>33)</sup>
  -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 상향으로 경영실적평가 시 ‘중소형’ 기관(300명 미만)에 해당하던 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되어 경영실적평가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정 유형과 평가 유형이 일치하여 관리체계 간 연계성이 높아짐.
- 공공기관 유형 구분의 정원기준 상향에 맞추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입액 기준을 기존 30억 원에서 200억 원, 자산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함.

〈표 II-15〉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관련 「공운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개정사항

종전 「공운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대통령령 제32832호, 2022. 8. 2., 일부개정]	「공운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078호, 2022. 12. 10., 일부개정]
<p><b>제7조(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b></p> <p>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직원 정원: 50명 이상</li> <li>2. 수입액(총수입액을 말한다): 30억 원 이상</li> <li>3. 자산규모: 10억 원 이상</li> </ol>	<p><b>제7조(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b></p> <p>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직원 정원: 300명 이상</li> <li>2. 수입액(총수입액을 말한다): 200억 원 이상</li> <li>3. 자산규모: 30억 원 이상</li> </ol>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www.law.go.kr/법령/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200명 미만) 전기·가스·수도업, 금융 및 보험업 등  
(300명 미만) 제조업, 광업, 건설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32)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준정부기관(94개)은 300명 이상(준정부)과 미만(중소형)을 구분하여 별도 평가 중

33)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가 2022년 130개에서 2023년 87개로 전년 대비 32% 감소

-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될 경우 경영관리 주체가 기획재정부에서 주무부처로 변경됨에 따라 기관 입장에서는 경영실적평가, 임원임명 절차 및 재무관리 차원에서 변동이 발생함.
  - 경영실적평가의 경우, 기획재정부 경영실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신 주무부처가 주관하는 경영실적평가의 대상으로 편입됨.
  - 임원임명 절차의 경우, 「공운법」상 절차를 적용하는 대신 설립근거법령 및 기관 정관에 따른 임명 절차를 적용받음.
  - 재무관리 측면에서 기타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출자·출연 사전협의 등의 대상이 아님.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2022년 12월 「공운법」 시행령 제7조를 개정하고 이를 적용하여 2023년 공공기관 지정을 실시함.
  - 2023년 공공기관 지정 시 상향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을 최초 적용함에 따라 2022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3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됨.
    - <표 II-16>과 같이 4개 공기업과 39개 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됨.
  -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 43개 기관은 앞으로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대상이 됨.<sup>34)</sup>
    - 기타공공기관인 43개 기관은 주무부처 주관 경영실적평가를 수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알리오시스템에 공시하여 경영 투명성을 담보해야 함.
    - 정원·총인건비·혁신 등 관련사항은 주무부처와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수행해야 함.

<표 II-16> 「공운법」 시행령 제7조 개정에 따른 2023년 공공기관 유형변경 현황

구분	기관명
시장형 공기업 → 기타공공기관(2개)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 기타공공기관(2개)	(해수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2개)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문체부) 한국언론진흥재단

34) 기획재정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3. 1. 30.

〈표 II-16〉의 계속

구분	기관명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37개)	(과기부)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토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보훈부) 독립기념관
	(문체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산업부)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해수부)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식약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농진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산림청)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특허청)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3. 1. 30.

### 다. 공공기관 유형별 관리 차별화<sup>35)</sup>

#### 1)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편할 것을 발표하고 후속하여 2022년 12월 제55회 국무회의에서 「공운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규정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함.

○ 공공기관의 자본규모가 확대<sup>36)</sup>되고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추세<sup>37)</sup>에 있으며, 신규

35) 기획재정부, 「자율·책임·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2. 8. 18.

36) 공기업·준정부기관 자본규모: 2017년 294조 원 → 2021년 351조 원(2017년 대비 20% 증가)

사업 추진 시 기관 자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sup>38)</sup>을 <표 II-17>과 같이 ‘총사업비 2천 억 원 및 기관·정부부담액 1천 억 원 이상’으로 상향함.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수가 증가하는 추세<sup>39)</sup>임을 고려할 때, 조사대상 기준금액 상향을 통해 조사 대규모 사업을 선택적으로 집중 조사함으로써 향후 조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신규 투자사업 추진 시,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 내부적으로 타당성 검증절차를 이행하고 검증 결과를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해 나갈 계획임.
  -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를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심의회에서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II-17>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관련 「공운법」 시행령 제25조의3 개정사항

종전 「공운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1항 [대통령령 제32832호, 2022. 8. 2., 일부개정]	「공운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1항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078호, 2022. 12. 10., 일부개정]
<p><b>제25조의3(예비타당성조사)</b>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하 이 조 및 제25조의4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 법 제40조제3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총사업비가 1,000억 원 이상일 것</li> <li>2.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 원 이상일 것</li> </ol> <p>② ~ ⑥ (생략)</p>	<p><b>제25조의3(예비타당성조사)</b>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하 이 조 및 제25조의4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 법 제40조제3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총사업비가 2,000억 원 이상일 것</li> <li>2.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1,000억 원 이상일 것</li> </ol> <p>② ~ ⑥ (현행과 같음)</p>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www.law.go.kr/법령/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또한 해외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적용되는 평가항목과 평가방식을 개편하여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37) 공공기관 타당성조사 사업 평균 총사업비: 2017년 0.6조 원 → 2019년 0.8조 원 → 2021년 1.27조 원(2017년 대비 2배)

38) (2011년~2016. 9월 이전) 총사업비 500억 원 & 기관·정부부담액 300억 원 → (2016. 9월~현재) 총사업비 1천 억 원 & 기관·정부부담액 500억 원

39) 대상사업 수: 2017년 28개 → 2019년 35개 → 2021년 40개('17 대비 43% ↑)

- 해외사업에 대한 종합평가(AHP 분석)<sup>40)</sup> 시, 해외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에 35%이던 공공성 항목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수익성 항목의 비중을 80%까지 크게 상향함.
- MIGA<sup>41)</sup>와 같은 국제금융기구나 글로벌자문사 등의 재무적 타당성 검증 결과를 수익성 분석에 활용하는 것을 확대하는 등 평가방식을 개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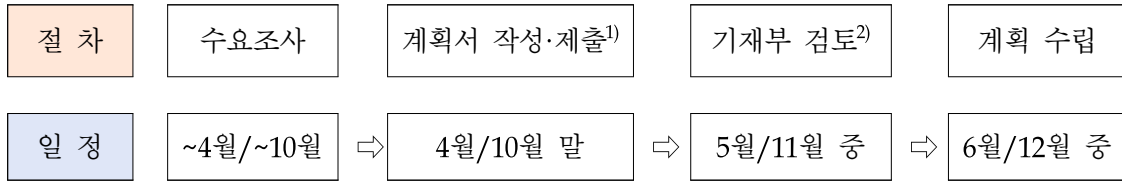
## 2) 출자·출연 사전협의 제도 효율화

-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관리 차별화 차원에서 출자·출연에 대한 사전협의 제도의 효율화를 추진함.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종전까지 개별사업 건별로 기획재정부와 수시로 사전협의하던 방식에서 반기별 일괄협의로 협의방식을 전환하고, 계획 대비 이행실적 점검도 반기별로 실시할 계획임.
    - 다만, 계획변경 또는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시급한 출자·출연 수요가 발생할 경우, 개별사업에 대한 수시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기획재정부는 출자·출연 사전 계획협의를 위한 실시 근거를 명문화하기 위해 2022년 10월 제14차 공운위 심의·의결을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 제4조를 개정함.
    - 기존 「경영지침」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출연·출자 시 사전협의를 진행해야함을 규정했으나 개정된 「경영지침」에서는 사전협의를 전년도 10월 말과 당해 연도 4월 말까지 신청할 것을 원칙으로 규정함.
    - 다만, 정책 추진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를 수시로 진행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함.
  - 출자·출연 사전계획 협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출자·출연 계획과 기관의 재무 건전성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출자회사가 무분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기존 절차에서 개별사업의 타당성만 검토했다면, 바뀐 절차에서는 기관의 경영목표 및 계획, 전반적 재무상황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였음.

40)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적 계층화법) 분석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종합평가 시 적용되는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 방법론에 해당

41) MIGA: 국제투자보증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그림 II-2] 출자·출연 계획 사전협의 절차



주: 1) 기관의 경영목표·재무상황·출자액 등을 고려하여 계획서 작성  
 2) 사업별 적정성·재무상황 등을 종합 검토하고 출자·출연 계획 대비 이행실적 반영  
 자료: 기획재정부, 「자율·책임·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8. 18.

<표 II-18>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4조 개정사항

개정 전	개정 후
<p><b>제4조(출자기관 등의 운영)</b>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이 법 제51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하는 출연·출자에 관한 약정을 맺고자 하는 경우, 사전협의를 약정을 맺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p> <p>&lt; 신 설 &gt;</p> <p>② ~ ⑦ 생략</p>	<p><b>제4조(출자기관 등의 운영)</b> ①(개정 전과 같음)</p> <p>②출연·출자 사전협의를 당해연도 출연·출자 계획에 대해 연 2회 실시하되, 전년도 10월 말과 당해연도 4월말까지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제·개정, 정책상황의 변경 등 정책 추진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p> <p>③ ~ ⑧ (개정 전 ②~⑦과 같음)</p>

자료: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10. 17.

- 또한 출자회사에 대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출자회사의 성과 제고를 도모함.
  - 기관의 자체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출자사업의 정의, 출자 대상 사업 범위 등을 기관별 내부지침에 명문화하도록 함.
  - 이행관리 차원에서 출자기관의 이행실적을 반기마다 보고하도록 하고, 4월 정기 보고 시에는 투자수익률 같은 출자회사 경영성과를 점검하여 차기 계획 협의 시 성과를 반영하도록 함.
  - 필요 시에는 부실회사 리스트를 공유하고 성과가 부실한 출자회사에는 경영개선 계획의 수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sup>42)</sup>

-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기준 상향의 영향으로 「공운법」상 경영실적평가 대상기관이 대폭 감소함.
  -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 추진된 「공운법」 시행령 제7조의 개정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공운법」 제48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경영실적평가의 대상기관 수가 대폭 감소함.
  - 개정 시행령 적용결과, 기존에 경영실적평가 대상이었던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3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sup>43)</sup>되고,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경영실적평가 대상에서도 제외됨.
  -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 기관은 주무부처가 실시하는 경영실적평가의 대상이 되며, 주무부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의 주요 내용을 준용하여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으나 주무부처가 기관을 관대하게 평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내용 준용, 평가 결과의 특정 평가등급 집중 지양 등을 주무부처에 권고함.
-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2022년 하반기에 경영실적평가 지표체계의 개편을 추진함.
  -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공공기관에 산재한 문제점과 현안과제를 신속히 개선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주요 내용을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여 추진과정 및 이행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함.
    - 이를 위해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2022. 6. 30.),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022. 7. 29.),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2022. 8. 18.),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2022. 9. 23.) 등과 같은 주요 정책의 내용을 경영실적평가의 유관지표에 반영하기 시작함.
  - 우선적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 시 효율성과 공공성이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관련 평가지표의 신설, 지표 통합, 배점 조정 및 평가내용 보장 등이 검토되었으며, 2022년 10월 제13차 공운위 의결을 통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확정함.

42)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2. 10. 6.

43) &lt;표 II-16&gt; 참고

- 수정 편람에는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무성과 평가 강화, 그간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의 비중 축소,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혁신계획의 평가 가점 신설 등이 포함됨.
- 또한 기획재정부는 2022년 9월 발표한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의 이행력 담보를 위해 관련 내용을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sup>44)</sup>에 반영함.
  -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은 2022년 수정 편람에 반영된 재무성과 평가 강화 및 사회적 가치 구현 관련 지표 축소 등의 평가 기초를 그대로 유지함을 원칙으로 함.
  - 추가적으로 민간-공공기관 협력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가 평가될 수 있도록 유관 평가지표에 관련 평가내용을 반영함.
- 경영평가지표 개선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무성과 평가 강화 측면에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에 ‘재무성과관리’ 지표의 배점 확대 및 신설을 추진함.
  - <표 II-19>와 같이 기존 ‘조직·인사·재무관리’ 지표 중 ‘재무관리’ 항목과 ‘업무효율’ 항목을 ‘재무성과관리’ 항목으로 통합하여 배점을 확대하고<sup>45)</sup> ‘재무성과관리’ 항목의 체계적 평가를 위해 하위 세부지표를 ‘재무예산관리’와 ‘재무예산성과’로 구분하여 설계함.
    - 비계량지표인 ‘재무예산관리’ 지표는 재무예산 관리시스템 운영과 같은 재무안정성·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성적인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계량지표인 ‘재무예산성과’ 지표는 활동성·수익성·안정성과 일반관리비 절감 등 정량적인 재무성과를 평가함.
    - ‘재무성과관리’ 항목으로 통합된 ‘업무효율’ 지표(계량)의 경우, 경영효율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공기업 유형의 배점을 기존 5점에서 6점으로 확대하고 준정부기관 유형은 해당 지표를 신설하여 4점을 부여함.
  - <표 II-20> 및 <표 II-21>과 같이 ‘재무예산성과’의 주요 세부평가지표는 기관별 재무구조 및 상황을 반영하여 기관 유형을 구분하고 3개 영역(활동성·수익성·안정성)별로 세부지표와 가중치를 달리 설정하는 맞춤형 방식으로 최적의 재무성과 지표를 선정함.

44) 2022년 12월 26일 개최된 제18차 공운위에서 의결·확정함

45) 공기업은 10점에서 20점으로 배점을 확대하고 준정부기관은 유형별로 구분하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0점(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기관은 2점)에서 13점으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5점(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기관은 7점)에서 18점으로 배점을 상향함

- 공기업의 경우 재무활동 평가 중시기관, 사업활동 평가 중시기관, 무차입기관, 재무위험기관<sup>46)47)</sup> 등 4개 유형으로 기관을 구분하고 총 8점을 배점함.
  - 준정부기관 중 위탁집행형의 경우 지표 신설에 따라 재무활동 평가 중시기관, 자체사업활동 평가 중시기관, 위탁사업활동 평가 중시기관 등 3개 유형으로 기관을 구분하여 총 4점을 배점함.
  - 준정부기관 중 기금관리형과 중소형 또한 기관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3대 영역 별로 가중치 및 전체 가중치<sup>48)</sup>를 달리하여 세부 지표를 구성함.
- 마지막으로 사업비 외에 기관이 지출하는 일반관리비성 경비의 절감을 위해 ‘재무 예산성과’ 지표 내에 세부지표로 ‘일반관리비 관리’ 지표(계량)를 신설하고 가중치를 3점 부여함.
- 매년 연례적으로 지출하는 업무추진비, 여비교통비, 광고선전비 등의 일반관리비를 관리함.

〈표 II-19〉 ‘재무성과관리’ 관련 평가지표 수정사항(2022년 수정 편람 기준)

2022년 당초 편람(2021. 12. 확정)	2022년 수정 편람(2022. 10. 6. 확정)
<input type="checkbox"/> 조직·인사·재무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예산 운영·성과(계량·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기업/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5점,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0점 배점</li> </ul> </li> </ul>	<input type="checkbox"/> 재무성과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예산관리(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기업/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3점,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2점 배점</li> </ul> </li> <li>○ 재무예산성과(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기업/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11점,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7점 배점</li> <li>- 세부지표로 ‘일반관리비 관리’ 신설(3점)</li> </ul> </li> </ul>
<input type="checkbox"/> 업무효율(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기업 5점, 준정부기관 0점 배점</li> </ul>	<input type="checkbox"/> 효율성 관리(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기업 6점, 준정부기관 4점)</li> </ul>

주: 준정부기관 중 기금관리형의 경우 ‘재무예산성과’의 세부지표인 ‘기금운용성과’의 배점을 5점에서 6점으로 상향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10. 6.

46) 재무위험관리기관(14개, 2022년 6월 선정):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47) 공기업 중 재무위험기관은 재무예산성과 지표의 가중치 합계가 8점인 것은 다른 유형과 동일하나 세부평가 지표 구성에 있어 활동성·수익성·안정성 관련 세부평가지표(총 4점)와 ‘재정건전화 계획 적극성 및 이행실적’ 지표(4점)를 모두 평가하는 점에서 차이를 보임

48)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전체 2점을 배점하고, 중소형 준정부기관은 전체 4점을 배점

〈표 II-20〉 공기업의 '재무예산성과' 관련 세부 평가지표 현황(2022년 수정 편람 기준)

구분	대상기관 선정기준	활동성	수익성		안정성	
		총자산회전율 <sup>3)</sup>	영업이익률	EBITDA <sup>4)</sup> /매출액	부채비율 <sup>1)</sup>	이자보상비율 <sup>2)</sup>
재무활동 평가 중시기관 <sup>5)</sup>	대규모 자본투자로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관리가 중요한 기관(7개)	2점	1점	1점	2점	2점
사업활동 평가 중시기관 <sup>6)</sup>	지속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의 수익성 유지가 중요한 기관(6개)	2점	2점	2점	1점	1점
무차입기관	사업활동 평가 중시기관 중 차입이 없는 기관(9개)	3점	2점	2점	1점	-
재무위험기관 <sup>7)</sup>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14개)	1점	0.5점	0.5점	1점	1점

주: 1) 부채비율=부채/자산  
 2)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  
 3) 총자산회전율=매출/총자산  
 4)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는 이자비용, 세금, 감가상각비 등을 빼기 전 순이익으로 기업의 현금 창출력을 추측하는 지표로 사용됨  
 5) 재무활동 평가 중시기관은 부채비율이 100% 이상이거나 차입금 총액이 1조 원 이상인 기관임. 다만, 재무위험 기관은 제외함  
 6) 사업활동 평가 중시기관은 부채비율이 100% 미만이고 차입금 총액이 1조 원 미만인 기관임  
 7) 재무위험기관은 '재무예산성과' 평가 시, 활동성·수익성·안정성 관련 세부평가지표(4점, 5개 지표) 외에 별도 세부지표로 '재정건전화 계획 적극성 및 이행실적'(계량, 총 4점으로 계획 1.5점/실적 2.5점으로 구성)을 평가함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10. 6.

〈표 II-21〉 준정부기관 '재무예산성과' 관련 세부 평가지표 현황(2022년 수정 편람 기준)

구분	대상기관 선정기준	활동성	수익성	안정성	
		사업비 집행률	자체수입 증가율	부채/자산비율	
위탁 집행형	재무활동 평가 중시기관 <sup>1)</sup>	부채비율이 높은 수준으로 부채관리(안정성)가 필요한 기관(8개)	3.5점	-	0.5점
	자체사업활동 평가 중시기관 <sup>2)</sup>	부채비율 등이 높지 않은 수준으로 자체수입 확대(수익성)가 가능한 기관(6개)	3.5점	0.5점	-
	위탁사업활동 평가 중시기관 <sup>3)</sup>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지속성 있는 사업집행(활동성)이 중요한 기관(31개)	4점	-	-
기금관리형 <sup>4)</sup>	한국언론진흥재단 제외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2개)	2점	-	-	

〈표 II-21〉의 계속

구분	대상기관 선정기준	활동성	수익성	안정성
		사업비 집행률	자체수입 증가율	부채/자산비율
중소형	위탁사업 위주의 사업구조와 기관 규모 등을 감안하여 선정(37개)	4점	-	-

- 주: 1) 재무활동 평가 중시기관은 부채비율이 100% 이상이고 차입금 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기관임  
 2) 자체사업활동 평가 중시기관은 부채비율이 100% 미만이거나 차입금 총액이 100억 원 미만인면서 자체수입 비율이 30% 이상인 기관임  
 3) 위탁사업 활동 평가 중시기관은 부채비율이 100% 미만이거나 차입금 총액이 100억 원 미만인면서 자체수입 비율이 30% 미만인 기관임  
 4)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중 보증·보험성 기관(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총 5개 기관)은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안정성 위주(부채/자산비율)로 평가함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10. 6.

-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에서는 정책 목표 및 변별력이 상당 수준 달성된 지표49)를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의 비중을 축소50)하여 반영하고 명칭을 ‘사회적 가치 구현’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변경함.
- 별도로 존재하던 ‘일자리 창출’ 지표와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를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지표로 통합하고 가중치를 축소함.
  - 공기업의 경우, 종전까지는 2개 지표가 각 6점 및 4점으로 총 10점의 가중치였으나 수정 편람에서는 통합지표에 대해 총 5점의 가중치를 부여함.
  - 준정부기관의 경우, 종전까지는 2개 지표가 각 5점 및 3점으로 총 8점의 가중치였으나 수정 편람에서는 통합지표에 대해 총 3점을 부여함.
- 평가내용 중 안전 분야를 조정하고 환경 분야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종전의 ‘안전 및 환경’ 지표(5점)를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2점)와 ‘친환경·탄소중립’ 지표(1.5점)로 분리함.
  -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는 2021년도 평가부터 0점 부여가 가능하여 배점 조정 시에도 평가의 변별력 확보가 가능함.
- 이 외에도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의 배점을 일부 조정(5 → 4점)하고, ‘윤리 경영’ 지표의 배점을 축소(5 → 2.5점)함.

49)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2017년 설정한 정규직 전환 계획 대비 실적을 점검하는 지표로 2021년 기준 96% 수준 달성

50) (공기업) 25점 → 15점, (준정부기관) 23 → 12점

- ‘윤리경영’ 지표의 경우, 2021년도 평가부터 위법행위 발생 등의 경우 최하등급 (배점의 20%)이 아닌 0점 부여가 가능하여 배점 조정 시에도 평가의 변별력 확보가 가능함.

□ 2022년도 경영평가편람 수정 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로 ‘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 가점(5점)을 신설함.

- 수정 편람에서는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개 분야의 효율화 계획을 반영하여 마련한 기관별 혁신계획을 점검하여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
- 2022년도 경영실적평가에서는 혁신계획을 충실히 수립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2023년도 경영실적평가부터 구체적인 이행실적을 평가할 예정임.

□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은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개선과 재무 위험기관에 대한 사후조치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함.

-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의 경우, 직무 중심 보수체계의 정착을 위해 직무급 평가 내실화와 같은 평가내용을 강화하고 가중치를 3.5점에서 4점으로 상향함.
  - 특히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평가 비중을 종전 2점에서 2.5점으로 상향함.
- 또한 재무위험기관에 대한 사후조치로서 당기순손실 발생 등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수정하여 제한대상의 범위를 확대함.
  - 종전까지는 재무위험도가 높은 7개 기관에 한해 재무지표 평가결과가 부진할 경우 성과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수정 편람에서는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에 대해 공운위 의결을 통해 성과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마련 시,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 ‘국민소통’ 지표 및 ‘전략기획 및 혁신’ 지표의 평가내용을 수정함.<sup>51)</sup>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의 세부평가내용에 ‘민간-공공기관 협력을 위한 노력 및 성과’ 문구를 추가하고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이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내용을 보완함.

51) 기획재정부,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2. 9. 23.

- 세부평가내용에 미활용 특허 공유 및 기술이전, 기관의 규제개선 노력 및 실적, 기업성장응답센터 운영 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추가함.
- '국민소통' 지표 및 '전략기획 및 혁신' 지표에도 관련 내용을 추가함.
  - '국민소통' 지표에 공공데이터의 공유·개방·활용 등 정보 제공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는 내용을 추가함.
  - '전략기획 및 혁신' 지표에는 경영혁신 및 경영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과 이행을 위한 기관 노력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협의체 운영을 추가함.

#### 4) 연구개발목적기관 운영체계 개편

-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서는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개발목적기관은 기관 특성에 맞춰 교수 및 박사급 인력 채용 시 심사자료를 구체화하고 채용절차를 간소화할 것임을 발표하고 후속하여 관련 내용을 「공공기관 혁신지침」에 명문화함.
- 「혁신지침」 제22조 제3항의 개정을 통해 연구수행기관 경력과 같이 채용 시 기관이 필요로 하는 심사자료의 수집범위를 주무부처에 위임하여 심사자료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함.
- 「혁신지침」 제22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외부 심사위원 비중 축소 및 중복 참여 허용, 제한경쟁채용 시 동일자격에 대한 반복적 부처 협의 생략 등 인력채용 절차를 간소화하였음.
  - 종전까지는 동일 외부위원이 단계별(계획수립 - 서류 - 필기 - 면접 - 발표) 심사 시 중복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면접전형 시 외부위원의 비중을 50%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했으나 개정 지침에서는 단계별 외부위원의 중복 참여를 허용하고 면접전형 시 외부위원 참여 비중을 축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최종학력·전공 등을 제한하는 제한경쟁채용 시 종전까지는 매번 주무부처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했으나 개편방안에 따르면 동일한 자격사항에 대해서는 최초 1회만 협의하는 것으로 개선함.
- 기획재정부는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연구개발목적기관을 제외하는 것을 검토할 것임을 밝힘.
- 고객이 '정부' 등으로 제한되고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함.

- 2022년 지정된 연구개발목적기관(75개) 중 주무부처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하는 58개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의 조사 제외 요청 시 이를 적극 검토할 것임을 밝힘.

□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원활한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현행 주거지원 외에도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혁신지침」 제46조를 개정함.

- 종전까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무기관의 장과 대상 및 지원조건 등을 협의하여 별도의 주거지원 제도를 운영할 수 있었으나, 이를 개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지원조건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47개)의 경우 연구회가 전체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기관별 총인건비 인상률을 차등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종전까지는 일률적으로 인상하도록 하였으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기관별 임금수준, 업무특성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연구회에서 소속기관 간 차등 인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함.

## 5)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자율성 제고

□ 국립대학교 병원 및 치과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같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우 감염병 확산과 같은 긴급상황 시 인력 및 예산 협의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게 하여 기관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인력 운용 측면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정원의 일정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우선 증원 후 승인을 허용하도록 함.
- 예산 운용 측면에서는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근무·파견수당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총인건비 예외를 인정하도록 개선함.
-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유사한 조치를 이미 시행하였으나, 공공의료기관에 한해 코로나19 외 감염병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

## 6) 소규모 기관의 행정부담 완화

-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서는 소규모 공공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무부처 경영실적평가 및 직급별 정원관리를 간소화하기로 함.
  - 주무부처 주관 경영평가의 경우 소규모 기관의 평가지표를 축소하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여타 기관과 구분하여 별도 유형으로 관리하는 등 주무부처의 경영실적평가를 간소화하도록 함.
  - 직급별 정원관리와 관련하여 하위 직급에 한해 통합정원 운영을 허용하여 소규모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총인건비 한도를 준수하면서 총정원은 유지하되, 하위 직급에 한해 직급별 정원 관리가 아닌 통합 정원관리를 인정함.

라.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인사·조직관리 강화<sup>52)</sup>

## 1) 추진경과

- 우리나라 기업의 주된 임금체계는 업무량이 증가하지 않아도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연공성에 기반하고 있음.
  -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근속연수 1년 미만 대비 30년 이상의 월임금 총액 비중은 우리나라가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영국이 1.5배, 유럽연합이 1.7배, 독일이 1.8배, 일본이 2.3배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3.0배로 상당한 차이를 보임.
- 우리나라 공공기관 보수는 약 76%<sup>53)</sup>가 연공급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민간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공성에 기반한 보수체계의 비효율이 크게 발생하고 있음.
  - 성장률 둔화, 인구 고령화 추세 등의 영향으로 인건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고용안정성이 높은 공공기관에서는 생산성 향상 유인이 적어 공공서비스의 질적 제고가 어려움.

52) 기획재정부,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 마련」, 보도자료, 2023. 2. 3, 기획재정부,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3. 2. 3.을 참고

53) 2021년도 기준으로, 공기업·준정부 기관의 보수 항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연공급기반 급여 75.9%, 직무급 4.1%, 성과급 15.6%, 기타 4.4로 나타남

- 공공기관의 보수체계를 성과연동형 임금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간부직(2급 이상)은 성과연봉제를 적용 중이나 비간부직은 기관 자율로 적용하고 있어 성과연봉제를 통한 연공성 완화 효과가 제한적임.
- 정부는 2021년부터 공공기관 보수체계의 연공성 완화를 위해 직무급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이행 담보를 위해 경영실적 평가 시 직무급 도입 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기관 내부적인 노사 합의 지연 등으로 도입 확산에 애로가 많음.
  -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기준,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의 세부평가 내용으로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의로의 전환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고 명시하고 2점을 배점함.<sup>54)</sup>
    - 동 지표에서는 직무 중심 보수체계 마련을 위한 직무분석 등 사전절차 이행 실적과 도입내용의 질적 수준, 노사합의 여부, 직무급 적용 보수 항목의 비중 등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정부는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2022년 8월 발표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를 통해 공공기관 보수체계의 연공성 완화와 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인사·조직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공공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경영평가편람 및 예산운용지침 등에 관련 내용을 반영함.
  - 2022년 10월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을 살펴보면, 경영실적평가 시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의 세부평가내용에서 직무급 배점을 기존 2점에서 2.5점으로 확대함.
    - 해당 지표는 기획재정부가 별도로 실시하는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점검결과를 활용하여 평가함.
  - 2022년 12월 발표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는 직무급 도입기관에 대한 예산 상 인센티브를 명문화함.
    - 직무급 도입기관 확대와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직무급 우수기관에 대한 총인건비 추가 지급 근거를 마련함.

54)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기획재정부, 2021. 10.

## 2) 직무·성과 중심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의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후속하여 2023년 2월 3일, 제2차 공운위를 통해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함.
  - 정부는 공공기관의 직무 난이도와 성과를 보수에 연계하여 생산성·공정성을 높이고, 직무급을 확대하여 고정급여 중 연공급 기반 급여 비중을 낮춰 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을 늘리는 동시에 차등폭을 확대하고자 함.
  
- 경영실적평가에서 직무급 도입 노력과 성과급 비중 및 차등폭 확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예정임.
  - 현 2.5점 외에 추가로 혁신계획 가점(5점) 중 일부를 직무급 도입 및 운영성과에 배정함.
    - 경영실적평가에서 연공성 완화 등 보수체계 합리화 노력, 제도 설계·운영 과정 중 조직 구성원의 폭넓은 참여 등 직무급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노력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여 기관의 도입확대 노력을 유도하고자 함.
  - 2023년도 경영실적평가부터 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을 확대하거나 성과급을 받는 최고·최저등급 간 차등액(비간부직 기준)이 「예산운용지침」에서 권고하는 2배 이상인 경우 가점을 부여할 계획임.
  
- 직무급 고도화에 따른 총인건비 인센티브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기관들의 관심과 적극적 이행을 유도할 계획임.
  - 직무급 도입성과에 따른 총인건비 추가 지급 대상(예시: 0.1%~0.2%p, 추후 공운위에서 결정)을 직무급 도입 최우수 기관에서 신규도입 우수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추가로 지급되는 총인건비 인센티브는 성과급 차등폭 확대를 위한 활용과 같이 직무급 재원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추후 미도입기관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인센티브만큼을 총인건비에서 차감할 수 있음.
  
- 직무급 점검 및 관리 대상을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임.
  - 현재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경영실적평가 시 직무급 도입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나, 향후 기타공공기관도 직무급 도입 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2023년 실적  
점점부터 기타공공기관에 기획재정부의 경영실적평가 지표 준용을 권고할 예정임.

- 직무급 도입기관을 2021년 말 기준 35개에서 2024년 100개, 2027년 200개 이  
상의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주무부처가 주관하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타공공기관 역시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총인건비 추가인상 인센티브가 적용되도록 할 계획임.

□ 직무급 도입 확대 및 고도화를 위해 임금피크제 적용을 완화하거나 경상경비 삭감  
실적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는 것도 추진할 계획임.

- 생산성과 보수수준이 충분히 연계되어 직무급이 임금피크제 효과를 발휘하는  
직무급 고도화 기관은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별도 정원(신규채용 규모) 등에 있어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임.
- 경영실적평가의 가점 항목인 '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 가점' 지표에  
대한 평가 시<sup>55)</sup>, 직무급 도입 확대 및 성과급 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용역 등과  
관련한 지출은 제외하고 평가하기로 함.

□ 정부는 직무·성과 중심 보수체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구성원의 관심 및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개편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병행해 나갈 계획임.

-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 확대 및 성과급 강화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기관이 제도개편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직무급 점검단을 중심으로 직무·성과 중심 보수관리 컨설팅팀을 구성하여 유형  
별·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제도개편 과정에서의 경험과 역량부족  
등의 어려움을 기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임.
- 제도개편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별 보수담당자의 역량을 제고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는 효과적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의 필요성, 직무급 평가 시  
주요 고려사항 등을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 및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할 예정임.
-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관리 강화를 위한 우수사례집을 발간·배포하여 노사합의  
등 제도개편 과정에서의 노하우와 경험 등이 기관 간 공유·확산되어 보다 많은  
공공기관이 제도 개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임.

55) 2023년 경상경비는 전년 대비 3% 이상 삭감,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10% 이상 삭감

3) 2022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sup>56)</sup>

- 정부는 공공기관의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을 유도하고자 2021년부터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 도입·운영 실적을 점검해 옴.
  -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해 관련 규정에 점검 실시 근거를 명문화함.
    - 종전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1조(보수체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경영목표, 업무 및 조직구성 등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직무가치·능력·성과 등에 기반한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해야함을 규정하고 있을 뿐 관련 점검 및 평가의 실시근거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음.
    - 정부는 2022년 10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1조(보수체계)를 개정<sup>57)</sup>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수체계 운영실태를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실시 근거를 명문화함.<sup>58)</sup>
  - 점검결과는 경영실적평가 시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에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옴.
  
- 2023년에는 2~4월 사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실적을 점검함.
  - 2022년도 개편실적에 대한 점검이기 때문에 점검대상은 2022년도 기준 공기업 36개와 준정부기관 94개 등 총 130개 기관임.
  - 점검내용은 기관별 직무분석과 같은 사전절차의 이행 여부와 직무급 도입을 위한 보수체계 개편 노력 및 그 성과 등이 포함됨.
  - 점검결과는 경영평가단에 전달하여 2022년도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데 활용함.
    - 개편실적 점검결과는 경영실적 평가지표 중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4점)에 최대 2.5점까지 반영됨.
    -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총인건비 인센티브로 총인건비를 추가 지급(+0.1%p)받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

56) 기획재정부, 「2022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3. 4. 25.

57)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1조(보수체계):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관의 경영목표, 업무 및 조직구성 등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직무가치·능력·성과 등에 기반한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수체계 운영실태를 점검·평가할 수 있다.

58)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2. 10. 17.

-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을 점검한 결과 직무급 도입기관은 2022년 말 기준 55개로, 전체 공기업·준정부기관(130개) 중 약 42.3%가 도입한 것으로 파악됨.
  - 체계적 직무평가 여부, 직무가치가 반영된 보수의 도입 여부, 50% 이상의 직원에게 적용 중인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직무급 도입 여부를 판단한 결과, 2022년 직무급 도입기관은 2021년 35개보다 20개 증가한 55개 기관임.
  - 대부분 기관들이 직무분석 등 직무급 도입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볼 때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 중이며, 도입기관의 경우 전년 대비 평균적인 총 보수 대비 직무급 비중 및 직무등급 간 보수차이가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일부 기관들의 경우 직무급 도입 과정에서 직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보수 구조에 잘 연계하고 노사 협력을 통해 이를 규정화하여 제도의 형식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보여줌.
    - 2022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 연공성 완화 우수기관인 한국 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사례는 <표 II-22>와 같음.
  - 반면, 일부 도입기관의 경우에는 보수 중 직무급이 차지하는 비중과 직무 난이도 차이에 따른 보수의 차등 수준이 미흡하여 직무급 고도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표 II-22> 2022년도 연공성 완화 우수기관 사례

구분	우수사례 주요 내용
한국무역보험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기술서를 작성하고 직무평가 완료, 총보수 대비 직무급 비중(약 32%) 등 우수</li> <li>• 「노사공동 직무급 협의체」를 운영하여 노사공동으로 직무평가결과를 확인, 직무등급 결과를 모든 직원에게 공개하고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하여 수용성 제고</li> <li>• 연공성 완화를 위해 성과가 우수한 3급 팀장에 대해 직급승진 없이 바로 부서장(2급 실장급)으로 보임할 수 있는 페스트트랙(Fast-Track) 제도를 도입</li> </ul>
한국수자원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적인 노사협의를 통해 직무등급 간 차등수준<sup>1)</sup> 확대 등 직무급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li> <li>• 연공성 완화를 위해 기본급의 직급별 임금 상한을 설정하고 상한선 초과 시 임금인상률을 낮게 적용</li> </ul>

주: 1) 4급 직원 기준 최대(A등급)~최저(F등급) 직무등급 간 월 51.5만 원 차이  
 자료: 기획재정부,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35개 → 55개로 확대」, 보도자료, 2023. 4. 26.

- 정부는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확산을 위해 점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대상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권역별 설명회 및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임.
- 점검결과 발표 후 권역별 주요 혁신도시를 방문하여 공공기관 보수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급 도입 취지, 주요 점검사항 및 점검결과를 공유해 나갈 계획이며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병행할 예정임.
- 직무급 도입 기관 수를 확대하기 위해 기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과 현장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기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주무부처 주관 직무급 도입 및 운영현황 점검 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적용해 온 직무급 평가기준이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평가기준 및 내용을 공유해 나갈 계획임.
  - 기타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기초지식에 대한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기관특성을 반영한 상세교육을 추진할 계획임.
- 2023년도 실적 점검 시 총인건비 추가 인상 인센티브 대상을 현재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우수기관에서 직무급 신규도입 우수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마.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 강화

### 1) 이사회 기능 활성화 및 감사 기능 강화<sup>59)</sup>

-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이사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공공기관 투명성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개별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활동내용을 민간기업 수준으로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공시하고, 경영실적평가의 '경영전략 및 리더십' 항목에 반영하도록 함.
  - 민간기업에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개별 비상임이사의 출석률 및 안전별 찬·반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59) 기획재정부, 「자율·책임·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2. 8. 18.

-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이 발표된 2022년 8월 기준 알리오시스템 공시항목상 개별 비상임이사의 활동내용을 공시할 수 있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2023년 2월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개편하여 관련 공시항목을 마련함.
  - 기존 '이사회 회의록' 항목을 '이사회'로 개편하고 하위 공시항목으로 '개별 비상임이사 활동내용'을 공시하도록 함.

□ 비상임이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비상임이사에 대한 보수 지급 방식을 변경하고 이사회 내 역할 및 지위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함.

- 종전까지 비상임이사 보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 지침」 제5조(비상임 감사와 비상임이사의 수당)에 근거하여 월정액 또는 회의참석수당 등을 포함하여 연간 3천만 원까지 집행할 수 있었음.
- 정부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2022년 12월 임원 보수 지침을 개정하여 비상임이사의 보수를 이사회 활동실적과 연계하여 월정액과 회의참석수당을 적절히 배분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종전의 전액 월정액 방식을 제한함.

〈표 II-23〉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 지침」 제5조 개정사항

개정 전	개정 후(2022.12.19. 공운위 의결 확정)
제5조(비상임감사와 비상임이사의 수당) 비상임 감사와 비상임이사의 수당은 월정액 또는 회의참석수당 등을 포함하여 연 30백만 원을 상한으로 한다.	제5조(비상임감사와 비상임이사의 수당) 비상임 감사와 비상임이사의 수당은 월정액 또는 회의참석수당 등을 포함하여 연 30백만 원을 상한으로 한다. 다만, 비상임이사의 경우 수당 전액을 월정액만으로 지급 할 수 없다.

자료: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 지침 일부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12. 17.

□ 개편방안에 따라 종전까지 일부 공기업에 대해서만 의무화되어 있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전체 공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임.

- 현행 「공운법」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은 감사 대신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
  - 2022년 공공기관 기준, 시장형 공기업 15개와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준시장형 공기업 7개 등 22개 기관이 「공운법」에 따른 감사위원회 설치 대상 기관임.
- 향후에 감사위원회 설치 대상 기관이 공기업 전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이를 통해 종전의 1인 감사 체제에서 재무·회계전문가인 비상임이사가 포함된 3인 이상의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로 내부지배구조가 전환되고 내부건제기능이 강화될 것이 기대됨.

## 2) 공공기관 통합공시 강화<sup>60)</sup>

- ESG 경영의 중요성 증대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강화 및 현행 별점 부과식 점검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와 공시항목의 지속 확대에 따른 분류체계 개편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고 있음.
  -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경영평가 편람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를 실행하며, 모호한 통합공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공시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 그간 공시 분류체계에 대한 정책대응 차원에서 ESG 관련 신규항목을 지속적으로 추가하였으나 체계성이 미흡하여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ESG 공시항목 확대, 분류체계 개편 및 공시항목 조정 등을 추진할 것을 밝히고 이에 후속하여 2023년 2월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의결 확정함.
  - 통합공시기준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전반적인 통합공시 분류체계의 재편, ESG 공시 강화, 국정과제 및 공시 여건을 반영한 공시항목 신설·통합,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됨.
  - 이 외에도 개정 통합공시기준에는 개편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통합공시 점검 제도에 대한 개편사항도 반영되어 있음.
    - 기존의 별점 부과식 공시점검 방식을 탈피하여 보다 명확하고 실효성 있게 점검 및 별점 기준을 개편함.
- 분류체계 재편은 [그림 II-3]과 같이 기존 5개 대항목 체계를 4개의 대분류로 개편하는 것과 개별 공시항목을 15개의 중분류 체계로 재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이를 통해 공시항목의 체계성이 제고됨.
  - 공시항목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와 공시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07년 통합공시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공시항목의 전체적인 체계를 5개 대항목 체계에서 4개 대분류 체계로 전면 재편함.

60)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3. 2. 3.

- 기존 대항목은 일반현황, 기관운영,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 5개로 구성되어 있으나, 개정 통합공시기준에서는 기관운영, ESG 경영,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등 4개의 대분류 체계로 개편됨.
  - 기관운영 하위 항목은 인력관리·보수관리·복리후생 등 기관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16개 공시항목(일반현황, 내부규정, 임직원 수, 신규채용, 임원연봉, 복리후생 등)을 중심으로 기존 항목을 재구성함.
  - ESG 운영은 ESG 관련 12개 항목(ESG 경영 현황, 환경보호, 안전관리 및 개인정보, 이사회 등)의 지속적 관리 및 추진현황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신설된 대분류임.
  - 경영성과 하위 항목은 재무성과, 사업 및 투자, 중장기 재무관리 등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관련 기존 공시항목(요약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주요사업, 투자집행 내역 등 13개 항목)으로 재구성함.
  - 대내외 평가에서는 경영실적평가, 국회 등 외부지적사항,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계약정보 등 대내외 평가 및 정보공개와 관련된 5개 공시항목으로 재편됨.
- 공시항목 관리의 효율성과 국민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공시항목 간 유사성을 기준으로 중분류 체계를 개편함.
  - 공시항목의 중분류 체계는 2022년 2월 추진된 통합공시제도 개선 시 마련된 것으로 일반현황, 인원, 보수, 기타, ESG 경영, 사업 및 투자 등 10개로 구성됨.
  - 2023년 2월 개정된 통합공시기준에서는 기존 10개의 중분류를 일반현황, 인력관리, 보수관리,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 15개로 재조정함.

[그림 II-3] 통합공시 분류체계 개편내용

- ▶ (개편 전) **대항목(5개)** - 항목(41개) - 세항목(99개) - 세세항목(126개)
- ▶ (개편 후) **대분류(4개)** - **중분류(15개)** - 항목(46개) - 세항목(98개) - 세세항목(118개)

개편 전(2007~2021)		⇒	개편 후(2022~)		
대항목 (5개)	항목 (41개)		대분류 (4개)	중분류 (15개) 항목 (46개)	
I. 일반현황	일반현황 1개	⇒	I. 기관운영	일반현황	일반현황, 내부규정 2개
	II. 기관운영			임직원 수, 신규채용, 직원 평균보수, 복리후생, 환경보호, 인권경영, 일가정양립제도, 소송 및 법률자문 등 20개	인력관리
보수관리		임원연봉, 직원 평균보수, 기관장 업무추진비 3개			
복리후생		복리후생비, 그 밖에 복리후생제도 2개			
노동조합		노동조합 현황 1개			
소송 및 자문		소송 및 법률자문 현황 1개			
III.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투자 및 집행현황,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등 13개	⇒	II. ESG운영	ESG현황	ESG 경영 현황 1개
				E(환경)	환경보호 1개 (온실가스, 녹색구매 실적 등 세항목 7개)
				S(사회)	안전관리, 인권경영, 장애인 고용률 등 7개
				G (지배구조)	이사회 회의록, 자체 감사부서 현황 등 3개
IV. 대내외 평가	경영평가, 동반성장 평가, 청렴도 평가, 국회 등 외부지적사항 등 5개	⇒	III. 경영성과	재무성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7개
				사업 및 투자	주요사업, 투자집행내역 등 3개
				중장기 재무관리	중장기 재무 관리계획 등 3개
V. 정보공개	계약 정보, 연구보고서 2개	⇒	IV. 대내외 평가 등	대내외 평가	경영평가, 국회 등 외부 지적사항 등 3개
				정보공개	계약정보, 연구보고서 2개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3. 2. 3.

- 통합공시기준 개정 시 ESG 공시 강화 차원에서 ESG 공시항목<sup>61)</sup> 확대, ESG 경영 현황 항목 신설, 기후공시 강화 등을 위한 공시대상 항목 확대, 항목 재구성, 항목 신설 등이 구체적으로 반영됨.
- ESG 항목 중 국회, 경영평가지표 등에서 공시 필요성이 제기된 사회(S) 항목과 기관운영 투명성 및 ESG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보강이 필요한 지배구조(G) 항목을 확대함.
    - 사회(S) 항목은 경영실적평가에서 ‘사회적 책임’ 지표이나, 공시항목에 없는 ‘장애인 고용률<sup>62)</sup>’,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sup>63)</sup>’ 등의 항목을 신설함.
    - 지배구조(G) 항목은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비상임이사 활동내용<sup>64)</sup>’, ESG 추진체계와 관련한 ‘ESG 운영위원회<sup>65)</sup>’ 항목을 신설함.
  - ESG 경영 체계와 관련하여 개별 공공기관의 ESG 추진체계 및 현황 등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ESG 경영 현황’ 항목을 신설함.
    - 신설된 ESG 경영 현황 항목에서는 민간기업이 작성하여 공시 중인 선도적 ESG 경영보고서(전략·추진체계·실적)를 벤치마킹하여 개별기관이 필수사항 위주로 작성한 보고서 형태로 정보가 게시되어야 함.
  - 다만, ESG 인프라 구축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ESG 운영위원회’ 항목과 ‘ESG 경영 현황’ 항목은 2024년까지 자율공시 후 ESG 추진현황 등을 고려해 2025년 이후 기관 유형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순으로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임.
  - 기후공시 강화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선도적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실적(현행 Scope1·2)을 Scope 3까지 자율공시하도록 개선함.
    - ISSB(국제지속가능표준위원회)에서 글로벌 ESG 공시기준 제정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실적 Scope3를 반영한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을 2023년 중 발표할 예정임.
    -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Scope1~2 공시)」에 Scope3 관련 국제 공시기준이 반영되기 전까지 자율공시를 유지할 예정임.

61) ESG 공시항목 중 E(환경)에 해당하는 세항목은 온실가스, 에너지 사용량 등 7개이고, S(사회)에 해당하는 세항목은 안전관리, 사회공헌, 인권경영 등 21개이며, G(지배구조)에 해당하는 세항목은 이사회, 청렴도 평가 등 3개임

62)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 2022~2023년 3.6%, 2024년 이후 3.8%

6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매년 발표(중소벤처기업부)

64) 상장기업의 경우 비상임이사의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 현황 공시 중(금융감독원 전자공시)

65) 기관별 이사회 내 ESG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 확인(위원명단, 근거규정, 회의록 등)

- 온실가스 감축실적 관련 온실가스 배출유형(Scope 1~3)은 <표 II-25>와 같음.
- 국제기구 및 주요국(EU, 미국)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ESG 국제 공시기준에 맞춰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공시항목을 신설하는 등 ESG 공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임.

〈표 II-24〉 ESG 공시 강화를 위한 공시항목 개정사항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ESG 공시 항목 확대	사회(S) 관련	-	24. 장애인 고용률(신설)
		40. 계약정보 (40-3) 혁신조달 구매실적 (40-4)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25. 구매실적(신설/이동) (25-1) 혁신조달 구매실적(이동) (25-2)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이동) (25-3) 중소기업 생산품 구매실적(신설)
	지배 구조(G) 관련	15. 이사회 회의록	26. 이사회(신설/이동) (26-1) 이사회 회의록(이동) (26-2) 개별 비상임이사 활동내용(신설) (26-3) ESG 운영위원회(신설)
ESG 경영 체계		-	17. ESG 경영 현황(신설)
기후공시 강화		12. 환경보호 (12-1) 온실가스 감축실적	18. 환경보호(이동) (18-1) 온실가스 감축실적(항목내용 추가) * '온실가스 감축실적'내에 Scope3 포함 공시

주: ( ) 안은 개편 전 대비 기존 공시항목의 이동, 항목 신설 등을 표시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3. 2. 3.

〈표 II-25〉 온실가스 배출 유형

구분	정의	예시
Scope 1 (직접배출)	• 제품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화석연료(보일러, 화로 등), 운송 수단, 기타 화학공정 등
Scope 2 (간접배출)	• 사업장에서 에너지 사용 등을 통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전력·전기·열·물 사용, 폐기물
Scope 3 (기타 간접배출)	• 기업활동 결과로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은 시설(협력사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 공급망(운송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임대한 자산, 프랜차이즈, 판매된 생산품과 용역의 이용, 아웃소싱 활동, 폐기물 처분 등

주: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과 같은 일부 금융 공공기관은 Scope3에 대해 자체 공개 중임.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3. 2. 3.

- 통합공시기준 개정내용에는 국정과제와 변화된 공시여건을 반영한 항목 신설, 기존 항목의 재편이 포함되어 있음.
- 국정과제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의 세부 이행과제인 '성별근로공시제를 도입해 양성평등 일자리 기반 조성(고용노동부 주관)'과 관련하여 '남녀 이직자 비율'과 '남녀 근로자 평균 임금비율' 항목을 신설함.
    - 성별근로공시제는 채용·근로·퇴직단계 등 고용 상 항목별 성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로서 1단계로 공공부문에 시범도입하고 추후 2단계로 500인 이상 민간부문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임.
    - 공공기관은 매년 4월 정기공시 시, 공공기관의 남녀 이직자(퇴직자 포함) 비율과 공공기관의 남녀 근로자 평균 임금비율을 공시해야 함.
  - 국회 및 언론 등 외부기관의 지적이 많은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복리후생제도 운영의 자율혁신 유도를 위해 '복리후생 자체점검 결과' 항목을 신설하여 운영하기로 함.
    - 2022년 8월 발표된 '공공기관 복리후생 점검계획'에 따라 실시한 각 기관의 복리후생 운영현황에 대한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결과 중, 체크리스트 미준수 사항 등을 매년 4월 정기공시하도록 함.
  - 항목 간 내용 중복으로 별도 공시가 불필요한 항목을 통합하고 공시의 실효성이 없어진 항목을 폐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공시항목을 재조정함.
    -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추진 시 노조운영비 지원, 영리시설, 장비운영권 노조위탁 등과 같은 노사관계 항목에 대한 공시 확대가 추진되었으나, 이후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규정 위반을 사유로 대부분 기관에서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관련 공시항목을 폐지하기로 함.
  - '경영평가 결과' 항목의 공시 대상기관을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한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되 기관별 여건을 고려하여 공시시기를 차별화하도록 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운법」 제48조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경영실적평가의 완료시점이 6월으로 명문화되어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주관 주무부처에 따라 완료시점이 6~12월 중으로 다양함.
    - 이를 반영하여 '경영평가 결과' 항목에 대한 공시 시점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정기공시로, 기타공공기관은 수시공시로 운영하도록 함.

〈표 II-26〉 국정과제 및 공시여건 변화를 반영한 공시항목 개정사항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항목 신설	31-2.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	7.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통합/이동) (7-2) 남녀 이직자 비율(신설)
	7. 직원 평균보수 (7-1) 직원 평균보수  (7-2) 신입사원 초임	11. 직원 평균보수(이동) (11-1) 직원 평균보수(항목내용 추가) * 남녀 근로자 평균 임금비율 추가  (11-2) 신입사원 초임
	10. 그 밖의 복리후생제도 등의 운영현황	14. 그 밖의 복리후생제도 등의 운영현황 (이동) (14-4) 복리후생 자체점검 결과(신설)
항목 통합	16.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현황 (16-1) 육아휴직 제도현황 (16-3) 출산휴가 제도현황 (16-5) 유산·사산휴가 제도현황 (16-6) 임신기·육아기 단축근무제도현황 (16-9) 가족돌봄휴가 제도운영 현황 (16-11) 가족돌봄휴직 제도운영 현황	2. 내부규정 *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운영현황은 '내부규정'에 포함 공시
	18. 노동조합 관련 현황 (18-1) 노동조합 가입정보 (18-2)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정보 (18-3) 협약정보 (18-4) 경영/인사	15. 노동조합 관련현황(이동) (15-1) 노동조합 가입정보(이동/통합) * 노동조합 가입정보(18-1) 및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정보(18-2) 통합  (15-2) 노사합의사항(신설/통합) * 협약정보(18-3) 및 경영/인사 정보(18-4) 통합 * 제도 운영 상황(18-4-1)은 내부규정에 통합
	31. 투자 및 출자·출연 현황 (31-2)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 (31-2-1) 퇴직임원 재취업 현황 (31-2-2) 퇴직직원 재취업 현황	7.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이동) (7-1)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통합/신설) *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 통합
항목 폐지	(18-4-2) 노조운영비 지원 (18-4-3) 영리시설, 장비운영권 노조위탁	(폐지) * 노조운영비 및 장비운영권 노조위탁 사항은 공시 항목을 폐지하더라도, 「공운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기관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권고
대상 확대	35. 경영평가 결과(공기업·준정부기관) - 정기공시	42. 경영평가 결과(전체 공공기관) - 정기공시: 공기업·준정부기관 - 수시공시: 기타공공기관

주: ( ) 안은 개편 전 대비 기존 공시항목의 이동, 항목 신설 등을 표시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3. 2. 3.

- 정부는 통합공시기준 개편 시, 통합공시에 대한 점검 강화 차원에서 공시점검 지원기관을 지정해 기존 별점부과 중심의 점검제도를 탈피한 정책 점검기능을 추가하고 ESG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 여부 판단 시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관 수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 통합공시기준에 제10조의166)을 신설하여 공시점검 지원기관 지정근거를 마련하고 2023년 4월 한국재정정보원67)을 공시점검 지원기관으로 지정함.
    - 종전까지 노무법인 및 회계법인을 통해 위반 여부 중심의 공시점검을 실시해 왔다면, 개편 이후에는 공공기관 중 공시점검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공시항목에 대한 종합 점검뿐만 아니라 일관성 있는 중장기적 품질 유지 및 향상, 정책활용 가능한 공시정보 기반의 자료 생산 등을 수행하도록 함.
    - 공시점검 지원기관은 정책 점검기능 차원에서 ESG 항목 등의 추진현황 분석, 분야별 공시품질 점검, 제도 개선방안 제안 등을 수행함.
  - ESG 점검 강화를 위해 개별 ESG 항목별 점검 외에도 ESG 경영보고서 형태68)와 같은 ESG 추진체계 및 현황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함.
  - 그간 위반 여부 판단 시 중과실 기준이 모호하여 공공기관의 이의제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별점에 대한 기관 수용성 제고를 위해 규정 상 모호한 중과실의 정의를 구체화함.
    - 중과실에 대한 판단기준은 통합공시기준 <별표 2> 불성실공시에 대한 별점기준에 제시되어 있음.
    - 대법원 판례69)를 준용하여 <표 II-27>과 같이 중과실에 대한 판단기준을 종전보다 명확히 제시함.

66)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제10조의1(공시점검 지원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공시정보의 확인·검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지정된 공공기관 중에서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공시점검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공시점검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공시점검 항목 및 점검방식, 시기, 절차 등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한다.

③ 공시점검 지원기관은 연도별 점검결과를 기획재정부에 보고하고, 점검결과를 관리한다.

67) 한국재정정보원은 2022년부터 ESG 분류체계 개편 등 공시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공시정보 검증 지원, 통합공시 우수사례집 발간 등 공시업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음

68) ESG 경영보고서 형태 예시

① (LG에너지솔루션) 1. 회사개요, 2. ESG 경영목표, 3. ESG 경영 전략, 4. ESG 추진체계 및 항목별 추진현황

② (한국자산관리공사) 1. 기관개요, 2. ESG 핵심목표, 3. ESG 경영전략 및 추진체계, 4. ESG 항목별 추진현황

69) 중과실이란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경우와 같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함

〈표 II-27〉 불성실공시에 대한 벌점기준 중 중과실 관련 개정사항

개정 전	개정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과실은 공시오류로 인해 해당 항목의 의미상의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 경과실은 공시항목의 내용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 기재오류를 의미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과실은 공시담당자가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오류(수치오류, 중요사항 누락·오기 등)로 해당 항목의 내용·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연계항목의 내용 변경, 기초사실의 왜곡 등), 경과실은 공시항목의 내용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 기재 오류를 의미한다.</li> </ul>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3. 2. 3.

- 통합공시 점검결과 활용에 있어 실효성 확보와 기관 수용도 제고를 위해 우수공시·공시향상기관의 지정요건을 합리화하고, 경영평가편람 개정에 따라 벌점구간 및 배점 등을 재설정함.
- 우수공시기관 지정요건이 공시향상기관과 일부 중첩되어 위상이 퇴색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통합공시기준이 정한 우수공시·공시향상기관 지정요건을 엄격하고 명확하게 규정함.
  - 현행 공시향상기관 지정요건은 해석에 따라 지정기관 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일관된 해석이 가능토록 명확하게 규정함.
- 2022년도 경영평가편람 개정 시, 공시 벌점 배점이 1점에서 0.5점으로 조정됨에 따라 벌점구간 및 배점을 재설정하였음.
  - 기존 공시점검 결과에서 벌점은 경영실적평가에 1점이 차등 반영되었으나, 최근 기관 간 공시 품질이 평준화됨<sup>70)</sup>에 따라 인센티브 역할에 제약이 있음.
  - 현행 배점기준표는 벌점구간이 0점 초과~0.1점 미만(3개 기관: 0.05점)인 경우 해당 배점이 부재<sup>71)</sup>하므로, 이러한 벌점구간 및 배점의 공백을 해소함.

〈표 II-28〉 우수공시·공시향상기관 지정요건 개정사항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우수 공시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년간(기타공공기관 2년간) 벌점이 0점 또는 2년간(기타공공기관 1년간) 하락하고 점검연도 벌점이 0점인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년(기타공공기관 2년) 연속하여 벌점이 0점인 경우(예: 20년-21년-22년 모두 0점)</li> <li>* 공시향상기관과 중첩 및 불합리한 경우 해소를 위해 우수공시기관 지정요건 후단 삭제</li> </ul>

70) 평균벌점이 2017년 7.4점에서 2021년 3.9점 구점으로 대폭 감소

71) 2021년도 경영실적평가 시, 무벌점 만점 원칙에 따라 공백구간은 부득이하게 0.9점 배점

〈표 II-28〉의 계속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공시 향상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간(기타공공기관 2년간) 별점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li> <li>* 공기업·준정부기관 3년간 기타공공기관 2년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년 연속하여 별점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li> <li>*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지정요건 통일</li> </ul>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3. 2. 3.

### 3) 공공기관 임·직원 징계제도 개선<sup>72)</sup>

-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은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임·직원 징계기준을 강화하여 책임성을 제고하기로 하고 후속조치로 관련 경영지침을 개정함.
-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 음주운전 징계 규정 및 퇴직금 감액 규정 등 공무원에 비해 일부 미비한 징계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이는 노사합의 없이 가능한 사항에 해당함.
  - 음주운전 징계규정의 경우 공무원과 달리 음주운전 규정이 없었으나, 경영지침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규정을 추가함.
  - 퇴직금 감액 규정의 경우 공공기관 임원은 해임되더라도 공무원과 달리 퇴직금 감액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경영지침을 개정하여 해임되는 임원의 퇴직금 감액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직원의 경우, 노사 합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내부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하였음.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25조(인사운영)에서는 기타공공기관 임직원이 징계로 해임되었을 때 퇴직금 감액 등 복무 관리를 규정한 「경영지침」 제31조 및 제44조의2를 기타공공기관에도 준용하도록 규정을 개정함.
  - 기타공공기관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을 유도하고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징계 기준을 강화하도록 「경영지침」 제31조 및 제44조의2<sup>73)</sup>를 우선 개정함.

72) 기획재정부, 「자율·책임·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2. 8. 18.

73) 공기업·준정부기관장은 임원의 성범죄·음주운전 등에 대한 징계 규정을 마련하고, 징계규정에는 해임된 임원 퇴직금 감액 내용을 포함해야 함

〈표 II-29〉 윤리경영 강화 관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출자기관 등의 운영) ① (생략)  <신설>	제4조(출자기관 등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략)	②출연·출자 사전협의는 당해연도 출연·출자 계획에 대해 연 2회 실시하되, 전년도 10월 말과 당해연도 4월말까지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제·개정, 정책상황의 변경 등 정책 추진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제11조(보수체계)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관의 경영목표, 업무 및 조직구성 등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직무가치·능력·성과 등에 기반한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 ⑧ (현행 제2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제11조(보수체계) ----- -----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수체계 운영 실태를 점검·평가할 수 있다.
제26조(징계 등 복무관리) ①·② (생략)	제26조(징계 등 복무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인사위원회 등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 ----- ----- -----.
④ ~ ⑩ (생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제29조(징계의 감경·가중) ①·② (생략)	제29조(징계의 감경·가중)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경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 사유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 해당 징계를 감경할 ---.
1.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 비위관련 징계 후 5년이 넘지 아니한 자	<삭제>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삭제>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삭제>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삭제>

〈표 II-29〉의 계속

개정 전	개정 후
5. 채용비위	<삭 제>
6. 제2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삭 제>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30조(징계 시효)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위의 경우는 5년)이 지나면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제30조(징계 시효) ① ----- 5년, 성매매·성폭력·성희롱의 경우는 10년-----.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제36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기관별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임원 직위 결원이 여러 명이고 그 결원발생 예정시기가 최초 결원발생 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하며, 시행령 제24조의2(임원후보자의 재추천 요구)의 경우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는 이사회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4조의2(임원의 징계 및 복무관리)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의 법령 위반, 직무태만,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음주운전 등에 대한 징계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임원에 대해 복무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징계 규정에는 해임된 임원의 퇴직금을 감액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자료: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10. 17.

### 3. 민간 - 공공기관 협력 강화

#### 가.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 정부는 공공기관을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혁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생산성 제고, 관리체계 개편에 이어 2022년 9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마련했음.
  - 공공기관이 가진 자산과 역량을 개방·공유하고 규제 관리체계 개편을 통해 민간 중심 경제 제도약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는 협력 강화방안을 발표함.
  
- 공공기관은 SOC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경제의 핵심 경제주체로서 거대한 자원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 공공기관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축적한 총 969조 원의 유·무형 자산과 연간 63조 원 이상의 막대한 조달·구매력 등을 보유하고 있음.<sup>74)</sup>
  - 국제적으로도 세계 3위 수준<sup>75)</sup>의 기업 가치를 보유하면서 SOC, 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sup>76)</sup> 중임.
  
- 최근 ESG 경영, 온실가스 감축, 중대재해 예방, 공급망 충격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민간의 혁신과 성장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보유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되는 상황임.
  - 그간 공공기관은 민간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민간 성장 기여도가 큰 데이터, 특허 등의 민간 개방·공유 노력은 부족<sup>77)</sup>한 것으로 평가됨.
  - 또한 민간 지원체계의 비효율성과 규제 해소에 대한 미온적 대응 등 국민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도 존재함.
    - 기업성장응답센터<sup>78)</sup>와 같은 규제·애로 해소 전담창구도 일부 기관에만 설치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74) 예산(2021): 761조 원(정부 예산의 1.3배), 조달·구매(2021): 63조 원(정부 조달의 1.5배)

75) 공기업 규모(OECD): (중국) 2조 9,201.1억 달러 (인도) 338.5억 달러 (한국) 217.8억 달러

76) (인천국제공항공사)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 12년 연속 1위(2005~2017), (한국가스공사) 세계 2위의 LNG 구매자(2021) 등

77) (데이터) 2013년부터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개방 → 기관당 60.6건만 개방 중(2022년 8월)

(특허·실용신안) 7.0만 건 보유 → 1.5만 건(21.6%)만 활용 중(2022년 8월)

78) 기업성장응답센터: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의 업무 중 겪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2020년부터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에 설치한 규제애로 해소 전담창구(총 125개 운영 중)

-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를 위한 첫 번째 방향은 개방 요구가 높은 데이터, 기술·특허, 편의시설 등 공공기관 보유 자산 및 역량을 민간에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를 확대하는 것임.
  - 공공기관 자원을 민간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이후의 사업화·판로 등 후속 단계까지 적극 지원함.
  - 중소기업을 위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우수기술·제품 구매, ESG 경영 지원, 해외 진출 정보 제공 등은 지원 수준을 더욱 강화함.
  
- 두 번째 방향은 공공기관 간 협업과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민간 협력 시너지 효과 창출을 극대화하는 것임.
  - 분야별 '공공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고 민간지원 효율화를 위한 공공기관 간 협업 창구 단일화 및 공공기관 간 지원수단 연계를 활성화함.
  
- 세 번째 방향은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규제 관리체계를 개편하는 것임.
  - 「경제 규제혁신 TF」를 통해 주무부처가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행하는 규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
  - 공공기관의 규제·애로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성장응답센터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공공기관의 자체적인 규제개선도 병행함.
  
- 정부는 3대 기본방향을 토대로 데이터, 기술·특허, 시설·인프라, 우수기술·제품, 해외네트워크, ESG 경영 등 세부 분야별로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구체화하여 추진할 계획임.
  -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의 추진체계 및 세부분야별 추진방향은 [그림 II-4]와 같음.

[그림 II-4]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 추진체계



<b>추진체계</b>	
<b>① 공공기관 협업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제도화</li> <li>▶ 해외진출·규제개선 등 분야별 협의체 확대</li> </ul>	<b>② 강력한 인센티브 체계 구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평가 반영</li> <li>▶ 예산운영 자율성 확대</li> <li>▶ 조직 인력 강화</li> </ul>

자료: 기획재정부,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9. 23.

〈표 II-30〉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세부 분야별 추진 방향

협력 분야	추진 방향
데이터	보유 데이터의 개방 확대 및 민간 활용 적극 지원
기술·특허	무료나눔 확대 및 유료 기술거래 활성화 환경 구축
시설·인프라	국민 편의를 위한 윈스톱 예약시스템 구축 및 의무 등록제 실시
우수기술·제품	중소기업 완성품 구매에 더해, 연구개발 수요 매칭까지 지원
해외네트워크	기관 간 협의체·플랫폼 등 통합지원체계(One-roof) 구축
ESG 경영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안전경영시스템 구축 등 지원

자료: 기획재정부,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9. 23.

## 나. 세부 분야별 추진방안

### 1) 데이터 개방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의 첫 번째 세부과제는 데이터 개방임.

〈표 II-31〉 주요 공공기관별 데이터 개방 현황

기관명	데이터	기대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MRI, CT 등 의료영상 데이터	정상데이터와 이상데이터를 함께 분석해 특정 질환발생을 진단하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개발 등 사업화 가능
한국부동산원	청약/입주물량 데이터	청약 및 입주 물량 데이터를 활용한 부동산정보 산업 콘텐츠 개발 및 중개·이사·가전·인테리어 수요 예측 등 사업화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플루엔자, 천식, 아토피 등 데이터	빅데이터 활용한 의료수요 예측 및 감염병 확산예측 모델 개발 및 사업화 가능
한국철도공사	철도고객 관광패턴 데이터	지역별 철도이용객의 선호 방문지 등 관광패턴 데이터 제공을 통해 여행업계와 지역상권의 마케팅전략 개발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시세 데이터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 낙찰가, 인근 토지 공시지가 등을 결합해 분양토지 낙찰가 등 예측 서비스 제공 및 사업화 가능
국민연금공단	지역별 국민연금 연금종별 수급자 현황	고령자를 위한 금융이동서비스 등 민간서비스 개발에 활용하여 연금수급자의 복지 증진 가능

자료: 기획재정부,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9. 23.

-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민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 협업 데이터 까지 추가 생산·공개하도록 함.
  - 또한 2022년 11월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료·부동산·연금 등 10개 핵심기관<sup>79)</sup>을 선정하여 양질의 중요 데이터 선도적으로 개방하기로 함.
  - 정부는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TF’를 설치(2022년 10월)하여 산업·금융·환경 분야 등 국민이 원하는 중요 데이터의 추가 개방을 추진함.
    -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관행이나 규제를 발굴하여 철폐하는 것을 병행하기로 함.
  -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방향 및 데이터 개방기준(네거티브 방식 등)에 맞춰 기관별 원천 데이터도 개방을 확대함.
    -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을 포함한 기관별 자체 개방계획 수립 후,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TF 논의를 거쳐 2023년 1분기부터 개방하기로 함.
  
- 또한 정부는 민간이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하면 공공기관이 가공·개방하는 ‘민간 수요 맞춤형 개방 체계’의 구축을 추진함.
  - 국민이 원하는 우수데이터 개방을 지속 유도하기 위해 개방한 데이터의 가치를 평가·공개하는 ‘데이터 등급제’도 도입하고자 함.
  - 이를 통해 가공 능력이 부족한 민간의 데이터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데이터의 질적 수준 제고 및 민간의 비즈니스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그림 II-5] 민간 수요 맞춤형 개방 체계



자료: 기획재정부,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9. 23.

7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 데이터 개방의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데이터를 지속 발굴하고 개방할 수 있도록 협업데이터 공동생산 체계를 구축함.
- 공공기관 또는 민간의 요청에 따라 다수 기관이 각각 소유한 데이터를 결합하여 활용도가 더 큰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고자 함.

[그림 II-6] 협업데이터 공동생산 및 제공 체계



자료: 기획재정부,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9. 23.

- 정부는 공공기관 데이터를 활용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창업 시, 사업화자금·교육·인큐베이팅 등을 지원하는 창업 지원 패키지를 지원함.
  - 창업진흥원이 운영 중인 예비창업패키지 및 초기창업패키지 지원 대상 선발 시, 창업자금(최대 1억 원), 맞춤형 창업교육 및 창업 멘토링을 지원함.
- 공공기관 단위에서 기관별로 창업자를 직접 돕는 데이터 활용 창업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함.
  - 창업자에게 맞춤형 데이터 제공 등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이터 창업지원 서포터즈’ 제도를 운영함.
  - 지적재산권 보호 컨설팅(한국특허정보원 등), 민간투자 유치 설명회(창업진흥원 등) 등 각 공공기관의 기존 특화지원제도를 강화함.
- 공공기관 데이터를 활용한 우수한 아이디어로 선정된 창업이 실패하더라도 재기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재창업을 유도함.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공공기관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기업이 폐업 등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재기 지원을 위한 보증료, 보증비율을 우대함.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창업 실패기업이 잔여채무로 인한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특수채무자감면대상’에 포함, 채권 매입과 채무감면을 통해 재창업의 기회를 제공함.

## 2) 특허·실용신안 개방

- 특허·실용신안 개방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실용신안 중 민간 수요가 높은 의료·바이오·통신 등을 중심으로 무료 기술이전을 확대 추진함.
  - 2023년까지 미활용 특허·실용신안 5.5만 건 중 20%를 무료로 기술 이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민간에 1조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 기업이 선호하는 분야를 고려하여 무료나눔 대상을 확정하고, 공고를 통해 민간 수요를 발굴하여 공공기관과 희망기업 간 기술이전을 추진함.
  
- 공공기관으로부터 특허·실용신안을 유료로 이전받은 중소기업의 사업화부터 판로까지 원스톱 지원을 강화함.
  - 공공기관 특허 등을 구입하는 영세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전 비용 지원을 검토함.
  - 공공기관 특허 등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이 제품화 추진 시, 후속 R&D 자금 및 기술 컨설팅을 지원함.
    - 재무 여건이 취약한 스타트업 및 영세 중소기업에 후속 R&D 및 이차보전을 지원함.
    - 특허를 이전받은 영세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화 관련 노하우 및 기술 컨설팅을 제공함.
  - 공공기관 특허를 활용하여 제품화에 성공한 경우, 특허를 이전한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를 추진함.
    - 기술마켓에 공공기관 특허 활용 제품을 등록·심사할 경우, 가점을 부여함.
  
- 기술중개기관 역량 강화, 기술료 거래 방식 개편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실용신안의 기술거래 활성화를 촉진함.
  - 민간 중개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 중개기관과 민간이 중개 과정을 함께 진행하며 노하우를 전수함.
  - 사업화 실패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기술 이전시점에 기술료를 지급하는 정액기술료 방식에서 매출 발생시점에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함.

## 3) 보유시설·장비 이용 편의성 제고

- 공공기관 전체 편의시설에 대해서 권고 형태로 운영 중인 개방시설 등록방식을 의무제로 변경하여 각 기관의 시설 개방<sup>80)</sup>을 확대함.
  - 상시 사용, 보안시설 등 개방 곤란 시설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함.
  - 우수 시설개방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통합공시 및 경영평가 등과의 연계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
    - 통합공시 무벌점 수정 기회 부여, 공공기관 보유 시설과 장비 이용·편의제공 노력 등을 평가함.
  
- 민간이 공공기관의 시설·장비를 이용하는 데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공공기관의 편의시설 및 장비를 한 곳에서 예약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예약 체계'를 구축함.
  - 1단계로 2022년 12월 알리오플러스(ALIOPLUS, [www.alioplus.go.kr](http://www.alioplus.go.kr))에 원스톱 통합예약시스템을 개통하였으며 2단계로 시스템 고도화 및 예약앱(APP) 개발을 추진 중임.

## 4) 기술력 있는 제품 등의 구매 활성화

- 우수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더해 연구개발 수요 매칭까지 지원함.
  - 그간 공공기관들은 <표 II-32>와 같이 기술마켓 플랫폼을 통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제품·기술을 구매함으로써 기업의 판로를 지원해 왔음.
  - 기존 완성품만 구매해 온 기술마켓 플랫폼에 공공기관 연구개발 수요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매칭하는 기능을 추가함.
    - 공공기관이 먼저 희망 제품·기술 사양을 제시하면,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연결하여 기업의 제품·기술 개발 및 판로까지 보장함.

80) 9개 유형 전체 보유시설 1만 2,525개 중 2,673개(21.3%)만 개방 중(2022년 8월)

〈표 II-32〉 공공기관 기술마켓 플랫폼 운영 현황

구분	주요 내용
개요	공공기관의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플랫폼, 2019년부터 시행
방식	공공기관들이 협업하여 기술제품 공동 인증 → 기술마켓 플랫폼 등록 → 공공기관 구매
실적	총 55개 기관이 참여, 우수 중소기업 제품 2,897억 원 구매(2022년 2분기 누적)
경과	분야별 순차 개통 중: SOC 분야(2019년 6월) → 에너지 분야(2020년 10월) → ICT 분야(2021년 12월)

자료: 기획재정부,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9. 23.

-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실증테스트 및 판로 등을 적극 지원하고, 정부·공공기관의 R&D 과제를 추진하거나, 실증 테스트 등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기술마켓’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함.
  - 기술마켓 참여 공공기관의 구매를 전제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우수 중소기업에 연구비를 지원함.
    - 공공기관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공공기관이 희망한 제품 사양대로 제품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도 연구비를 지원함.
  - 정부 R&D를 통해 개발한 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후속 R&D를 지원하고, 성능시험을 위한 K-테스트베드를 연계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보유한 실증 인프라를 민간의 신기술 시험에 제공함.
  - 기술마켓에 참여한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 공동연구를 확대함.
  
-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고도화를 추진함.
  - 중소기업이 R&D 등 각종 지원 프로그램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통합 지원 HUB’를 구축함.
    - R&D(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한국연구재단), 금융(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각 분야별 전문 기관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요를 발굴하고 매칭함.

## 5) 해외 진출 및 수주 지원 협업 네트워크 구축

-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주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출, 투자·창업, 해외 프로젝트 수주, 자원개발, ESG 등 해외진출 각 분야별로 공공기관 협의체를 구축함.
  - 기관별 전문역량에 따른 역할 분담, 협업체계 구축, 지원수단 연계, 거점지역 선정 등 전략적·체계적 지원을 추진함.
- 해외진출 지원 플랫폼 활성화 등 공공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함.
  - 통합 해외진출 정보 플랫폼에 대한 공공기관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해외정보 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
    - 해외경제정보드림<sup>81)</sup>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수 확대 및 기관별로 특화된 해외진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한 곳에서 해외진출 정보 통합 문답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함.
- 우수품목·바이어 발굴, 거래알선 등을 위한 온라인 수출 플랫폼에 공공기관의 노하우·네트워크를 제공함.
  - 고비즈 코리아(Gobiz-Korea)<sup>82)</sup>에 공공기관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품목별·지역별 우수상품 발굴, 해외 바이어 검증·선별을 지원함.
- 공공기관을 통해 해외 유명 글로벌 기업의 혁신기술 수요와 국내 유망기업 간 매칭을 추진함.
  -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진입 지원사업과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국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적극 연계함.
  - 실증 테스트 지원과 사업화 및 R&D 자금도 연계함.

## 6) 중소기업의 ESG 경영, 온실가스 감축, 안전경영 구축 지원

-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을 선도적·체계적으로 지원함.

81) 2020년 구축해 2022년 9월 기준 79개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 참여 중(공공기관 25개), 해외시장·투자·조달 등 해외진출 정보 통합 제공(dream.kotra.or.kr)

82) B2B 플랫폼으로 30만 해외 바이어에게 한국 중소기업제품 홍보·거래알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공기업은 자체적으로 ESG 경영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출자기관 및 협력 업체에 ESG 컨설팅을 실시함.
  - 환경·윤리경영 준수를 위한 MOU 체결, ESG 경영 수준에 대한 주기적 점검, 개선계획 수립·이행 등을 지원함.
- 중소기업 지원 공공기관<sup>83)</sup>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초기 진입단계 중심으로 전문 ESG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함.
  - ESG 경영기획·평가대응을 위한 사내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수출기업 및 하도급 기업에 대한 특화교육을 제공함.
-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전문 공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환경·안전 분야별 정보를 제공함.
  - 환경 분야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이 중소기업에 필요한 환경 분야 법·제도 등 관련 정보를 ESG 정보 플랫폼을 통해 맞춤형으로 제공함.
    - 한국환경공단은 주류수입업계에 자원순환분야 전반 법령·제도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재활용·친환경포장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2021년 12월)함.
  - 안전 분야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중심으로 고위험 사업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안전관리체계 구축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함.
    - 2022년 11월부터 민간기업이 ‘공공기관 CEO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리오플러스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 7) 공공기관 규제·애로 관리체계 개편

- 공공기관을 통해서 각 부처 규제 실태조사 및 개선 등 규제혁신을 추진함.
  - 각 부처가 법령 등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을 통해 행하고 있는 전체 규제 현황을 파악함.
  - 민간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sup>84)</sup>」를 활용하여 공공기관과 관련된 부처의 규제 발굴 및 해결방안을 강구함.
    - 경제 규제혁신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규제개선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역할을 강화함.

83)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등

84)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정부위원 11명, 민간위원 12명으로 구성, 경제 분야 규제혁신 및 분야별 핵심규제 개선안 발표

- 공공기관의 자체 규제에로 발굴 시스템을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함.
  - 공기업·준정부기관만 설치·운영 중인 기업성장응답센터<sup>85)</sup>를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 설치함.
  - 공공기관 규제 개선사항을 폭넓게 파악하기 위해 요구주체를 중소기업 위주에서 중견·대기업까지 확대함.
  
- 공공기관의 규제개선 인센티브 및 역량을 강화함.
  - 기업성장응답센터 설치 여부와 함께 운영 실적이 평가되도록 평가지표를 구체화하고 배점 확대 등을 검토함.
    - 평가지표에서 ‘기업성장응답센터 운용’만 평가하던 것에서 ‘기관의 규제개선 노력 및 실적, 기업성장응답센터 운영실적’으로 구체화함.
  - 공공기관의 규제개선 역량 제고를 위해 기업성장응답센터 직원에 대한 온·오프라인 형태의 역량교육을 실시함.

## 다. 분야별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 1) 데이터 개방

-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1,178건의 데이터를 우선 개방했으며, 개방 후 데이터의 민간 활용 제고방안을 마련 중임.
  -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부동산·의료 등 10대 핵심기관의 데이터 192건을 우선 개방(2022년 11월~12월)함.
  - 산업·금융·환경 등 분야의 120개 기관을 중심으로 국민요청 549건과 자체발굴 437건을 추가 개방(2022년 11월~2023년 1월)함.
    - 대표적으로 벤처회사 ‘와이리’는 한국관광공사가 개방한 관광데이터(내비게이션 이력 등)를 활용해 기존 당일치기 상품과 차별화된 1박 2일 서핑여행상품을 개발·운영하여 월매출이 180% 증가함.
  -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지원 및 사업 실패 시 재창업 등을 위한 지원 제도를 정비(2022년 11월)함.

85) 중소기업이 겪는 규제·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2020년부터 설치한 규제 애로 처리창구(총 125개 기관이 중소기업 ombudsman과 공동 운영 중)

- 창업자에게 맞춤형 데이터 제공 등 윈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이터 창업지원 서포터즈<sup>86)</sup>'를 지정 완료함.
- 창업진흥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창업 관련 공공기관의 지적재산권 보호 컨설팅, 민간투자 유치 설명회 등 지원제도를 마련함.
-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창업이 불가피하게 실패하더라도 재기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토록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 공공기관의 제도를 정비<sup>87)</sup>함.

〈표 II-33〉 주요 공공기관별 데이터 개방 활용사례

기관	데이터	활용사례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정보	TOSS(금융플랫폼 앱) 내 '부동산 청약 통합조회 서비스' 개발 시 활용
	입주예정 물량정보	빌트인 가전제품 수요 추정 및 생산 계획 수립 시 활용
한국철도공사	철도이용객 관광패턴	여행사가 여행상품 개발에 활용 * 아름, (주)여수여행센터, 장안힐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뇌동맥류 MRI영상	뇌동맥류 정보를 분석하여 보조적인 진단 정보를 제공하는 AI 알고리즘 개발 중(뉴로핏)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정보	헬스케어앱 건강상태 분석, 검진예약 서비스 개발에 활용 * KeepWell(SK(주) C&C), 케어나우(주)한국인삼공사, 어떡케어(주) GC케어)

자료: 기획재정부,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3. 2. 27.

- 정부는 공공기관 데이터 활용 제고, 기관 간 협업 및 개방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실무TF를 매달 개최하여 데이터 개방의 양적 확대와 함께 민간의 데이터 활용 제고방안을 마련함.
  - 국민 개방요구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기관별 개방실적을 관리함.
  - 주기적인 데이터 개방 만족도조사를 통해 추가개방 수요조사 및 우수사례 전파, 개방된 데이터의 실제 활용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함.

86) 창업지원자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데이터 정보가 필요해 관련 담당자를 찾을 때 데이터 서포터즈가 이를 연결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87) 재기 지원을 위한 보증료·보증비율 우대(신용·기술보증기금): 2023년 상반기 개정  
잔여채무 처리를 위한 특수채무자감면대상 포함(한국자산관리공사, 2023년 2월 개정)

- 협업데이터 수요조사 및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 실적을 알리오플러스에 공개하고 실적비교를 통해 데이터 개방 확대를 유도할 계획임.

## 2) 특허·실용신안 개방

- 개방체계 구축 후 국민 관심이 높은 전기전자 분야 등 19개 기관 505건의 특허·실용신안을 무료 개방하고, 사업화·판로지원 및 기술거래 활성화를 촉진함.
- 2022년 12월에 공공기관 기술 무료나눔을 위해 기술거래 협의체 출범 및 무료 나눔 가이드라인을 배포 완료함.
  - 한국발명진흥회, 기술보증기금 등 17개 기관<sup>88)</sup>이 참여하는 ‘기술거래를 위한 공공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무료나눔 특허 선정기준 마련, 기술거래 중개 지원, 참여 공공기관 간 정보공유 등을 수행함.
  - 특허 무료나눔 시 공공기관이 참고할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함.
- 개방체계 구축 후 2023년 1월에는 국민 관심이 높은 의료·전자·바이오 분야 등 19개 기관 505건의 특허·실용신안을 무료로 개방함.
- 공공기관 특허를 이전받은 중소기업의 제품화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후속 R&D 자금 및 기술 컨설팅을 지원함.
  - 2022년 12월에는 공공기관 특허 활용 제품을 기술마켓<sup>89)</sup>에 등록하고 심사할 경우 가점<sup>90)</sup>을 부여토록 제도를 정비함.
  - 2023년 1월에는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사업화 비용, 이차보전, 사업화 기술컨설팅 등을 지원함.
- 기술료 거래방식 변경 및 통상실시 원칙 폐지 등을 통해 기술거래 활성화를 촉진함.
  - 2023년도 경영평가 편람 개정을 통해 기술료 거래방식을 민간이 선호하는 경상 기술료 방식으로 개편<sup>91)</sup>함.

88) (공공기술거래기관: 12개) 한국발명진흥회, 기술보증기금,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임업진흥원

(자문·지원기관: 5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전력공사

89) 공공기관의 기술력 있는 우수중소기업 제품 구매 플랫폼

90) 공동검증 심의 시 평가항목 4개 중 2개 항목(혁신성,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적합”

91) (정액기술료) 기술 이전시점에 기술료를 지급하는 방식, 사업화 실패 시 큰 부담

(경상기술료) 매출 발생시점에 기술료를 지급하는 방식, 사업화 실패 부담 완화

〈표 II-34〉 무료나눔 특허·실용신안권(505건) 분류

(단위: 건)

기술분류	기계	바이오· 의약학	소재	식품 농수축산	에너지· 자원	전기전자
건수	74	54	21	3	201	46
정보통신	지식 서비스	철도·토목	화학공학	해양공학	환경	합계
35	8	4	30	1	28	505

자료: 기획재정부,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3. 2. 27.

- 향후에는 매월 무료나눔 대상을 선별하여 2023년 말까지 1만 건 특허·실용신안 무료나눔을 추진할 계획임.
- 민간기술거래기관의 역량 제고를 위해 기술거래 플랫폼<sup>92)</sup>을 신규 구축(2023년 2월) 하고, 민간-공공 기술거래기관 간 공동중계를 통한 노하우를 전수함.

### 3) 보유시설·장비 이용편의성 제고

- 2023년 1월 기준으로 국민 수요가 높은 주차장, 체육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4,040개 및 심장제세동기 등 1,719개 장비를 신규로 개방함.
- 기획재정부는 한 곳에서 공공기관의 모든 개방 시설과 장비를 예약할 수 있는 통합예약시스템을 2023년 1월에 오픈함.
  - 예약단계를 5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고 검색조건을 2개에서 5개로 상세화 하는 등 시설·장비 예약의 편의성을 제고함.
- 2023년 1월 시설·장비 개방 이후, 알리오플러스 예약시스템의 방문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약 2.6배로 큰 폭으로 증가함.

〈표 II-35〉 공공기관 보유 시설 개방 현황

(단위: 개)

구분	합계	주차장	체육	문화	회의실	강의실	강당	숙박	다목적
시행 전	2,673	1,039	426	236	373	295	217	60	3
시행 후	4,040	1,422	506	291	495	357	224	61	25

자료: 기획재정부,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3. 2. 27.

92) 스마트 테크브릿지: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며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해 범부처 정보를 연계하는 개방형 플랫폼

- 기획재정부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 온라인점검단 활용 등을 통해 통합예약시스템 기능을 개선할 계획임.
- 인터넷 예약시스템이 없는 공공기관(180개)도 알리오플러스 및 앱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미개방 시설에 대한 추가 개방을 추진할 계획임.

#### 4) 기술력 있는 제품 등의 구매 활성화

-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지원 활성화, 기술마켓 기능 고도화 및 이용편의성 개선을 통해 혁신기업 육성에 기여함.
- 2019년 6월 기술마켓 오픈 이후, 최근 3년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기술 누적 구매실적은 3,753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공공기관 위주의 판로지원에서 연구개발·제품화·해외진출 지원 등 기술마켓 기능 확대로 민간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 2022년 12월에는 'K-테스트베드'에서 성능시험을 거친 우수 시제품은 기술마켓 인증 요건을 간소화함.
  - 또한 금융·해외진출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공기관 통합지원 HUB'를 신규 구축함.
  - 2023년 1월에는 공공기관 연구개발 수요에 따라 기술마켓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R&D 정책과제 지원방안을 협의함.
- 2022년 12월에 기술마켓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불편·애로사항에 대한 건의를 받아 제도를 개선함.
  - 공공기관 공모횟수를 연 4회에서 6회로 확대하고, 전문가 심의·인증기간을 11주에서 8주로 단축하였으며 기업 신청서류를 21종에서 10종으로 대폭 간소화함.

〈표 II-36〉 분야별 기술마켓 구매실적(2023년 1월 기준)

(단위: 억 원, 괄호: 등록 제품·기술 수)

구분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합계	3,753 (490)	256 (104)	896 (123)	250.0 (18.3)	2,601 (252)	190.3 (104.9)
SOC(2019. 6.)	1,987 (311)	251 (79)	542 (95)	115.9 (20.3)	1,194 (137)	120.3 (44.2)
에너지(2020. 10.)	1,580 (100)	5 (25)	354 (28)	6,980.0 (12.0)	1,221 (47)	244.9 (67.9)
ICT(2021. 12.)	186 (79)	-	-	-	186 (79)	-

자료: 기획재정부,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3. 2. 27.

- 앞으로 참여 공공기관별 구매실적 집계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용자 평가에 기반한 인증기술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 등록건수, 활용기관, 금액 등 활용실적을 자동 집계해 DB화하고, 이용자의 인증 기술 사후평가 결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축함.
- 중소기업의 기술마켓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참여 마일리지제’를 도입할 예정임.
  - 기술마켓 인증기술 수 상위 기업, 공모전·경진대회 참여율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통합지원HUB’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정책 우선 매칭 등 인센티브 제공함.

5) 공공기관 규제·애로 관리체계 개편

- 2022년 전체 공공기관(350개) 대상으로 규제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230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주무부처·공공기관 간 교차 검토 중임.
- 공공기관의 규제발굴 체계인 기업성장응답센터 설치기관(125개)을 공기업·준정부 기관에서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함.
  - 2022년 11월에는 모든 공공기관이 규제·애로 전담 처리창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기업성장응답센터 구축·운영 가이드 라인을 배포 완료함.
- 2022년 12월에는 각 공공기관의 기업성장응답센터 설치 및 운영 유도를 위해 경영평가 지표에 관련내용을 추가함.

- 정부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통해 분야별 핵심규제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임.
  - 2023년도 경영평가 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를 통해 기관별 규제개선 노력 등을 평가할 예정임.
    - 관련 평가지표인 기관의 규제 개선 노력 및 실적, 기업성장응답센터 운영실적 (공기업 비계량지표 2점, 준정부기관 비계량지표 1점) 등을 통해 평가할 예정임.

2023 공공기관 현황편람

## Ⅲ

# 2023년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정보

1. 일반현황
2. 인력현황
3. 재무현황
4. 손익현황
5. 보수수준
6. 외부 평가결과



III

2023년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정보

- 제III장에서는 2023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일반현황, 인력, 손익 및 재무현황과 외부평가결과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제시하고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자 함.
  - 2023년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정보는 347개 공공기관(2023년 1월 기준)<sup>93)</sup>과 15개 부설기관이 2023년 4월 말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정기 공시한 경영정보<sup>94)95)</sup>를 기준으로 작성함.
  - 또한 2022년도 경영실적평가결과,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청렴도 측정결과 등 외부평가결과는 주관 정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와 알리오시스템에 공시된 자료를 참고함.
  -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홈페이지 및 개별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함.
- 일반현황은 알리오시스템 일반현황, 관계부처 및 기관 홈페이지,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분포, 공공기관 설립형태, 공공기관 자회사 현황, 공공기관 지역별 분포 및 지역발전계획 주요 내용<sup>96)</sup> 등을 정리함.
- 인력, 손익 및 재무현황은 2023년 4월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내용과 알리오시스템의 주요 통계 및 기관별 통합공시 정보 등을 분석하여 정리함.
- 외부평가결과는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그리고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에 대한 분석과 주요 특징을 정리함.

93) 주요 경영정보 분석대상 공공기관은 2023년 1월 지정 공공기관으로 2023년 6월 법인 해산된 재외동포재단은 포함되나 「재외동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신설 출범되고 2023년 6월 공공기관으로 수시 지정된 재외동포협력센터는 포함되지 않음

94) 기획재정부, 「347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23. 4. 28.

95) 2023년 1월 지정된 350개 공공기관 및 그 부설기관(15개)은 「공운법」 제12조 및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여 2023년 4월 말까지 2022년 말 기준의 경영정보를 정기공시하여야 함

96)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홈페이지(<http://innocity.molit.go.kr/index.do>) 및 기관 홈페이지 참고

- 먼저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는 「공운법」 제48조에 근거하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실시하고 있는 기관 경영실적평가의 주요 결과를 정리함.<sup>97)</sup>
  - 따라서 주무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는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공운법」 제13조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 고객만족도 조사와 주무부처 주관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한 결과를 포함함.
  - 알리오시스템에 공시된 2022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sup>98)</sup>를 참고하여 주요 특징을 분석함.<sup>99)</sup>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결과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청렴도 평가 중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학 또는 공공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일부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종합청렴도 측정결과에 대해 정리함.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청렴도 측정결과를 토대로 유형별 측정 결과, 전년 대비 특징 등을 분석하여 정리함.<sup>100)</sup>
-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는 「공운법」 제12조에 따라 알리오시스템에 공공기관이 공시한 경영정보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점검한 결과를 정리함.
  - 기획재정부가 전년도 통합공시 정보에 대해 정확성 및 충분성을 점검한 결과<sup>101)</sup>를 토대로 항목별 점검결과, 별점현황, 전년 대비 개선 수준 등을 분석하여 정리함.

97) 외부평가결과 중 기관 평가결과는 기획재정부의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2022. 10.,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실시계획」,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3. 2. 27.,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재무성과 따라 '희비' 엇갈렸다」, 보도자료, 2023. 6. 16.,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3. 6. 16. 및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2022. 12. 19. 참고

98) 매년 1분기 정기공시(매년 4월 말) 시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4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을 통해 공개되는 전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작성

99) 주무부처 주관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기관이라 할지라도 주무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알리오시스템에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 공시되지 않은 기관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100)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 자료실」에 공개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2022. 5.,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3. 1., 「2022년도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3. 1., 「2022년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3. 1. 및 기획재정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3. 1. 30.을 활용하여 작성(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자료실: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bid=INTG>)

101)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전자문서 작성지침」, 2023. 3. 24., 「'22년도 공공기관 경영공시 전년보다 정확해졌다」, 보도자료, 2023. 4. 4. 및 「'22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3. 4. 4.을 활용하여 작성

## 1. 일반현황

### 가.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분포<sup>102)</sup>

- 「공운법」에 따라 2023년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47개 기관을 주무부처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총 35개 정부 부처가 산하에 공공기관을 보유하고 있음.
- 2022년과 마찬가지로 35개 부처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 수(43개)가 가장 많고 23개 부처가 산하에 10개 미만의 공공기관을 보유하고 있음.
  - 인사혁신처,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등 6개 부처의 산하 공공기관은 각 1개로 나타남.
- 2023년 1월 지정 공공기관 기준,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수 및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Ⅲ-1>과 같음.

<표 Ⅲ-1>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분포(2023년 1월 기준)

(단위: 개)

구분	계 (347)	시장형 공기업 (13)	준시장형 공기업 (19)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4)	기타 공공기관 (260)
기획재정부	4	0	1	0	0	3
교육부	22	0	0	0	1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3	0	0	0	6	37
외교부 <sup>1)</sup>	3	0	0	0	1	2
통일부	2	0	0	0	0	2
법무부	3	0	0	0	0	3
국방부	3	0	0	0	0	3
행정안전부	3	0	0	0	1	2
국가보훈부 <sup>2)</sup>	3	0	0	0	1	2
문화체육관광부	31	0	1	1	1	28
농림축산식품부	12	0	1	0	3	8
산업통상자원부	41	11	6	1	10	13
보건복지부	28	0	0	1	3	24
환경부	12	0	1	0	4	7

102)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현황(유형별 분포 현황)은 <부록 1> 참고

〈표 III-1〉의 계속

(단위: 개)

구분	계 (347)	시장형 공기업 (13)	준시장형 공기업 (19)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4)	기타 공공기관 (260)
고용노동부	12	0	0	1	4	7
여성가족부	5	0	0	0	0	5
국토교통부	28	2	7	0	4	15
해양수산부	17	0	1	0	1	15
중소벤처기업부	11	0	0	2	1	8
국무조정실	25	0	0	0	0	25
방송통신위원회	2	0	1	0	0	1
원자력안전위원회	3	0	0	0	0	3
금융위원회	7	0	0	4	0	3
공정거래위원회	2	0	0	0	1	1
인사혁신처	1	0	0	1	0	0
식품의약품안전처	4	0	0	0	0	4
관세청	1	0	0	0	0	1
방위사업청	2	0	0	0	0	2
경찰청	1	0	0	0	1	0
소방청	1	0	0	0	0	1
문화재청	1	0	0	0	0	1
농촌진흥청	1	0	0	0	0	1
산림청	4	0	0	0	1	3
특허청	6	0	0	0	0	6
기상청	3	0	0	0	0	3

주: 1) 외교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중 재외동포재단이 2023년 6월 해산되고 재외동포청 산하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신설 및 수시지정(기타공공기관)됨에 따라 2023년 7월 현재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이 총 2개로 감소하고 재외동포청 산하 공공기관이 1개 추가됨

2)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2023년 6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 출범함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3. 1. 30.를 참고하여 작성

□ 2023년 6월 외교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이 해산 및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되고 후속하여 신설된 재외동포청 산하에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신규 출범하고 「공운법」상 기타공공기관으로 수시 지정됨에 따라 2023년 7월 현재 공공기관 수는 347개로 유지되었으나 공공기관을 보유한 주무부처는 35개에서 36개로 증가함.

- 외교부는 재외동포재단 해산으로 산하 공공기관 수가 3개에서 2개로 감소함.
  - 신설 정부조직인 재외동포청은 2023년 6월 수시 지정된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보유하고 있어 산하 공공기관 수는 1개임에 따라 정부 부처 중 산하 공공기관 수가 1개인 부처는 종전 6개에서 7개로 증가함.
- 산하 공공기관이 30개 이상인 정부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임.
- 3개 부처 소관의 공공기관 수는 115개로 전체 공공기관의 33.1%를 차지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은 2022년에 비해 4개 감소한 43개 기관이며 분야 특성상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6개 기관)과 기타공공기관(37개 기관)만 분포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중 25개 기관이 '연구개발목적기관'에 해당하며 전체 연구개발목적기관의 35.2%를 차지함.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은 2022년과 동일하게 41개 기관이며 공공기관 유형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기업이 가장 많이 보유한 정부 부처로 32개 공기업 중 17개 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에 해당함.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중 (주)강원랜드를 제외한 16개 기관은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에 해당함.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은 31개이며 이 중 28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임.
    -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 공기업은 1개 기관으로 그랜드코리아레저(주)가 이에 해당함.
-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개발목적기관은 2019년부터 별도 분류하기 시작하였으며 2023년 공공기관 지정 시 14개 부처의 71개 기관이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되었으며 2022년 대비 4개 기관이 감소함.
- 2023년 공공기관 지정 결과, 연구개발목적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 4개 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이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됨에 따라 연구개발목적기관 수가 75개에서 71개로 감소함.
  - 연구개발목적기관의 70.4%인 50개 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 산하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목적기관은 25개로, 이 중 22개 기관이 「과학기술기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

하며 나머지 3개 기관은 개별 설립근거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임.

- 국무조정실 소관 연구개발목적기관은 25개 기관으로 모두 「정부출연기관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임.

○ 연구개발목적기관의 부처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I-2>와 같음.

<표 III-2> 주무부처별 연구개발목적기관 분포(2023년 1월 기준)

(단위: 개)

주무부처	기관 수	주무부처	기관 수
교육부	1	해양수산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	중소벤처기업부	1
국방부	1	국무조정실	25
문화체육관광부	1	원자력안전위원회	2
산업통상자원부	2	방위사업청	2
보건복지부	3	특허청	1
환경부	3	기상청	2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3. 1. 30.을 참고하여 작성

□ 2023년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분포를 2022년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2개 부처에서 산하 공공기관 수 변화가 발생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허청 등 2개 부처는 기존 공공기관 지정해제 및 신규 공공기관 지정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소관 기관 수가 달라짐.
- 2022년 대비 2023년 소관 공공기관에 변화가 있던 부처의 전년 대비 변동내역을 정리하면, <표 III-3>과 같음.

<표 III-3> 2023년 주무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수 변동 내역

(단위: 개)

구분	기관 수		전년 대비 변동내역	
	'22년	'23년	제외(지정해제)	추가(신규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7	43 (△4)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
특허청	5	6 (+1)	-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3. 1. 30.을 참고하여 작성

## 나. 공공기관 설립형태<sup>103)</sup>

### 1) 설립 근거법령에 따른 설립형태<sup>104)</sup>

- 공공기관의 설립형태는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음.
  - 개별 설립 근거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형태의 기관
  -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sup>105)</sup>
  
- 2023년 공공기관의 설립형태를 살펴보면, [그림 Ⅲ-1]과 같음.
  - 347개 공공기관의 83.6%인 290개 기관이 개별설립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은 전체의 16.4%인 57개 기관임.
  - 공기업은 개별 설립 근거법령 또는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됨.
    - 개별설립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기업은 전체 32개 기관 중 19개임.
    -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13개 공기업은 한국광해광업공단(1개), 한국가스공사(1개), 한국전력공사(9개), 한국철도공사(1개) 및 한국관광공사(1개)의 자회사에 해당함.<sup>106)</sup>
  - 반면 준정부기관은 전체 55개 기관 중 53개 기관(96.4%)이 개별설립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임.
    -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은 없으며 「민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은 2개 기관임.
  - 기타공공기관은 대부분의 기관(218개, 83.8%)이 개별 설립 근거법령에 따라 설립됨.
    - 「민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공공기관은 28개 기관이며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공공기관은 14개 기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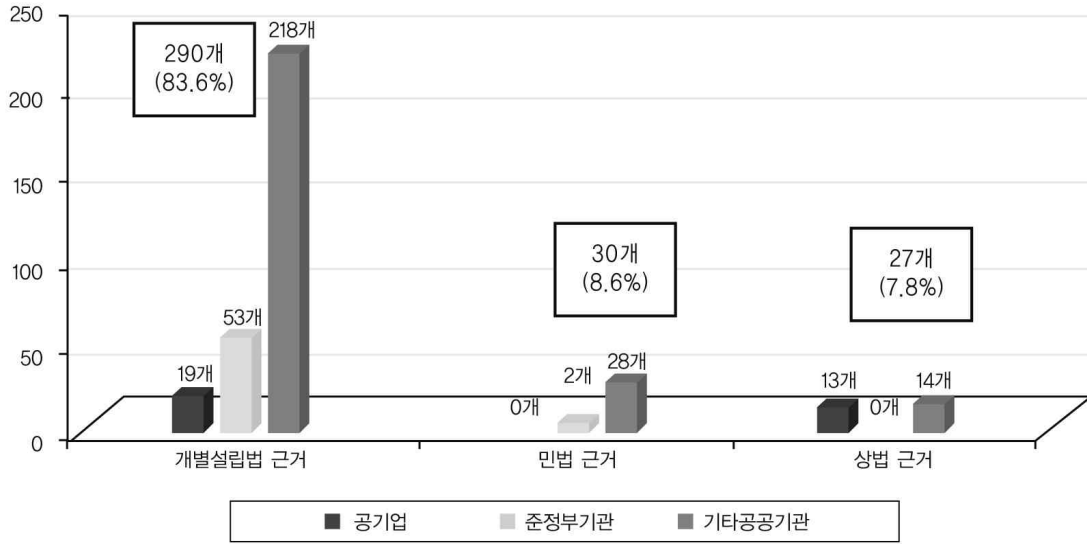
103) 2023년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47개 기관을 기준으로 작성

104) 기관별 설립근거는 <부록 2> 참고

105) 다른 법률에 설립근거 없이 상법에만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을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분류

106) <표 Ⅲ-10> 공공기관 자회사 현황 참고

[그림 III-1] 공공기관 설립형태 분포(설립 근거법령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 일반현황'의 기관별 공시내용(2023. 4. 28.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개별 설립 근거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형태의 기관은 2022년 대비 3개 기관이 감소한 290개(83.6%)이며 이를 통해 법령에 근거하여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음.

- 법률상 명문화된 기관 설립근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은 통상적으로 특수법인으로 일컬음.<sup>107)</sup>
- 법령상 기관 설립근거는 특정기관의 설립 및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서 특정기관의 설립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조문에 근거하는 경우로 구분됨.
  -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등이 전자에 해당함.
  - 다른 법률에 설립근거 조항을 둔 기관으로는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41조에 각각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 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이 대표적임.

107) 개별 법률에 설립근거는 있으나 법조문상 기관명이 명문화되지 않은 경우는 개별 설립 근거법령에 따라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2023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된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등 4개 과학기술원은 개별설립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함.
  -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원산지정보원은 2023년 7월 개정 「관세법」 시행에 따라 「민법」상 재단법인이었던 (재)국제원산지정보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여 신규 출범한 기관임.
    - 「관세법」 제233조의2에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부칙을 통해 한국원산지정보원이 (재)국제원산지정보원의 지위를 승계함을 명문화함.
  - 2023년 6월 기관 해산된 재외동포재단과 신설기관으로 수시 지정된 재외동포협력센터는 모두 개별설립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며, 기존 「민법」상 재단법인이었던 (재)국제원산지정보원이 특수법인인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 전환하여, 연중 특수법인인 공공기관의 수는 1개 증가함.
    - 기관 해산된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었고, 수시 지정된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재외동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함.
- 개별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형태의 공공기관은 30개 기관(8.6%, <표 III-4>)임.
- 「민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 중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29개 기관은 「민법」상 재단법인에 해당함.
    - 「민법」상 사단법인인 공공기관은 2022년과 마찬가지로 1개 기관임.
  - 「민법」상 재단법인은 2023년에 특수법인으로 전환된 기관(한국원산지정보원)과 신규 편입된 기관(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 각 1개씩 발생하여 기관 수는 2022년과 마찬가지로 29개임.
    - 2023년 7월 개정 「관세법」 시행에 따라 재단법인이었던 (재)국제원산지정보원은 특수법인인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 신설 출범함.
    - 2023년 신규 지정된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종전에 한국특허정보원의 부설기관이었던 특허정보진흥센터가 2022년 8월 별도법인으로 분리되어,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신설 출범한 기관임.

- 공공기관 중 공기업·준정부기관 구분의 양적 기준 강화를 위한 「공운법」 시행령 개정의 영향으로 「민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의 유형별 분포는 전년도와 차이를 보임.
- 2023년 공공기관 지정 시 「민법」상 재단법인 중 (재)우편사업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4개 기관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됨.
- 그 결과,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의 준정부기관 수는 2022년 6개에서 2023년 2개로 감소함.

<표 III-4> 「민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30개 기관)

구분	기관명	
재단법인 (29)	준정부기관 (2개)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기타 공공기관 (27개)	(재)APEC기후센터,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노사발전재단,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재단법인 국악방송,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사단법인 (1개)	기타 공공기관 (1개)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주: 밑줄 친 기관은 2023년 신규로 지정된 공공기관임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 일반현황'의 기관별 공시내용(2023. 4. 28.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개별 설립 근거법령이나 「민법」이 아닌 「상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은 2022년과 동일한 27개(7.8%, <표 III-5>)임.
- 「상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은 개별 설립 근거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민간 부문의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임.

-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은 13개 공기업과 14개 기타공공기관으로, 준정부기관 중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은 없음.
- 88관광개발(주)<sup>108)</sup>을 제외한 26개 기관은 공공기관의 자회사로 모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은 전년 대비 변동이 없음.

〈표 III-5〉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27개 기관)

구분	기관명
공기업 (13개)	(주)강원랜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 한전KPS(주)
기타공공기관 (14개)	(주)공영홈쇼핑,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전MCS(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88관광개발(주)

주: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 중 88관광개발(주)는 공공기관 자회사가 아님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 일반현황'의 기관별 공시내용(2023. 4. 28. 기준)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 2) 설립재원 조달방식에 따른 설립형태 구분

- 공공기관의 설립형태는 설립재원 조달방식에 따라 자본금을 출자받아 설립하는 기관과 이외 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자본금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타 민간 등이 납입한 자금으로 구성함.
  - 일부 기관은 관계법령이나 정관에 근거하여 자본금을 주식으로 분할(주식 발행)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함.
- 자본금 출자가 아닌 다른 재원조달 방식으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타 민간 등의 출연을 통해 기본재산을 구성하여 기관을 설립하는 경우와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로 기관을 설립하는 경우<sup>109)</sup>가 있음.

108) 88관광개발(주)은 국가보훈부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정부출자기관임

109)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기관 설립 시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함

- 외부기관의 출자를 통해 설립된 공공기관(<표 III-6>)은 전체 공공기관 중 64개 기관임.
- 외부기관 출자를 통해 설립된 공공기관은 2022년과 동일하게 64개 기관임.
  - 출자 방식에 따라 설립된 기관을 공공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기업은 29개, 준정부기관은 7개, 기타공공기관은 28개 기관임.
    - 「공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공공기관 중 공기업 4개, 준정부기관 1개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됨.<sup>110)</sup>
    - 전체 공기업 32개 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마사회, 해양환경공단 등 3개 기관을 제외한 29개 공기업이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기관임.
    - 준정부기관 중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기관은 2022년 대비 1개 감소한 7개 기관이며, 이는 개정된 「공운법」 시행령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되었기 때문임.
    -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기타공공기관 또한 「공운법」 시행령 개정의 영향으로 2022년 23개 기관에서 2023년 28개 기관으로 증가함.<sup>111)</sup>
  - 출자방식으로 설립된 64개 기관 중 46개 기관이 설립 근거법령 또는 기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하고 주식을 발행하고 있음.<sup>112)</sup>
    - 기관은 설립 근거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수만큼 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출자자는 출자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됨.
  - 주식을 발행하는 46개 기관 중 8개 기관이 상장기업에 해당함.
    -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된 기관 중,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 상장된 공공기관은 8개 기관임.
    - 상장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공운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한국거래소가 정한 유가증권시장의 상장규정 요건 등을 준수하여야 함.<sup>113)</sup>

110)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공공기관 중 「공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 기관은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4개 기관이며, 준정부기관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 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 1개 기관임

111) 2022년 공공기관 중 4개의 공기업과 1개의 준정부기관이 2023년에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됨

112)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18개 공공기관의 출자자는 출자금에 해당하는 출자증권 또는 출자증서를 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음

113) ① 일반기업의 상장은 규모요건, 분산요건, 경영성과 요건, 안정성 및 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나, 공공기관을 상장하는 경우에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1조 제1항의 '공적법인 등과 지주회사에 관한 특례'를 적용함

②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특례에 따라 공공법인과 민영화 대상 공기업은 양도제한 요건만을 적용하고,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은 분산요건, 양도제한 요건만을 적용하고 있음

- 2023년 기준으로 상장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인 중소기업은행을 제외한 7개 기관이 공기업에 해당함.114)
- 8개 상장 공공기관에 대한 개요는 <표 III-7>과 같음.

<표 III-6>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공공기관(64개 기관)

구분	주식 발행 기관(46개)	출자증권(증서) 교부 기관(18개)
공기업 (29개)	(주)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 한전KPS(주) (22개)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7개)
준정부기관 (7개)	한국관광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2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5개)
기타공공기관 (28개)	서민금융진흥원, 88관광개발(주), (주)공영홈쇼핑, 새만금개발공사,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주택관리공단(주),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은행,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은행,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 한전MCS(주) (22개)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6개)

주: 밑줄 친 기관은 상장 공공기관(8개)에 해당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2. 자본금 및 주주현황'의 기관별 공시내용(2023. 4. 28.기준)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114) 상장 공기업 7개 중 시장형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주)강원랜드 등 4개 기관이고, 준시장형 공기업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PS(주) 등 3개 기관임

〈표 III-7〉 상장 공공기관 개요

(단위: 명, 백만 원)

기관명	부처	유형	설립연도 (설립근거(법))	상장일	임직원 총계	총자산
한국전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시장형 공기업	1961년 (「한국전력공사법」)	1989.08.10.	23,728	234,804,994
한국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시장형 공기업	1983년 (「한국가스공사법」)	1999.12.15.	4,320	62,424,983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시장형 공기업	1985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	2010.01.29.	2,210	7,478,130
(주)강원랜드	산업통상자원부	시장형 공기업	1998년 (「상법」 및 「폐광지역 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2003.09.04.	3,778	4,167,753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산업통상자원부	준시장형 공기업	1975년 (「상법」 제317조)	2009.12.24.	2,417	816,503
한전KPS(주)	산업통상자원부	준시장형 공기업	1984년 (「상법」 제317조)	2007.12.24.	6,642	1,562,022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문화체육관광부	준시장형 공기업	2005년 (「상법」 및 카지노 영업허가)	2009.11.19.	1,827	609,513
중소기업은행	금융위원회	기타 공공기관	1961년 (「중소기업은행법」)	2003.12.24.	13,965	431,979,690

주: 임직원 총계(상임임원+정규직 정원+무기계약직 정원)와 총자산은 2022년 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의 기관별 공시정보(2023. 4. 28.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출자 주체는 정부, 「공운법」상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이 외 민간 등 기타로 구분할 수 있음(<표 III-8>).

- 정부가 단독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공공기관은 13개 기관으로 전년과 동일함.
  - 정부 단독 출자 공기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6개 기관이 해당함.
  - 정부 단독 출자 준정부기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3개 기관이 해당함.
  - 정부 단독 출자 기타공공기관은 88관광개발(주),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 4개 기관이 해당함.
- 전체 지분 중 공공기관 보유 지분이 30% 이상인 기관은 35개로 이 중 29개 기관이 공공기관 자회사에 해당함.

-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보유한 지분이 50% 이상이거나 보유지분이 30~50% 미만이나 지분 보유 공공기관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을 공공기관 자회사로 분류함.
  - 공공기관 보유 지분이 30% 이상인 기관 중 공공기관 자회사가 아닌 기관은 한국관광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 6개 기관임.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지분이 30% 미만인 공공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 1개 기관임.
-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통한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시중 은행 및 보험사 등 민간기관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임.

〈표 Ⅲ-8〉 출자 주체별 보유지분 현황(2022년 12월 말 기준)

(단위: %)

기관명	공공기관 유형	출자 주체별 보유지분율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기타
인천국제공항공사	시장형 공기업	100.00	-	-	-
(주)강원랜드	시장형 공기업	-	36.27	10.18	53.56
<u>한국가스공사</u>	시장형 공기업	26.15	20.47	7.93	45.45
한국공항공사	시장형 공기업	95.60	4.40	-	-
한국남동발전(주)	시장형 공기업	-	100.00	-	-
한국남부발전(주)	시장형 공기업	-	100.00	-	-
한국동서발전(주)	시장형 공기업	-	100.00	-	-
한국서부발전(주)	시장형 공기업	-	100.00	-	-
한국석유공사	시장형 공기업	100.00	-	-	-
한국수력원자력(주)	시장형 공기업	-	100.00	-	-
<u>한국전력공사</u>	시장형 공기업	18.20	39.96	-	41.84
한국중부발전(주)	시장형 공기업	-	100.00	-	-
한국지역난방공사	시장형 공기업	34.55	30.08	10.36	25.01
<u>그랜드코리아레저(주)</u>	준시장형 공기업	-	60.25	-	39.75
대한석탄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00.00	-	-	-
주식회사 에스알	준시장형 공기업	-	100.00	-	-

〈표 III-8〉의 계속

(단위: %)

기관명	공공기관 유형	출자 주체별 보유지분율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기타
주택도시보증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70.25	-	-	29.75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	100.00	-	-
한국광해광업공단	준시장형 공기업	99.87	0.13	-	-
한국도로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87.36	12.63	-	0.0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00.00	-	-	-
한국부동산원	준시장형 공기업	49.40	30.60	-	20.00
한국수자원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94.07	5.86	0.07	-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준시장형 공기업	-	67.83	-	32.17
한국조폐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00.00	-	-	-
한국철도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00.00	-	-	-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89.25	10.75	-	-
한전KDN	준시장형 공기업	-	100.00	-	-
한전KPS(주)	준시장형 공기업	-	63.21	-	36.79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86.31	10.78	-	2.91
한국주택금융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67.30	-	-	32.7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00.00	-	-	-
한국관광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55.20	44.46	-	0.3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00.00	-	-	-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00.00	-	-	-
한국전력거래소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100.00	-	-
부산항만공사	기타공공기관	87.30	12.70	-	-
인천항만공사	기타공공기관	80.67	19.33	-	-
여수광양항만공사	기타공공기관	71.20	28.80	-	-
울산항만공사	기타공공기관	87.31	12.69	-	-
서민금융진흥원	기타공공기관	-	12.21	-	87.79
88관광개발(주)	기타공공기관	100.00	-	-	-
새만금개발공사	기타공공기관	100.00	-	-	-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기타공공기관	-	100.00	-	-
(주)공영홈쇼핑	기타공공기관	-	50.00	-	50.00
주택관리공단(주)	기타공공기관	-	100.00	-	-

〈표 III-8〉의 계속

(단위: %)

기관명	공공기관 유형	출자 주체별 보유지분율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기타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공공기관	-	100.00	-	-
중소기업은행	기타공공기관	59.50	9.04	-	31.46
코레일관광개발(주)	기타공공기관	-	60.80	-	39.20
코레일네트웍스(주)	기타공공기관	-	99.00	-	1.00
코레일로지스(주)	기타공공기관	-	97.27	-	2.73
코레일유통(주)	기타공공기관	-	100.00	-	-
코레일테크(주)	기타공공기관	-	97.98	-	2.02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기타공공기관	-	100.00	-	-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기타공공기관	-	100.00	-	-
한국벤처투자	기타공공기관	-	100.00	-	-
한국산업은행	기타공공기관	100.00	-	-	-
한국수출입은행	기타공공기관	68.80	22.08	-	9.12
한국체육산업개발(주)	기타공공기관	-	100.00	-	-
한국투자공사	기타공공기관	100.00	-	-	-
한국해양진흥공사	기타공공기관	53.18	43.56	-	3.26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기타공공기관	57.48	35.74	-	6.76
한전MCS(주)	기타공공기관	-	100.00	-	-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기타공공기관	-	100.00	-	-

주: 1. 출자 주체는 중앙정부(정부), 공공기관(「공운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및 기타(민간, 우리사주, 외국인투자자 등 포함)로 구분되고, 알리오시스템 4월 말 공시기준이므로 현재 지분율과 다를 수 있음

2. 밑줄 친 기관은 상장 공공기관(8개)에 해당

3. 주식회사 에스알은 2023년 제28회 국무회의(2023. 7. 11.)에서 「주식회사 에스알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3년 하반기 중앙정부 출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에 따라 지분 구성이 정부지분율 59%, 공공기관 지분율 41%로 변동될 예정임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2. 자본금 및 주주현황'의 기관별 공시내용(2023. 4. 28.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을 설립 근거법령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표 III-9>),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27개)과 개별 설립 근거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37개)으로 구분됨.

○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준정부기관은 7개 기관으로 모두 개별 설립 근거법령이 있는 기관임.

-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공기업(29개) 중 개별 설립 근거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은 16개 기관임.
  - 「상법」상 주식회사<sup>115)</sup>인 공기업은 13개 기관으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자회사에 해당함.
-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기타공공기관(28개) 중 14개 기관이 개별 설립 근거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임.
  - 「상법」상 주식회사인 기타공공기관은 14개 기관으로 88관광개발(주),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를 제외한 12개 기관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자회사에 해당함.
  -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는 기타공공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자회사임.

〈표 III-9〉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공공기관 구분(설립 근거법령 기준)

구분	공기업(29개)	준정부기관(7개)	기타공공기관(28개)
개별 설립 법령 근거 (37개)	(주식 발행) 주택도시보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9개)	(주식 발행) 한국관광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2개)	(주식 발행) 새만금개발공사, <u>서민금융진흥원</u> ,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은행,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은행,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8개)
	(출자증권·증서 교부)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7개)	(출자증권·증서 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5개)	(출자증권·증서 교부) <u>부산항만공사</u> , <u>여수광양항만공사</u> , <u>울산항만공사</u> , <u>인천항만공사</u>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6개)

115)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주식을 발행하는 기관을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분류함



- 공공기관을 자회사로 보유한 공공기관은 전년과 동일하게 12개 기관임.
  - 12개 기관 중 7개 기관이 공기업 유형에 해당하고 준정부기관 유형이 3개 기관이며 기타공공기관 유형은 2개 기관임.
    - 공기업에 해당하는 7개 모회사는 에너지 및 SOC 분야의 공공기관임.<sup>116)</sup>
  - 공공기관을 자회사로 보유한 12개 공공기관 중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3개 기관을 제외한 9개 기관은 공공기관인 자회사를 1개씩 보유하고 있음.
  
- 주식회사 에스알<sup>117)</sup>은 당초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였으나, 2023년 7월 개최된 제 28회 국무회의에서 중앙정부의 대규모 현물출자가 확정됨에 따라 2023년 하반기 중 중앙정부 지분율이 크게 증가하여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될 예정임.<sup>118)</sup>
  - 당초 한국철도공사가 주식회사 에스알의 지분 41%를 보유하고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여, 주식회사 에스알은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에 해당하였음.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식회사 에스알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에 따라 2023년 하반기 국토교통부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한국도로공사 지분의 일부를 주식회사 에스알에 출자하게 되면 중앙정부는 주식회사 에스알의 지분 중 59%를 소유하게 됨.
    - 중앙정부의 현물출자가 실현될 경우, 주식회사 에스알은 「공운법」 제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에 의한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통상적으로 정부출자기관으로 일컬어짐.

116) 공공기관을 자회사로 보유한 에너지 분야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3개 기관이며, SOC 분야 공기업은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4개 기관임

117) 2022년 12월 기준, 주식회사 에스알의 지분 구성은 한국철도공사 4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31.5%, 중소기업은행 15%, 한국산업은행 12.5%로 한국철도공사가 최대주주임

118) 제28회 국무회의(2023년 7월11일) 회의록 참고 (2023년도 제27회 및 제28회 국무회의 회의록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사전정보공개> 국무·차관회의 회의록 (mois.go.kr), 2023. 8. 21 검색)

〈표 III-10〉 공공기관 자회사 현황(29개 기관)

모기업		공공기관 자회사인 기관(29개)	
기관명	유형	기관 수	기관명
한국전력공사	시장형 공기업	1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형 공기업)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li> <li>▪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 한전KPS(주)</li> <li>▪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전력거래소</li> <li>▪ (기타공공기관) 한전MCS(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li> </ul>
한국가스공사	시장형 공기업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시장형 공기업) (주)한국가스기술공사</li> </ul>
한국광해광업공단	준시장형 공기업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형 공기업) (주)강원랜드</li> </ul>
한국철도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시장형 공기업) 주식회사 에스알</li> <li>▪ (기타공공기관)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li> </ul>
한국도로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공공기관)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li> </ul>
한국수자원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공공기관)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li> </ul>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공공기관) 주택관리공단(주)</li> </ul>
한국관광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시장형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주)</li> </ul>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공공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li> </ul>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공공기관) 한국체육산업개발(주)</li> </ul>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타 공공기관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공공기관)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li> </ul>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공공기관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공공기관) (주)공영홈쇼핑</li> </ul>

주: 1. 공공기관 자회사 중 「공운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국한하여 자료 작성  
 2. 주식회사 에스알과 (주)강원랜드는 모회사가 보유한 지분은 각각 41%, 36.27%로 50% 미만에 해당하나 모회사인 한국철도공사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 자회사로 분류함  
 3. 주식회사 에스알은 2023년 제28회 국무회의(2023. 7. 11.)에서 「주식회사 에스알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3년 하반기 중앙정부 출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에 따라 지분 구성이 정부지분을 59%, 공공기관 지분을 41%로 변동될 예정으로 현물출자 실현 후에는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가 아님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2. 자본금 및 주주현황'의 기관별 공시내용(2023. 5. 17.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라. 공공기관의 지역별 분포 및 지역발전계획 주요 내용

### 1) 공공기관 지역별 분포 현황<sup>119)</sup>

- 정부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2003년부터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추진함.
  - 2003년 정부의 기본구상 발표를 시작으로 2005년 혁신도시 및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지정·발표하였으며, 2007년 10개 혁신도시 및 세종특별시의 개발예정지구 지정을 거쳐 개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함.
  -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전기관을 최대한 유사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일 기능 군으로 분류하여 10개 혁신도시 및 세종특별시로 이전할 지역별 대상기관을 선정함.
    - 부산 혁신도시는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여 해양수산 분야, 금융 산업 분야, 영화진흥 분야의 공공기관이 이전대상 기관으로 선정됨.
    - 대구 혁신도시는 산업진흥 분야, 교육·학술 진흥 분야, 가스 산업 분야의 공공기관이 이전대상 기관으로 선정됨.
    -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전력산업 유관 공공기관과 농림수산 분야 공공기관이 이전대상으로 선정됨.
    - 울산 혁신도시로는 에너지 산업 분야, 근로복지 및 산업안전 등 분야의 공공기관이 이전하기로 함.
    - 강원 혁신도시로는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여 광업진흥 및 관광 분야 공공기관과 건강생명 유관 공공기관이 이전하기로 함.
    - 충북 혁신도시는 정보통신 분야 공공기관과 인력개발 및 과학기술 분야 유관 공공기관이 이전대상으로 선정됨.
    - 전북 혁신도시는 식품연구 관련 공공기관과 국민연금 관련 공공기관 등이 이전대상으로 선정됨.
    - 경북 혁신도시로는 도로교통 관련 공공기관 등이 이전하기로 함.
    - 경남 혁신도시로는 주택건설 관련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진흥 관련 공공기관, 그리고 국방·산업기술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하기로 함.

119)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홈페이지(<http://innocity.molit.go.kr>) 및 기관별 홈페이지와 2023년 4월 말 알리오 시스템에 공시된 일반현황 자료의 소재지 정보를 참고하여 작성

- 제주 혁신도시는 국제교류 관련 공공기관 등이 이전대상으로 선정됨.
- 세종특별시로는 정부부처와 밀접한 업무관계가 있는 국책연구기관 등이 이전 대상으로 선정됨.

-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른 이전대상 기관은 정부부처(소속조직 포함) 및 공공기관을 포함한 151개 기관이며 이 중 「공운법」상 공공기관은 105개 기관임.<sup>120)</sup>
  - 이전대상 기관 중 「공운법」상 공공기관은 당초 109개 기관이었으나, 공공기관 통폐합<sup>121)</sup>과 공공기관 지정 해제<sup>122)</sup> 등의 영향으로 2023년 공공기관 기준으로 105개 기관이 이전대상 공공기관에 해당함.
  -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은 2019년 12월에 모두 완료됨.
  - 2020년 10월 대전·충남 혁신도시가 추가로 지정됨.
- 지역별 이전대상 공공기관 분포는 <표 Ⅲ-11>과 같음.

<표 Ⅲ-11> 지역별 이전대상 공공기관 분포(2023년 공공기관 기준)

(단위: 개)

구분	합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이전대상 공공기관 수	105	18	36	51
부산	10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게임물관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구	9	한국가스공사 한국부동산원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120)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홈페이지(<http://innocity.molit.go.kr/content.do?key=2208172095042>)

121) 2014년 6월 구. 기초기술연구회와 구. 산업기술연구회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세종 지역 이전 완료)로 통합 출범하였으며, 2021년 9월 구.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구.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한국광해광업공단(강원 지역 이전 완료)으로 통합 출범함

122) 지방이전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기관은 (주)한국건설관리공사(경북 지역 이전 완료, 2021년 1월 지정 해제)와 한국예탁결제원(부산 지역 이전 완료, 2022년 1월 지정 해제)임

〈표 III-11〉의 계속

(단위: 개)

구분	합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광주/전남	13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전KPS(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울산	7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석유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강원	9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적십자사
충북	10	-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소비자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충남	2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	-
전북	6	-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경북	7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	10	한국남동발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국방기술품질원 주택관리공단(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제주	3	-	공무원연금공단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표 Ⅲ-11〉의 계속

(단위: 개)

구분	합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세종	19	-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토연구원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주: 1. 2023년 4월 기준, 공공기관 기관유형 변경에 따라서 이전대상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은 36개, 기타공공기관은 51개로 변경됨  
 2. 2023년 공공기관 지정 시,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 기관은 기관명에 밑줄 표시함  
 자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홈페이지(<http://innocity.molit.go.kr>)

- 2023년 지정된 347개 공공기관의 지역별 분포(〈표 Ⅲ-12〉)를 살펴보면, 서울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119개(34.3%)로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분포율을 보임.
- 공공기관 분포율이 높은 상위 5개 지역은 서울(34.3%), 대전(10.1%), 경기(8.1%), 세종(7.2%), 부산(5.8%) 순이며 5개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전체 공공기관의 65.5%를 차지함.

〈표 Ⅲ-12〉 지역별 공공기관 분포(2023년 4월 기준)

(단위: 개,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347개)	119 (34.3)	20 (5.8)	14 (4.0)	7 (2.0)	2 (0.6)	35 (10.1)	9 (2.6)	25 (7.2)	28 (8.1)	12 (3.5)	13 (3.7)	7 (2.0)	11 (3.2)	16 (4.6)	10 (2.9)	14 (4.0)	5 (1.4)
공기업 (32개)	5 (15.6)	2 (6.3)	2 (6.3)	1 (3.1)	0 (0.0)	4 (12.5)	2 (6.3)	0 (0.0)	2 (6.3)	3 (9.4)	0 (0.0)	2 (6.3)	0 (0.0)	3 (9.4)	3 (9.4)	2 (6.3)	1 (3.1)

〈표 III-12〉의 계속

(단위: 개,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준정부기관 (55개)	9 (16.4)	3 (5.5)	5 (9.1)	1 (1.8)	0 (0.0)	4 (7.3)	4 (7.3)	2 (3.6)	3 (5.5)	6 (10.9)	3 (5.5)	1 (1.8)	3 (5.5)	5 (9.1)	2 (3.6)	3 (5.5)	1 (1.8)
기타공공기관 (260개)	105 (40.4)	15 (5.8)	7 (2.7)	5 (1.9)	2 (0.8)	27 (10.4)	3 (1.2)	23 (8.8)	23 (8.8)	3 (1.2)	10 (3.8)	4 (1.5)	8 (3.1)	8 (3.1)	5 (1.9)	9 (3.5)	3 (1.2)

주: 1. ( ) 안은 각 지역별 공공기관 비중  
 2. 공공기관별 상세 소재지(본사 기준)는 <부록 2> 참고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 일반현황'의 기관별 공시내용(2023. 4. 28. 기준)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 공공기관 유형에 따른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타공공기관에 비해 수도권 지역 소재 기관의 비중이 낮음.

○ 공기업의 경우 수도권 지역(서울·경기) 소재 기관의 비중(7개 기관)이 21.9%이며, 32개 공기업 중 18개 기관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였기 때문임.

-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7개 기관 중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공항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해양환경공단 5개 기관은 서울에 소재하며 한국마사회 및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경기 지역에 소재함.

- 공기업은 광주, 세종, 충북, 전북을 제외한 지역에 고르게 분포한 것으로 나타남.

○ 준정부기관은 광주를 제외한 16개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수도권 지역 소재 기관의 비중이 높음.

- 준정부기관 중 수도권 지역 소재 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전체 준정부기관의 21.8%를 차지함.

- 기타공공기관은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나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기관이 128개로 전체 기타공공기관의 49.2%를 차지함.

- 2023년 기준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기관 유형이 변경된 기관이 많아 수도권에 소재한 기타공공기관 비중이 높아짐.

□ 정부는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21년 10월 제37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서울에 소재한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 3개 기관의 대전 지역으로의 이전을 확정함.<sup>123)</sup>

- 한국임업진흥원은 2023년 일부 이전을 시작하여, 2026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예정임.
-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2022년 9월 이전을 완료하였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2023년 일부 이전을 시작하여 2025년 이후 이전을 완료할 예정임.<sup>124)</sup>
- 2020년 4월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신청 기반 마련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되어 시·도에서 지정 신청이 가능해졌음. 이에 따라 같은 해 10월 대전·충남 혁신도시가 지정되었음.<sup>125)</sup>

2) 이전공공기관 2022년도 지역발전계획 추진실적 및 2023년 추진계획 주요 내용<sup>126)</sup>

-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3 및 제29조의5, 동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1조의3에 근거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이전공공기관은 이전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추진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공개하여야 함.
- 「혁신도시법」에 따른 기관별 지역발전계획은 지역산업 육성, 지역인재 채용 및 육성, 지역주민 지원, 유관기관 협력, 지역생산물품 우선구매 등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주요 수립 항목은 <표 III-13>과 같음.

<표 III-13>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주요 수립 항목

구분	세부 내용
지역산업 육성	연관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산업 활성화에 대한 사업
지역인재 채용·육성	지역인재 채용, 지역대학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장학 사업, 직무체험 및 견학프로그램 운영 등 인재 양성에 대한 사업
지역주민 지원	지역주민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SOC 건립, 기관 시설 개방 등에 대한 사업

123) 국토교통부, 「기상청+3개 공공기관' 대전 이전 확정」, 보도자료, 2021. 10. 25.

124) 기관별 홈페이지 참조

125)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홈페이지 참조(<http://innocity.molit.go.kr/content.do?key=2208172095042>)

126) 국토교통부, 「2022년 지역발전 추진실적 및 2023년 추진계획」, 2023. 4. 24.을 참고하여 작성

〈표 III-13〉의 계속

구분	세부 내용
유관기관 협력	지자체-기업-대학과의 공동 연구 및 협의회 운영 등 지역발전을 위한 기관 간 협력에 대한 사업
지역생산물품 우선구매	이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자료: 국토교통부, 「2022년 지역발전 추진실적 및 2023년 추진계획」, 2023. 4. 24

- 2023년 4월 국토교통부는 이전공공기관의 2022년도 지역발전 추진실적을 발표함.
  - 국토교통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등 전체 이전 대상기관(151개)<sup>127)</sup>은 2022년에 개별 혁신도시 및 개별 이전 지역에서 지역산업 육성, 지역 인재 채용, 주민지원(지역공헌), 유관기관 협력, 지역물품 우선구매 등 지역발전을 위해 약 4조 529억 원 규모의 사업(총 3,488건)을 시행하였음.
    - 2022년 실적은 2021년 실적 3조 4,017억 원 대비 6,512억 원(19.1%) 증가하였음.
  - 2022년 지역발전 추진실적 기준으로 105개 「공운법」상 공공기관<sup>128)</sup>에 대한 지역별 추진실적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III-14>와 같음.
    - 105개 이전공공기관은 지역발전을 위해 2022년에 약 3조 8,682억 원 규모의 사업(총 2,988건)을 추진하였음.

〈표 III-14〉 2022년 지역별 추진실적

(단위: 개, 건, 백만 원)

구분	기관 수	지역산업 육성		지역인재 육성		지역주민 지원		유관기관 협력		지역물품 우선구매		기타사업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합계	105	415	1,583,067	426	64,084	905	51,818	484	54,316	592	1,980,330	104	95,179
부산	10	41	13,909	40	5,539	104	4,951	36	3,517	46	36,392	1	1
대구	9	47	192,993	52	35,473	86	3,557	40	2,379	64	60,532	6	2,019
광주·전남	13	72	335,970	64	5,221	118	11,261	68	1,473	81	1,425,129	13	51,631
울산	7	27	29,188	21	1,299	64	2,531	16	13,629	36	46,938	7	23,272
강원	9	38	78,597	36	293	112	1,108	56	6,346	55	67,566	18	2,209
충북	10	19	35,499	32	1,056	102	1,361	43	877	39	9,371	12	5,968

127) 전체 이전 대상기관(151개)에는 「공운법」상 공공기관(2023년 기준) 105개 외에 정부부처(소속조직) 및 「공운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된 기관이 포함

128)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 당시 109개였으나 공공기관 통폐합과 공공기관 지정 해제 등의 영향으로 2023년 공공기관 기준 105개 기관이 지역발전계획 작성대상 이전대상 공공기관에 해당

〈표 III-14〉의 계속

(단위: 개, 건, 백만 원)

구분	기관 수	지역산업 육성		지역인재 육성		지역주민 지원		유관기관 협력		지역물품 우선구매		기타사업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충남	2	18	4,646	11	2,951	10	5,538	16	2,987	6	48,489	7	1,411
전북	6	48	79,843	39	449	57	1,171	48	1,746	69	37,126	1	27
경북	7	45	31,522	32	7,166	53	11,883	27	321	52	100,134	17	419
경남	10	50	779,766	47	3,539	99	8,005	46	15,520	29	84,122	6	7,765
제주	3	3	-	5	30	18	132	20	805	17	1,413	13	355
세종	19	7	1,134	47	1,068	82	320	68	4,715	98	13,117	3	103

주: 「공운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한국지방행정연구원(강원 지역)과 2020년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으로 추가 지정된 기관(21개)의 계획 제외  
 자료: 국토교통부, 「2022년 지역발전 추진실적 및 2023년 추진계획」, 2023. 4. 24

-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2022년 추진한 지역별 발전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지역산업 육성의 경우 지역 전략 사업 육성 및 중소기업 지원 등 동반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였음.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는 대구 지역 기업 R&D 활성화를 지원하였고, 한국전력 공사는 광주·전남 유망 중소기업 투자를 지원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반성장 협력 대출을 지원하였음.
  - 지난해 105개 이전공공기관은 신규 채용대상 중 1,002명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였음.
  -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은 지역 우수 인재 장학금, 국가 근로 장학금을 지원하였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체험형 청년인턴을 운영하였음.
  - 지역주민 지원은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생활SOC 확충 및 공공시설 개방 등을 추진하였음.
    -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는 지역 취약계층 및 결연마을 지원, 소상공인 매출 향상지원 프로그램 운영, 열린 도서관 무료 개방을 진행하였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대강당 및 주차장 개방, 교실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였음.
  - 유관기관 협력과 관련하여 지역대학, 기업, 지차체 등과 보유자산을 활용한 공동연구 및 관계기관 협력 증진을 위한 협의체 운영 등을 추진하였음.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산 청년 창업 허브 조성 및 운영, 부산지역 소비재 우수 기업 박람회를 개최하였고, 한국서부발전(주)은 충남도-발전3사 상생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음.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산지역 신혼부부·청년 등 사회취약계층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하였음.
  - 지역 생산물품 우선구매를 통해 이전공공기관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등을 추진하였음.
- 2023년 4월 국토교통부는 이전공공기관의 2023년도 지역발전계획을 발표함.
- 국토교통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 전체 이전 대상기관(151개)은 개별 혁신도시 및 개별 이전 지역에서 지역산업 육성, 지역 인재 채용, 주민지원(지역공헌), 유관기관 협력, 지역물품 우선구매 등 지역발전을 위해 약 3조 8,434억 원 규모의 사업(총 3,066건)을 시행할 계획임.
    - 특히 지역산업 육성(28.8%, 1조 1,081억 원)과 지역경제 기여(52.7%, 지역물품 구매, 2조 268억 원) 부문 투자가 다수 계획되어 있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 기관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2023년 지역발전계획 기준으로 105개 「공운법」상 공공기관<sup>129)</sup>에 대한 지역별 발전계획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III-15>와 같음.
    - 105개 이전공공기관은 지역발전을 위해 2023년 중 약 3조 5,095억 원 규모의 사업(총 2,539건)을 추진할 예정임.

<표 III-15> 2023년 지역별 발전계획

(단위: 개, 건, 백만 원)

구분	기관 수	지역산업 육성		지역인재 육성		지역주민 지원		유관기관 협력		지역물품 우선구매		기타사업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합계	105	357	1,048,793	392	280,413	758	47,361	394	51,431	561	1,902,947	82	179,418
부산	10	36	15,592	41	5,179	75	3,027	29	1,324	48	35,882	2	201
대구	9	46	53,052	47	252,250	85	3,808	38	2,138	54	73,800	3	109
광주·전남	13	62	289,256	62	7,614	90	12,307	45	6,597	70	1,445,462	11	130,069
울산	7	22	40,085	17	1,216	58	1,380	15	9,084	38	36,713	7	14,737
강원	9	29	70,542	34	443	105	1,312	48	6,099	57	32,081	13	327
충북	10	19	36,119	28	999	73	1,950	42	913	35	9,571	11	2,981
충남	2	16	5,201	10	2,914	9	4,952	14	2,925	6	49,417	4	1,158

129)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 당시 109개였으나 공공기관 통폐합과 공공기관 지정 해제 등의 영향으로 2023년 공공기관 기준 105개 기관이 지역발전계획 작성대상 이전대상 공공기관에 해당

<표 III-15>의 계속

(단위: 개, 건, 백만 원)

구분	기관 수	지역산업 육성		지역인재 육성		지역주민 지원		유관기관 협력		지역물품 우선구매		기타사업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전북	6	43	57,673	31	437	43	1,095	42	484	61	37,798	3	2,818
경북	7	31	50,230	33	6,183	44	6,456	23	291	48	84,342	12	60
경남	10	42	429,555	37	2,448	89	10,815	41	19,529	28	85,535	9	26,679
제주	3	4	-	6	36	12	95	13	464	21	1,641	4	161
세종	19	7	1,488	46	694	75	166	44	1,583	95	10,705	3	118

주: 「공운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한국지방행정연구원(강원 지역)과 2020년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으로 추가 지정된 기관(21개)의 계획 제외  
 자료: 국토교통부, 「2022년 지역발전 추진실적 및 2023년 추진계획」, 2023. 4. 24

□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2023년 중 추진할 지역발전계획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표 III-16>과 같음.

<표 III-16> 2023년 지역별 발전계획 주요 내용

구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부산	(주택도시보증공사) 민관합동 창업공간 조성사업, IT인재 육성 지원 (한국남부발전주) 클린 에너지 기술 혁신기업 육성 산업, 국민참여형 사회공헌사업	(한국자산관리공사) 희망올림 프로그램 (한국주택금융공사) 행복돌봄 서비스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 이용자 교육사업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동의대학 협업 KYCI 오픈캠퍼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과학 기술인 전문인력 양성 사업
대구	(한국가스공사) 에너지 스타트업 창업기업 지원사업 (한국부동산원) 윈도심 역사 문화공간 보존사업, 사회복지시설 친환경 시설 지원	(신용보증기금) 미래혁신분양 강소기업 및 ESG 경영 기업 금융지원 (한국장학재단) 창업지원형 기숙사 운영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공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사업	(한국사학진흥재단) 지역 아동 센터 지원, 대구 지역 대학생을 위한 행복 기숙사 건립
광주. 전남	(한국전력공사) KEPCO에너지 스타트업, 에너지 신기술 연구원 공동 연구 기자재 구축 (한전KDN) 빛가람 에너지 밸리 ICT&보안 컨퍼런스, 스마트 에코 정류장 구축 (한전KPS주) 기술혁신 지원사업	(한국농어촌공사) 농촌 환경 보전 프로그램 추진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소기업 종합컨설팅 및 솔루션 지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청년 인턴 운영 사업, 빛가람 미래농업 인재육성과정 운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나는 예술여행 운영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역 기반 게임 산업 육성

〈표 III-16〉의 계속

구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울산	(한국동서발전주) 시민주도 공유 옥상 태양광 건축사업, 울산 공공시설 에너지 효율화 사업 (한국석유공사) 동해 가스전 CCS 사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회적 기업 안전 인큐베이팅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 지역맞춤형 취업 클래스 운영 (한국에너지공단) 농촌마을 LED 보안등 설치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주도 에너지 효율 혁신모델 구현을 위한 울산시 에너지 효율 혁신 사업, 초·중등 팀 프로젝트 교육 추진
강원	(대한석탄공사) 취약계층 연탄 지원 사업 (한국광해광업공단) 굿잡(Good Job)프로젝트, 에너지 소외계층 주거 환경 개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빅데이터 전문교육 (도로교통공단) e-모빌리티 기업지원 (한국관광공사) 웰니스 관광 활성화	(대한적십자사) 안심 원주, 안전 원주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
충북	-	(한국고용정보원) 지역 일자리 모니터링단 운영 (한국소비자원) 청년인턴제도 운영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역균형발전 SWICT 융합 기술개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역 청년 공유형 사택 운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초· 중학교 교사 연수
전북	-	(국민연금공단) 청년 창업 지원사업 (한국국토정보공사) 새만금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건축지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그린바이오 벤처창업 캠퍼스 조성 (한국식품연구원) 식품 중소중견기업 상시 기술 지원사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도농 상생 지역독서 문화 확산, 지역 독서 활성화 지원
경북	(한국도로공사) 지역대학 창업 동아리 지원, ex-사랑기금 추진 (한국수력원자력주) 해오름동맹지역 6개 대학 R&D 공동연구사업, 한수원 아트페스티벌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거점 드론 실기시험장 구축 (한국원자력환경공단) KORAD 오픈캠퍼스 추진	(대한법률구조공단) 학교 법 문화 교육, 이동법률 상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홍보 역사관 설치 및 개방
경남	(한국남동발전주) 동반성장 협력 대출, 바다 사랑 지킴이 사업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혁신복합문화도서관 건립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지역 전통시장 안전점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동반성장펀드 추진	(주택관리공단주) 경남 생태 누리 바우처 추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경남 진주 강소 특구 혁신네트 워크 운영 (한국저작권위원회) 체험형 청년인턴 사업 추진

자료: 국토교통부, 「2022년 지역발전 추진실적 및 2023년 추진계획」, 2023. 4. 24을 참고하여 작성

## 2. 인력현황<sup>130)</sup>

### 가. 임직원 수 현황<sup>131)</sup>

- 2022년 공공기관의 임직원 수(정원 기준<sup>132)</sup>)는 약 44만 5천 명으로 국가행정공무원 정원 약 75만 8천 명의 58.7%에 해당하는 규모임.
- 공공기관의 임직원 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22년에는 전년 대비 약 1.4%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는 점차 둔화되고 있음.

〈표 Ⅲ-17〉 공공기관 임직원 및 국가행정공무원 현황(2018~2022년)

(단위: 천 명,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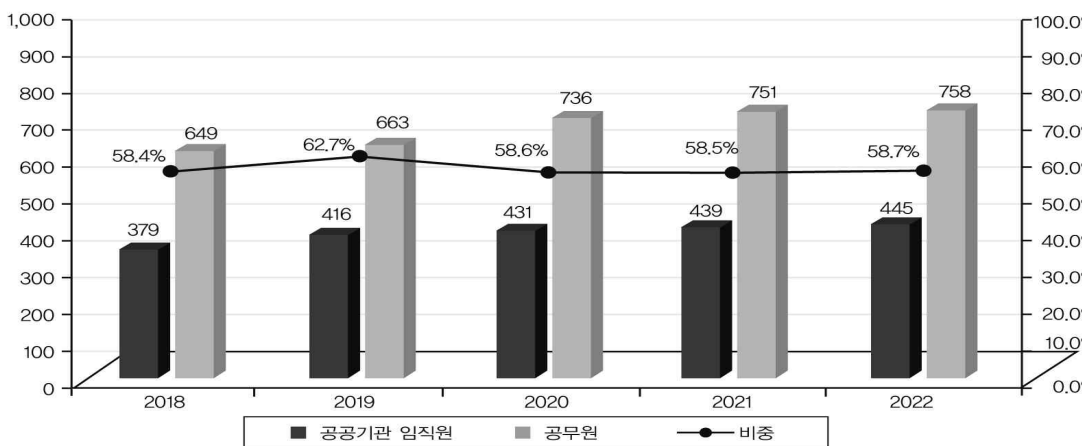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A)	'22년 (B)	증감 (B-A)	전년 대비 증감률
공공기관 임직원(a)	379	416	431	439	445	6	1.4%
국가행정공무원(b)	649	663	736	751	758	7	0.9%
비중(a/b)	58.4	62.7	58.6	58.5	58.7	0.2 <sup>1)</sup>	

주: 1. 소수 반올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수차이 조정을 일부 거침  
1) %p단위임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임직원 현황(정원)'(2023. 4. 28. 기준) 및 나라지표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 추이'(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016)'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Ⅲ-2〕 공공기관 임직원 및 국가행정공무원 현황(2018~2022년)

(단위: 천 명, %)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임직원 현황'(2023. 4. 28. 기준) 및 나라지표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 추이'(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016)'를 참고하여 작성

130) 기획재정부, 「347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23. 4. 28. 및 알리오시스템 유관항목 참고

131) 2023년 1월 기준 347개의 공공기관과 15개의 부설기관이 대상기관

132)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의 상임임원, 정규직 직원(무기계약직 및 임금피크제 별도 정원 포함)에 대한 총정원

- 2022년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필수 분야에서의 신규 증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전년 대비 6,574명 증가함.
  - 2022년 증원 인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병원 인력확충 등이 눈에 띄는데 이는 2021년 하반기에서 2022년 초 인력증원 협의결과(6,476명)로 인한 것임.<sup>133)</sup>
- 최근 5년간 준시장형 공기업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공공기관에서 임직원 정원 및 현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기타공공기관 유형의 2022년 임직원 정원은 전년 대비 3,649명(2.1%) 증가한 17만 5,953명으로 전체 공공기관 유형 중 가장 큰 비중(39.5%)을 차지하고 정원 증가율도 가장 높음.
    - 기타공공기관 중 인력증원의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경북대학교병원(589명)이고, 두 번째는 전남대학교병원(364명)임.
  - 공기업 유형의 2022년 임직원 정원은 15만 956명으로 전년 대비 1,018명이 증가하여 0.7%의 정원 증가율을 보임.
    - 시장형 공기업의 2022년 임직원 정원은 6만 7,003명으로 전년 대비 0.9%(567명) 증가하였음.
    - 2021년에 감소하였던 준시장형 공기업의 임직원 정원은 2022년 8만 3,953명으로 전년 대비 0.5%(451명) 증가했으나 이는 전체 공공기관 유형 중 가장 작은 정원 증가율임.
  - 준정부기관 유형의 2022년 임직원 정원은 전년 대비 1.6%(1,907명) 증가한 11만 8,347명으로 정원 증가율이 공기업보다 높으나 기타공공기관보다는 낮음.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임직원 정원은 전년 대비 1.8%(548명) 증가한 3만 737명으로 나타남.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임직원 정원은 8만 7,610명으로 전년 대비 1.6%(1,359명) 증가함.
- 공공기관의 임직원 정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2019년부터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음.
  - 최근 4년간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 증가율은 2019년 9.6%, 2020년 3.6%, 2021년 1.8%, 2022년 1.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133) 기획재정부, 「347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23. 4. 28.

- 공공기관 정원 증가율의 감소 추세는 기타공공기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남.<sup>134)</sup>
- 공기업은 2021년까지 정원 증가율이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22년에 소폭 상승하였음.<sup>135)</sup>
  - 특히 공기업 유형 중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2020년까지 정원 증가율이 둔화하다가 2021년에는 정원 자체의 감소로 전환되었고 2022년에 다시 정원 증가로 돌아섬.<sup>136)</sup>
- 준정부기관 유형의 정원 증가율은 2020년까지 감소하다가 2021년에는 일시적으로 상승했지만 2022년에 다시 감소하였음.<sup>137)</sup>

〈표 Ⅲ-18〉 공공기관 유형별 임직원 수 현황(2018~2022년)

(단위: 명, %)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A)	'22년 (B)	증감 (B-A)	전년 대비 증감률
합계	379,455 (355,944)	415,881 (389,059)	430,843 (405,032)	438,682 (411,712)	445,256 (416,002)	6,574 (4,290)	1.5% (1.0%)
공기업	139,503 (133,451)	146,583 (140,832)	149,592 (143,953)	149,938 (144,178)	150,956 (145,058)	1,018 (880)	0.7% (0.6%)
· 시장형	63,069 (60,652)	64,752 (62,905)	65,737 (64,214)	66,436 (64,667)	67,003 (65,179)	567 (512)	0.9% (0.8%)
· 준시장형	76,434 (72,799)	81,831 (77,927)	83,855 (79,739)	83,502 (79,511)	83,953 (79,879)	451 (368)	0.5% (0.5%)
준정부기관	105,203 (98,886)	111,041 (105,717)	113,340 (107,838)	116,440 (111,319)	118,347 (112,400)	1,907 (1,081)	1.6% (1.0%)
· 기금관리형	27,866 (26,042)	28,922 (27,390)	29,322 (27,734)	30,189 (28,537)	30,737 (28,769)	548 (232)	1.8% (0.8%)
· 위탁집행형	77,337 (72,844)	82,119 (78,328)	84,018 (80,105)	86,251 (82,781)	87,610 (83,631)	1,359 (850)	1.6% (1.0%)
기타공공기관	134,748 (123,606)	158,257 (142,510)	167,912 (153,240)	172,304 (156,215)	175,953 (158,543)	3,649 (2,328)	2.1% (1.5%)

주: 1. 2023년 1월 지정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산출한 수치이므로 2023년 6월 수시 지정 건(구.채외동포재단 지정해제 및 채외동포협력센터 신규 지정)은 반영하지 아니함

2. ( ) 안의 수치는 현원 기준

3. 소수 반올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수차이 조정을 일부 거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임직원 현황'(2023. 4. 28.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134) 기타공공기관: (2019년) 17.5% → (2020년) 6.1%(△9.4%p) → (2021년) 2.6%(△3.5%p) → (2022년) 2.1%(△0.5%p)

135) 공기업: (2019년) 5.1% → (2020년) 2.1%(△3.0%p) → (2021년) 0.2%(△1.9%p) → (2022년) 0.7%(+0.5%p)

136) 준시장형 공기업: (2019년) 7.1% → (2020년) 2.5%(△4.6%p) → (2021년) -0.4%(△2.9%p) → (2022년) 0.5%(+0.9%p)

137) 준정부기관: (2019년) 5.6% → (2020년) 2.1%(△3.5%p) → (2021년) 2.7%(+0.6%p) → (2022년) 1.6%(△1.1%p)

- 2022년 공공기관 임직원 수(정원 기준) 현황을 주무부처별로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수가 9만 7,208명(41개 기관)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국토교통부 8만 8,594명(28개 기관), 교육부 5만 4,053명(22개 기관) 순으로 나타남.
- 임직원 수 증가는 교육부 산하 기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1,968명, 3.8%), 다음으로 국토교통부(824명, 0.9%), 보건복지부(718명, 1.7%) 순임.
- 반면 2022년 임직원 수가 감소한 기관은 산림청 산하 기관(△14명, △1.1%)과 국방부 산하 기관(△2명, △0.3%)으로 두 곳의 주무부처 산하 공공기관에서만 임직원 수가 감소함.

〈표 III-19〉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임직원 수 현황(2018~2022년)

(단위: 개, 명, %)

구분	기관 수	'18년	'19년	'20년	'21년 (A)	'22년 (B)	증감 (B-A)	전년 대비 증감률
기획재정부	4	3,190	3,264	3,341	3,327	3,391	64	1.9
교육부	22	41,774	45,651	49,677	52,085	54,053	1,968	3.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3	26,966	28,059	28,465	28,886	29,105	219	0.8
외교부	3	737	796	814	827	838	11	1.3
통일부	2	208	216	209	210	215	5	2.4
법무부	3	1,249	1,307	1,319	1,360	1,407	47	3.5
국방부	3	633	728	802	793	791	△2	△0.3
행정안전부	3	1,527	1,601	1,694	1,708	1,786	78	4.6
국가보훈부	3	6,550	6,983	7,326	7,620	7,765	145	1.9
문화체육관광부	31	9,248	9,618	9,611	9,645	9,729	84	0.9
농림축산식품부	12	12,580	13,029	13,060	13,109	13,237	128	1.0
산업통상자원부	41	86,539	91,725	94,976	96,504	97,208	704	0.7
보건복지부	28	38,632	41,813	42,392	43,288	44,006	718	1.7
환경부	12	13,369	14,023	14,661	15,062	15,316	254	1.7
고용노동부	12	17,846	19,049	19,514	20,229	20,684	455	2.2
여성가족부	5	996	1,026	1,031	1,082	1,108	26	2.4
국토교통부	28	68,088	85,014	88,121	87,770	88,594	824	0.9
해양수산부	17	4,098	4,621	4,855	5,107	5,211	104	2.0
중소벤처기업부	11	4,611	4,942	5,224	5,476	5,667	191	3.5
국무조정실	25	4,495	5,000	5,114	5,192	5,238	46	0.9
방송통신위원회	2	529	534	578	581	590	9	1.5

〈표 III-19〉의 계속

(단위: 개, 명, %)

구분	기관 수	'18년	'19년	'20년	'21년 (A)	'22년 (B)	증감 (B-A)	전년 대비 증감률
원자력안전위원회	3	731	795	808	815	830	15	1.8
금융위원회	7	22,334	22,998	23,540	24,123	24,372	249	1.0
공정거래위원회	2	546	589	627	651	684	33	5.1
인사혁신처	1	658	662	680	683	687	4	0.6
식품의약품안전처	4	505	528	526	565	571	6	1.1
관세청	1	50	50	50	50	50	0	0.0
방위사업청	2	4,258	4,425	4,479	4,497	4,585	88	2.0
경찰청	1	2,935	3,001	3,030	3,057	3,112	55	1.8
소방청	1	271	291	314	321	329	8	2.5
문화재청	1	376	389	394	394	397	3	0.8
농촌진흥청	1	291	315	324	329	343	14	4.3
산림청	4	774	940	1,230	1,256	1,242	△14	△1.1
특허청	6	1,628	1,663	1,708	1,710	1,739	29	1.7
기상청	3	234	238	351	372	378	6	1.6
합 계	347	379,455	415,881	430,843	438,682	445,256	6,574	1.5

주: 1. 기관 수는 모기관 단위로 산출하였으며 부설기관(15개 기관)의 임직원 수는 모기관에 포함하여 반영  
 2. 임직원 수는 2023년 4월 28일 알리오시스템에 공시한 기관별 임직원 수를 부처 단위로 합산하여 작성하였으며 반올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수차이 조정을 일부 거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 임직원 수' 항목의 기관별 공시자료(2023. 4. 28.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22년 임직원 수(정원 기준)의 증감을 기관 단위로 살펴보면, 총 16개 기관에서 전년 대비 100명 이상의 인력 증원이 이루어짐.
  - 16개 기관에서 총 3,247명이 증원되었으며 이는 2022년 전체 인력증원 규모(6,574명)의 약 49.4%를 차지함.
  - 가장 큰 규모로 인력이 증원된 기관은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전년 대비 589명(11.5%)이 증원되어 임직원 정원이 2021년 5,128명에서 2022년 5,717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 및 간호 인력의 한시적 증원에 기인함.
  - 두 번째로 증원 규모가 큰 기관인 전남대학교병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전년보다 6.9% 증원되어 2022년 5,631명을 기록함.
    - 다른 의료 분야 기관에서의 정원 증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인력 증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주요 원인임.

- 의료 분야 기관 외에 인력 증원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전년 대비 199명이 증원되어 2022년 총 임직원 수는 1만 266명으로 나타남.
- 근로복지공단의 인력 증원은 기관의 주요 사업인 산재보험사업과 의료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이루어졌으며 2022년에 전년 대비 2.0%의 증가율을 보임.

〈표 III-20〉 2022년 인력증원 100명 이상인 기관

(단위: 명)

번호	기관명	유형	증원 규모	번호	기관명	유형	증원 규모
1	경북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589	9	충남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151
2	전남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364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44
3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343	11	국토안전관리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41
4	전북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207	12	코레일테크(주)	기타공공기관	136
5	근로복지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99	13	서울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122
6	한국전력공사	시장형 공기업	188	14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20
7	한국수력원자력(주)	시장형 공기업	172	15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102
8	한국철도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69	16	주택도시보증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00

주: 1. 2022년 인력증원 규모는 2021년 임직원 정원 대비 2022년 임직원 정원 차이임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설기관이며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기타공공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의 부설기관임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 임직원 수' 항목의 공시자료(2023. 4. 28.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반면, 42개 기관은 전년에 비해 임직원 정원이 감소하였으며 정원 감소 규모는 총 597명으로 집계됨.
- 임직원 정원이 가장 크게 감소한 기관은 대한석탄공사로 2016년에 발표된 기능 조정 방안<sup>138)</sup>에 근거하여 매년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으며 2022년 임직원 정원 수는 2021년 755명에서 100명 감소한 655명임.

138) 기획재정부,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보도자료, 2016. 6. 14.

- 부산대학교병원은 두 번째로 임직원 정원이 크게 감소한 기관으로 전년 대비 99명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8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후 유지되었던 무기계약직 정원을 2022년에 반납한 것에 기인함.
- 한국동서발전(주)은 전년 대비 감소한 인원이 62명으로, 이들 중 대부분은 「전력수급기본계획<sup>139)</sup>」에 따른 2022년 1월 울산기력발전소 폐지로 감축된 정원임.

〈표 III-21〉 2022년 인력 감원 기관

(단위: 명)

번호	기관명	유형	감원 규모	번호	기관명	유형	감원 규모
1	대한석탄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00	22	한국전력거래소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
2	부산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99	2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타공공기관	6
3	한국동서발전(주)	시장형 공기업	62	24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타공공기관	5
4	한전KPS(주)	준시장형 공기업	61	25	한국언론진흥재단	기타공공기관	4
5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28	26	영화진흥위원회	기타공공기관	2
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타공공기관	25	27	코레일관광개발(주)	기타공공기관	2
7	한국교통안전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3	28	한국가스공사	시장형 공기업	2
8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기타공공기관	17	29	한국마사회	준시장형 공기업	2
9	한국조폐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5	3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타공공기관	2
10	한국한의약진흥원	기타공공기관	13	31	한국재정정보원	기타공공기관	2
11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기타공공기관	13	32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
1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2	33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기타공공기관	1
13	기초과학연구원	기타공공기관	11	34	정부법무공단	기타공공기관	1
14	전쟁기념사업회	기타공공기관	11	35	한국과학창의재단	기타공공기관	1

139) 산업통상자원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 2020. 12. 28.

〈표 III-21〉의 계속

(단위: 명)

번호	기관명	유형	감원 규모	번호	기관명	유형	감원 규모
15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기타공공기관	11	3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공공기관	1
16	인천국제공항공사	시장형 공기업	10	37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기타공공기관	1
17	중소기업은행	기타공공기관	9	38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기타공공기관	1
18	창업진흥원	기타공공기관	9	39	한국특허기술진흥원	기타공공기관	1
19	한국보육진흥원	기타공공기관	8	40	한국특허정보원	기타공공기관	1
20	한국전기안전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8	41	한국학중앙연구원	기타공공기관	1
21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	42	한국행정연구원	기타공공기관	1

주: 2022년 인력감원 규모는 2021년 임직원 정원 대비 2022년 임직원 정원 차이임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 임직원 수' 항목의 공시자료(2023. 4. 28.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나. 신규채용 현황

- 2022년에는 보건의료 및 SOC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이루어졌으며 채용인원은 2만 5,356명으로 나타남.<sup>140)</sup>
- 신규채용 규모는 전년 대비 1,590명(△5.9%) 감소하여 최근 3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나 감소폭은 점차 줄어들고 있음.<sup>141)</sup>

〈표 III-22〉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2018~2022년)

(단위: 만 명, %)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A)	'22년 (B)	증감 (B-A)	전년 대비 증감률
신규채용	3.36	4.12	3.06	2.69	2.54	△0.16	△5.9

주: 소수 반올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수차이 조정을 일부 거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5. 신규채용 현황' 항목의 기관별 공시자료(2023. 4. 28.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140) 기획재정부, 「347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23. 4. 28.

141) (2020년) △25.6% → (2021년) △12.1%(+13.5%p) → (2022년) △5.9%(+7.2%p)

- 2022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인원은 준시장형 공기업만 유일하게 증가했으며 그 외의 모든 공공기관 유형에서는 감소하였음.
- 공공기관 유형 중에서 신규채용 규모가 가장 크게 감소한 것은 준정부기관으로 2021년 7,629명에서 2022년 6,902명으로 727명(△9.5%) 감소하였으며 세부적으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228명(△12.9%),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498명(△8.5%) 감소하였음.
- 공기업의 2022년 신규채용 인원은 전년 대비 632명(△10.6%)이 감소한 5,319명인데, 이는 시장형 공기업에서 953명(△36.8%) 감소한 1,639명과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321명(9.6%) 증가한 3,680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기타공공기관은 전체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인원에서 가장 큰 비중(51.8%)을 차지하는 유형으로 2022년에 전년보다 231명(△1.7%) 줄어든 1만 3,135명을 신규로 채용함.

〈표 III-23〉 신규채용 현황(2018~2022년)

(단위: 명, %)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A)	'22년 (B)	증감 (B-A)	전년 대비 증감률
합 계	33,632	41,195	30,645	26,946	25,356	△1,590	△5.9
공기업	9,021	11,220	7,629	5,951	5,319	△632	△10.6
· 시장형	4,172	4,258	3,192	2,592	1,639	△953	△36.8
· 준시장형	4,849	6,962	4,437	3,359	3,680	321	9.6
준정부기관	9,058	8,509	6,657	7,629	6,902	△727	△9.5
· 기금관리형	2,584	1,628	1,429	1,769	1,541	△228	△12.9
· 위탁집행형	6,475	6,881	5,229	5,859	5,361	△498	△8.5
기타공공기관	15,553	21,467	16,359	13,366	13,135	△231	△1.7

주: 1. 2023년 1월 지정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산출한 수치이므로 2023년 6월 수시 지정 건(구.제외동포재단 지정해제 및 제외동포협력센터 신규 지정)은 반영하지 않음  
 2. 소수 반올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수차이 조정을 일부 거침  
 자료: 기획재정부, 「347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23. 4. 28. 및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5. 신규채용 현황' 항목의 기관별 공시자료(2023. 4. 28.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22년 공공기관 신규채용 현황을 주무부처별로 살펴보면, <표 III-24>와 같음.
- 2022년 신규채용 규모는 교육부(7,173명), 국토교통부(3,570명), 보건복지부(3,348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3개 주무부처의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가 전체 신규채용 규모의 55.6%를 차지함.

- 2022년 신규채용 규모가 증가한 주무부처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194명, 6.2%), 과학기술정보통신부(168명, 14.7%), 농림축산식품부(59명, 12.9%) 순으로 증가하였음.
- 2022년 신규채용 규모가 감소한 주무부처를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938명, △24.7%), 교육부(△398명, △5.3%), 환경부(△185명, △19.2%) 순으로 감소하였음.
- 35개 부처 중 21개 부처<sup>142)</sup> 산하 기관의 신규채용 규모가 총 2,204명 감소하였음.

〈표 III-24〉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신규채용 현황(2018~2022년)

(단위: 개, 명, %)

구분	기관 수	'18년	'19년	'20년	'21년 (A)	'22년 (B)	증감 (B-A)	전년 대비 증감률
기획재정부	4	251	205	195	185	206	21	11.4
교육부	22	7,931	7,112	8,210	7,571	7,173	△398	△5.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3	2,767	1,543	1,132	1,136	1,304	168	14.7
외교부	3	87	87	47	39	60	22	55.8
통일부	2	5	10	6	7	3	△4	△57.1
법무부	3	95	92	57	71	91	20	28.2
국방부	3	23	33	21	24	23	△1	△4.2
행정안전부	3	352	127	66	150	137	△13	△8.7
국가보훈부	3	828	671	919	869	808	△62	△7.1
문화체육관광부	31	476	352	299	359	311	△48	△13.3
농림축산식품부	12	666	551	375	458	517	59	12.9
산업통상자원부	41	5,659	8,411	6,855	3,802	2,865	△938	△24.7
보건복지부	28	3,318	3,869	3,046	3,153	3,348	194	6.2
환경부	12	783	1,165	773	966	781	△185	△19.2
고용노동부	12	2,154	1,320	979	1,311	1,247	△64	△4.9
여성가족부	5	65	58	117	75	70	△5	△6.7
국토교통부	28	4,781	12,402	4,867	3,749	3,570	△179	△4.8
해양수산부	17	346	385	348	408	353	△55	△13.6
중소벤처기업부	11	511	470	392	528	452	△76	△14.4

142) 산업통상자원부(△938명), 교육부(△398명), 환경부(△185명), 국토교통부(△179명), 중소벤처기업부(△76명), 고용노동부(△64명), 국가보훈부(△62명), 국무조정실(△59명), 해양수산부(△55명), 문화체육관광부(△48명), 기상청(△44명), 산림청(△25명), 공정거래위원회(△20명), 특허청(△17명), 행정안전부(△13명), 인사혁신처(△5명), 여성가족부(△5명), 소방청(△4명), 통일부(△4명), 식품의약품안전처(△3명), 국방부(△1명)

〈표 III-24〉의 계속

(단위: 개, 명, %)

구분	기관 수	'18년	'19년	'20년	'21년 (A)	'22년 (B)	증감 (B-A)	전년 대비
								증감률
국무조정실	25	651	338	273	327	268	△59	△18.0
방송통신위원회	2	35	37	49	24	24	0	0.0
원자력안전위원회	3	54	79	24	37	42	5	13.5
금융위원회	7	836	855	744	883	929	47	5.3
공정거래위원회	2	64	72	39	67	47	△20	△29.9
인사혁신처	1	50	49	60	42	37	△5	△11.9
식품의약품안전처	4	71	70	75	67	64	△3	△4.5
관세청	1	3	8	2	5	7	2	40.0
방위사업청	2	371	389	101	199	244	45	22.6
경찰청	1	83	137	124	141	154	13	9.2
소방청	1	25	31	30	21	17	△4	△19.0
문화재청	1	24	16	21	14	22	8	57.1
농촌진흥청	1	8	25	25	20	31	11	55.0
산림청	4	199	154	253	105	80	△25	△23.4
특허청	6	43	51	68	59	42	△17	△28.8
기상청	3	22	23	55	76	32	△44	△57.8
합 계	347	33,632	41,195	30,645	26,946	25,356	△1,590	△5.9

주: 1. 기관 수는 모기관 단위로 산출하였으며 부설기관(15개 기관)의 임직원 수는 모기관에 포함하여 반영

2. 임직원 수는 2023년 4월 28일 알리오시스템에 공시한 기관별 임직원 수를 부처 단위로 합산하여 작성하였으며 반올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수차이 조정을 일부 거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5. 신규채용 현황' 항목의 기관별 공시자료(2023. 4. 28.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22년에 신규채용이 100명 이상 이루어진 기관은 49개이며 이 중 상위 10개 기관의 신규채용 규모(9,283명)는 전체 신규채용 규모(2만 5,356명)의 36.6%를 차지함.

○ 신규채용을 많이 한 10개 기관은 의료복지 분야와 SOC 분야의 공공기관에 해당함.

〈표 III-25〉 2022년 신규채용 규모 상위 10개 기관

(단위: 명)

번호	기관명	유형	신규 채용	번호	기관명	유형	신규 채용
1	한국철도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701	6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92
2	충남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1,144	7	부산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728
3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105	8	경북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722
4	서울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959	9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712
5	전남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795	10	근로복지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626

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기타공공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의 부설기관임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5. 신규채용 현황' 항목의 기관별 공시자료(2023. 4. 28.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신규채용 규모를 전년 대비 증감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국철도공사를 포함한 5개 기관에서 2022년 신규채용 규모가 전년 대비 100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철도공사는 2022년 전체 공공기관 중 신규채용 규모가 1,701명으로 가장 크고 전년 대비 신규채용 증가 인원도 272명으로 가장 많음.
  - 기존 인력인 베이비붐 세대 직원의 퇴직으로 필요 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신규 채용 규모가 확대됨.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년보다 240명 증가(1,043.5%)한 263명을 신규로 채용함.
  -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sup>143)</sup>에 따른 정원 감축으로 신규채용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2022년에는 일정 수준의 채용을 유지하는 안건이 공운위를 통해 의결받아 신규채용 인원이 늘어남.
- 한국산업은행의 2022년 신규채용 규모는 236명으로, 2021년 60명 대비 176명 (293.3%) 증가하였음.
  - 2021년 하반기 신규채용 인원의 집행일 지연으로 2022년 신규 채용 규모가 일시적으로 증가함.
- (주)강원랜드는 2021년 7명에서 170명이 증가한 177명을 2022년에 신규로 채용하였으며 이는 전체 공공기관 중 두 번째로 큰 증가율(2,428.6%)을 보임.

143) 국토교통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 발표」, 보도자료, 2021. 6. 7.

- (주)강원랜드는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휴업으로 채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22년부터 완화된 조치로 운영을 재개하여 기존 규모로 신규 채용을 진행하였음.
- 충남대학교병원은 2021년보다 164명(16.7%) 많은 1,144명을 신규 채용함.
  - 충남대학교병원의 신규채용 인원 증가는 간호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영향에 기인함.

〈표 III-26〉 2022년 신규채용 100명 이상 증가한 기관

(단위: 명, %)

번호	기관명	유형	'21년 신규채용 (A)	'22년 신규채용 (B)	증감 (B-A)	전년 대비 증감률
1	한국철도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429	1,701	272	19.0
2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23	263	240	1,043.5
3	한국산업은행	기타공공기관	60	236	176	293.3
4	(주)강원랜드	시장형 공기업	7	177	170	2,428.6
5	충남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980	1,144	164	16.7

주: 전년 대비 증감률은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5. 신규채용 현황' 항목의 기관별 공시자료(2023. 4. 28.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에 따른 사회형평적 채용 관련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의 신규채용 규모는 감소하였으나 사회형평적 채용의 모든 분야에서 전체 신규채용 대비 비중은 증가하여 2021년보다 사회형평적 채용 지표가 개선된 모습을 보여줌.144)
- 이전지역 인재, 비수도권 지역인재, 청년 등의 신규채용은 감소하였으나 각 감소율은 총 신규채용 감소율(△5.9%)보다는 낮았으며, 장애인 및 여성 인재 채용은 증가하였음.
  - 장애인 채용을 제외한 다른 분야의 2022년 전체 신규채용 대비 비중은 최근 5년 중 가장 높음.
  - 2022년 장애인 신규채용 규모는 2021년보다 5명 증가한 739명이며 2019년 대규모 채용을 제외하면 채용 규모와 비중이 꾸준히 늘어남.
  - 2022년 여성의 신규채용 인원은 1만 3,042명으로 전년 대비 166명 증가하였고 전체 신규채용 대비 비중도 전년(47.8%) 대비 가장 크게 증가(3.6%p)하여 51.4%로 나타났음.

144) 기획재정부, 「347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23. 4. 28.

- 2022년 청년 채용 규모는 전체 분야 중 가장 크게 감소(676명)하였지만 전체 신규 채용 대비 비중은 84.6%로 전년보다 2.5%p 증가하였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III-27〉 사회형평적 채용 규모(2018~2022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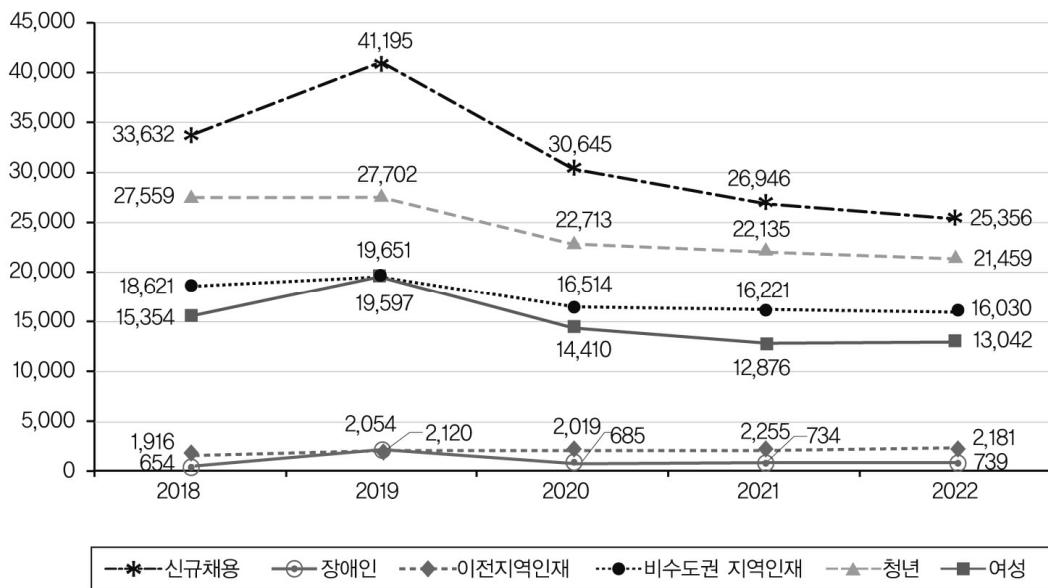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A)	'22년 (B)	증감 (B-A)	전년 대비
							증감률
장애인	654 (1.9%)	2,120 (5.1%)	685 (2.2%)	734 (2.7%)	739 (2.9%)	5 (0.2%p)	0.7
이전지역인재	1,916 (5.7%)	2,054 (5.0%)	2,019 (6.6%)	2,255 (8.4%)	2,181 (8.6%)	△74 (0.2%p)	△3.3
비수도권 지역인재	18,621 (55.4%)	19,651 (47.7%)	16,514 (53.9%)	16,221 (60.2%)	16,030 (63.2%)	△191 (3.0%p)	△1.2
청년	27,559 (81.9%)	27,702 (67.2%)	22,713 (71.4%)	22,135 (82.1%)	21,459 (84.6%)	△676 (2.5%p)	△3.1
여성	15,354 (45.7%)	19,597 (47.6%)	14,410 (47.0%)	12,876 (47.8%)	13,042 (51.4%)	166 (3.6%p)	1.3
총 신규채용	33,632	41,195	30,645	26,946	25,356	△1,590	△5.9

주: ( ) 안의 수치는 총 신규채용 대비 비중

자료: 기획재정부, 「347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23. 4. 28.

[그림 III-3] 사회형평적 채용 추이(2018~2022년)

(단위: 명)



자료: 기획재정부, 「347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23. 4. 28.를 참고하여 작성

### 3. 재무현황<sup>145)</sup>

#### 가. 총평

- 2022년 공공기관 자산 규모는 약 1,055조 원으로 주요 공공기관의 설비·투자자산의 지속적 확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88.4조 원(9.1%) 증가하였음.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임대자산 증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 대지급 규모 확대에 따른 대출채권 증가, 한국도로공사의 건설 투자 지속 확대에 따른 보유자산 증가 등이 공공기관 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었음.
  
- 2013년 말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영향으로 2014년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된 이래 2017년까지 4년 연속 감소하였으나, 2018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2022년까지 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 2022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의 부채 규모가 전년 대비 64.5조 원 대폭 증가함에 따라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전년 대비 87.6조 원(15.0%) 증가하였음.
  -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등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된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할 경우 부채비율은 2021년 130.0%에서 2022년 128.0%로 2.0%p 감소하여 재무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됨.
  - 공기업 부채는 전년 대비 78.6조 원(18.3%) 증가하였고, 준정부기관 부채는 전년 대비 8.3조 원(6.7%) 증가, 기타공공기관 부채는 전년 대비 0.7조 원(2.4%) 증가함.

145)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기관별 공시자료(2023. 4. 28. 기준) 및 「347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23. 4. 28. 참고

〈표 III-28〉 공공기관의 자산, 부채 및 자본 현황(2018~2022년)

(단위: 조 원, %)

구분	'18	'19	전년 대비 증감 (증가율)	'20	전년 대비 증감 (증가율)	'21	전년 대비 증감 (증가율)	'22	전년 대비 증감 (증가율)
◇ 부채	500.7	524.2	23.5 (4.7)	540.6	16.4 (3.1)	582.4	41.8 (7.7)	670.0	87.6 (15.0)
· 공기업	368.0	384.6	16.6 (4.5)	394.1	9.5 (2.5)	429.3	35.3 (9.0)	508.0	78.6 (18.3)
· 준정부기관	116.0	117.9	1.9 (1.6)	121.2	3.3 (2.8)	124.0	2.8 (2.3)	132.3	8.3 (6.7)
· 기타공공기관	16.7	21.7	5.1 (30.3)	25.4	3.6 (16.7)	29.1	3.7 (14.5)	29.8	0.7 (2.4)
◇ 자본	321.5	330.6	9.1 (2.8)	354.2	23.6 (7.1)	383.7	29.5 (8.3)	384.5	0.8 (0.2)
· 공기업	201.1	204.9	3.9 (1.9)	210.6	5.6 (2.7)	215.3	4.8 (2.3)	202.6	△12.7 (△5.9)
· 준정부기관	69.2	73.1	4 (5.8)	84.7	11.5 (15.8)	99.7	15.1 (17.8)	115.8	16 (16.1)
· 기타공공기관	51.3	52.5	1.2 (2.4)	59.0	6.4 (12.3)	68.7	9.7 (16.5)	66.1	△2.5 (△3.7)
◇ 자산	822.2	854.8	32.6 (4.0)	894.8	40 (4.7)	966.1	71.3 (8)	1,054.5	88.4 (9.1)
· 공기업	569.3	589.8	20.4 (3.6)	604.9	15.1 (2.6)	644.9	40.1 (6.6)	710.9	65.9 (10.2)
· 준정부기관	184.9	190.8	5.9 (3.2)	205.6	14.8 (7.8)	223.5	17.9 (8.7)	247.8	24.3 (10.9)
· 기타공공기관	68.0	74.3	6.3 (9.2)	84.3	10.1 (13.6)	97.7	13.4 (15.9)	95.9	△1.8 (△1.9)

주: 1. (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2. 2023년 4월 말 알리오시스템에 경영정보를 공시한 347개 공공기관(2023년 1월 지정 기준) 및 부설기관(15개)을 기준으로 작성

3.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2017~2022년 모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료 작성

(단, 일부 기타공공기관(7개)의 경우 2018~2020년 신규 지정 및 유형 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시점에 기관별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기준이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7~18년에 한해 과거 한국일반회계기준(K-GAAP)을 사용: 서민금융진흥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창업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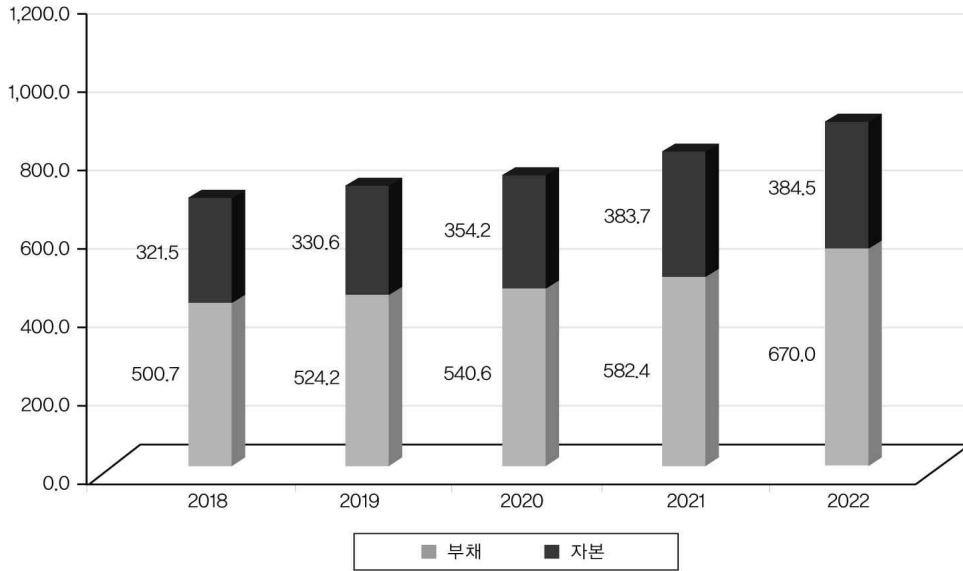
4.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관 고유계정 및 기금계정(직접관리기금)을 모두 포함하여 금액 산출. 다만, 기타공공기관 중 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산출대상에서 제외

5. 소수점 반올림과 증감 계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수차이 조정을 일부 거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9.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3. 4. 28.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Ⅲ-4] 공공기관의 자본 및 부채 규모 추이(2018~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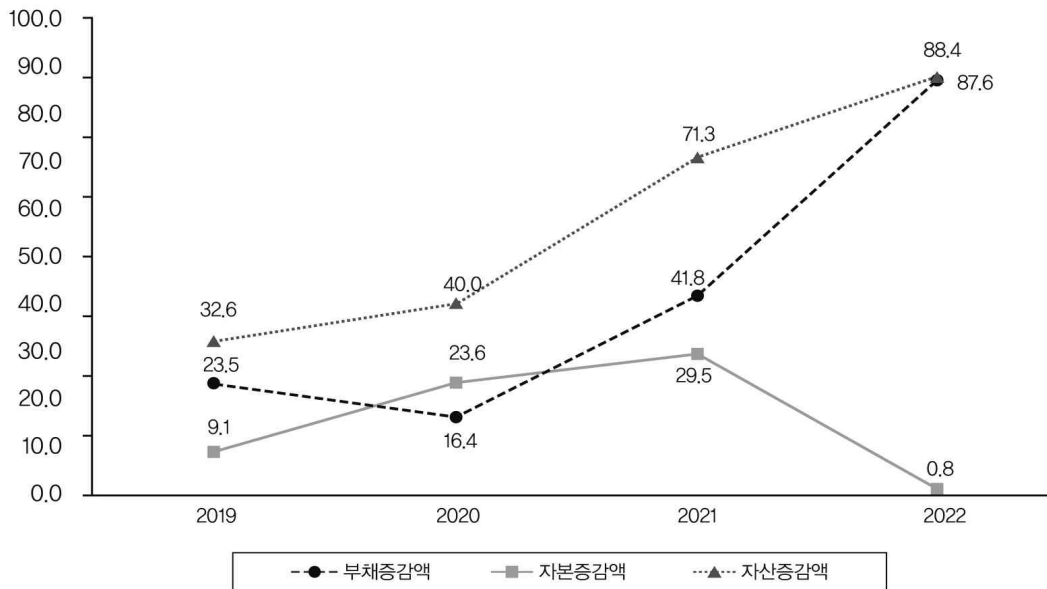
(단위: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9. 요약재무상대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3. 4. 28.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Ⅲ-5] 공공기관의 자산, 부채 및 자본 증감액 추이(2019~2022년)

(단위: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9. 요약재무상대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3. 4. 28.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나. 부채 현황

- 2015년 이후 2017년까지 매년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감소세를 유지하였으나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부터 이어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2022년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670조 원으로 전년 대비 87.6조 원 대폭 증가하였음.
-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의 부채 규모(연결재무제표 기준)가 전년 대비 각각 47.0조 원, 17.5조 원 대폭 증가함.
  -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발전자회사의 연료도입 가격이 증가하였고 그 결과 한국전력공사의 구입단가가 상승하였으나 이러한 원가상승 요인이 전기요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수익성이 악화되어 부채가 크게 증가함.<sup>146)</sup>
  - 유가 상승 및 환율변동에 따른 요금상 원료비와 실적원료비의 차이로 인해 원료비미수금이 발생하여 한국가스공사의 차입금이 크게 증가함.<sup>147)</sup>
- 「공운법」 제39조의2 및 「국가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39개 기관<sup>148)</sup>의 2022년 부채 규모는 638.4조 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약 9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87.8조 원 증가하였고 부채비율은 187.2%로 전년 대비 25.4%p 상승함.
- 부채 규모는 작년에 수립된 「2022~2026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2022년 전망치인 632.8조 원보다 약 5.6조 원 초과하였음.<sup>149)</sup>

146)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41. 12개 주요기관의 상세부채 정보」의 기관별 공시자료(2023. 4. 28. 기준)를 참고

147)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41. 12개 주요기관의 상세부채 정보」의 기관별 공시자료(2023. 4. 28. 기준)를 참고

148)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39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농어촌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보증기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강원랜드, 서민금융진흥원

149)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9.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3. 4. 28. 기준)를 참고

〈표 III-29〉 부채 규모 및 부채비율 현황(2018~2022년)

(단위: 조 원, %, %p)

구분	'18	'19	전년 대비 증감	'20	전년 대비 증감	'21	전년 대비 증감	'22	전년 대비 증감
◇ 부채	500.7 (156)	524.2 (159)	23.5 (3)	540.6 (153)	16.4 (△6)	582.4 (152)	41.8 (△1)	670.0 (174)	87.6 (22)
공기업	368.0 (183)	384.6 (188)	16.6 (5)	394.1 (187)	9.5 (△1)	429.3 (199)	35.3 (12)	508.0 (251)	78.6 (51)
· 시장형	171.5 (174)	186.5 (194)	14.9 (20)	188.7 (199)	2.3 (6)	212.1 (237)	23.4 (38)	279.5 (418)	67.4 (181)
· 준시장형	196.5 (192)	198.1 (182)	1.6 (△9)	205.3 (177)	7.2 (△5)	217.2 (173)	11.9 (△5)	228.5 (168)	11.3 (△4)
준정부기관	116 (168)	117.9 (161)	1.9 (△7)	121.2 (143)	3.3 (△18)	124 (124)	2.8 (△19)	132.3 (114)	8.3 (△10)
· 기금관리형	56.9 (143)	56.8 (121)	△0.1 (△22)	59.3 (104)	2.5 (△17)	62.0 (91)	2.7 (△13)	70.8 (92)	8.7 (1)
· 위탁집행형	59.1 (201)	61.1 (234)	2.0 (33)	61.9 (224)	0.8 (△10)	62.0 (196)	0.1 (△28)	61.5 (158)	△0.5 (△38)
기타공공기관	16.7 (33)	21.7 (41)	5.1 (9)	25.4 (43)	3.6 (2)	29.1 (42)	3.7 (△1)	29.8 (45)	0.7 (3)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39개)	479.9 (167)	500.0 (169)	20.2 (2)	512.3 (162)	12.3 (△7)	550.6 (162)	38.2 (0)	638.4 (187)	87.8 (25)

주: 1. ( ) 안은 부채비율(부채/자본)임

2. 2023년 4월 말 알리오시스템에 경영정보를 공시한 347개 공공기관(2023년 1월 지정 기준) 및 부설기관(15개)을 기준으로 작성

3.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2017~2022년 모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OFRS)에 따라 자료 작성 (단, 일부 기타공공기관(7개)의 경우 2018~2020년 신규 지정 및 유형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시점에 기관 별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기준이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7~18년에 한해 과거 한국일반회계 기준(K-GAAP)을 사용: 서민금융진흥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창업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4.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관 고유계정 및 기금계정(직접관리기금)을 모두 포함하여 금액 산출. 다만, 기타공공기관 중 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산출대상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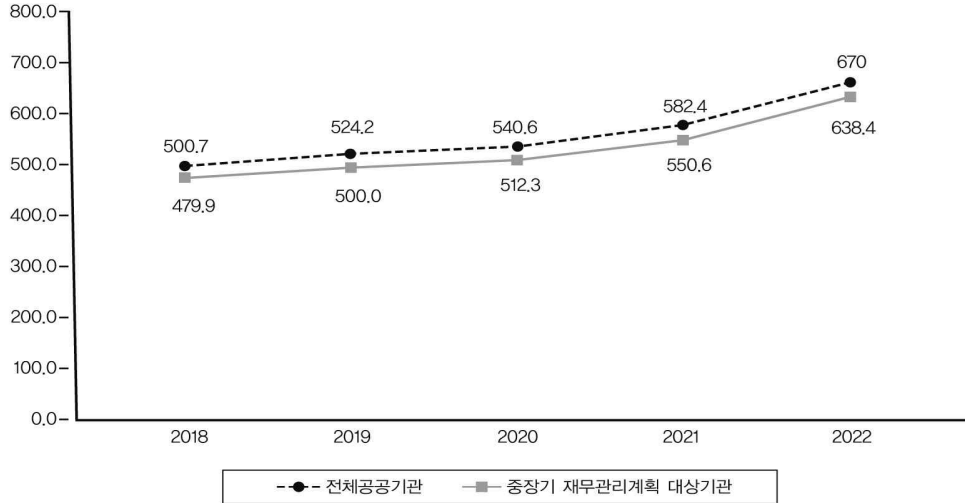
5. 소수점 반올림과 증감 계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수차이 조정을 일부 거침

6.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은 2022년(39개)을 기준으로 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9.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3. 4. 28.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I-6] 부채 규모 추이(2018~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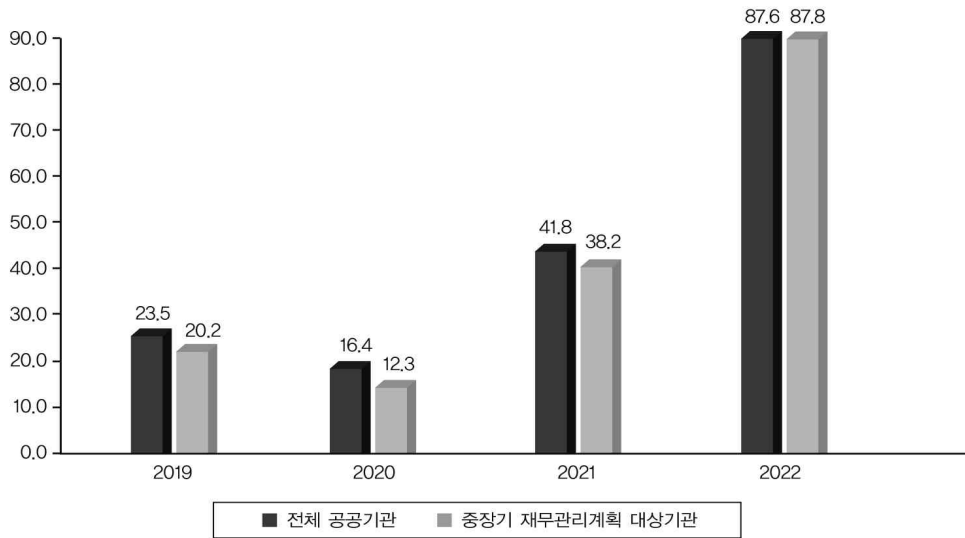
(단위: 조 원)



주: 작성 시점에 따라 전체 공공기관 개수 및 규모 변동가능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9. 요약재무상대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3. 4. 28.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I-7] 부채 증감 추이(2019~2022년)

(단위: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9. 요약재무상대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3. 4. 28.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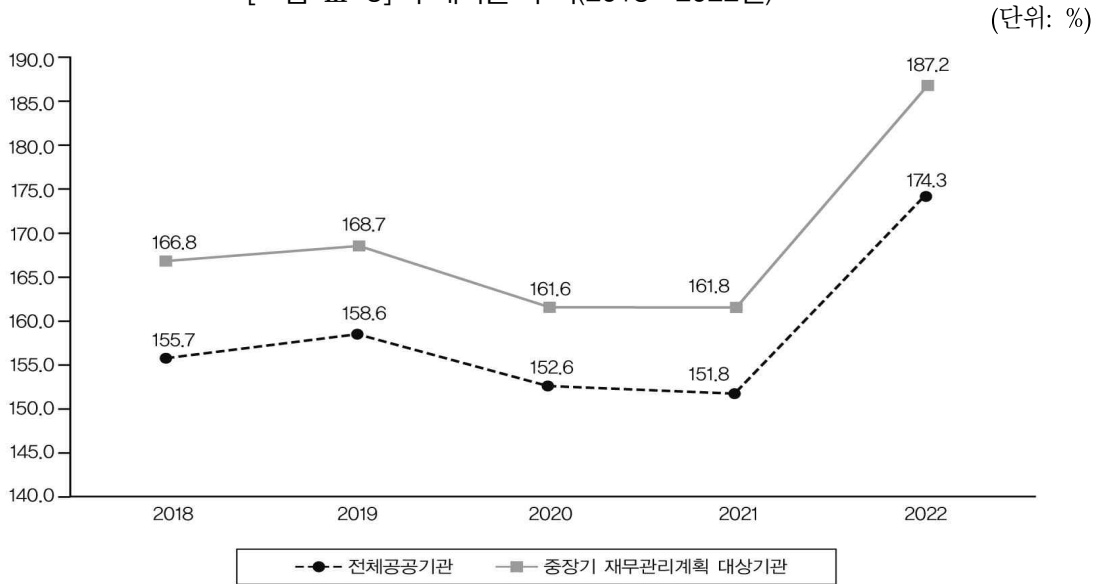
□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sup>150)</sup>은 2013년 이후 6년간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2019년의 일시적인 소폭 상승 이후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sup>151)</sup>, 2022년에는 대폭 상승하여 (전년 대비 22.5%p 상승) 174.3%를 나타내었음.

150) 부채비율: 부채/자본

151) 부채비율(%): ('13) 217 ('14) 201 ('15) 183 ('16) 167 ('17) 157 ('18) 156 ('19) 159 ('20) 153 ('21) 152 ('22) 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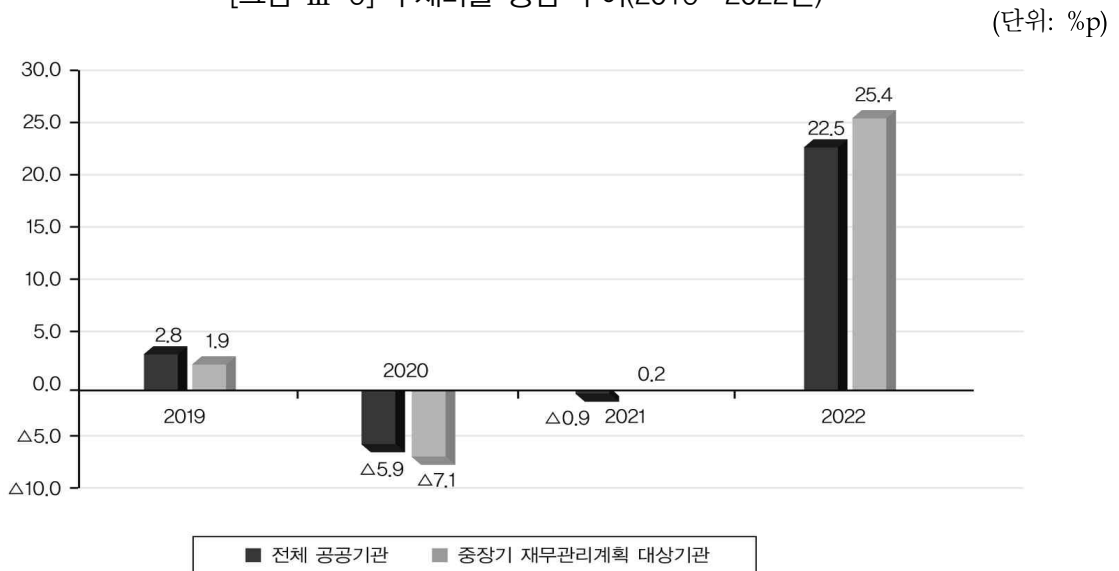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인 공공기관 39개의 부채비율 역시 전체 공공기관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0.2%p 소폭 상승하여 161.8%를 나타냈고, 2022년은 전년 대비 25.4%p 크게 상승하여 187.2%를 기록함.

[그림 III-8] 부채비율 추이(2018~2022년)



주: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표 III-29>의 부채비율을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기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9.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3. 4. 28.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I-9] 부채비율 증감 추이(2019~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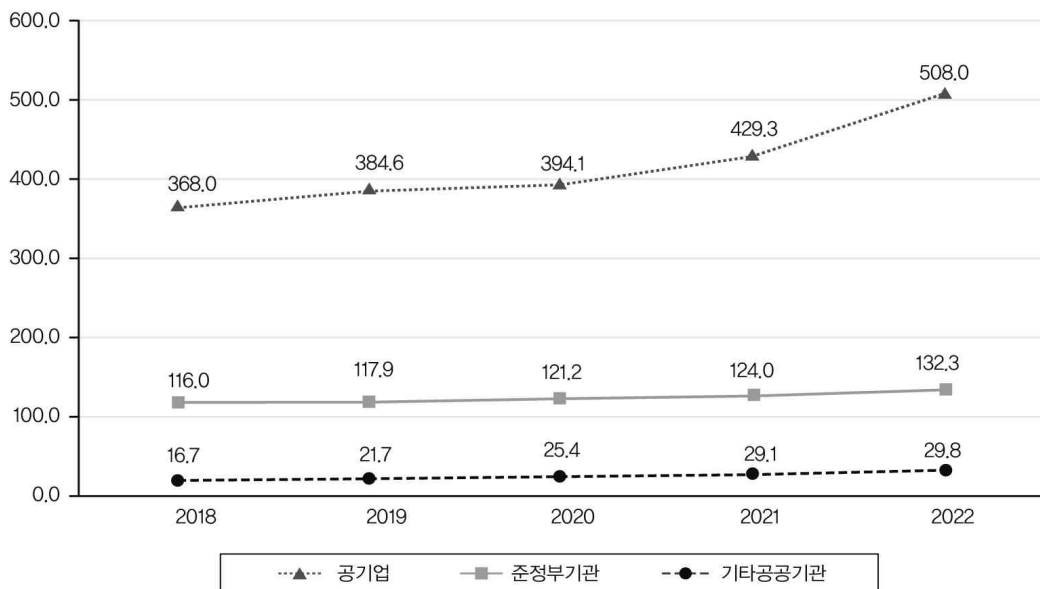


주: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표 III-29>의 부채비율 증감을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기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9.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3. 4. 28.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공공기관 유형별로 부채 규모를 살펴보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모두 부채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부채 규모면에서 보면, 전체 공공기관의 전년 대비 부채 증가액(87.6조 원)의 상당 부분(78.6조 원, 89.7%)이 공기업의 부채 증가에 기인함.
    - 공기업 유형의 전년 대비 증가한 78.6조 원의 부채 중 67.4조 원이 시장형 공기업의 부채에 해당하였으며,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의 부채 규모가 전년 대비 64.5조 원 대폭 증가한 것에서 기인함.
    - 준정부기관의 경우 전년 대비 8.3조 원의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부채가 전년 대비 8.7조 원 증가한 것에서 기인함.
  
- 부채 증가율의 경우 2022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부채 증가율이 크게 상승하는 반면 기타공공기관은 대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준정부기관의 부채 증가율은 2019~2021년에 1.6~2.8% 수준을 보이다 2022년 6.7%로 상승하였으며, 기타공공기관은 2019년 30.3%에서 3년 연속 하락하여 2022년 2.4%를 나타내었음.

[그림 III-10]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 현황(2018~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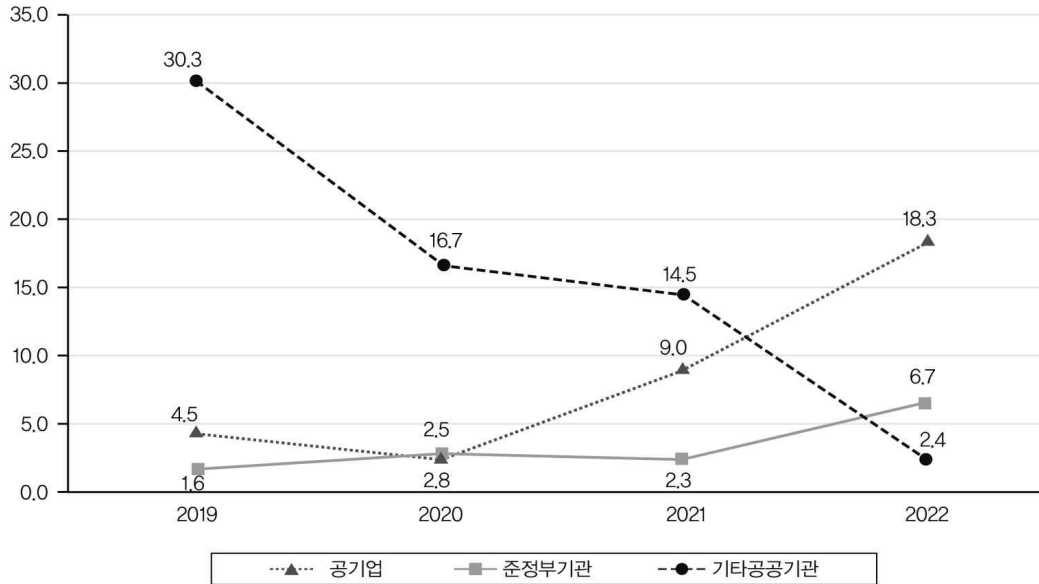
(단위: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9.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3. 4. 28.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Ⅲ-11]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 증가율 추이(2019~2022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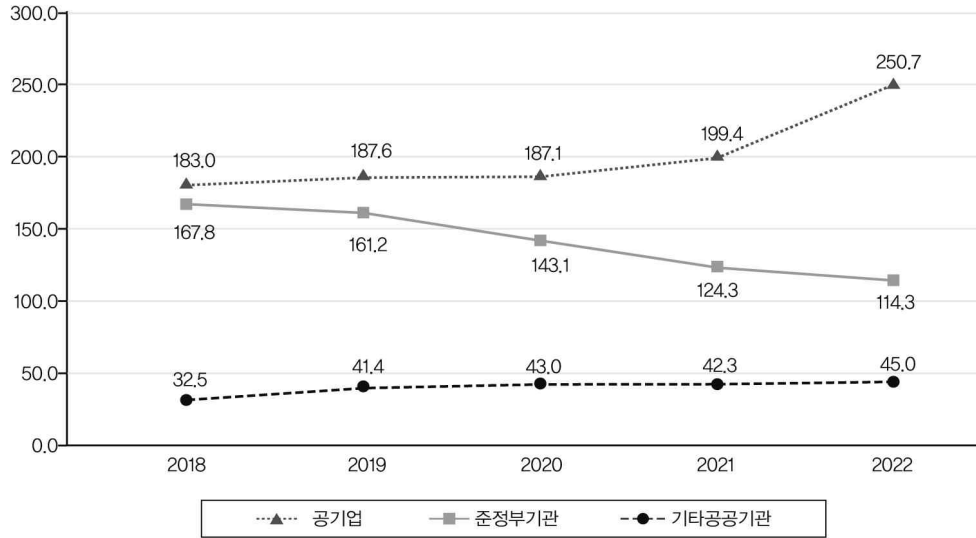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9.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3. 4. 28.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공공기관 유형별로 부채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공기업은 2018~2020년까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다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기타공공기관은 2018년 이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나 준정부기관은 2018년 이후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대체로 완만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 2021년 12.2%p 증가하여 199.4%를 기록한 이후 2022년 51.2%p 대폭 증가하여 250.7%를 나타냄.
- 준정부기관은 2018년 168.2%였던 부채비율이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특히 2020년~2021년 18~19%p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2022년에도 10%p 감소하여 114.3%를 나타냄.
- 기타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2019년, 2020년에는 증가하였고, 2021년 다시 감소, 2022년에는 증가하여 소폭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음.

[그림 III-12]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비율 현황(2018~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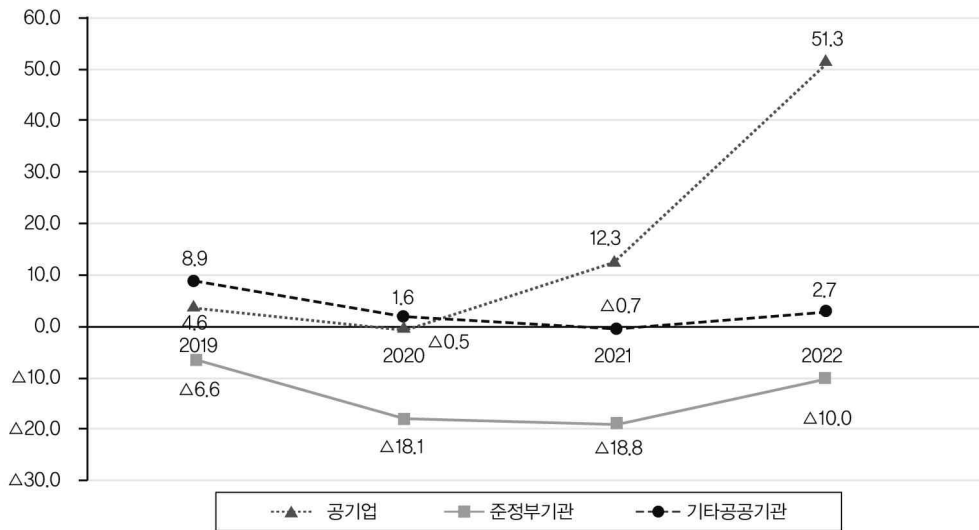
(단위: %)



주: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표 III-29>의 부채비율을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기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9.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3. 4. 28.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I-13]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비율 증감 추이(2019~2022년)

(단위: %p)



주: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표 III-29>의 부채비율 증감을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기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9.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3. 4. 28.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22년 공공기관 부채 규모를 주무부처별로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채가 약 286.2조 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으며,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채 약 234.8조 원이 두 번째로 큰 규모를 보임.

-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채는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77.8%<sup>152)</sup>를 차지하고 있음.
- 2022년 부채 규모가 가장 크게 증가한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전년 대비 약 65.2조 원 증가(29.5%)하였으며, 부채 규모가 가장 크게 감소한 부처는 환경부로 전년 대비 약 1.1조 원 감소(7.1%)함.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부채가 크게 급증한 것은 유가급등으로 인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분야 공기업의 부채가 전년 대비 증가<sup>153)</sup>한 것에 기인함.
  - 환경부 소관 공공기관의 부채 감소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 감축 실적(1.1조 원)에 기인함.

〈표 Ⅲ-30〉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부채 현황(2018~2022년)

(단위: 억 원, %)

구분	기관 수	'18	'19	'20(A)	'21(A)	'22(B)	증감 (B-A)	전년 대비 증감률
기획재정부	4	1,456	2,448	3,909	4,601	3,681	△920	△20.0
교육부	22	175,308	176,457	176,648	174,586	172,368	△2,217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3	23,870	25,314	26,901	28,737	30,645	1,908	6.6
외교부	3	1,248	1,120	1,245	1,568	1,788	220	14.0
통일부	2	34	123	160	162	164	2	1.0
법무부	3	693	700	714	753	811	59	7.8
국방부	3	274	291	329	340	331	△9	△2.6
행정안전부	3	468	540	636	698	603	△95	△13.6
국가보훈부	3	877	903	981	967	958	△9	△0.9
문화체육관광부	31	24,367	23,180	22,399	21,280	24,093	2,813	13.2
농림축산식품부	12	97,766	104,625	114,714	121,756	135,470	13,714	11.3
산업통상자원부	41	1,821,003	1,974,799	1,991,874	2,209,676	2,861,825	652,149	29.5
보건복지부	28	124,844	136,329	137,548	131,573	124,613	△6,960	△5.3
환경부	12	155,527	154,759	156,270	155,200	144,256	△10,943	△7.1
고용노동부	12	9,238	10,508	10,759	11,146	10,456	△690	△6.2

152) 국토교통부 35.0%, 산업통상자원부 42.7%

153) 한국전력공사(47조 원), 한국가스공사(17.5조 원), 한국지역난방공사(1.1조 원)

〈표 III-30〉의 계속

(단위: 억 원, %)

구분	기관 수	'18	'19	'20	'21(A)	'22(B)	증감 (B-A)	전년 대비 증감률
여성가족부	5	87	129	130	148	181	33	22.3
국토교통부	28	1,982,866	1,990,899	2,074,098	2,212,035	2,348,352	136,317	6.2
해양수산부	17	42,006	63,037	83,268	108,840	100,125	△8,714	△8.0
중소벤처기업부	11	174,021	184,416	221,014	245,807	269,548	23,740	9.7
국무조정실	25	3,934	4,348	4,951	5,073	5,447	374	7.4
방송통신위원회	2	2,370	2,351	2,567	2,555	2,749	194	7.6
원자력안전위원회	3	610	497	513	675	660	△16	△2.3
금융위원회	7	278,893	303,603	295,629	306,307	382,964	76,658	25.0
공정거래위원회	2	92	91	119	172	115	△57	△33.1
인사혁신처	1	73,759	68,341	64,984	61,346	57,167	△4,179	△6.8
식품의약품안전처	4	197	368	429	399	406	6	1.6
관세청	1	3	3	3	2	2	0	△7.7
방위사업청	2	9,441	9,787	11,292	15,378	18,167	2,789	18.1
경찰청	1	444	584	723	817	613	△203	△24.9
소방청	1	118	119	141	137	103	△35	△25.2
문화재청	1	82	93	118	86	124	38	44.1
농촌진흥청	1	137	155	125	98	113	15	15.3
산림청	4	64	189	181	170	143	△26	△15.5
특허청	6	844	900	1,014	1,005	1,110	106	10.5
기상청	3	36	17	31	35	37	2	7.1
합계	347	5,006,977	5,242,019	5,406,416	5,824,125	6,700,190	876,065	15.0

주: 1. 2023년 4월 말 알리오시스템에 경영정보를 공시한 347개 공공기관(2023년 1월 지정 기준) 및 부설기관(15개)을 기준으로 작성. 기관 수는 모기관 단위로 산출하였으며 부설기관 수치는 모기관에 포함하여 반영  
 2.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관 고유계정 및 기금계정(직접관리기금)을 모두 포함하여 금액 산출. 다만, 기타공공기관 중 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기획재정부 소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금융위원회 소관)은 산출 대상에서 제외  
 3.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합계, 증감액, 증감률에 오차 발생 가능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9.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3. 4. 28.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22년 기준 부채 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에서는 2021년 10위<sup>154)</sup>를 기록하였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외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추가되었으며 일부 순위 변동이 발생하였음.
- 10개 기관 모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기관이며 이 중 국가철도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제외한 7개 기관은 에너지 및 SOC 분야 공기업에 해당함.

〈표 III-31〉 2022년도 부채 규모 상위기관 현황

(단위: 조 원, %, %p)

순위	기관명	2021년	2022년(A)	증감액	증감률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전망치(B)	전망치 대비 초과감축(B-A)
1	한국전력공사	145.8 (223)	192.8 (459)	47.0 (236)	32.2%	99.4 (369.1)	△93.4 (△90.0)
2	한국토지주택공사	138.9 (221)	146.6 (219)	7.7 (△3)	5.6%	150.3 (220.6)	3.68 (1.9)
3	한국가스공사	34.6 (379)	52.0 (500)	17.5 (121)	50.5%	45.8 (437.3)	△6.21 (△62.3)
4	한국도로공사	33.3 (83)	35.8 (84)	2.5 (1)	7.7%	36.0 (84.7)	0.17 (0.4)
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2.0	24.0	2.0	9.1%	24.0	△0.04
6	국가철도공단	20.6	20.4	△0.2	△0.7%	20.9	0.47
7	한국철도공사	18.7 (287)	20.0 (223)	1.4 (△65)	7.4%	19.6 (241.3)	△0.44 (18.7)
8	한국석유공사 <sup>155)</sup>	20.0	19.8	△0.2	△0.8%	20.9	1.10
9	한국주택금융공사	10.7 (82)	18.2 (134)	7.5 (52)	70.5%	22.4 (159.6)	4.17 (25.6)
10	한국수자원공사	13.5 (137)	12.4 (115)	△1.1 (△22)	△8.5%	13.5 (127.0)	1.10 (12.0)

주: 1. ( ) 안은 부채비율(=부채/자본)임

2.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연결 재무상태표 기준

3. 국가철도공단은 자본금·기본재산이 '0'인 기관으로 부채비율 산출 불가능

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융자사업 수행기관으로 여타기관과 부채비율 일괄 비교 곤란

5. 소수점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증감액 및 증감률 계산하는 데 일부 오차 발생 가능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9.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3. 4. 28.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154) 2021년도 부채 상위 10개 기관의 순위: 1. 한국전력공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한국가스공사, 4. 한국도로공사 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 국가철도공단, 7. 한국석유공사, 8. 한국철도공사, 9. 한국수자원공사, 10. 국민건강보험공단

### 다. 자산 현황

- 2022년 공공기관 자산 총액은 1,054.5조 원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임대자산 증가(한국토지주택공사)와, 건설투자 지속 확대에 따른 보유자산 증가(한국도로공사), 지급보증 대지급 규모 확대에 따른 대출채권 증가(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따라 전년 대비 9.2%(88.4조 원) 증가함.
- 2022년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규모를 살펴보면, 공기업은 710.9조 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자산에서 가장 큰 비중(67.4%)을 차지하고 있으며, 준정부기관은 247.8조 원(23.5%), 기타공공기관은 95.9조 원(9.1%) 수준을 나타냄.
- 2022년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규모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공기업(66.0조 원, 10.2%), 준정부기관(24.3조 원, 10.9%)은 자산이 증가했으나, 기타공공기관(1.8조 원, 1.8%)은 자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그림 III-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2년 자산이 소폭 감소한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모든 유형에서 자산이 꾸준히 증가하였음.

〈표 III-32〉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현황(2018~2022년)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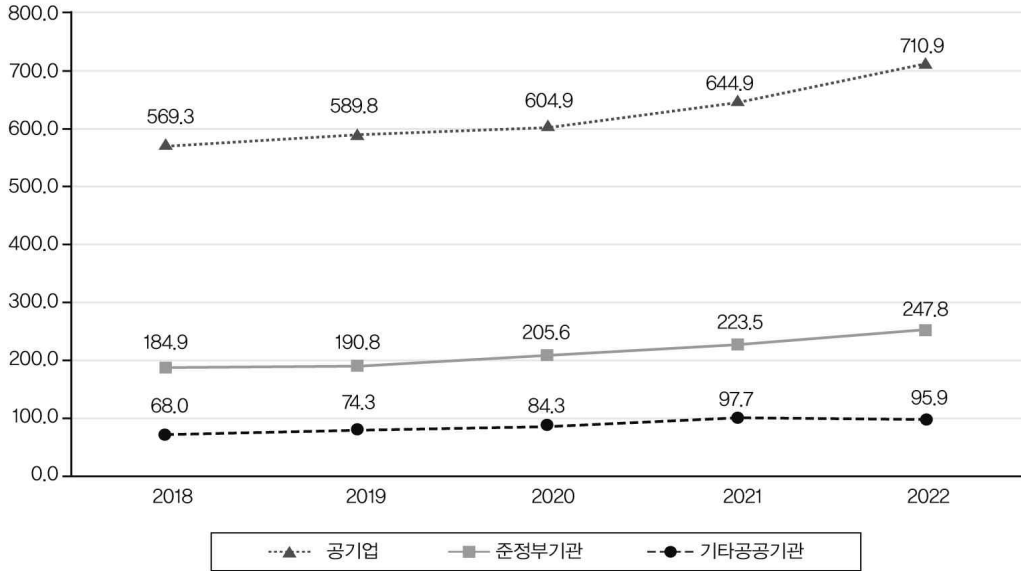
구분	'18	'19	'20	'21(A)	'22(B)	증감 (B-A)	전년 대비 증감률
합 계	822.2	854.8	894.8	966.1	1,054.5	88.4	9.2
공기업	569.3	589.8	604.9	644.9	710.9	66.0	10.2
· 시장형	270.1	282.8	283.5	301.6	346.4	44.8	14.9
· 준시장형	299.2	306.9	321.3	343.3	364.4	21.1	6.1
준정부기관	184.9	190.8	205.6	223.5	247.8	24.3	10.9
· 기금관리형	96.4	103.6	116.1	129.9	147.2	17.3	13.3
· 위탁집행형	88.5	87.2	89.5	93.6	100.5	6.9	7.4
기타공공기관	68.0	74.3	84.3	97.7	95.9	△1.8	△1.8

주: 소수점 반올림 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액의 합과 합계가 일부 오차 발생 가능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9.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3. 4. 28.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155) 한국석유공사는 2021년 부채 규모가 자산 수준을 넘어서면서 자본이 (-)상태인 “자본잠식”을 나타내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2026년 말 한국석유공사의 자본은 △0.4조 원으로 2022년 대비 1.4조 원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완전자본잠식 상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석유공사) 2022년~2026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2022. 8.

[그림 Ⅲ-14]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현황(2018~2022년)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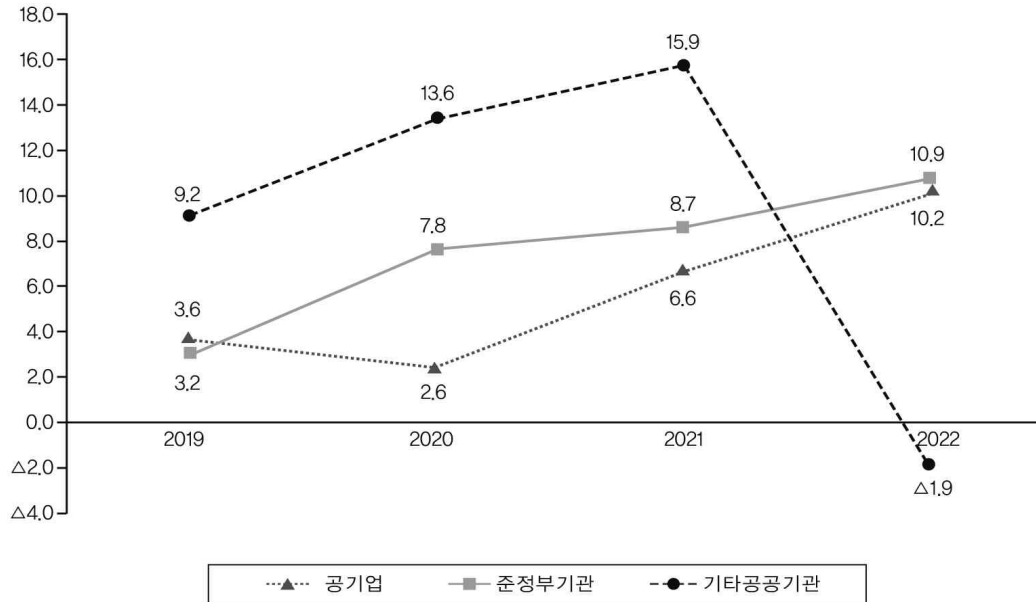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9.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3. 4. 28.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공공기관 유형별로 자산 증가율을 살펴보면 공기업은 자산 증가율이 전년 대비 감소한 2020년 이후에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며, 준정부기관은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냄.
- 공기업은 2020년에 2.6%로 자산 증가율이 감소한 이후 2021년부터 약 4%p씩 자산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이를 보임.
- 준정부기관은 2019년 이후 자산 증가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10.9%의 자산 증가율을 나타냄.
- 기타공공기관은 2021년까지 자산 증가율이 연속적으로 상승하여 15.9%로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2022년에는 전년 대비 17.8%p 대폭 하락하여 1.9%의 자산 감소율을 나타냄.

[그림 III-15]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증가율 추이(2019~2022년)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9. 요약재무상대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3. 4. 28.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22년 공공기관 자산 현황을 주무부처별로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의 자산 규모가 약 373.4조 원으로 가장 큰 규모이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자산이 약 344.9조 원으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나타냄.
-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은 전체 공공기관 자산의 35.4%, 32.7%로 총 68.1%에 육박함.
- 자산 규모가 가장 크게 증가한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전년 대비 약 43.7조 원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감소한 부처는 해양수산부로 약 2.5조 원 감소하였음.

〈표 III-33〉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자산 현황(2018~2022년)

(단위: 억 원, %)

구분	기관 수	'18	'19	'20	'21(A)	'22(B)	증감 (B-A)	전년 대비 증감률
기획재정부	4	6,869	8,287	10,209	12,054	10,906	△1,148	△9.5
교육부	22	396,337	420,625	445,450	475,862	456,149	△19,713	△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3	97,621	100,162	105,641	112,700	116,761	4,062	3.6
외교부	3	3,205	3,112	2,925	2,898	2,832	△65	△2.3
통일부	2	118	204	226	222	236	14	6.3
법무부	3	2,217	2,233	2,252	2,275	2,213	△62	△2.7
국방부	3	848	878	873	832	826	△7	△0.8
행정안전부	3	990	1,021	1,173	1,144	1,053	△91	△8.0
국가보훈부	3	4,173	4,046	3,866	3,980	4,007	28	0.7
문화체육관광부	31	89,038	94,640	92,894	92,866	102,208	9,342	10.1
농림축산식품부	12	146,941	154,098	158,940	163,137	179,031	15,895	9.7
산업통상자원부	41	2,697,533	2,824,610	2,827,848	3,011,707	3,448,899	437,191	14.5
보건복지부	28	360,776	338,313	357,142	396,834	457,943	61,109	15.4
환경부	12	236,620	241,471	250,436	258,273	257,689	△584	△0.2
고용노동부	12	20,415	22,288	23,123	23,342	25,027	1,684	7.2
여성가족부	5	189	184	172	203	337	134	66.3
국토교통부	28	3,050,667	3,127,006	3,285,677	3,510,355	3,734,874	224,519	6.4
해양수산부	17	156,352	177,028	225,365	293,451	268,171	△25,280	△8.6
중소벤처기업부	11	228,345	237,145	287,209	333,832	368,378	34,546	10.3
국무조정실	25	9,392	9,687	10,749	10,687	10,889	202	1.9
방송통신위원회	2	5,518	5,367	5,737	5,613	5,612	△1	0.0
원자력안전위원회	3	1,805	1,816	1,843	2,123	2,284	161	7.6
금융위원회	7	490,428	550,012	612,709	690,576	832,642	142,066	20.6
공정거래위원회	2	717	683	659	671	643	△28	△4.1
인사혁신처	1	182,138	188,770	198,071	213,098	208,343	△4,755	△2.2
식품의약품안전처	4	212	357	413	369	409	40	10.9
관세청	1	33	38	41	44	45	1	2.7
방위사업청	2	24,514	25,788	28,221	33,195	37,057	3,862	11.6
경찰청	1	3,209	2,942	2,969	3,118	3,250	132	4.2
소방청	1	1,337	1,400	1,452	1,504	1,560	56	3.7
문화재청	1	125	147	176	163	222	59	36.2
농촌진흥청	1	212	247	257	290	355	65	22.4
산림청	4	774	871	844	849	935	86	10.1
특허청	6	2,475	2,510	2,715	2,909	3,231	321	11.0
기상청	3	71	54	103	126	134	8	6.5
합계	347	8,222,212	8,548,040	8,948,380	9,661,304	10,545,153	883,849	9.1%

주: 1. 2023년 4월 말 알리오시스템에 경영정보를 공시한 347개 공공기관(2023년 1월 지정 기준) 및 부설기관(15개)을 기준으로 작성. 기관 수는 모기관 단위로 산출하였으며 부설기관 수치는 모기관에 포함하여 반영  
 2.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관 고유계정 및 기금계정(직접관리기금)을 모두 포함하여 금액 산출. 다만, 기타공공기관 중 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기획재정부 소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금융위원회 소관)은 산출대상에서 제외  
 3.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합계, 증감액, 증감률에 오차 발생 가능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9.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3. 4. 28.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22년 기준 자산 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은 2021년 자산 상위 10개 기관<sup>156)</sup>과 동일하며, 일부 순위 변동만 발생하였음.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8개 기관은 모두 부채 상위 10개 기관에 포함됨.
- 상위 10개 기관 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수자원공사를 제외한 8개 기관이 전년 대비 자산이 증가함.
- 상위 10개 기관 중 자산 증가액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한국전력공사(약 23.6조 원, 11.2% 증가)이며, 자산 증감률이 가장 큰 기관은 한국가스공사(약 18.7조 원, 42.9% 증가)이고, 자산 감소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약 2조 원, 7.7% 감소)과 한국수자원공사(약 0.3조 원, 1.1% 감소)에서 나타남.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임대자산 증가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급보증 대지급 규모 확대에 따른 대출채권 증가로, 한국도로공사는 건설투자 지속 확대에 따른 보유자산 증가로 인하여 자산이 증가함.

〈표 III-34〉 2022년도 자산 규모 상위기관 현황

(단위: 억 원, %)

순위	기관명	2021년	2022년	증감액	증감률
1	한국전력공사	2,111,237	2,348,050	236,813	11.2
2	한국토지주택공사	2,016,501	2,136,488	119,988	6.0
3	한국도로공사	734,021	783,082	49,061	6.7
4	한국가스공사	436,699	624,250	187,551	42.9
5	국민건강보험공단	362,047	419,223	57,175	15.8
6	한국주택금융공사	237,759	318,433	80,673	33.9
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66,367	290,964	24,597	9.2
8	한국철도공사	251,556	290,437	38,881	15.5
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66,769	246,342	△20,42	△7.7
10	한국수자원공사	234,371	231,803	△2,567	△1.1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9.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3. 4. 28.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156) 2021년도 자산 상위 10개 기관의 순위: 1. 한국전력공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한국도로공사, 4. 한국가스공사 5. 국민건강보험공단, 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7. 중소기업진흥공단, 8. 한국철도공사, 9. 한국주택금융공사, 10. 한국수자원공사

#### 4. 손익현황<sup>157)</sup>

- 최근 공공기관 손익현황을 살펴보면 2018~2021년 4년간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흑자를 유지하다가 2022년 당기순이익이 24.4조 원 대폭 하락하면서 △13.6조 원으로, 준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시장형 공기업과 기타 공공기관에서 적자를 나타내고 있음.
- 2018년 0.6조 원이던 당기순이익이 이후 3년간 각각 0.8조 원, 5.2조 원, 10.8조 원로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나 2022년 △13.6조 원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공공기관 유형별로 2022년 당기순이익 추이를 살펴보면, 준정부기관에서 당기순이익이 전년도(2021년)보다 개선되었으나 공기업과 기타공공기관 유형에서 당기순이익이 전년도 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공기업의 2022년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047.4% 이상 감소하였는데, 이는 시장형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8.1조 원(341.5%)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임.
- 준정부기관의 경우 2018년 1조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이후 2019년에 손실의 폭이 줄고, 2020년부터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면서 2022년에는 9.6조 원으로 개선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함.
- 기타공공기관은 2018년 0.3조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이후 2021년까지 3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으나 2022년에 들어와 크게 감소하여 약 1.4조 원의 순손실을 나타내고 있음.

157)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기관별 공시자료(2023. 4. 28. 기준), 「347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23. 4. 28., 「2023년 정부 출자주식 배당금 1조 2,387억 원 확정」, 보도자료, 2023. 5. 26. 등 참고

〈표 Ⅲ-35〉 당기순손익 현황(2018~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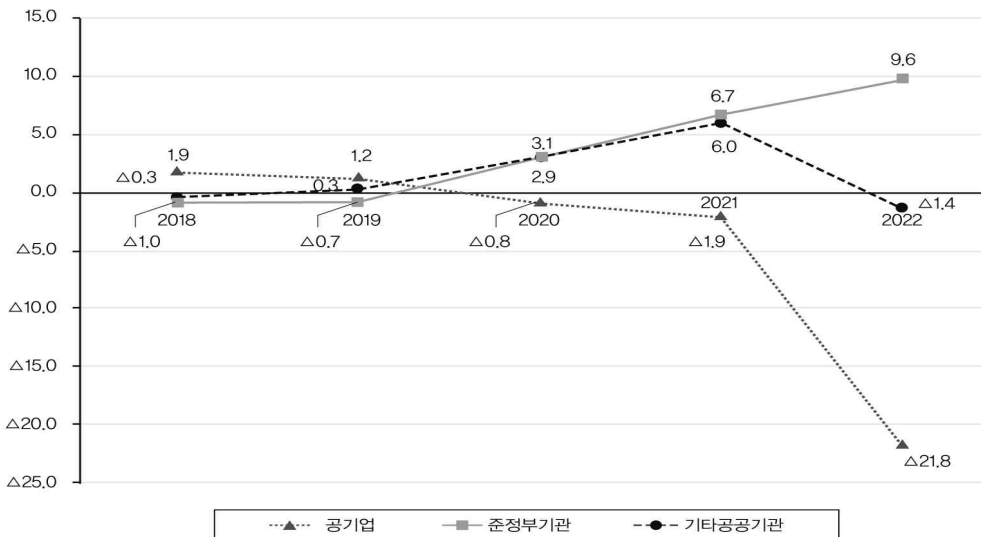
(단위: 조 원, %)

구분	'18	'19	전년 대비 증감	'20	전년 대비 증감	'21	전년 대비 증감	'22	전년 대비 증감 (증감률)
공기업	1.9	1.2	△0.7	△0.8	△2.0	△1.9	△1.1	△21.8	△19.9 (△1,047.4)
· 시장형	△0.5	△1.2	△0.7	△1.3	△0.1	△5.3	△4.0	△23.4	△18.1 (△341.5)
· 준시장형	2.4	2.4	0.0	0.5	△1.9	3.4	2.9	1.6	△1.8 (△52.9)
준정부기관	△1.0	△0.7	0.3	3.1	3.8	6.7	3.6	9.6	2.9 (43.3)
· 기금관리형	2.7	2.5	△0.2	1.6	△0.9	2.8	1.2	2.8	0.0 (0.0)
· 위탁집행형	△3.6	△3.2	0.4	1.5	4.7	3.9	2.4	6.9	3.0 (76.9)
기타공공기관	△0.3	0.3	0.6	2.9	2.6	6.0	3.1	△1.4	△7.4 (△123.3)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39개)	0.2	0.5	0.3	3.2	2.7	5.5	2.3	△12.3	△17.8 (△323.6)

주: 1.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2018~2022년 모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료 작성  
 2.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관 고유계정을 대상으로 금액 산출  
 3. 공무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일부 공공기관은 국가회계기준 적용으로 당기순이익이 산출되지 아니하여 상기 수치에서 제외  
 4. 소수점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증감액 및 증감률 오차 발생 가능  
 5.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은 2022년(39개)을 기준으로 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0. 요약손익계산서(또는 요약 포괄손익계산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3. 4. 28.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Ⅲ-16〉 공공기관 유형별 당기순손익 추이(2018~2022년)

(단위: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0. 요약손익계산서(또는 요약 포괄손익계산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3. 4. 28.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22년에 순이익을 실현한 상위 10개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민금융진흥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년 대비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고, 한국석유공사, 국가철도공단, (주)강원랜드, 한국마사회를 제외하고 2021년 대상기관<sup>158)</sup>과 일치하며, 일부 순위 변동이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가입자 수 및 보험료를 상승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여 1위를 차지하였으며,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사 납부 예금보험료 수입의 증가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여 2위를 차지함.
  - 2021년 순이익 상위 10개 기관 중 한국해양진흥공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4개 기관은 2022년 당기순이익 상위 10개 기관에서 제외됨.
  - 한국석유공사, 국가철도공단, (주)강원랜드, 한국마사회는 6, 8, 9, 10위에 신규 편입되었음.
    - 한국석유공사와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순손실 상위 10개에 속해 있던 기관으로 2022년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여 순이익 상위 10개 기관에 편입됨.
    - 한국석유공사는 해외 자회사를 통해 가스전에서 2021년 4월부터 생산을 개시해 연간 456만 배럴의 생산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판매량을 증가시켜 매출을 상승시켰으며, 비핵심자산 매각, 해외 자회사에 본사의 신용 공여 방식을 통해 현금흐름을 개선하고 투자금을 회수해 1조 3890억 원의 차입금을 감축함으로써 이자비용을 낮춰 당기순이익 후자를 달성함.<sup>159)</sup>
    - 한국마사회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에 따른 경마 정상화와 비용절감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함.<sup>160)</sup>
- 2022년에 순손실이 발생한 상위 10개 공공기관은 2021년 대상기관<sup>161)</sup>과 다소 차이를 보임.
  - 2021년 순손실 상위 10개 기관 중 한국마사회, 한국관광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석유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5개 기관이 2022년 당기순손실 상위 10개 기관에서 제외됨.

158)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가스공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서민금융진흥원

159) 한국석유공사, 「2022년 당기순이익 3,130억 원 시현」, 보도자료, 2023. 3. 2.

160) 한국마사회, 「2022년 주요업무 성과 발표」, 보도자료, 2022. 12. 15.

161) 국민연금공단, 대한석탄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 2021년 순이익 상위기관 1위, 8위였던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2년 순손실 상위기관 2위, 8위가 되었고, 이외 한국지역난방공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충남대학교병원이 순손실 상위 10개 공공기관에 신규 편입됨.
- 한국전력공사는 유가 등 발전연료 가격 급등에 따른 전력구입 비용 증가로 순손실이 발생하였고, 대한석탄공사는 석탄 판매가격 동결 등 구조적인 한계로 당기순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표 III-36〉 2022년도 당기순이익·순손실 상위기관 현황

(단위: 억 원, %)

순위	기관명	2021년	2022년	증감액	증감률	
순이익	1	국민건강보험공단	38,123	65,310	27,187	71.3
	2	예금보험공사	22,853	26,752	3,898	17.1
	3	한국가스공사	9,645	14,970	5,325	55.2
	4	한국토지주택공사	41,633	14,327	△27,306	△65.6
	5	한국수자원공사	3,421	4,074	653	19.1
	6	한국석유공사	△460	3,130	3,589	780.7
	7	서민금융진흥원	2,972	1,365	△1,607	△54.1
	8	국가철도공단	174	1,168	994	570.6
	9	(주)강원랜드	△106	1,156	1,262	1192.5
	10	한국마사회	△3,480	973	4,453	128.0
순손실	1	한국전력공사	△52,156	△244,291	△192,135	△368.4
	2	한국해양진흥공사	41,875	△19,863	△61,738	△147.4
	3	인천국제공항공사	△7,506	△5,266	2,240	29.8
	4	한국철도공사	△11,552	△2,350	9,202	79.7
	5	한국공항공사	△2,311	△1,876	436	18.8
	6	한국지역난방공사	215	△1,840	△2,054	△957.4
	7	대한석탄공사	△1,325	△1,673	△347	△26.2
	8	주택도시보증공사	3,620	△1,126	△4,746	△131.1
	9	신용보증재단중앙회	△99	△686	△587	△592.7
	10	충남대학교병원	△392	△501	△110	△28.1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0. 요약손익계산서(또는 요약 포괄손익계산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3. 4. 28.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23년 5월 정부는 39개 출자기관 중 올해 배당이 결정된 18개<sup>162)</sup> 출자기관의 배당금 1조 2,387억 원 수납을 확정하였음.
- 2023년 정부배당금은 전년 대비 1조 2,153억 원 감소하고 평균 배당성향<sup>163)</sup>은 39.9%로 전년 대비 0.48%p 하락하였음.<sup>164)</sup>
  - 정부배당을 실현한 기관 수는 2022년 19개에서 2023년 18개로 감소하였고 배당금 규모도 감소함.
  - 소관·회계별로는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9,412억 원과 주무부처 소관 특별회계·기금 2,975억 원임.
- 39개 정부출자기관 중 「공운법」상 공공기관은 34개<sup>165)</sup>로 이 중 17개 기관이 2023년 지급한 정부배당금 규모는 1조 2,351억 원임.
  - 2021년에 배당하지 않았던 인천항만공사, 한국조폐공사가 2022년 흑자로 전환되면서 배당을 실시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도 이월결손금 해소가 완료되면서 배당을 실시하였음.
  - 2022년 적자 전환된 한국방송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3개 기관은 정부배당을 실시하지 못함.

〈표 III-37〉 정부 배당수입 추이(2019~2023년)

(단위: 개, 억 원, %, %p)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감
출자기관 수	38	39	39	39	39	-
유배당기관	21	22	22	19	18	△1
정부배당금	14,382	14,040	14,396	24,541	12,387	△12,153
일반회계	6,696	6,069	9,194	16,826	9,412	△7,414
특별·기금	7,685	7,971	5,203	7,715	2,975	△4,739
배당성향	32.48	32.58	36.92	40.38	39.9	△0.48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 정부 출자주식 배당금 2조 4,541억 원 확정」, 보도자료, 2022. 5. 31. 및 기획재정부, 「2023년 정부 출자주식 배당금 1조 2,387억 원 확정」, 보도자료, 2023. 5. 26.을 참고하여 작성

162) 21개 기관은 당기순손실 및 이월결손 보전 등으로 2023년 배당에서 제외  
 - 당기순손실 발생(15개): 인천국제공항공사,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88관광개발(주), 한국전력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가스공사  
 - 이월결손 보전 등(6개): 한국광해광업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서울신문사, 공항철도주식회사,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163) 평균 배당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 %): ('18) 34.98 → ('19) 32.48 → ('20) 32.58(0.10%p) → ('21) 36.92(4.34%p) → ('22) 40.38(3.46%p) → ('23) 39.9(△0.48%p)

164) 기획재정부, 「2023년 정부 출자주식 배당금 1조 2,387억 원 확정」, 보도자료, 2023. 5. 26.

165) 대한송유관공사, 공항철도주식회사, 서울신문사,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5개 기관은 「공운법」상 공공기관이 아님

〈표 III-38〉 39개 정부출자기관의 정부배당 현황

(단위: 억 원)

기관명	2022년 배당			2023년 배당		
	일반 회계	특별 기금	소계	일반 회계	특별 기금	소계
1 한국토지주택공사	2,597	4,844	7,441	821	1,804	2,625
2 한국산업은행	7,592	739	8,331	1,502	145	1,647
3 중소기업은행	3,701	-	3,701	4,555	-	4,555
4 한국가스공사	566	92	659	-	-	-
5 한국수출입은행	1,296	19	1,315	918	13	932
6 한국주택금융공사	417	34	451	272	20	292
7 한국자산관리공사	159	-	159	214	58	272
8 부산항만공사	183	-	183	162	-	162
9 한국방송공사	32	-	32	-	-	-
10 한국농어촌공사	130	-	130	112	-	112
11 울산항만공사	119	0.1	119	127	0.1	127
12 한국부동산원	16	-	16	22	-	22
1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5	-	15	28	-	28
14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4	-	4	22	-	22
15 한국해양진흥공사	-	-	-	-	-	-
16 한국수자원공사	-	-	-	616	3	619
17 한국광해광업공단	-	-	-	-	-	-
18 여수광양항만공사	-	-	-	-	-	-
19 서울신문사	-	-	-	-	-	-
20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	-	-	-	-	-	-
21 한국조폐공사	-	-	-	21	-	21
22 한국교육방송공사	-	-	-	-	-	-
23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	-	-	-	-
24 새만금개발공사	-	-	-	-	-	-
25 한국관광공사	-	-	-	-	-	-
26 인천항만공사	-	-	-	20	7	27
27 한국석유공사	-	-	-	-	-	-
28 한국공항공사	-	-	-	-	-	-

〈표 Ⅲ- 38〉의 계속

(단위: 억 원)

기관명	2022년 배당			2023년 배당		
	일반 회계	특별 기금	소계	일반 회계	특별 기금	소계
29 한국철도공사	-	-	-	-	-	-
30 한국전력공사	-	-	-	-	-	-
31 주택도시보증공사	-	621	621	-	-	-
32 한국투자공사	-	1,176	1,176	-	641	641
33 한국도로공사	-	134	134	-	248	248
34 대한송유관공사	-	23	23	-	36	36
35 한국지역난방공사	-	32	32	-	-	-
36 공항철도주식회사	-	-	-	-	-	-
37 88관광개발(주)	-	-	-	-	-	-
38 대한석탄공사	-	-	-	-	-	-
39 인천국제공항공사	-	-	-	-	-	-
합 계	16,826 (14개)	7,715 (11개)	24,541 (19개)	9,412 (15개)	2,975 (11개)	12,387 (18개)

주: 1. 밑줄 친 기관은 「공운법」상 공공기관이 아님

2. 괄호 안의 수치는 기관수임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 정부 출자주식 배당금 2조 4,541억 원 확정」, 보도자료, 2022. 5. 31. 및 기획재정부, 「2023년 정부 출자주식 배당금 1조 2,387억 원 확정」, 보도자료, 2023. 5. 26.을 참고하여 작성

## 5. 보수수준<sup>166)</sup>

### 가. 직원 평균보수 수준

- 2022년 전체 공공기관 정규직 직원<sup>167)</sup>의 평균보수는 약 7,037만 원 수준으로 유형별 평균보수 수준은 공기업(약 8,303만 원), 준정부기관(약 7,145만 원), 기타공공기관(약 6,865만 원) 순으로 높음.<sup>168)</sup>
- 공기업 정규직 직원의 평균보수(약 8,303만 원)는 전체 공공기관 평균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유형보다 높음.
  - 시장형 공기업의 직원 평균보수(약 8,918만 원)는 2022년 전체 기관 유형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으로,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는 약 1,881만 원, 준정부기관보다 약 1,773만 원, 기타공공기관보다 약 2,053만 원 높은 수준임.
- 준정부기관 정규직 직원의 평균보수(약 7,145만 원)는 공기업(약 8,303만 원)보다 약 1,158만 원 낮으나, 기타공공기관(약 6,865만 원)보다는 약 280만 원 높음.
  - 준정부기관 정규직 직원의 평균보수는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 약 108만 원 높음.
  - 특히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정규직 직원 평균보수는 약 6,869만 원 수준으로,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 약 172만 원 낮은 수준임.

166)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23. 4. 28. 및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23. 4. 24. 기준) 참고

167)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의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일반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함

168) 직원 평균보수는 각 회계연도별로 상시종업원 전체에게 지급된 총보수지급액을 상시종업원 수로 나눈 값임 (여기서 상시종업원은 각월 급여지급일 현재 급여 지급대상 정규직원 수의 연간 합계를 12월로 나눈 인원임). 기관별 직원 평균보수는 알리오시스템 공시항목 중 '11. 직원 평균보수' 항목에 공시된 '1인당 평균 보수액' 정보를 활용하여 산출함. 알리오시스템의 '1인당 평균보수액'은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영평가 성과급, 기타성과상여금 등의 세부항목으로 지급된 총금액으로 산출

〈표 Ⅲ-39〉 직원 평균보수 현황(2018~2022년, 정규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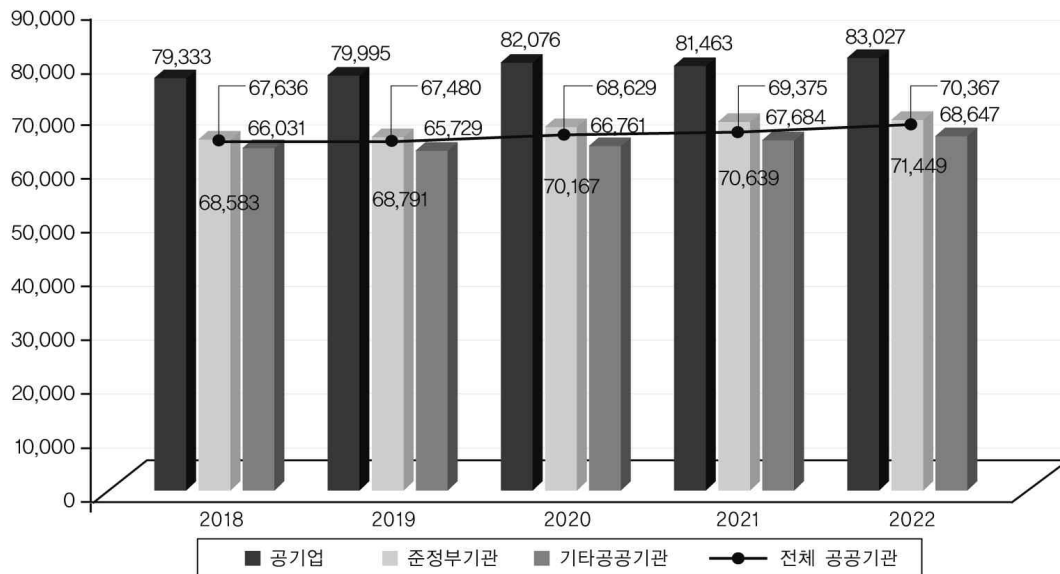
(단위: 천 원, %)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A)	'22년 (B)	증감 (B-A)	전년 대비 증감률
합 계	67,636	67,480	68,629	69,375	70,367	992	1.4
공기업	79,333	79,995	82,076	81,463	83,027	1,564	1.9
· 시장형	84,451	85,871	87,395	86,946	89,181	2,235	2.6
· 준시장형	75,637	75,752	78,235	77,712	78,817	1,105	1.4
준정부기관	68,583	68,791	70,167	70,639	71,449	810	1.1
· 기금관리형	78,829	79,902	81,894	82,273	83,220	947	1.2
· 위탁집행형	66,185	66,190	67,423	67,916	68,694	778	1.1
기타공공기관	66,031	65,729	66,761	67,684	68,647	963	1.4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직원 평균보수'(2023. 4. 28.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Ⅲ-17] 직원 평균보수 추이(2018~2022년, 정규직 기준)

(단위: 천 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직원 평균보수'(2023. 4. 24.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22년 공공기관 전체 정규직 직원의 평균보수는 전년 대비 1.4%(약 99만 원) 증가했으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년 대비 직원의 평균보수는 공기업은 1.9%, 준정부기관은 1.1%, 기타공공기관은 1.4%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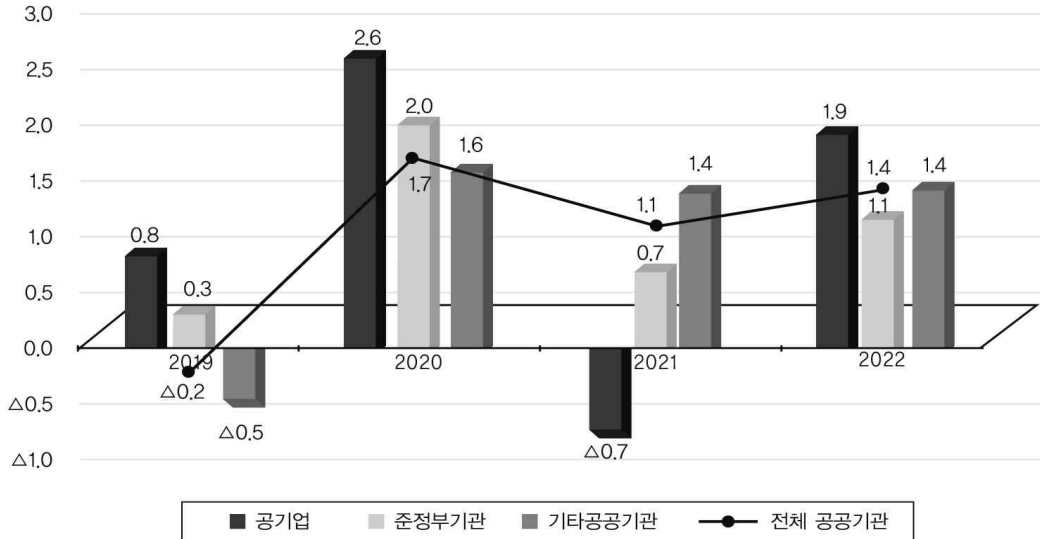
- 전년 대비 직원 평균보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공기업으로 전년 대비 1.9% (약 156만 원) 증가하였고, 특히 시장형 공기업의 증가율이 2.6%(약 224만 원)로 가장 높았음.
- 2022년도 총 32개 공기업 중 10개 기관의 전년 대비 정규직 직원 평균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sup>169)</sup>, 이 중 감소율이 3.0% 이상인 기관은 한국공항공사가 유일하였음.
- 2022년도 총 32개 공기업 중 22개 기관의 전년 대비 정규직 직원 평균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상승률이 3.0% 이상인 기관은 (주)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중부발전(주) 등 10개 기관임.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직원 평균보수가 전년 대비 각각 1.2%, 1.1% 씩 증가함.
- 2022년도 기타공공기관의 직원평균보수는 전년 대비 1.4%(96만 원) 증가함.
-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전체 공공기관 직원 평균보수는 2019년도를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약 1.1~1.7% 수준으로 증가함.
  - 공기업의 직원 평균보수는 202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1년 0.7%(61만 원) 감소한 이후, 2022년 다시 1.9%(156만 원) 증가함.
  - 준정부기관의 직원 평균보수는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에 매년 0.3~2.0%의 폭으로 증가함.
  - 기타공공기관은 2019년에 소폭 감소하였지만(30만 원, 0.5%),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에 매년 1.4~1.6%의 폭으로 증가함.
- 공공기관 유형별 직원 평균보수 인상률과 「2022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상의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sup>170)</sup>을 비교해 보면, 공기업을 제외한 모든 유형이 지침상의 상한선(1.4%)을 준수함.

169)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전KPS(주)

170) 「2022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은 2022년도 총인건비 예산 편성 시 2021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4% 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하도록 함. 다만, 공공기관 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2021년도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직원의 1인당 평균 임금 수준과 해당 산업 평균을 비교하여 총인건비 인상률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정부출연기관법」, 「과기출연연구기관법」 등에 따라 운영 중인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포함)과 부처 직할 연구기관은 총인건비 차등인상률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

[그림 Ⅲ-18] 직원 평균보수 증가율 추이(2019~2022년, 정규직 기준)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직원 평균보수'(2023. 4. 24.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나. 상임임원 연봉 수준<sup>171)</sup>

- 공공기관 상임임원(기관장, 상임이사, 상임감사)의 보수에 대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sup>172)</sup>과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이하 「혁신지침」)」에 관련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음.
- 「임원 보수지침」은 상임임원의 기본연봉 책정 시 준수해야 할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한해 적용함.
  - 기관장의 기본연봉은 매년 정무직 공무원 중 차관의 연봉과 연계하여 책정하며, 기관장의 기본연봉이 해당 연도 차관의 연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관의 연봉과 동액으로 설정하고 이하인 경우는 매년 차관의 연봉 인상률에 따라 기본연봉을 인상하도록 함.
  -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의 기본연봉은 기관장 기본연봉의 100분의 80을 상한으로 하되, 이를 초과할 경우는 기관장 연봉의 100분의 80과 동액으로 하고 100분의

171) 기관장, 상임이사, 상임감사 등 상임임원에 대한 연봉은 알리오시스템에 공시된 '10.임원연봉'과 주요통계 중 '임원 평균연봉' 자료를 활용함. 알리오시스템상 상임임원에 대한 연봉은 연도 말 결산기준으로 상임임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총보수액을 의미하며 총보수액에는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영평가 성과급, 기타 성과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하여 산출

172) 2018년 3월 공공기관 관련 지침 전면 개정에 따라 종전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이 개정된 것으로 임원 보수 지침의 적용범위를 공공기관 전체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제한

80 이하인 경우는 매년 기관장의 연봉 인상률에 따라 기본연봉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함.

-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2018년부터 임원 보수지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기타공공기관 중 4개 금융 분야 기관<sup>173)</sup>은 「혁신지침」 제5조(보수) 제3항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을 준용하여 상임임원의 보수를 책정하여야 함.
  - 2021년에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 일부 개정이 있었으나, 공기업 임원 성과급 지급률 상한 조정, 준정부기관 기관장의 중기성과급제 적용에 관한 개정 사항은 2021년을 평가 대상기간으로 하는 성과급(2022년 지급)부터 적용하기로 함.<sup>174)</sup>
    - 금융형 공공기관 적용으로 기관장·상임이사·상임감사의 보수가 상향조정되는 경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함.<sup>175)</sup>
- 2022년 전체 공공기관 기관장(상임)의 평균연봉은 약 1억 8,538만 원 수준임.
-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공기업 기관장의 평균연봉이 약 2억 24만 원으로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 약 1,486만 원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시장형 공기업(약 2억 1,659만 원)이 준시장형 공기업 기관장 평균연봉(약 1억 8,905만 원)보다 약 2,754만 원 높은 수준임.
    - 시장형 공기업 기관장의 평균연봉은 전체 공공기관 유형 중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약 2억 6,152만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음.
  - 준정부기관 기관장 평균연봉은 약 1억 9,666만 원으로 공기업보다는 358만 원 낮으나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는 약 1,128만 원 높은 수준임.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평균연봉(약 2억 6,152만 원)은 전체 공공기관 유형 중 가장 높는데, 이는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 약 7,614만 원 높은 수준임.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관장 평균연봉이 약 1억 8,045만 원으로 공공기관 전체 유형 중 가장 낮은 수준임.
  - 기타공공기관의 기관장 평균연봉(약 1억 8,091만 원)은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 다소 낮은 편으로, 전체 평균보다 448만 원 낮음.
    - 기타공공기관 유형의 기관장 평균연봉은 공기업보다는 약 1,933만 원 낮고, 준정부기관보다는 약 1,575만 원 낮은 수준임.

173)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174)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보수지침 부칙수정」, 2022. 12. 19. 참고

175)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보수지침 부칙수정」, 2022. 12. 19. 참고

- 2022년 전체 공공기관 상임이사의 평균연봉은 약 1억 5,453만 원 수준임.
  -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공기업 상임이사의 평균연봉이 약 1억 5,036만 원으로,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 약 417만 원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준정부기관 상임이사 평균연봉은 약 1억 5,997만 원으로, 공기업보다는 약 961만 원 높고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는 약 544만 원 높은 수준임.
  - 기타공공기관의 상임이사 평균연봉은 약 1억 5,295만 원이며, 이는 공공기관 전체 유형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체 평균보다 약 158만 원 낮음.
  
- 2022년 전체 공공기관 상임감사의 평균연봉은 약 1억 6,208만 원 수준으로 전체 공공기관 간의 편차가 크지 않은 편임.
  -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공기업 상임감사의 평균연봉이 약 1억 5,274만 원으로,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 934만 원 적을 뿐만 아니라 전체 기관 유형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임.
  - 준정부기관 상임감사 평균연봉은 약 1억 7,163만 원으로, 공공기관 전체 유형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전체 평균보다 약 955만 원 높음.
  - 기타공공기관의 상임감사 평균연봉은 약 1억 6,140만 원으로, 공기업 평균보다는 866만 원 높으나 준정부기관 평균보다는 약 1,023만 원 낮은 수준임.

〈표 III-40〉 상임임원 평균연봉 현황(2018~2022년)

(단위: 천 원, %)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A)	'22년 (B)	증감 (B-A)	전년 대비 증감률	
	전체 평균	171,635	176,805	181,256	182,986	185,380		2,394
기관장	공기업	198,351	208,464	214,900	204,324	200,240	△4,084	△2.0
	· 시장형	215,114	230,930	231,280	221,446	216,586	△4,860	△2.2
	· 준시장형	186,245	192,239	203,070	192,609	189,055	△3,554	△1.8
	준정부기관	187,347	191,230	193,714	195,299	196,661	1,362	0.7
	· 기금관리형	234,687	250,237	251,328	258,670	261,521	2,851	1.1
	· 위탁집행형	175,512	176,479	179,310	179,456	180,446	990	0.6
	기타공공기관	164,372	169,285	174,115	177,435	180,907	3,472	2.0

〈표 III-40〉의 계속

(단위: 천 원, %)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A)	'22년 (B)	증감 (B-A)	전년 대비 증감률	
상 임 이 사	전체 평균	146,757	150,312	152,453	153,188	154,529	1,341	0.9
	공기업	151,854	156,413	161,398	154,892	150,362	△4,530	△2.9
	· 시장형	161,398	171,969	172,803	166,936	161,862	△5,074	△3.0
	· 준시장형	144,962	145,178	153,161	146,651	142,493	△4,158	△2.8
	준정부기관	150,200	152,910	155,181	157,609	159,967	2,358	1.5
	· 기금관리형	182,702	194,787	197,211	205,927	206,991	1,064	0.5
	· 위탁집행형	139,985	140,114	142,686	143,244	145,987	2,743	1.9
기타공공기관	142,362	146,162	147,285	149,895	152,953	3,058	2.0	
상 임 감 사	전체 평균	155,367	159,575	162,318	163,512	162,076	△1,436	△0.9
	공기업	154,743	160,695	163,435	158,015	152,735	△5,280	△3.3
	· 시장형	166,713	175,413	177,314	173,244	164,833	△8,411	△4.9
	· 준시장형	146,997	151,172	154,455	148,709	145,342	△3,367	△2.3
	준정부기관	162,299	162,982	163,728	167,963	171,628	3,665	2.2
	· 기금관리형	191,166	199,180	199,210	204,835	209,079	4,244	2.1
	· 위탁집행형	146,422	143,074	144,213	147,683	151,030	3,347	2.3
기타공공기관	150,305	156,063	160,444	164,047	161,395	△2,652	△1.6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임원 평균연봉'(2023. 4. 24.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sup>176)</sup>

□ 최근 5년간의 상임임원 평균연봉 추이는 [그림 III-19], [그림 III-20], [그림 III-21]과 같음.

○ 기관장(상임), 상임이사의 전체 평균연봉은 최근 5년 동안 매년 증가세를 보였으나, 상임감사의 경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증가하다 2022년에 하락함.

- 2022년 기관장의 전체 평균연봉은 2021년에 비해 약 1.3% 증가하였으며, 상임이사는 0.9% 증가하였고, 상임감사는 0.9% 하락함.

○ 상임기관장 평균연봉을 살펴보면, 2021년과 2022년 공기업의 하락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음.

- 공기업의 기관장 평균연봉은 최근 5년 동안 다른 유형의 기관장 연봉 대비 가장

176) 산출시 부설기관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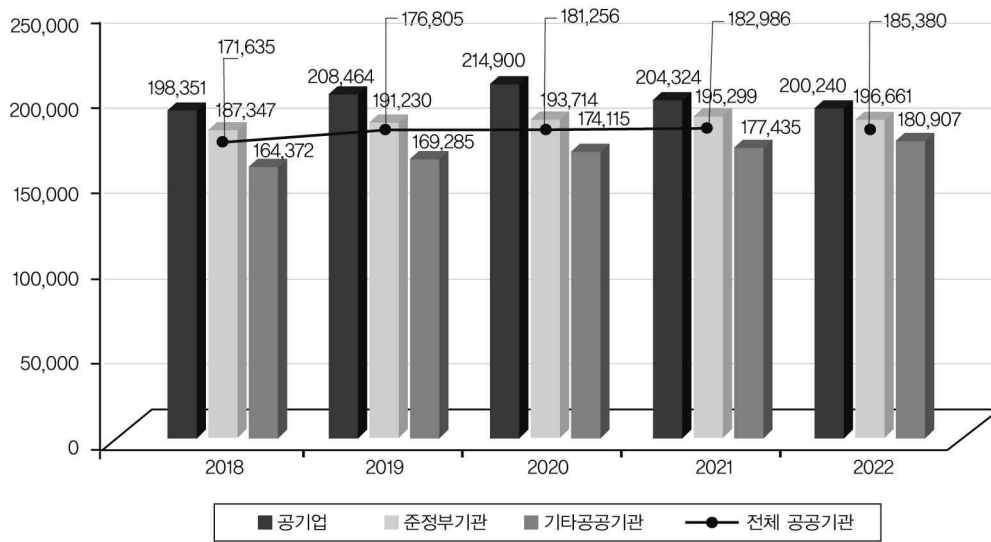
-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 중 가장 큰 하락폭(4.9%)이었던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약 2% 인하됨.
- 준정부기관 기관장의 평균연봉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2년 기관장 평균연봉이 1억 9,666만 원으로 공공기관 전체 평균(1억 8,538만 원)보다 1,128만 원 높은 수준을 보임.
  - 기타공공기관 기관장의 평균연봉은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증감률은 2019~2020년 약 3% 증가 수준에서 최근 2년간(2021~2022년) 약 2% 증가 수준으로 다소 둔화됨.<sup>177)</sup>
- 상임이사 평균연봉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상승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전년 대비 0.9%(134만 원) 증가에 그침.
- 이 기간 공기업 상임이사의 평균연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21년 하락세로 돌아선 뒤 2022년에도 2.9%(453만 원) 하락하였으며, 공공기관 전체 유형 중 가장 낮은 수준임.
  -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상임이사의 평균연봉은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준정부기관의 경우 2022년에 전년 대비 약 236만 원(약 1.5%) 증가한 1억 5,997만 원으로 공공기관 전체 유형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2022년 기타공공기관의 상임이사 평균연봉은 전년보다 약 2.0%(약 306만 원) 증가하여 다른 유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크게 상승하였으며, 공기업보다는 높으나 공공기관 전체 평균연봉보다는 낮은 수준임.
- 전체 상임감사 평균연봉의 경우 2018~2021년 매년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2022년 5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0.9% 감소함.<sup>178)</sup>
- 2021년에 이어 2022년 공기업 상임감사 평균연봉이 다른 유형에 비해 큰 폭(3.3%)으로 감소하면서, 2년 연속 기타공공기관의 상임감사 평균연봉보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짐.
  - 준정부기관 상임감사 평균연봉은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전년 대비 약 2.2%(약 337만 원) 증가한 1억 7,163만 원으로, 전체 유형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 기타공공기관의 상임감사 평균연봉은 2018~2021년 매년 꾸준히 증가하다 2022년에 전년 대비 약 1.6%(약 265만 원) 감소함.

177) 2019년 3.0% → 2020년 2.9% → 2021년 1.9% → 2022년 2.0%

178) 2019년 2.7% → 2020년 1.7% → 2021년 0.7% → 2022년 △0.9%

[그림 III-19] 기관장(상임) 평균연봉 추이(2018~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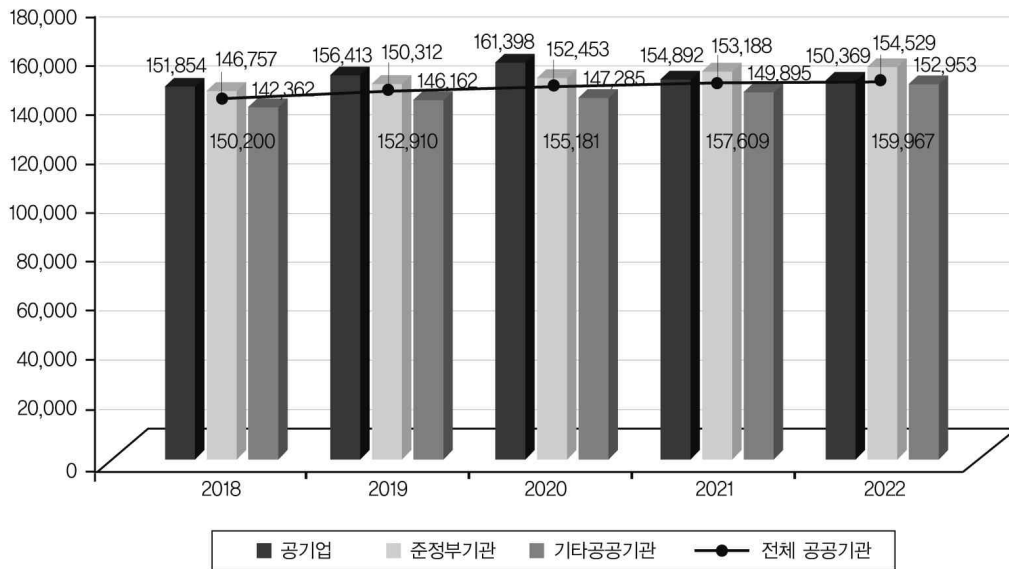
(단위: 천 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임원 평균연봉'(2023. 4. 24.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I-20] 상임이사 평균연봉 추이(2018~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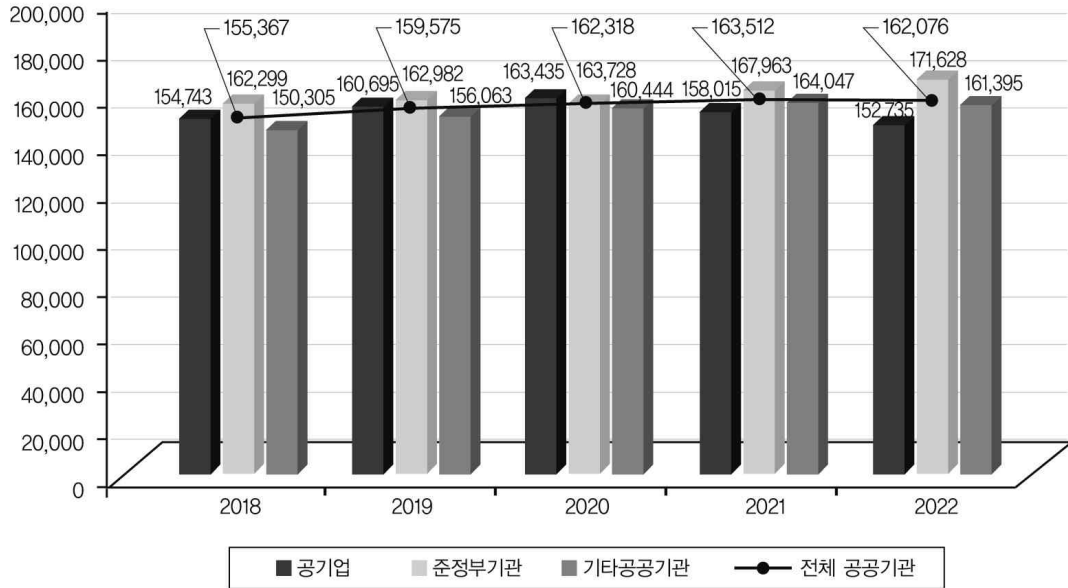
(단위: 천 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임원 평균연봉'(2023. 4. 24.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I-21] 상임감사 평균연봉 추이(2018~2022년)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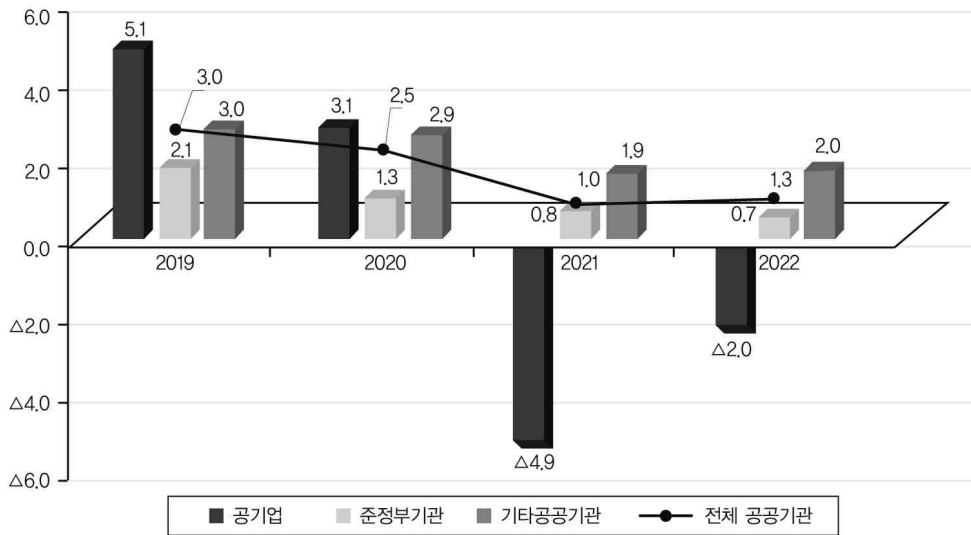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입원 평균연봉'(2023. 4. 24.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상임임원 평균연봉 수준의 변화를 전년 대비 증감률 기준으로 살펴보면, [그림 III-22], [그림 III-23], [그림 III-24]와 같음.

-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 중 전년 대비 상임임원 평균연봉 증가율이 가장 높은 회계연도는 기관장, 상임이사, 상임감사 모두 2019년임.
- 2019년 이후 상임임원 평균연봉 증가율은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이후 매년 점진적으로 둔화되었고, 2020, 2021년 소폭 상승하였으나 2022년에는 전년 대비 유사하거나 소폭 하락함.
  - 공기업의 경우, 2019년과 비교하여 2020년에 상임임원 평균연봉 증가율이 소폭 하락하다가 2021년부터 계속 감소 추세(약 2~3.3%)를 유지함.
  - 준정부기관의 경우, 상임감사의 전년 대비 평균연봉 증가율은 꾸준히 증가하다 2022년에 소폭 하락하였고, 기관장은 꾸준히 하락한 반면, 상임이사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기타공공기관의 전년 대비 기관장·상임이사의 평균연봉 증가율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하락 추세이다 2022년에 소폭 상승하였으며, 상임감사의 경우 2022년에 증가율이 1.6% 감소함.

[그림 III-22] 기관장(상임) 평균연봉 증감률(2019~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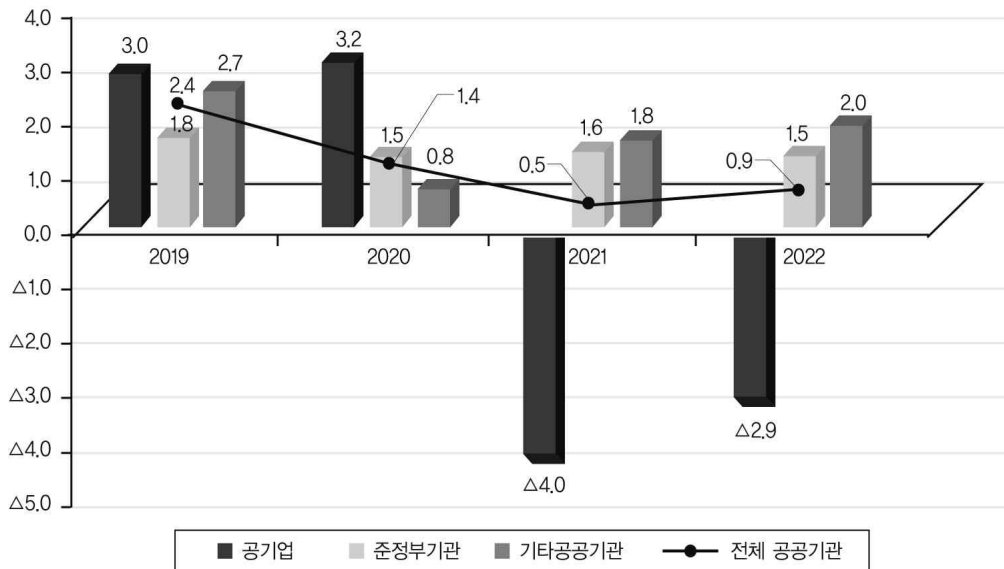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임원 평균연봉'(2023. 4. 24.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I-23] 상임이사 평균연봉 증감률(2019~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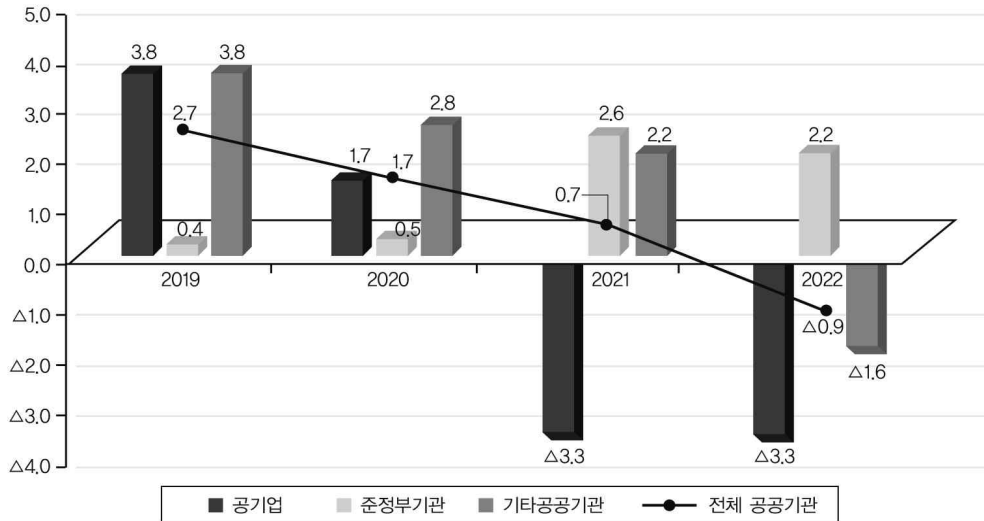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임원 평균연봉'(2023. 4. 24.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I-24] 상임감사 평균연봉 증감률(2019~2022년)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임원 평균연봉’(2023. 4. 24.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다. 복리후생비 수준

- 2022년 중 공공기관 전체 임직원(무기계약직, 비정규직 포함)에게 지급된 무상지급 형태의 복리후생비 총규모는 약 8,675억 원임.
-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복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2022년 임직원 수가 전년 대비 1.5%(6,574명) 증가하였고, 복리후생비 지원규모는 정원 증가 및 코로나 이후 일상회복 지원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6%(219억 원) 증가함.
  - 정원 증가 등의 이유로 복리후생비 총액은 증가하였으나, 1인당 복리후생비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임.<sup>179)</sup>
- 공공기관 유형별로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는 공기업(3,629억 원), 기타공공기관(3,131억 원), 준정부기관(1,914억 원) 순으로 높음.
  - 공공기관의 유형별 복리후생비 비중을 살펴보면, 각각 공기업이 41.8%, 기타공공기관이 36.1%, 준정부기관이 22.1%를 차지함.<sup>180)</sup>

179) 2022년도 1인당 복리후생비는 전년 대비 0.8% 증가한 188만 원으로, 2021년보다 1만 원 증가함. 기획재정부, 「347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23. 4. 28. p.8 참고

180) 2022년 정원 기준 공공기관 유형별 임직원 수 규모를 비교하면, 기타공공기관(17만 5,953명, 39.5%), 공기업(15만 956명, 33.9%), 준정부기관(11만 8,347명, 26.6%) 순임.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임직원 현황’(2023. 4. 24. 기준) 참고

- 모든 공공기관 유형의 2022년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함.
  - 2022년도 1인당 복리후생비는 전년 대비 0.8% 증가한 188만 원으로, 2021년보다 1만 원 증가함.
  - 공기업은 전년 대비 임직원 정원이 0.7%(1,018명) 증가하였고,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도 1.8%(63억 원) 증가함.
  - 공기업,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은 2022년에 복리후생비가 증가하였는데, 당해 연도에 세 기관 유형 모두 정원이 증가하였으므로 정원 증가에 따른 복리후생비 증가라고 볼 수 있음.<sup>181)</sup>

〈표 III-41〉 기관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현황(2018~2022년)

(단위: 억 원, %)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A)	'22년 (B)	증감 (B-A)	전년 대비 증감률
합 계	8,295	8,388	8,446	8,456	8,675	219	2.6
공기업	4,026	3,896	3,775	3,566	3,629	63	1.8
· 시장형	2,159	2,143	2,040	1,910	1,933	23	1.2
· 준시장형	1,867	1,753	1,735	1,656	1,696	40	2.4
준정부기관	1,741	1,796	1,787	1,868	1,914	46	2.5
· 기금관리형	546	576	559	568	588	20	3.5
· 위탁집행형	1,195	1,220	1,228	1,300	1,326	26	2.0
기타공공기관	2,527	2,696	2,884	3,022	3,131	109	3.6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2023. 4. 24.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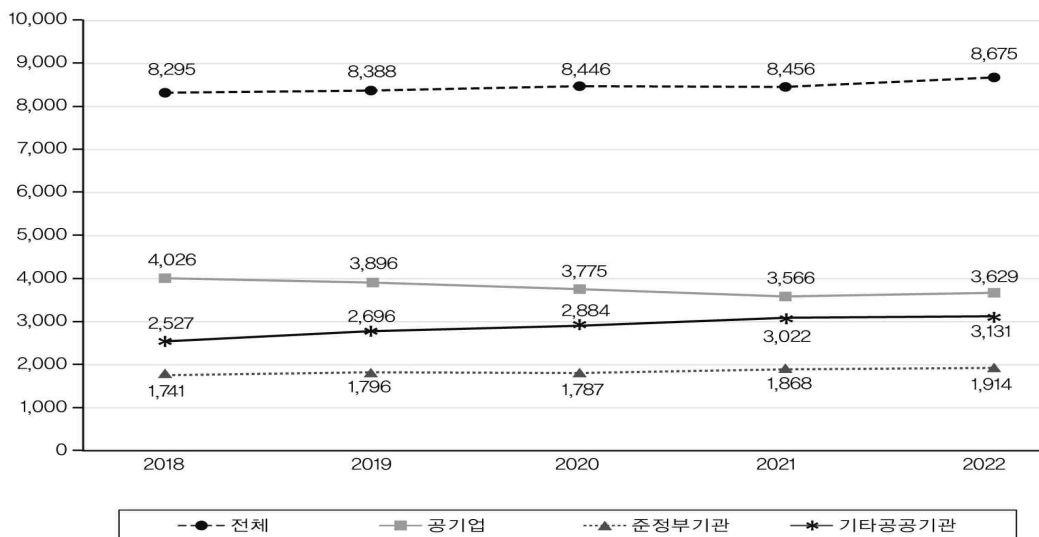
- 최근 5년간 무상 지급된 복리후생비 총액 추이([그림 III-25])를 보면, 전체 공공기관 복리후생비는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였음.
- 전체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 총액은 2019년에 1.1%(93억 원) 증가 이후 상승폭이 둔화되어 2020년 0.7%, 2021년 0.1% 증가하였다가, 2022년에는 전년 대비 2.6%(219억 원) 증가함.
  - 2022년 공기업에서 복리후생비가 소폭 증가(1.8%)하였고, 준정부기관에서 46억 원 (2.5%), 기타공공기관에서 109억 원(3.6%)이 증가하여 2022년 전체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 증감률은 전년 대비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181) 2022년 준정부기관은 복리후생비가 46억 원(2.5%), 정원 기준 임직원 수가 1,907명(1.6%) 증가했고, 기타공공기관은 복리후생비가 109억 원(3.6%), 정원 기준 임직원 수가 3,649명(2.1%) 증가함

- 공공기관 유형별로 복리후생비 무상지급액 지원 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준정부기관은 2020년 이후, 기타공공기관은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인 반면, 공기업은 2019~2021년 매년 계속 감소하다가 2022년에 다시 소폭 상승함.
  - 공기업의 복리후생비는 2019년부터 시작된 하락세를 유지하다 2022년 반등하여 전년 대비 63억 원(1.8%) 소폭 증가함.
  - 준정부기관의 경우, 복리후생비 무상지급액 규모의 변화가 공공기관 유형 중 가장 미미한 편이었으나, 2021년에 복리후생비가 81억 원(4.5%)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46억 원(2.5%) 소폭 상승함.
  - 기타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 무상지급액 규모는 2018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3,1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9억 원(3.6%) 증가함.
- 2018년 대비 2022년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증가율을 보면, 전체 공공기관의 증가율은 4.6%이며, 유형별 증가율은 공기업 △9.9%, 준정부기관 9.9%, 기타공공기관 23.9%로 나타남.
  - 공기업의 복리후생비 지원규모는 2018년 4,026억 원에서 2022년 3,629억 원으로 약 9.9%(397억 원) 감소함.
  - 준정부기관의 경우 복리후생비 지원규모가 2018년 1,741억 원에서 2022년 1,914억 원으로 9.9%(173억 원) 증가하였고, 기타공공기관도 2018년 2,527억 원에서 2022년 3,131억 원으로 23.9%(604억 원) 증가하여, 두 유형 모두 전체 공공기관의 증가율(4.6%)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

[그림 III-25]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현황(2018~2022년, 무상지원 기준)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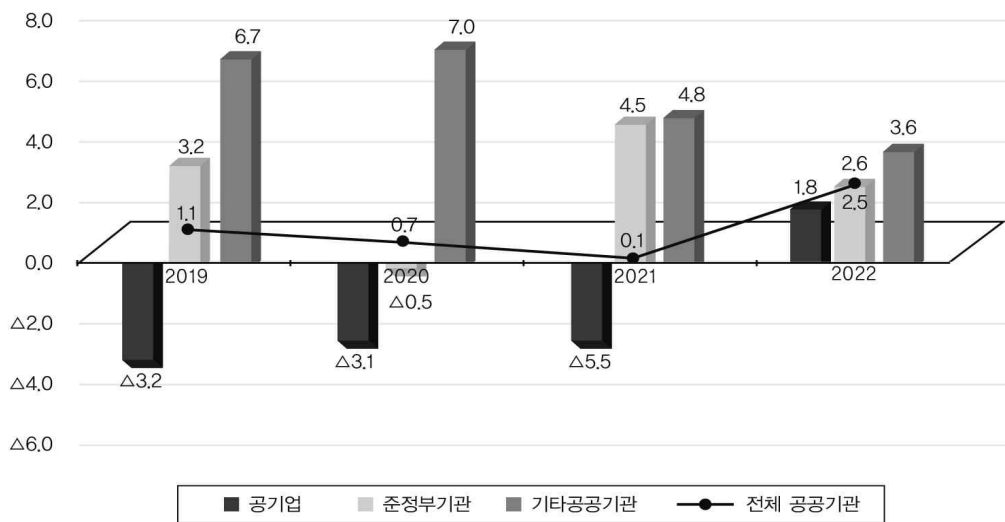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2023. 4. 24.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복리후생비 지원규모 증감률 추이(무상지원 기준)를 살펴보면, 공공기관 전체적으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증가세가 1.1% 이하로 완만한 형태를 유지하다 2022년에 2.6%로 상승함.
- 공기업의 경우, 복리후생비 지원규모 증감률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5%로 계속 감소세였으나, 2022년에 1.8% 소폭 상승함.
- 준정부기관의 복리후생비 지원규모는 2020년에 0.5%(9억 원) 감소하였으나, 2021년 4.5%(81억 원), 2022년 2.5%(46억 원) 증가하여 2020년의 감소분을 만회함.
- 기타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증감률은 최근 5년간 매년 증가 추세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매년 전년 대비 7% 안팎의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1년 4.8%로 증감률이 둔화된 뒤 2022년 더 하락한 3.6%의 증가율을 기록함.<sup>182)</sup>

[그림 III-26]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증감률 추이(2019~2022년, 무상지원 기준)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2023. 4. 24.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보육비, 문화여가비, 행사지원비, 의료 및 건강검진비, 선택적 복지, 학자금 등 주요 복리후생비 항목별 지급액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표 III-42>와 같음.
- 보육비는 2020년의 감소를 제외하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보육비는 전년 대비 약 1억 원(2.7%) 증가함.
  - 이러한 증가 추세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 확대가 지속됨에 따라 보육비 지원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182) 2019년 6.7% → 2020년 7% → 2021년 4.8% → 2022년 3.6%

- 2021년부터는 알리오시스템 보육비 항목의 공시기준이 개정되어 보육시설 설치·운영비<sup>183)</sup>를 제외한 보육비 지원을 복리후생비상 보육비로 공시해야 함.<sup>184)</sup>
- 2020년에 크게 하락했던 문화여가비와 행사지원비는 2021년 대폭 상승한 후 2022년에도 각각 6.3%, 13.6%로 크게 상승함.
  -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완화에 따른 체육시설 개방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 의료 및 건강검진비는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sup>185)</sup>
- 선택적 복지는 다른 항목에 비해 규모가 큰 복리후생 항목으로, 수혜인원 확대에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1년에 105억 원(2.9%) 감소하였으나, 2022년 반등하여 81억 원(2.3%) 증가함.
- 학자금은 2018년 이후로 감소세를 유지하다 2022년에 11억 원(2.5%) 소폭 상승하였으나, 2018년과 대비하여 574억 원(5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에 따라 학자금 지원 규모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임.

〈표 Ⅲ-42〉 복리후생비 주요 항목 현황(2018~2022년)

(단위: 억 원, %)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18년 대비		'21년 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보 육 비	38.1	41.6	38.3	42.9	44.0	6	15.6	1	2.7
문화여가비	404.8	454.2	377.5	467.5	497.0	92	22.8	29	6.3
행사지원비	337.8	369.0	291.5	324.7	368.9	31	9.2	44	13.6
의료 및 건강검진비	812.5	894.4	978.5	1,040.8	1,094.2	282	34.7	53	5.1
선택적 복지	3,161.6	3,343.8	3,642.0	3,536.6	3,618.1	457	14.4	81	2.3
학 자 금	1,014.8	891.4	648.7	430.3	441.0	△574	△56.5	11	2.5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통계다운로드에 게시된 '복리후생비'(2023. 4. 24.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감소세를 유지하다 2022년에는 전년 대비 34억 원(2.1%) 증가함.
  - 2022년 기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총액 1,645억 원 중 기타공공기관의 출연금이 872억 원으로 전체의 약 53%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공기업이 약 454억 원으로

183) 보육시설 운영비(보육교사 인건비·식재료비·기본운영비, 시설운영비와 보육시설 이용 수수료, 공동 어린이 집에 대한 기관부담금 등) 및 보육시설 설치비로 복리후생에서 분리공시

184)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전자문서 작성지침」, 2021. 3. 23. 참고

185) 2018년 대비 2022년 의료 및 건강검진비 증가액은 282억 원(34.7%)임

전체의 27.6%, 준정부기관이 318억 원으로 전체의 19.3%를 차지함.

- 2022년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크게 감소한 것은,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11억 원(5.0%)으로 소규모 증가했음에도 시장형 공기업에서 이를 훨씬 상회할 정도로 크게 감소(552억 원, 71%)한 것에서 기인함.
- 준정부기관의 202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는 3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7억 원(약 142.7%) 증가하였으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 약 10억 원(25.6%) 증가하였고, 특히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서 178억 원(195.6%) 증가함.
- 기타공공기관의 202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는 8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6억 원(79.4%) 증가함.

〈표 III-43〉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2018~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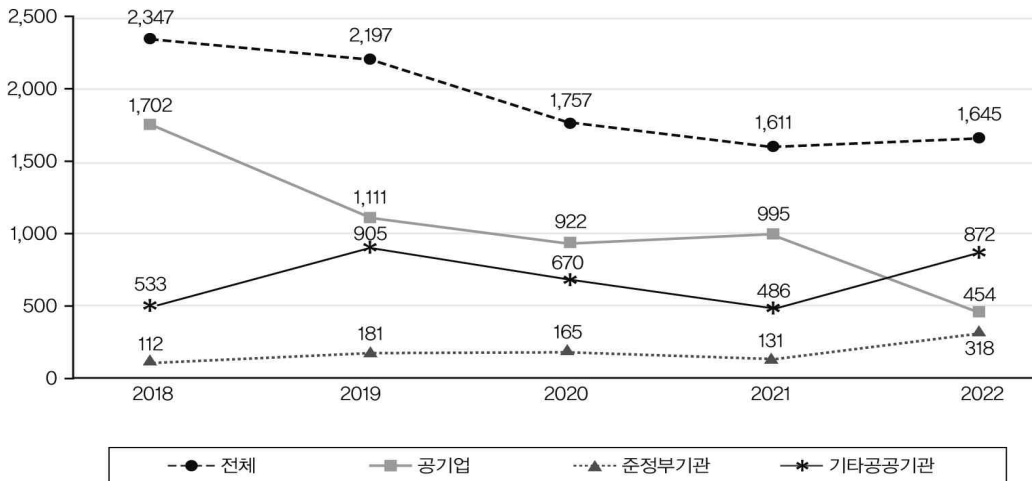
(단위: 억 원, %)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A)	'22년 (B)	증감 (B-A)	전년 대비 증감률
합 계	2,347	2,197	1,757	1,611	1,645	34	2.1
공기업	1,702	1,111	922	995	454	△541	△54.4
· 시장형	958	170	216	777	225	△552	△71.0
· 준시장형	744	941	706	218	229	11	5.0
준정부기관	112	181	165	131	318	187	142.7
· 기금관리형	32	121	125	91	269	178	195.6
· 위탁집행형	80	60	40	39	49	10	25.6
기타공공기관	533	905	670	486	872	386	79.4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2023. 4. 24.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I-27〕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2018~2022년)

(단위: 억 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2023. 4. 24.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6. 외부 평가결과

### 가.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sup>186)</sup>

#### 1) 기관 평가제도 개요

-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운법」 제31조 및 제48조에 근거하여 기관 경영실적 평가 (이하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함.<sup>187)</sup>
  - 경영실적 평가는 기관의 경영실적에 대한 외부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책 임성을 확보하고 경영개선을 유도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1984년에 최초 실시되어 40년째 시행 중인 대표적인 공공기관 관리정책 중 하나임.
  - 기획재정부는 매년 3~6월 사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전년도 경영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음.
    - 기타공공기관은 「공운법」 제4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대상은 아니나 주무부처 주관 하에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sup>188)</sup>
  -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평가업무를 수행토록 함.
    - 기관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2018년 실시한 2017년도 경영실적 평가 부터 경영평가단을 공기업 평가단과 준정부기관 평가단으로 분리함.
  - 경영실적 평가의 평가지표체계, 평가유형,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평가대상 연도 개시 전에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평가 편람』을 통해 사전에 정하고 있음.
  -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임직원에게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지급 하고 우수기관과 부진기관에 대해 차별화된 조치를 시행함.
    - 경영실적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등을 시행할 수 있음.

186)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2022. 10.,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실시계획」,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3. 2. 27.,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재무성과 따라 '희비' 엇갈렸다」, 보도 자료, 2023. 6. 16.,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3. 6. 16. 및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2022. 12. 19. 참고

187) 「공운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던 기관장 평가(공공기관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는 2018년도 평가부터 기관평가에 통합하여 실시하였으므로 별도로 다루지 않음

188)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준용하여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결과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할 의무는 없음

- 성과급 지급률은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정함.
- 기획재정부 장관은 실적부진 기관의 기관장·상임이사에 대하여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음.
- D등급 이하인 실적부진 기관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경상경비예산이 삭감(0.5~1%p 이내)될 수 있으며,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하여 이행상황을 점검받아야 함.

□ 2022년도 경영실적 평가는 기획재정부가 「공운법」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최종결과와 후속조치를 2023년 6월 16일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였음.<sup>189)</sup>

- 2022년도 경영실적 평가는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을 토대로 130개 기관(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을 대상으로 2023년에 실시함.
- 2023년 평가단은 교수·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별로 구분하여 평가팀을 구성함.<sup>190)</sup>
  - 기획재정부는 경영평가위원 선정에 앞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후보 풀을 구성하기 위해 인터넷 공모,<sup>191)</sup> 시민·사회단체 추천, 관련 부처 추천 등을 진행하는 한편, 특정전공·성별 등의 편중 최소화를 위해 지역·여성·특정분야 전문성을 고려하여 평가단을 구성함.
  - 평가단은 공기업 평가단 37명과 준정부기관 평가단 62명 외에 감사 직무수행 실적을 평가<sup>192)</sup>하기 위해 별도로 감사평가단(10명)을 구성함.
- 평가단은 서면심사, 기관별 실사 등을 통해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63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함.

□ 2022년도 경영실적 평가 대상기관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22년도 경영실적 평가는 130개(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운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공공기관 유형 구분 기준 및 산업별, 기능별, 규모별 유형 구분 기준에 따라 평가유형을 구분하여 실시됨.

189) 「공운법」 제48조 제7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년 6월 20일까지 경영실적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함

190) 경영관리 계량지표의 평가는 경영관리 계량평가위원회(35명)를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 후에 합산하여 최종 득점을 산출함

191)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경영평가위원 공모 실시

192) 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는 감사 개인에 대한 평가이므로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2021년도 경영실적 평가(2022년 실시)에서는 「공운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공공 기관 유형 구분 기준에 따라 공기업은 2개 유형(공기업 I, 공기업 II), 준정부 기관은 3개 유형(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강소형)으로 평가유형을 구분하였으나 2022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산업별, 기능별, 규모별 유형 구분 기준에 따라 공기업은 3개 유형(SOC, 에너지, 산업진흥·서비스), 준정부기관은 6개 유형(기금 관리형, SOC·안전, 산업진흥, 국민복지증진, 중형, 소형) 총 9개 유형으로 평가 유형을 세분화하였음.

〈표 III-44〉 2022년도 경영실적 평가 대상기관(130개)

유형		기관명
공 기 업 (36개)	SOC 유형 (12개)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에너지 유형 (12개)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업진흥·서비스 유형 (12개)	(주)강원랜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조폐공사, 한전KDN,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
준 정 부 기 관 (94개)	기금 관리형 (12개)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OC·안전 (14개)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도로교통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위탁 집행형 (45개)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민 복지 증진 (15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환경공단	

〈표 III-44〉의 계속

유형		기관명
준정부기관 (94개)	중형 (13개)	국제방송교류재단, 서민금융진흥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중소형 (37개)  소형 (24개)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독립기념관, 시청자미디어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창업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2022. 10.을 참고하여 작성

□ 2022년도 경영실적 평가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sup>193)</sup>

- 2022년도 경영실적 평가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로서, 효율성과 공공성 간 균형 있는 평가에 중점을 두었음.
  - 전반적인 지표체계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생산성, 재무건전성, 비용절감 노력 등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확대<sup>194)</sup>하여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평가함.
  - 공기업 재무상태 악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감안하여 ‘재무관리’ 항목과 ‘업무 효율’ 항목을 ‘재무성과관리’ 항목으로 통합하고 배점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경영 성과와 재무건전성을 면밀히 점검함.
  -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을 ‘사회적 책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 및 재난관리, 윤리경영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기관은 평가에 엄정히 반영함.
  - 사회적 책임 지표 중 정책 목표 및 변별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달성된 지표의 배점을 축소함.<sup>195)</sup>
  -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기관별 혁신계획의 적절성<sup>196)</sup> 등 국정과제에 따른 공공

193)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계획』,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3. 2. 27.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재무성과 따라 ‘희비’ 엇갈렸다」, 보도자료, 2023. 6. 16.을 참고하여 작성

194) (공기업) 10 → 20점, (위탁형 준정부기관) 0 → 13점, (기금형 준정부기관) 5 → 18점

195) (공기업) 25 → 15점, (준정부기관) 23 → 12점

196) 코로나19 대응노력·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가점(3점) 대신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2022. 7. 29.의

- 기관 혁신 노력과 성과를 평가에 반영함.
- 2021년도 경영실적 평가부터 강화된 체계적·전문적인 평가 및 검증장치 마련을 위해 개편한 전반적인 평가과정 및 절차를 2022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그대로 유지함.
    - 작년에 이어 올해도 1개월 일찍 경영평가단을 구성하고 기관별 경영현황·주요 사업 및 과거 평가결과 등에 대한 평가위원 사전검토를 강화하여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절차를 수행함.
    - 평정결과의 적정성 검증, 평정과정의 모니터링 및 평가결과 산출 시 오류 발생 방지 등을 위해 평가검증단과 평가검증위원회를 운영함.
  - 2022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연령과 관계없이 직무에 따라 공정하게 보수가 결정되는 직무급 제도를 도입하려는 기관의 노력과 도입 수준에 대한 평가 배점을 2021년 2점에서 2022년 2.5점으로 확대함.
    - 2019년도 경영실적 평가까지 직무급 관련 평가내용이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의 일부 세부 평가항목으로 반영되어 있었으나 2020년도 경영실적 평가부터 별도의 체크리스트와 ‘직무급 점검단<sup>197)</sup>을 통해 직무급 도입 노력과 수준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시작함.
    - 2020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직무급 점검단의 점검결과를 참고하여 경영평가단이 실사를 통해 다시 평가하는 방식이었다면 2021년도 경영실적 평가부터는 기관의 평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직무급 점검단의 점검결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함.
    -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직무급 도입 여부 및 기관별 수준을 지속해서 관리해 온 결과, 2020년도 경영실적 평가 시 도입기관 수가 18개에 불과했던 것이 2022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직무급 도입 기관이 55개 기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sup>198)</sup>
  - 평가등급 판정과 관련하여 기관 간 과열 경쟁 방지를 위해 2017년도 경영실적 평가부터 도입한 절대평가 제도를 2022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그대로 유지함.
    -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용하며 종합점수와 경영관리, 주요사업 범주별 점수를 바탕으로 하여 6개 등급(탁월(S)/우수(A)/양호(B)/보통(C)/미흡(D)/아주미흡(E))으로 기관의 평가등급을 산출함.

후속조치로 공공기관의 혁신 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자 가점(5점)을 신설

197) 경영평가단 내 점검단이 아닌 경영평가단과 구분하여 기획재정부가 별도로 구성·운영하는 점검단임

198) 직무급 도입기관이 2019년 5개에서 2020년 18개, 2021년 35개, 2022년 55개로 증가

## 2) 2022년도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 2022년도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이하 '기관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2022년도 기관 평가결과를 2021년도 기관 평가결과와 비교해 보면 등급 분포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유사한 모습임.
  - 2021년도 대비 양호등급 이상(S, A, B) 비율이 다소 감소(55.4% → 51.5%)하고, 미흡 등급 이하(D, E) 비율은 13.8%로 차이가 없음.
  - 평가유형별<sup>199)</sup> 종합등급 분포를 비교하면, 양호등급 이상(S, A, B)은 전 유형이 모두 유사한 수준인 반면에 미흡등급 이하(D, E)는 위탁집행형·기금관리형 유형의 분포비율이 공기업 유형, 중소형 유형에 비해 낮음.
    - 양호등급 이상인 기관 비율은 공기업 유형 50.0%, 위탁집행형·기금관리형 유형 52.6% 및 중소형 유형은 51.4%로, 유형별 비율 차이가 1.2~2.6% 수준임.
    - 미흡등급 이하(D, E)인 기관의 비율은 공기업 유형 16.7%, 중소형 유형 16.2%인 반면, 위탁집행형·기금관리형 유형은 10.5%임.
- 2022년도 기관 평가결과의 종합등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합등급이 A등급(우수)은 19개 기관, B등급(양호)은 48개 기관, C등급(보통)은 45개 기관, D등급(미흡)은 14개 기관, E등급(아주미흡)은 4개 기관임.
  - 최상위 S등급(탁월)에 해당하는 기관은 없음.
  - 전년 대비 등급별 기관 수 변화를 살펴보면, S등급인 기관이 1개 감소, A등급인 기관이 4개 감소, C등급인 기관이 5개 증가, D등급인 기관이 1개 감소, E등급인 기관이 1개 증가하였으며, B등급은 기관 수 변화가 없음.
  - 종합등급이 A등급인 기관은 공기업 유형의 울산항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5개 기관, 위탁집행형·기금관리형 유형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환경공단 등 7개 기관, 그리고 중소형 유형인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재정정보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7개 기관으로 총 19개 기관임.

199) 평가유형은 공기업(SOC, 에너지, 산업진흥·서비스), 준정부기관(준정부기관 중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SOC·안전, 산업진흥)) 및 중소형(준정부기관 중 중소형(중형, 소형))으로 구분

- 2021년도에 이어 2022년도에도 종합등급 A등급 이상을 유지한 기관은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환경공단 등 총 6개 기관임.
  - 이 중 한국도로공사 1개 기관은 2019년도부터 4년 연속 A등급을 유지함.
  - 이 외 13개 기관은 2021년도보다 경영성과가 개선되어 평가등급이 상승하였는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서부발전(주) 5개 기관은 종합등급이 전년도 C등급에 비해 2등급 상승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나머지 8개 기관은 모두 전년 대비 1등급 상승함.
- 종합등급이 E등급인 기관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4개 기관임.

□ 최근 3년(2019~2021년도) 기관 평가결과 평균 대비 2022년도 종합등급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유사한 수준임.

- 2022년도 종합등급이 양호등급 이상(S, A, B)인 기관의 비율이 51.5%로 3년 평균 55.4%보다 조금 낮으며, 2022년도 종합등급이 미흡등급 이하(D, E)인 기관의 비율이 13.8%로 3년 평균 비율인 13.8%와 같음.

〈표 III-45〉 2022년도 평가유형별 종합등급 분포

(단위: 개)

구분	연도별	기관 수	S (탁월)	A (우수)	B (양호)	C (보통)	D (미흡)	E (아주미흡)	
공기업	2021	36	1	8	9	13	4	1	
	2022	36	0	5	13	12	5	1	
준정부 기관	위탁집행/ 기금관리	2021	57	0	10	22	17	6	2
		2022	57	0	7	23	21	4	2
	중소형	2021	37	0	5	17	10	5	0
		2022	37	0	7	12	12	5	1
전 체	2021	130 (100%)	1 (0.8%)	23 (17.7%)	48 (36.9%)	40 (30.8%)	15 (11.5%)	3 (2.3%)	
	2022	130 (100%)	0 (0.0%)	19 (14.6%)	48 (36.9%)	45 (34.6%)	14 (10.8%)	4 (3.1%)	
	'19~'21 평균	(100%)	(0.3%)	(17.2%)	(37.9%)	(30.8%)	(12.3%)	(1.5%)	

주: 1. 등급구간은 평균점수 및 표준편차 등을 활용하여 설정  
 2. 2021년에는 준정부기관이 위탁집행/기금관리와 강소형으로 분류됨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보도자료, 2022. 6. 20.,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6. 20.,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재무성과 따라 '회비' 엇갈렸다」, 보도자료, 2023. 6. 16.,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3. 6. 16.을 참고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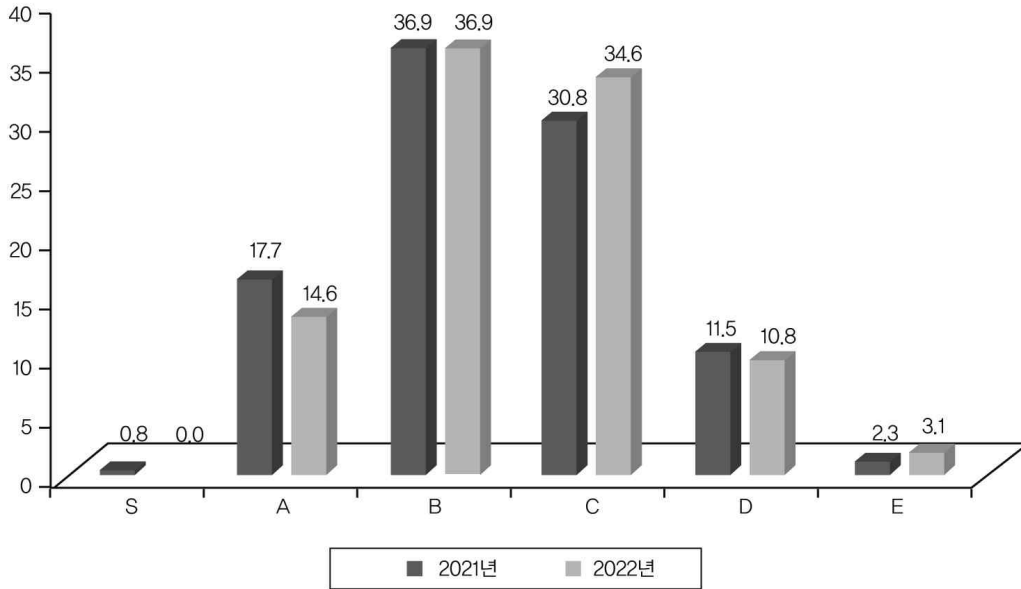
〈표 III-46〉 2022년도 종합등급별 기관 현황

등급	공기업(36개)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기금관리형(57개)	중소형(37개)
S	-	-	-
A	울산항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5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환경공단 (7개)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재정정보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7개)
B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부동산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조폐공사 한전KPS(주) (13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3개)	국도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서민금융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2개)
C	대한석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 (12개)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공무원연금공단 국가철도공단 국도안전관리원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도로교통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1개)	국제방송교류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12개)
D	(주)강원랜드 인천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5개)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4개)	독립기념관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5개)
E	한국철도공사 (1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1개)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3. 6. 16.

[그림 III-28] 전년 대비 2022년도 평가등급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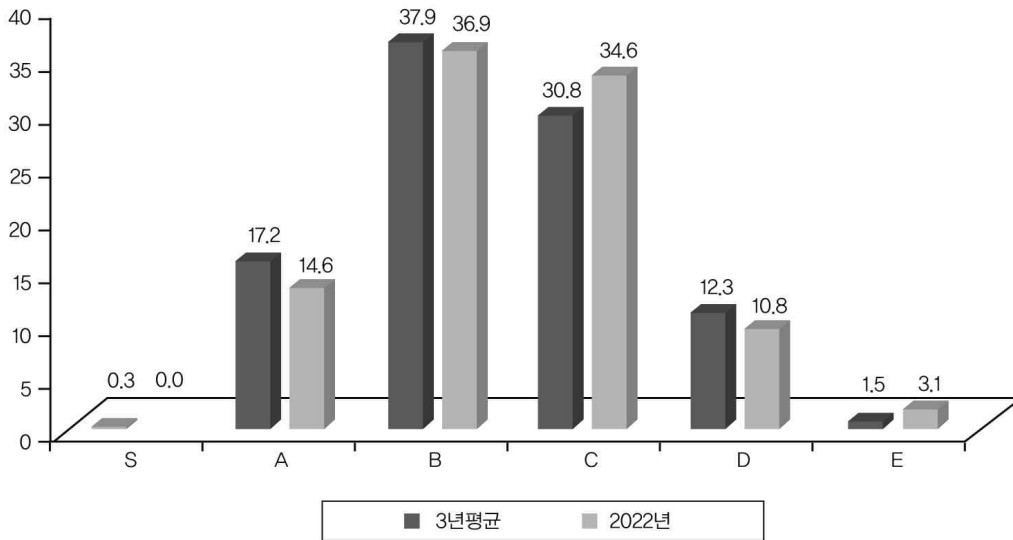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재무성과 따라 '희비' 엇갈렸다」, 보도자료, 2023. 6. 16. 및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3. 6. 16.을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I-29] 최근 3년 평균 대비 2022년도 평가등급별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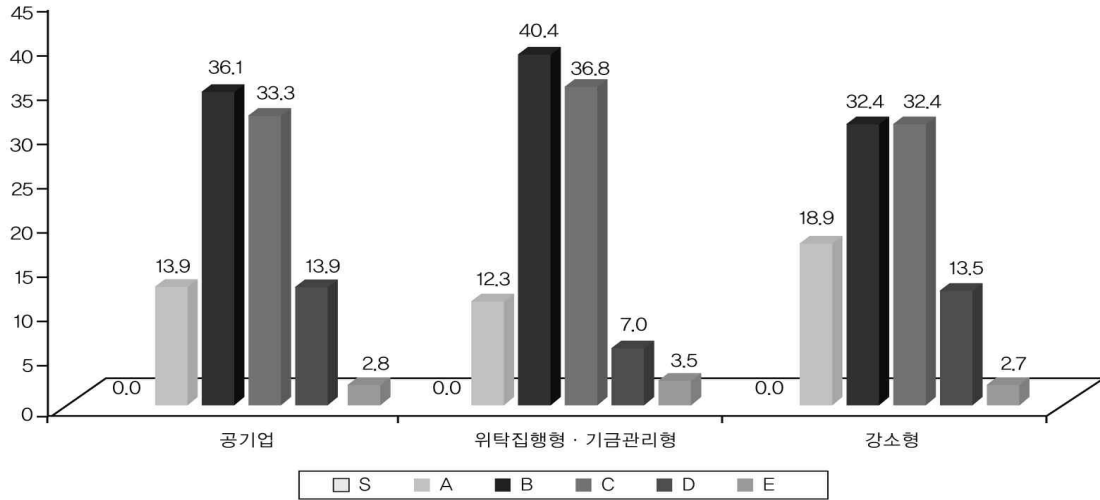


주: 3년 평균은 2019~2021년도의 기관 평가결과 평균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보도자료, 2022. 6. 20.,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6. 20.,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재무성과 따라 '희비' 엇갈렸다」, 보도자료, 2023. 6. 16.,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3. 6. 16.을 참고하여 작성

- 평가유형별로 기관 평가결과의 등급별 분포를 살펴보면, 모든 유형에서 동일하게 B등급과 C등급의 분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종합등급 분포는 평가유형별로 유사한 모습을 보이나, 일부 차이가 있음.
    - 모든 유형에서 B등급과 C등급이 가장 큰 분포를 차지하지만, 공기업 유형과 위탁집행형·기금관리형 유형은 B등급의 분포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중소형 유형은 B등급과 C등급이 동일한 분포를 보임.
    - 공기업 유형과 위탁집행형·기금관리형 유형은 B등급 다음으로 C등급이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B등급과 C등급 간 비중의 차이가 공기업 유형은 2.8%p 위탁집행형·기금관리형 유형은 3.5%p로 평가유형별로 일부 차이를 보임.
  - 전년 대비 종합등급 변동을 평가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기업 유형은 2021년 C등급 중심에서 2022년 B등급 위주로 평가등급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위탁집행형·기금관리형 유형은 B등급과 C등급 분포가 증가되는 평가 결과를 보였음.
    - 공기업 유형은 2021년도에 A등급과 B등급 분포의 차이가 작았으나, 2022년도 평가에서는 A등급이 감소하고, B등급이 증가하여 두 등급 간 분포의 차이가 2.8%p에서 22.2%p로 크게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상대적으로 가파른 분포를 보이고 있음.
    - 위탁집행형·기금관리형 2022년도에는 B등급과 C등급이 증가하고, A등급과 D등급이 감소함.
    - 중소형 유형은 2021년도 대비 B등급의 분포가 감소하고, A등급과 C등급의 분포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완만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
    - 미흡 이하 등급(D, E)의 분포는 위탁집행형·기금관리형 유형에서는 감소하였으나, 공기업과 중소형 유형에서는 증가하였음.

[그림 Ⅲ-30] 2022년도 평가유형별 등급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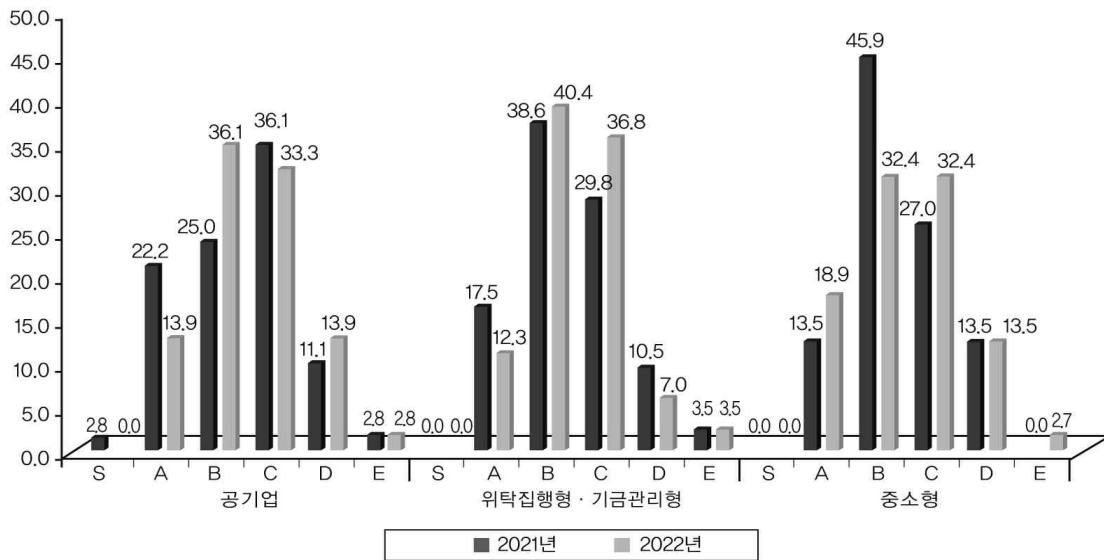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3. 6. 16.을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Ⅲ-31] 평가유형별 전년 대비 평가등급 분포 비교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6. 20. 및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3. 6. 16.을 참고하여 작성

□ 2022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수검한 1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년 대비 평가등급 변동내역을 살펴본 결과, 평가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38개 기관으로 전체의 29.2%를 차지하고, 평가등급이 하락한 기관은 47개로 36.2%를 차지함.

- 전년 대비 평가등급이 개선된 기관 중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국립생태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관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12개 기관은 평가등급이 2단계 상승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음.
- 2년 연속 평가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울산항만공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마사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전력거래소 등 10개 기관으로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sup>200)</sup>
- 평가등급이 전년보다 하락한 기관 중 평가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한 기관은 도로교통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14개 기관임.<sup>201)</sup>
- 2년 연속 평가등급이 하락한 기관은 독립기념관, 인천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6개 기관이며, 3년 연속 평가등급이 지속해서 하락한 기관은 없음.

〈표 III-47〉 전년 대비 2022년도 평가등급 변동 요약

(단위: 개)

구분	기관 수 (130개)	변동목		
		1단계	2단계	3단계
평가등급 상승	38 (29.2%)	26	12	-
평가등급 유지	45 (34.6%)	-	-	-
평가등급 하락	47 (36.2%)	33	13	1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6. 20. 및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3. 6. 16.을 참고하여 작성

200) 울산항만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등 4개 기관은 2년 연속 평가등급이 상승하여 2022년도 평가에서 A등급,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6개 기관은 B등급을 받음

201)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평가등급이 3단계 하락하여 2022년도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음

〈표 III-48〉 전년 대비 2022년도 평가등급 변동 현황

구분	기관명
<p>등급 상승 (38개)</p>	<p><b>(공기업)</b>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조폐공사</p> <p><b>(준정부기관)</b>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생태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p>
<p>등급 유지 (45개)</p>	<p><b>(공기업)</b>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p> <p><b>(준정부기관)</b>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국립공원공단,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안전관리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예금보험공사,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p>
<p>등급 하락 (47개)</p>	<p><b>(공기업)</b> (주)강원랜드,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p> <p><b>(준정부기관)</b> 공무원연금공단, 국가철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도로교통공단, 독립기념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p>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6. 20. 및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3. 6. 16.을 참고하여 작성

□ 2022년도 기관 평가결과 분포를 살펴보면 <표 III-49>, <표 III-50>과 같이 나타남.

<표 III-49> 2022년도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평가등급 분포

(단위: 개)

구분	기관 수	S (탁월)	A (우수)	B (양호)	C (보통)	D (미흡)	E (아주미흡)
기획재정부	2	-	1	1	-	-	-
교육부	3	-	1	1	1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	1	5	3	1	-
외교부	1	-	-	-	1	-	-
행정안전부	1	-	-	-	-	1	-
국가보훈부	2	-	-	-	-	1	1
문화체육관광부	6	-	1	2	3	-	-
농림축산식품부	6	-	1	5	-	-	-
산업통상자원부	30	-	6	12	9	3	-
보건복지부	9	-	1	3	3	1	1
환경부	5	-	2	3	-	-	-
고용노동부	5	-	-	1	4	-	-
여성가족부	3	-	-	2	-	-	1
국토교통부	15	-	1	3	6	4	1
해양수산부	9	-	3	2	2	2	-
중소벤처기업부	5	-	-	1	4	-	-
방송통신위원회	2	-	-	-	2	-	-
금융위원회	5	-	-	3	2	-	-
공정거래위원회	1	-	-	-	1	-	-
인사혁신처	1	-	-	-	1	-	-
식품의약품안전처	1	-	-	-	1	-	-
경찰청	1	-	-	-	1	-	-
소방청	1	-	-	-	-	1	-
농촌진흥청	1	-	-	1	-	-	-
산림청	3	-	1	2	-	-	-
특허청	1	-	-	-	1	-	-
기상청	1	-	-	1	-	-	-
합 계	130	0	19	48	45	14	4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3. 6. 16.을 참고하여 작성

〈표 III-50〉 2022년도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평가등급 현황

주무부처	기관명
기획재정부 (2개)	(A등급) 한국재정정보원 (B등급) 한국조폐공사
교육부 (3개)	(A등급) 한국장학재단 (B등급) 한국교육학술정보원 (C등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10개)	(A등급)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B등급)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연구재단 (C등급)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D등급)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외교부 (1개)	(C등급) 한국국제협력단
행정안전부 (1개)	(D등급)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국가보훈부 (2개)	(D등급) 독립기념관 (E등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문화체육관광부 (6개)	(A등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B등급)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관광공사 (C등급)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농림축산식품부 (6개)	(A등급)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B등급)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산업통상자원부 (30개)	(A등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서부발전(주) (B등급)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PS(주) (C등급)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 (D등급) (주)강원랜드,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보건복지부 (9개)	(A등급) 한국보건산업진흥원 (B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C등급)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육진흥원 (D등급) 한국사회보장정보원 (E등급)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환경부 (5개)	(A등급)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B등급)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노동부 (5개)	(B등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C등급)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표 III-50〉의 계속

주무부처	기관명
여성가족부 (3개)	(B등급)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E등급)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교통부 (15개)	(A등급) 한국도로공사 (B등급)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부동산원, (C등급)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공항공사 (D등급)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E등급) 한국철도공사
해양수산부 (9개)	(A등급) 울산항만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환경공단 (B등급)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C등급)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D등급) 인천항만공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중소벤처기업부 (5개)	(B등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C등급)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2개)	(C등급)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금융위원회 (5개)	(B등급)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C등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정거래위원회 (1개)	(C등급) 한국소비자원
인사혁신처 (1개)	(C등급) 공무원연금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 (1개)	(C등급)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찰청 (1개)	(C등급) 도로교통공단
소방청 (1개)	(D등급)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농촌진흥청 (1개)	(B등급)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산림청 (3개)	(A등급)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B등급)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특허청 (1개)	(C등급)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상청 (1개)	(B등급)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3. 6. 16.을  
참고하여 작성

- 범주별 등급을 살펴보면 경영관리 범주에서 S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이고, 주요사업 범주에서는 S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임.
- 공기업 유형 중 해양환경공단 1개 기관은 경영관리 범주와 주요사업 두 범주에서 모두 A등급을 받음.
  - 공기업 유형 중 경영관리 범주에서 S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1개 기관이며, A등급을 받은 기관은 울산항만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해양환경공단 등 4개 기관임.
  - 주요사업 범주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 등 7개 기관임.
  -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6개 기관은 경영관리 범주와 주요사업 범주 간 등급 차이가 2단계에 달함.
  - 주요사업 범주에서 E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철도공사 1개 기관임.
- 위탁집행형·기금관리형 유형 중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주요사업 범주에서 S등급을 받았으며, 두 범주 모두에서 A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은 없음.
  - 경영관리 범주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5개 기관임.<sup>202)</sup>
  - 주요사업 범주에서 S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1개 기관이며 A등급을 받은 기관은 10개 기관임.<sup>203)</sup>
  - 경영관리 범주와 주요사업 범주 간 등급이 2단계 이상 차이가 나는 기관은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등 17개 기관임.
  - 이 중 한국가스안전공사 1개 기관은 경영관리 범주와 주요사업 범주 간 등급이 4단계 차이가 나는 기관으로, 경영관리 범주에서 D등급, 주요사업 범주에서 S등급을 받아, 종합등급은 B등급으로 평가받았음.

202) 경영관리 범주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환경공단 등 5개 기관임

203) 주요사업 범주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연구재단 등 10개 기관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4개 기관은 경영관리 범주와 주요사업 범주 간 등급이 3단계 차이가 나는 기관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경영관리 범주에서 B등급, 주요사업 범주에서 E등급을 받아, 종합등급은 C등급으로 평가받았으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경영관리 범주에서 E등급, 주요사업 범주에서 B등급을 받아, 종합등급은 D등급으로 평가받았고,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경영관리 범주에서 B등급, 주요사업 범주에서 E등급을 받아, 종합등급은 B등급으로 평가받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경영관리 범주에서 D등급, 주요사업 범주에서 A등급을 받아, 종합등급은 C등급으로 평가됨.
- 경영관리 범주에서 E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3개 기관이고, 주요사업 범주에서 E등급을 받은 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 2개 기관임.
- 중소형 유형 중 경영관리 범주와 주요사업 범주 모두에서 A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개 기관임.
  - 경영관리 범주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6개 기관이고, 주요사업 범주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창업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5개 기관임.
  - 범주 간 등급이 2단계 이상 차이가 나는 기관은 국제방송교류재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독립기념관, 창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8개 기관임.
  - 이 중 창업진흥원은 범주 간 등급이 4단계 차이가 나는 기관으로, 경영관리 범주에서 E등급, 주요사업 범주에서 A등급을 받아, 종합등급은 C로 평가받았으며, 독립기념관은 범주 간 등급이 3단계 차이가 나는 기관으로, 경영관리 범주에서 B등급, 주요사업 범주에서 E등급을 받아, 종합등급은 D로 평가됨.
  - 경영관리 범주에서 E등급을 받은 기관은 창업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2개 기관이고, 주요사업 범주에서 E등급을 받은 기관은 독립기념관 1개 기관임.

〈표 III-51〉 2022년도 기관 평가결과 현황(공기업 유형)

등급	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S	-	한국수자원공사 (1개)	-
A	울산항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5개)	울산항만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해양환경공단 (4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 (7개)
B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부동산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조폐공사 한전KPS(주) (13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부산항만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부동산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주) (13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13개)
C	대한석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 (12개)	(주)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가스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 한전KDN (12개)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DN (10개)
D	(주)강원랜드 인천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5개)	대한석탄공사 인천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6개)	(주)강원랜드 주택도시보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5개)
E	한국철도공사 (1개)	-	한국철도공사 (1개)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보고서(공기업)』, 2023. 9.

〈표 III-52〉 2022년도 기관 평가결과 현황(위탁집행형·기금관리형 유형)

등급	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S	-	-	한국가스안전공사 (1개)
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환경공단 (7개)	국민연금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환경공단 (5개)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연구재단 (10개)
B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3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근로복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8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로교통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7개)

〈표 III-52〉의 계속

등급	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C	공무원연금공단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도로교통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1개)	국가철도공단 기술보증기금 도로교통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8개)	국가철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복지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환경공단 (18개)
D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4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개)	공무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9개)
E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개)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3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개)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기금관리형)』, 2023. 9., 『2022년도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위탁집행형)』, 2023. 9.을 참고하여 작성

〈표 III-53〉 2022년도 기관 평가결과 현황(중소형 유형)

등급	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S	-	-	-
A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재정정보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7개)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재정정보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6개)	창업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5개)
B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서민금융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2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독립기념관 서민금융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6개)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서민금융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16개)
C	국제방송교류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12개)	시청자미디어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7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1개)
D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독립기념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5개)	국제방송교류재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6개)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4개)
E	한국건강증진개발원 (1개)	창업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개)	독립기념관 (1개)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중소형)』, 2023. 9.

- 2022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① 부진기관 및 중대재해 발생기관에 대한 인사조치 ② 부진기관 경영개선 점검 및 차년도 예산 반영 조치 ③ 성과급 차등 지급 등을 시행함.<sup>204)</sup>
  - 실적부진 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시행함.
    - 종합등급에서 E등급을 받은 기관의 장과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의 장은 해임 건의의 대상이 되고, 당해 연도 D등급을 받은 기관의 장은 경고 조치의 대상이 됨.
    - 2022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E등급 또는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9개 기관<sup>205)</sup> 중 재임기간이 짧거나 기존에 해임된 기관장을 제외한 기관장 5명<sup>206)</sup>에 대해 해임 건의함.
    - 기관평가 종합등급이 D등급으로 실적이 부진하여 기관장 경고조치의 대상이 되는 기관은 14개<sup>207)</sup>이며, 해임 건의대상을 제외하고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7명에 대해 경고 조치함.<sup>208)</sup>
  - 중대재해가 발생한 8개 기관 중 현재 재임 중인 기관장 5명에 대해 경고 조치함.
    - 중대재해 발생으로 기관장 경고조치를 받은 기관은 국가철도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개 기관임.
  -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우수 기관에 총인건비 추가인상(0.1%p) 등 예산상 인센티브 조치를 취함.
  - 실적부진 기관, 중대재해 발생기관의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경영부진기관에 대한 경영개선 및 구조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함.
    - 종합등급에서 D등급 이하를 받은 18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경상경비를 삭감(0.5~1%p)하는 등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기관 평가결과를 반영함.

204)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보도자료, 2023. 6. 16.

205) 종합등급에서 E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4개 기관이며,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은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5개 기관임

206) 해임 건의된 기관의 기관장은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기관장임

207) (주)강원랜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독립기념관, 인천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08) 실적부진기관(14개) 중 기관장 경고조치를 받은 기관은 (주)강원랜드, 독립기념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7개 기관의 기관장임

- 중대재해가 발생한 8개 기관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 방지 등 안전 관련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임.
- 2022년도 경영실적 평가 성과급 지급 대상은 종합등급(상대·절대)이 C등급 이상인 115개 기관이고, 등급별·평가유형별로 차등 지급함.
  - 성과급 지급기준은 상대등급 50%, 절대등급 50%를 기준으로 유형별·등급별 차등지급하되, 기관별 실적 개선도를 일부 반영함.
  - 성과급 지급률은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함.
- 재무위험이 높은 15개 공기업의 성과급을 삭감 또는 자율반납을 권고함.
  - 2021~2022년 연속 당기순손실 및 손실폭 증가 또는 전년 대비 부채비율 50%p 이상 급증한 재무위험기관<sup>209)</sup>인 3개 기관의 임원 성과급을 전액 삭감하고, 1~2급 직원은 50% 삭감함.
  - 한국전력공사의 재무구조 악화와 관련성이 높은 6개 발전자회사<sup>210)</sup>의 임원 성과급을 50% 삭감하고 1~2급 직원은 25% 삭감함.
  - 재무상황 악화에 따른 강도 높은 자구노력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한국전력공사 및 9개 자회사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 자율 반납을 권고함.
  - 이 외에도 2022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6개 공기업(중복 제외)<sup>211)</sup>에 대하여 임원 성과급의 자율 반납을 권고함.
- 2022년도 경영실적 평가 성과급 지급률은 <표 III-54>와 같음.

209) 한국전력공사(D등급, 성과급 없음),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210)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등 6개 기관으로 모두 재무위험기관임

211)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5개 기관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 대상 성과급 100% 자율반납 권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감사(C등급)만 해당. 한국수력원자력(주) 임원은 우선 성과급 50% 삭감 후 잔액의 100% 반납 권고. 적자폭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1개 기관은 성과급 50% 자율반납 권고. 한국철도공사는 감사(C등급)만 해당. 한국남부발전(주) 임원은 우선 성과급 50% 삭감 후 잔액의 50% 반납 권고

〈표 III-54〉 2022년도 경영실적 평가 성과급 지급률(공기업·준정부기관)

(단위: %)

구분		S	A	B	C	D~E	
공기업	기관장 (100~0)	종합(상대)	50	40	30	20	0
		종합(절대)	50	40	30	20	0
		개선도 대상	한 등급 상승 시 +5, 두 등급 이상 상승 시 +10				
	상임이사 (80~0)	종합(상대)	40	32	24	16	0
		종합(절대)	40	32	24	16	0
		개선도 대상	한 등급 상승 시 +4, 두 등급 이상 상승 시 +8				
	상임감사 (80~0)	기관평가	상임이사 성과급 지급률의 50% (40~0%)				
		감사평가	40	32	24	16	0
	직원 (250~0)	종합(상대)	125	100	75	50	0
		종합(절대)	125	100	75	50	0
개선도 대상		한 등급 상승 시 +12.5, 두 등급 이상 상승 시 +25					
준정부기관	기관장· 상임이사 (60~0)	종합(상대)	30	24	18	12	0
		종합(절대)	30	24	18	12	0
		개선도 대상	한 등급 상승 시 +3, 두 등급 이상 상승 시 +6				
	상임감사 (60~0)	기관평가	상임이사 성과급 지급률의 50% (30~0%)				
		감사평가	30	24	18	12	0
	직원 (100~0)	종합(상대)	50	40	30	20	0
		종합(절대)	50	40	30	20	0
구 정부투자기관 (83~06)직원	직원 (300~0)	개선도 대상	한 등급 상승 시 +5, 두 등급 이상 상승 시 +10				
		종합(상대)	150	120	90	60	0
		종합(절대)	150	120	90	60	0
		개선도 대상	한 등급 상승 시 +15, 두 등급 이상 상승 시 +30				

주: 기관장, 상임이사·감사의 기준은 기본연봉 대비, 직원은 월기본급 대비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3. 6. 16.을  
 참고하여 작성

## 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sup>212)</sup>

### 1)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개요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서비스의 실질적 수요자인 고객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만족도 형태로 평가함으로써, 공급자 중심의 경영평가를 보완하고자 실시되고 있음.

212)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안)」, 2022. 8.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3. 4. 12. 참고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1999년부터 도입되었으며, 매년 기획재정부가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된 후 추진함.
  - 도입 당시에는 구 정부투자기관<sup>213)</sup>만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나, 2004년에는 구 정부산하기관으로, 2005년에는 각 부처 자율혁신기관<sup>214)</sup>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이 확대됨.
  - 2011년부터는 직접고객 외에 일반 국민의 공공기관 평가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체감도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사회적가치 기여도 조사’로 대체됨.
  - 2022년부터는 과거의 국민체감도 조사를 기본으로 사회적가치 기여도 조사를 보완하여 개편한 ‘국민인식도 조사’를 실시함.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2007년부터 「공운법」 제13조 제2항 및 제3항과 시행령 제17조 제1항과 제3항에 근거해 실시됨.
- 또한 「공운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공공기관이 공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 III-55〉 「공운법」 제13조

---

**제13조(고객현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①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고객현장을 제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기본 임무
2.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바람직한 서비스의 수준
3.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처리, 시정 절차 및 배상 등의 책임
4. 제공하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노력 및 계획 등

②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객현장을 제정하여 공표하거나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 고객현장의 제정·공표, 고객만족도 조사의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고객만족도 조사는 주관기관에 따라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조사’와 ‘주무부처 주관 조사’로 구분하여 시행됨.

213) 구 정부투자기관의 대부분이 현재 공기업에 해당함

214) 부처 자율혁신기관의 대부분이 현재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함

-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조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전체 및 기타공공기관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2022년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기관은 255개임.<sup>215)</sup>
  - ‘주무부처 주관조사’는 기타공공기관 중 업무의 특수성이 높거나 기관 규모가 작아 통합조사의 실익이 부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2022년 주무부처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기관은 77개임.<sup>216)</sup>
    - 출연연구기관 및 소규모 기관 등이 주무부처 주관조사를 실시함.
    - 2022년에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3개)<sup>217)</sup>도 예산 확보 등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업무 준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주무부처 주관조사를 실시함.
  - 공공기관의 주요 고객이 중앙행정기관, 불특정 외국인, 모회사 등으로 고객 형성이 미흡한 기관(18개)은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한국전력공사가 모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7개 기관, 발전자회사(공기업), 외국인이 주요 고객인 세종학당재단 등이 이에 해당함.
- 2015~2018년까지는 기능별로 그룹을 구분하여 그룹 내에서 상대평가하는 방식을 적용했으나, 2019년에 상대평가를 완화하기 위해 그룹 분류 방식을 폐지했으며 이러한 기초가 2022년까지 유지되고 있음.
- 2016년까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5개 그룹과 기타공공기관 4개 그룹으로 분류 하였으나, 고객만족도 조사 점수의 상향평준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부터 기능 중심으로 조사그룹을 개편함.<sup>218)</sup>
    - 기능과 주요사업에 따라 그룹을 세분화하여 동일 그룹 내 기관 간 동질성을 제고함으로써 상대평가를 강화함.
  - 2017년 개편된 그룹 분류에 따라 공공기관 간 서비스품질 경쟁 강화를 위해 그룹별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S-A-B-C 등급을 1:4:4:1의 비율로 부여함.
  - 2019년 조사부터 기존의 서열등급 부여 방식이 기관 간 과다경쟁을 유발하고

215) 2022년 공공기관 기준이며,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안)」에 명시된 조사 대상 기관 수입(2023년 공공기관 기준 250개)

216) 2022년 공공기관 기준이며,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안)」에 명시된 조사 대상 기관 수입(2023년 공공기관 기준 78개)

217)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218) 공기업·준정부기관 10개 그룹(고용·복지, 문화(관람, 관광·예술·언론), 교육, 금융, 에너지, SOC, 공공안전, 산업, 연구 등)과 기타공공기관 9개 그룹(복지, 산업, 의료, 교육·연구, SOC, 공공안전, 문화(관람, 체육·언론·예술), 금융 등)으로 분류함

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상대평가를 완화하고 절대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그룹 분류가 폐지됨.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2015년부터 PCSI 2.0 모델을 적용하고 있으며, 고객만족도 지수는 서비스 품질, 사회적 책임, 불일치의 3가지 선행요인과 만족도 측정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도출함.
- PCSI 2.0 모델은 종전 PCSI 모델을 개선한 것으로, 두 모델을 비교하면 <표 III-56>과 같음.
  - 개인이 고객인 경우 서비스 환경 품질에 대해 조사하며, 법인이 고객인 경우 관계여건 품질에 대해 조사함.
- 2018년부터 서비스 품질의 세부 설문항목을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한 설문유형을 폐지하고,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8개의 설문유형으로 분류한 PCSI 2.0 수정모델을 적용함.

<표 III-56> PCSI 모델과 PCSI 2.0 모델 비교

구분		PCSI	PCSI 2.0		
서비스품질 모형	서비스상품 품질	편익성	본원적 문제해결		
		전문성	서비스 효익성		
		혁신성	서비스 완결성		
	서비스전달 품질	지원성	인적상호작용		
		공감성	커뮤니케이션		
		대응성	고객케어		
	서비스환경 품질	공통	개인고객용	법인고객용	
		쾌적성	물리적 환경		협력
		편리성	제도/절차/시스템환경		상호호혜
		심미성	인적자원 역량환경		관계 동등성
	사회품질	청렴성	-		
		공익성	-		
안정성		-			
사회적책임 모형	-	정책타당성			
	-	지속가능성			
	-	윤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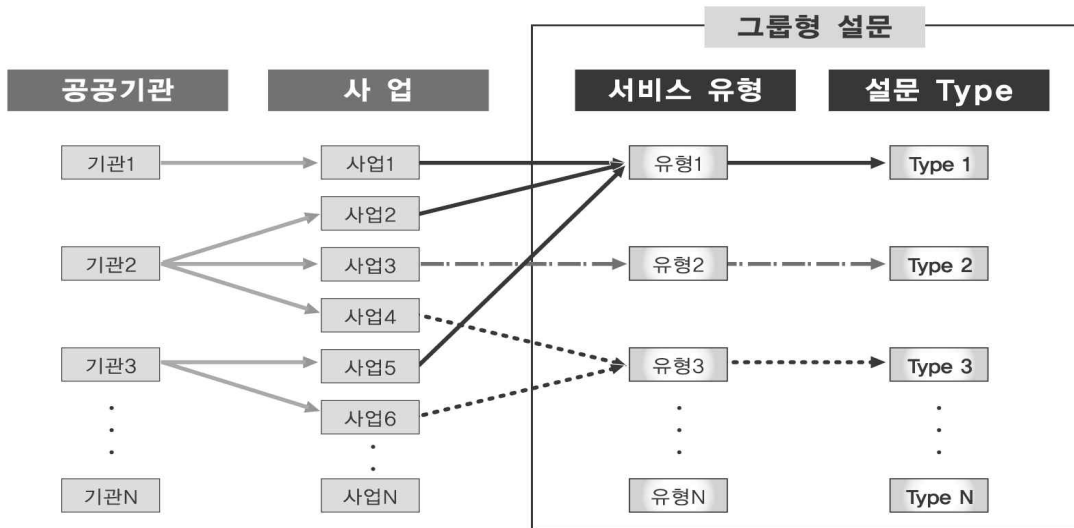
〈표 III-56〉의 계속

구분		PCSI	PCSI 2.0	
서비스 비교평가 모형	불일치	-	기대 대비 비교	
		-	이상점 대비 비교	
		-	다른 기관 대비 비교	
고객만족 모형	전반적 만족	절대적 만족	-	
		상대적 만족	인지적 만족	욕구 충족
		감정적 만족		체감 만족
	요소만족	서비스 상품만족	감정적 만족	긍정적 감정
		서비스 전달만족		부정적 감정
		서비스 환경만족	-	
사회적만족	사회적 책임만족	-		
성과모형	기관성과	신뢰	신뢰	
		지지		
		인식전환		
	사회성과	국민행복	국민행복	
		국가발전		

자료: 기획재정부, 「2016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6. 7. 1.

- 2017년까지는 전체 기관이 공통 설문문항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2018년부터는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설문을 다양화하였으며 이 설문문항은 2022년 조사까지 유지됨.
- 2017년까지 사용된 설문문항은 기관 설문 유형을 개인과 법인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조사 대상 기관별, 사업별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2018년 변경된 설문지는 공공서비스의 특징을 반영하여 이용 동기(자발·비자발), 서비스 형태(유형·무형), 이용 목적(과정지향·결과지향) 등에 따라 8종류로 세분화 함으로써 조사대상자의 응답 정확도를 제고하고자 하였음.

[그림 III-32]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개편(2018년)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8. 8. 24.

- 기획재정부는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일괄 발표한 후 알리오시스템<sup>219)</sup>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고, 조사결과는 경영실적평가의 국민소통 지표에 반영하고 있음.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음.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의 국민소통 지표로 전체 100점에서 0.5점이 반영됨.
  - 2017년까지는 전체 100점에서 2점이 반영되었으나 2018년부터 1점으로 축소되었고, 2020년부터는 0.5점으로 축소 반영됨.
-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의 경영실적평가에서 국민평가(고객만족도) 지표로 반영하고 있으나 주무부처에 따라 지표와 가중치를 달리 적용함.

<표 III-57>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통합조사 경영실적평가 반영안

$$\text{국민소통지수} = (0.8 \times \text{고객만족도 지수}) + (0.2 \times \text{국민인식도 지수})$$

\* 국민인식도 지수가 없는 경우 결측 처리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 2022. 8.

219)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4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통해 공개함

2) 2022년 고객만족도 조사제도 개선사항

- 2022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부터 기획재정부 통합조사에 ‘국민인식도 조사’를 도입함.
  - 정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기존 사회적가치 기여도 조사를 국민인식도 조사로 개편함.
  - 국민인식도 조사는 2011~2017년에 실시한 국민체감도 조사를 기본으로 2018~2021년에 실시한 사회적 가치 기여도 조사를 일부 보완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함.
  - 사회적가치 기여도 조사와 국민인식도 조사를 비교하면 <표 III-58>과 같음.

<표 III-58> 사회적가치 기여도 조사와 국민인식도 조사 비교

조사	사회적가치 기여도 조사 (2018~2021년)	국민인식도 조사 (2022년~)
대상	내부직원, 협력업체, 지역주민	일반국민, 지역주민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개선</li> <li>• 윤리·투명 경영</li> <li>• 일자리 창출</li> <li>• 근로환경 개선</li> <li>•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li> <li>• 환경보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기관운영의 설립목적 부합</u></li> <li>• 윤리경영</li> <li>• 환경보호</li> <li>• 상생협력</li> <li>• <u>경영개선 노력</u></li> </ul>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 2022. 8.

- 국민인식도 조사는 일반국민(전국의 권역별 인구 비례를 할당)을 대상으로 한 전화 조사 200표본, 지역주민(공공기관 본사 소재지 기초자치단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 100표본을 실시함.
- 합리적 수준의 고객만족도 조사비용 관리를 위하여 조사비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기본설계자가 비용 검증을 실시하도록 함.
  - 2015년, 2019년에 이어 2022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비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함.
  - 2022년부터는 공공기관-주간사업자 간 계약사무를 대행하고 있는 기본설계자가 조사비용 검증을 실시하도록 함.

## 3) 2022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2022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I-59>와 같음.
- 2022년 기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총 350개 중에서 2022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인 기관은 332개이나, 2023년 기준으로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총 347개 중 328개가 조사 대상기관에 해당됨.
    - 2023년 공공기관 지정 시 지정 해제된 4개 기관<sup>220)</sup>은 「202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 발표 당시에는 조사 대상기관에 포함되었기에 조사를 수검하였으나, 본 편람에서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 공기업 22개, 준정부기관 54개, 기타공공기관 252개가 조사 대상기관에 해당함.
    - 주 고객이 모회사로 고객 형성이 미흡하거나 고객의 특수성으로 조사가 곤란한 18개 기관은 「202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조사대상에서 제외됨.
    - 2023년 공공기관 지정 시 신규로 지정된 1개 기관<sup>221)</sup>은 2022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2022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기관 328개 중 24개 기관이 「202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 발표 이후 제외되어 실제 수검기관 수는 304개임.
    - 기획재정부 통합조사 대상기관 251개 중 3개 기관이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조사 기술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객 특성상 조사에 미적합한 2개 기관<sup>222)</sup>이 조사대상에서 제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불가에 따른 고객정보 미보유로 1개 기관<sup>223)</sup>이 주무부처 주관조사로 변경됨.
    - 주무부처 주관조사 대상기관 78개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비롯한 19개 과학기술계 연구개발목적기관과 기초과학연구원을 포함한 3개의 부처 직할 연구개발목적기관 등 총 22개 기관이 기본계획 발표 이후 조사대상에서 제외됨.
  - 2022년 고객만족도 조사 수검기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304개 중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고객만족도 통합조사를 수검한 기관은 248개 기관으로, 수검기관 전체의 81.6%를 차지함.
    - 공기업 21개, 준정부기관 54개, 그리고 기타공공기관 173개가 이에 해당함.

220)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221) 한국특허기술진흥원

222)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국제방송교류재단

223) 한전MCS(주)

- 주무부처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56개 기관은 모두 기타공공기관으로, 전체의 18.4%를 차지함.

<표 III-59> 202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기관 현황

(단위: 개)

구분	조사 미수검 기관 현황					조사 수검 기관 현황			
	합계	조사 제외	조사 유예	신규 지정	수시 지정	합계	기재부 통합조사	주무부처 조사	
공 기 업	시장형	13	6	6	0	0	7	7	0
	준시장형	19	5	5	0	0	14	14	0
	소 계	32	11	11	0	0	21	21	0
준 정 부 기 관	기금관리형	11	0	0	0	0	11	11	0
	위탁집행형	44	1	1	0	0	43	43	0
	소 계	55	1	1	0	0	54	54	0
기타공공기관	260	31	30	0	1	0	229	173	56
전 체	347	43 (100%)	42 (97.7%)	0 (0.0%)	1 (2.3%)	0 (0.0%)	304 (100%)	248 (81.6%)	56 (18.4%)

주: 1. 2023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347개)을 대상으로 2022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미수검 사유와 조사 주관기관 현황을 정리  
 2. 신규지정 및 수시지정은 2023년 중 발생한 건을 기준으로 작성  
 3. 한국개발연구원 부설기관 KDI국제정책대학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부설기관 육아정책연구소도 주무부처 조사를 수검하였으나 표에 미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4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기관별 공시자료(2023. 7. 14.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23년 지정 공공기관 기준으로 2022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수검기관을 조사 주관 기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III-60>과 같음.

- 2021년에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어 2021년에는 주무부처 주관조사를 수검한 8개 기관 중 7개 기관은 2022년 조사부터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조사로 편입됨.
  -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가 이에 해당함.
  - 다만, 한전MSC(주)는 2022년 조사부터 통합조사로 편입되었다가 기획재정부 기술평가위원회 의결 이후 다시 주무부처 주관조사로 변경됨.
- 2022년에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어 2022년부터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최초로 수검한 3개 기관은 모두 주무부처 주관조사를 수검함.
  -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이에 해당함.

〈표 III-60〉 202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수검기관(2023년 4월 기준)

구분	기관명
기획 재정부 주관 통합 조사 (248개)	<p><b>(공기업)</b> (주)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환경공단</p>
	<p><b>(준정부기관)</b>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p>
	<p><b>(기타공공기관)</b> (재)APEC기후센터,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축산환경관리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주)공영홈쇼핑,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게임물관리위원회,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부산과학관,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노사발전재단, 농림수산물유통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적십자사, 대한체육회, 독립기념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부산항만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새만금개발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시청자미디어재단, 식품안전정보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아동권리보장원, 여수광양항만공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재단법인 국악방송,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p>

〈표 III-60〉의 계속

구분	기관명
기획 재정부 주관 통합 조사 (248개)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략물자관리원, 전북대학교병원, 전쟁기념사업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주대학교병원, 주택관리공단(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진흥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태권도진흥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재단,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벤처투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향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한식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환경보건협회
주무 부처 주관 조사 (56개)	(기타공공기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88관광개발(주), 건축공간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전직교육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외동포재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부법무공단,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III-60〉의 계속

구분	기관명
주무 부처 주관 조사 (56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한전MCS(주), 항공안전기술원
조사 미수검 기관 (43개)	<p><b>(공기업)</b>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 한전KDN, 한전KPS(주)</p> <p><b>(준정부기관)</b> 한국원자력환경공단</p> <p><b>(기타공공기관)</b>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제방송교류재단, 기초과학연구원, 세종학당재단,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코레일테크(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투자공사,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p>

주: 1. 기관 유형은 2023년 1월 공공기관 지정 현황을 기준으로 함  
 2. 밑줄 처리된 기관은 2022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최초 수검 기관임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 2022. 8. 및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44.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기관별 공시자료(2023. 7. 14.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2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304개 공공기관의 절대등급은 다음의 <표 III-61>과 같음.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모든 기관의 결과를 우수(A)/양호(B)/보통(C)/미흡(D) 4단계로 구분하여 절대등급을 발표함.
- 2018년 조사까지 절대등급과 더불어 그룹별 상대등급을 발표하였으나, 2019년 조사부터 상대평가를 완화하고 절대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룹별 상대등급 부여는 폐지되었으며, 절대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사업별 목표치를 부여하고 달성 여부에 따라 목표달성도 등급을 나누는 제도를 도입함.

〈표 III-61〉 2022년도 고객만족도 절대등급별 해당 기관

구분	기관명
<p>우수 (63개)</p>	<p><b>(공기업)</b>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p> <p><b>(준정부기관)</b>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국가철도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신용보증기금,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환경공단</p> <p><b>(기타공공기관)</b>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부산과학관,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방기술품질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독립기념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새만금개발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전쟁기념사업회, 정부법무공단,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재단,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향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전MCS(주)</p>
<p>양호 (141개)</p>	<p><b>(공기업)</b>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해양환경공단</p> <p><b>(준정부기관)</b> (재)우체국금융개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p> <p><b>(기타공공기관)</b>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재)APEC기후센터,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88관광개발(주),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건축공간연구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립대구과학관, 국립암센터, 국립해양박물관, 국방과학연구소, 국토연구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한적십자사, 동북아역사재단, 부산항만공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산업연구원,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대학교병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시청차미디어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예술의전당,</p>

〈표 III-61〉의 계속

구분	기관명
양호 (141개)	<p>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울산항만공사, 재외동포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중소기업은행, 창업진흥원,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태권도진흥재단,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벤처투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한식진흥원, 항공안전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환경보전협회</p>
보통 (83개)	<p>(공기업)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p> <p>(준정부기관) 국토안전관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p> <p>(기타공공기관)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축산환경관리원,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주)공영홈쇼핑,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강원대학교병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게임물관리위원회,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방전직교육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노사발전재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체육회,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식품안전정보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국악방송,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전남대학교병원, 전략물자관리원, 전북대학교병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충남대학교병원,</p>

〈표 III-61〉의 계속

구분	기관명
보통 (83개)	충북대학교병원, 코레일로지스(주),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계기술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진흥공사
미흡 (17개)	<b>(공기업)</b> (주)강원랜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b>(기타공공기관)</b>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 대한장애인체육회, 아동권리보장원,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제주대학교병원, 주택관리공단(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주: 1. 고객만족도 조사 주관기관(기획재정부 또는 주무부처)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주관기관별 조사에서 측정된 고객만족도 절대등급을 기재  
 2. 2023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22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함 (2023년 신규 지정기관, 2022년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은 불포함)  
 3. 밑줄 처리된 기관은 고객만족도 조사 최초 수검기관(3개)임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4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자료(2023. 7. 14.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22년 조사결과를 절대등급에 따라 분석하면 ‘우수(A)’ 기관이 63개, ‘양호(B)’ 기관이 141개, ‘보통(C)’인 기관이 83개, ‘미흡(D)’ 기관은 17개임.
- 2022년 최초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3개 기관 중 2개 기관은 ‘양호(B)’, 1개 기관은 ‘보통(C)’인 것으로 나타나 최초 수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미흡’ 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양호(B)’ 및 ‘보통(C)’ 수준인 기관이 전체의 73.7%(224개)를 차지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수준이 전반적으로 양호함을 확인할 수 있음.
- 최하위 수준인 ‘미흡(D)’에 해당하는 기관은 전체 304개 기관 중 17개 기관으로 5.6%를 차지함.
  - 17개 ‘미흡(D)’ 기관 중 6개 기관이 공기업, 11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준정부기관 중에는 미흡 판정.

〈표 III-62〉 202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요약(절대등급)

(단위: 개)

구분	조사대상	고객만족도 절대등급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공기업	시장형	13	7	2	0	2	3
	준시장형	19	14	5	4	2	3
	소 계	32	21	7	4	4	6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11	11	3	8	0	0
	위탁집행형	44	43	13	22	8	0
	소 계	55	54	16	30	8	0
기타공공기관		260	229	40	107	71	11
합 계		347	304 (100%)	63 (20.7%)	141 (46.4%)	83 (27.3%)	17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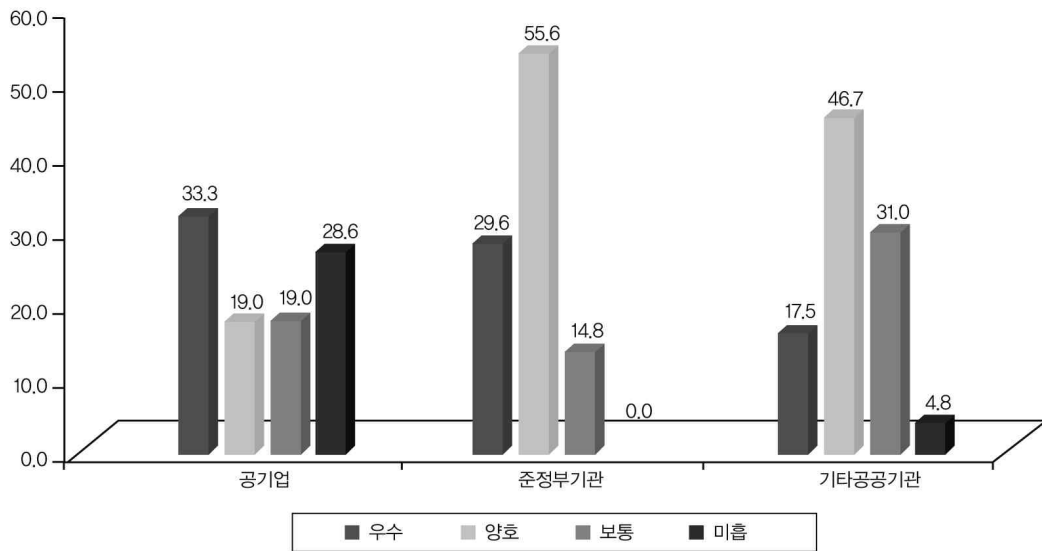
주: 2023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347개)을 대상으로 하며 기관 유형은 2023년을 기준으로 구분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4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자료(2023. 7. 14.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의 기관 유형별 절대등급 분포는 [그림 III-33]과 같음.
- 공기업은 모든 유형의 기관 중 고객만족도 '우수(A)' 등급인 기관의 비율이 가장 높아 고객만족도 수준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음.
  - 2022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받은 21개 공기업 중 '우수(A)' 등급인 기관이 7개(33.3%), '양호(B)' 등급인 기관이 4개(19.0%)로 '양호(B)' 이상인 기관이 전체의 52.4%를 차지함.
  - 다만, '미흡(D)' 등급을 받은 기관의 비율 역시 가장 높아(6개, 28.6%) 다소 편차를 보임.
- 준정부기관은 모든 유형의 기관 중 고객만족도 '양호(B)' 등급인 기관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미흡(D)'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2022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받은 54개 준정부기관 중 '우수(A)' 등급인 기관은 16개(29.6%), '양호(B)' 등급인 기관은 30개(55.6%)로, '양호(B)' 이상인 기관이 전체의 85.2%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고객만족도 등급이 '보통(C)'인 기관은 8개 기관(14.8%)이고, 최하위 수준인 '미흡(D)' 등급인 기관은 없어 준정부기관의 고객만족도 수준은 보통 수준 이상임을 알 수 있음.

- 기타공공기관은 모든 유형의 기관 중 고객만족도 ‘보통(C)’ 등급인 기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22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받은 기타공공기관 229개 중 ‘보통(C)’ 등급인 기관은 71개(31.0%)로 공기업 19.0%, 준정부기관 14.8%의 기관이 ‘보통(C)’ 등급을 받은 것에 비해 다소 높음.
- 2022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대부분의 기관(224개, 73.7%)이 ‘양호(B)’와 ‘보통(C)’ 등급에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상위 등급인 ‘우수(A)’에 분포한 기관은 63개로 20.7%를, 최하위 등급인 ‘미흡(D)’에 분포한 기관은 17개로 5.6%를 차지함.

[그림 Ⅲ-33] 202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절대등급 분포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4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자료(2023. 7. 14.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21년도 고객만족도 수준과 2022년도 수준을 비교해 보면, 전년도 등급을 유지한 기관이 66.3%(199개)를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고객만족도 수준의 변화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표 Ⅲ-63>).
- 전년도와 동일한 등급을 유지한 기관 중 공기업은 12개, 준정부기관은 37개, 기타 공공기관은 150개임.
- 고객만족도 수준이 2021년도에 비해 개선된 기관은 65개로 분석대상기관(300개)의 21.7%를 차지함.

- 공기업 4개, 준정부기관 12개 및 기타공공기관 49개 기관이 전년도보다 고객만족도 등급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고객만족도 등급이 개선된 65개 기관 중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보통(C)에서 우수(A)로 2단계 상승함.
- 이 외 63개 기관은 고객만족도 등급이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함.
- 2021년도에 비해 고객만족도 수준이 악화된 기관은 36개로, 전체의 12.0%를 차지함.
  - 공기업 5개, 준정부기관 5개 및 기타공공기관 26개 기관이 이에 해당함.
  - 이 중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은 양호(B)에서 미흡(D)으로 2단계 하락하였으며, 나머지 35개 기관은 1단계 하락함.
- 2021년도 대비 2022년도 고객만족도 절대등급 변동 현황 및 내역은 <표 III-63>, <표 III-64>, <표 III-65>와 같음.

<표 III-63> 전년 대비 2022년도 고객만족도 절대등급 변동 비교

(단위: 개)

구분	2022년도 조사대상기관	2021년도 대비 등급 개선수준					
		분석 대상기관	상승 (▲)	유지 (-)	하락 (▼)		
공 기 업	시장형	13	7	7	1	2	4
	준시장형	19	14	14	3	10	1
	소 계	32	21	21	4	12	5
준 정 부 기 관	기금관리형	11	11	11	1	7	3
	위탁집행형	44	43	43	11	30	2
	소 계	55	54	54	12	37	5
기타공공기관		260	229	225	49	150	26
전 체		347	304	300 (100%)	65 (21.7%)	199 (66.3%)	36 (12.0%)

주: 1. 기관 유형은 2023년 유형을 기준으로 구분함

2. 조사대상기관(304개)은 2023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 또는 주무부처가 실시한 2022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기관임. 분석대상기관(300개)은 2023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21년 및 2022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모두 수검한 기관임(2022-2023년 신규지정기관 및 지정해제기관, 2022년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기관 등은 불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4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자료(2023. 7. 14.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표 III-64〉 전년 대비 2022년도 고객만족도 절대등급 변동 현황

(단위: 개)

구분	기관 수 (300개)	변동폭		
		1단계	2단계	3단계
등급 상승	65 (21.7%)	63	2	0
등급 유지	199 (66.3%)	-	-	-
등급 하락	36 (12.0%)	35	1	0

주: 2023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21년 및 2022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모두 수검한 기관을 기준으로 분석  
(2022~2023년 신규 지정기관 및 지정 해제기관, 2022년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기관 등은 불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4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자료(2023. 7. 14.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표 III-65〉 2022년도 고객만족도 절대등급 변동 해당 기관(전년 대비)

구분	기관명
등급 상승 (65개)	(공기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가스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준정부기관)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기타공공기관) (재)APEC기후센터, (주)공영홈쇼핑, 88관광개발(주),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방전직교육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대한체육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새만금개발공사, 서울대학교병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전략물관리원, 코레일네트웍스(주),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식진흥원, 항공안전기술원
	등급 유지 (199개)

〈표 III-65〉의 계속

구분	기관명
<p>등급 유지 (199개)</p>	<p>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p> <p>(기타공공기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재)축산환경관리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강원대학교병원, 건축공간연구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부산과학관, 국립암센터,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제식품검역인증원, 국토연구원, 노사발전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적십자사, 독립기념관, 동북아역사재단, 민중화운동기념사업회,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산업연구원, 서민금융진흥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시청자미디어재단, 식품안전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여수광양항만공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울산항만공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천항만공사, 재단법인 국악방송,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외동포재단, 전북대학교병원, 전쟁기념사업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부법무공단, 제주대학교병원, 주택관리공단(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진흥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통일연구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재단,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벤처투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계기술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잡월드,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p>

〈표 III-65〉의 계속

구분	기관명
등급 유지 (199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향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한전MCS(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급 하락 (36)	<p>(공기업)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p> <p>(준정부기관) 국민연금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p> <p>(기타공공기관)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대구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부산항만공사,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전남대학교병원,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환경보건협회</p>

주: 2023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21년 및 2022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모두 수검한 기관을 기준으로 분석 (2022~2023년 신규 지정기관 및 지정 해제기관, 2022년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기관 등은 불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4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자료(2023. 7. 14.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기획재정부 주관 고객만족도 통합조사는 절대등급과 더불어 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우수-보통-미흡 3단계로 구분한 목표달성도 등급도 발표함.
- 2019년 조사부터 실시된 목표달성도 등급 산출은 기관의 사업별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본 결과는 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됨.
  - 각 기관의 사업별 3년 평균 실적을 기초로 목표점수를 부여하고 사업별 목표점수 달성 여부에 따라 기관의 목표달성도를 평가한 뒤,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보통-미흡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함.
  - 2020년 조사에서는 코로나19로 현장조사가 불가능한 사업이 기관 전체 사업의 70% 이상인 경우 목표달성도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나, 2021년 조사부터는 목표점수 산출이 가능한 모든 기관의 목표달성도를 평가함.
  - 또한 2021년, 2022년 조사에서는 기관별 목표달성도 점수 산출의 기준이 되는 사업별 달성 여부에 따른 배점 차이를 확대하여 변별력을 강화함.
    - 2020년에는 기존 사업별 목표치 달성 시 1.0점을, 미달성 시 0.8점을 부여하던 기준을 2021년부터는 목표치 미달성 시 0.5점 부여로 하향 조정함.

- 2022년 조사결과 기획재정부 주관 고객만족도 통합조사 대상기관인 248개 기관 중 241개 기관의 평가 결과가 발표되었으며,<sup>224)</sup> 7개 기관<sup>225)</sup>은 통합조사 최초 수검 기관으로 목표달성도 평가에서는 제외함.
- ‘우수’ 등급은 기관의 모든 평가대상 사업의 고객만족도가 과거보다 개선·유지된 경우로(목표달성도 100%), 총 50개 기관이 ‘우수’ 등급인 것으로 나타남.
  - 공기업 4개, 준정부기관 16개, 기타공공기관 30개가 이에 해당함.
  - 특히 6개 기관<sup>226)</sup>은 3년 연속 우수기관, 22개 기관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속적으로 고객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통’ 등급은 ‘우수’ 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나 전체 사업의 50% 이상 목표를 달성한 경우로, 총 111개 기관이 ‘보통’ 등급인 것으로 나타남.
  - 공기업 7개, 준정부기관 27개, 기타공공기관 77개가 해당함.
- ‘미흡’은 목표달성도가 50% 미만인 경우로, 총 80개 기관이 ‘미흡’ 등급인 것으로 나타남.
  - 공기업 10개, 준정부기관 11개, 기타공공기관 59개가 해당함.
  -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대국민 서비스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임.

〈표 III-66〉 202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목표달성도 등급별 해당 기관

구분	기관명
【우수】 (50개)	<p>(공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부동산원</p> <p>(준정부기관)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국가철도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p> <p>(기타공공기관) (재)APEC기후센터,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부산과학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독립기념관, 새만금개발공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여수광양항만공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전쟁기념사업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코레일로지스(주), 한국기술교육대학교,</p>

224) 2023년 1월에 지정 해제된 4개 기관(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도 2022년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조사 평가 결과 발표 대상기관에는 포함

225)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부

22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독립기념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벤처투자

〈표 III-66〉의 계속

구분	기관명
<p><b>【우수】</b> (50개)</p>	<p>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벤처투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p>
<p><b>【보통】</b> (111개)</p>	<p><b>(공기업)</b>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해양환경공단</p> <p><b>(준정부기관)</b> (재)우체국금융개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국민연금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p> <p><b>(기타공공기관)</b>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게임물관리위원회, 경북대학교병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암센터,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적십자사, 대한체육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대학교병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아동권리보장원,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전북대학교병원, 중소기업은행, 창업진흥원, 충남대학교병원,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재단,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여성인력진흥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잡월드,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한의학진흥원, 한국향로표지기술원, 한식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환경보전협회</p>
<p><b>【미흡】</b> (80개)</p>	<p><b>(공기업)</b> (주)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p> <p><b>(준정부기관)</b>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p> <p><b>(기타공공기관)</b>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축산환경관리원, (주)공영홈쇼핑, 건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해양박물관</p>

〈표 III-66〉의 계속

구분	기관명
【미흡】 (80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노사발전재단,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항만공사,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식품안전정보원, 재단법인 국악방송,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략물자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주대학교병원, 주택관리공단(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충북대학교병원,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2023. 4. 12.와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4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자료(2023. 7. 14.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표 III-67〉 202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요약(목표달성도)

(단위: 개)

구분	조사대상	고객만족도 목표달성도				
		우수	보통	미흡		
공 기 업	시장형	13	7	2	0	5
	준시장형	19	14	2	7	5
	소 계	32	21	4	7	10
준 정 부 기 관	기금관리형	11	11	4	5	2
	위탁집행형	44	43	12	22	9
	소 계	55	54	16	27	11
기타공공기관		260	166	30	77	59
합 계		347	241 (100.0%)	50 (20.7%)	111 (46.1%)	80 (33.2%)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2023. 4. 12.와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4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자료(2023. 7. 14.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21년도 고객만족도 목표달성도와 2022년도 목표달성도를 비교해 보면, 전년도 등급을 유지한 기관이 47.9%(113개)를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고객만족도 수준의 변화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표 III-68>).

○ 전년도와 동일한 등급을 유지한 기관 중 공기업은 12개, 준정부기관은 22개, 기타 공공기관은 79개임.

- 고객만족도 목표달성도가 2021년도에 비해 개선된 기관은 77개로 분석대상기관(236개)의 32.6%를 차지함.
  - 이는 2020년 조사 대비 2021년도 목표달성도가 개선된 기관의 비율인 16.8%보다 두 배 증가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목표달성도가 개선되었음을 나타냄.
  - 공기업 6개, 준정부기관 25개 및 기타공공기관 46개 기관이 전년도보다 고객만족도 목표달성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목표달성도가 개선된 77개 기관 중 9개 기관<sup>227)</sup>은 2단계 상승하였으며, 68개 기관은 1단계 상승함.
- 2021년도에 비해 고객만족도 목표달성도가 악화된 기관은 46개로, 전체의 19.5%를 차지함.
  - 공기업 3개, 준정부기관 7개 및 기타공공기관 36개 기관이 이에 해당함.
  - 이 중 4개 기관<sup>228)</sup>이 2021년 ‘우수’에서 2022년 ‘미흡’으로 2단계 하락하였으며, 나머지 42개 기관은 1단계 하락함.
- 2021년도 대비 2022년도 고객만족도 목표달성도 등급 변동 현황은 <표 III-69>와 같음.

<표 III-68> 전년 대비 2022년도 고객만족도 목표달성도 비교

(단위: 개)

구분	2022년도 조사대상기관	2021년도 대비 목표달성도 개선수준					
		분석 대상기관	상승 (▲)	유지 (-)	하락 (▼)		
공 기 업	시장형	13	7	2	4	1	
	준시장형	19	14	4	8	2	
	소 계	32	21	6	12	3	
준 정 부 기 관	기금관리형	11	11	5	4	2	
	위탁집행형	44	43	20	18	5	
	소 계	55	54	25	22	7	
기타공공기관		260	166	46	79	36	
전 체		347	241	236 (100%)	77 (32.6%)	113 (47.9%)	46 (19.5%)

주: 1. 기관 유형은 2023년 유형을 기준으로 구분

2. 조사대상기관(241개)은 2023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 또는 주무부처가 실시한 2022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기관임

3. 분석대상기관(236개)은 2023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21년 및 2022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모두 수검한 기관 중 목표달성도 평가를 받은 기관임(2022~2023년 신규지정기관 및 지정해제기관, 2022년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기관, 2021~2022년 조사를 수검하였으나 목표달성도 평가에서는 제외된 기관 등은 불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2023. 4. 12.와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4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자료(2023. 7. 14.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227) (재)APEC기후센터,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국립생태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도박문제예방법치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해양조사협회

228) 국립해양박물관, 부산항만공사,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표 III-69〉 전년 대비 2022년도 고객만족도 목표달성도 등급 변동 해당 기관

구분	기관명
<p>등급 상승 (77개)</p>	<p><b>(공기업)</b>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p> <p><b>(준정부기관)</b>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p> <p><b>(기타공공기관)</b> (재)APEC기후센터,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경북대학교병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암센터,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새만금개발공사, 서울대학교병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전북대학교병원, 중소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충남대학교병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p>
<p>등급 유지 (113개)</p>	<p><b>(공기업)</b>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마사회, 한국부동산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환경공단</p> <p><b>(준정부기관)</b> 국가철도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p> <p><b>(기타공공기관)</b>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주)공영홈쇼핑,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강원대학교병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부산과학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대한적십자사, 독립기념관, 서민금융진흥원, 수자원환경산업진흥원(주), 식품안전정보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여수광양항만공사,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재단법인 국악방송,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전략물자관리원, 전쟁기념사업회, 제주대학교병원, 주택관리공단(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창업진흥원, 코레일관광개발(주)</p>

〈표 III-69〉의 계속

구분	기관명
등급 유지 (113개)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문화번역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재단,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벤처투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잡월드,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진흥공사, 한식진흥원, 환경보건협회
등급 하락 (46개)	(공기업) (주)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준정부기관)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환경공단 (기타공공기관)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해양박물관, 국제식품검역인증원, 노사발전재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산항만공사,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전남대학교병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충북대학교병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주: 2023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21년 및 2022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모두 수집한 기관을 기준으로 분석 (2022~2023년 신규 지정기관 및 지정 해제기관, 2022년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기관 등은 불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3. 4. 12.와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4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자료(2023. 7. 14.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22년 각 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절대등급과 목표달성도를 기준으로 비교 하면 절대등급은 우수하나 목표달성도는 미흡한 기관은 대한석탄공사 1개인 것으로 나타남.

- 절대등급은 우수이나 목표달성도가 미흡한 것은 조사의 절대점수는 높으나 해당 기관의 3개년 평균 실적을 기준으로 한 목표점수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의미임.

○ 절대등급이 미흡한 기관 중 목표달성도가 우수한 기관은 없으며 절대등급은 미흡이나 목표달성도는 보통 수준인 기관은 4개 기관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 아동 권리보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이에 해당함.

〈표 III-70〉 2022년도 절대등급과 목표달성도 비교

(단위: 개)

절대등급	기관 수 (241개)	목표달성도		
		우수	보통	미흡
우수(A)	45 (18.7%)	29	15	1
양호(B)	105 (43.6%)	16	66	23
보통(C)	76 (31.5%)	5	26	45
미흡(D)	15 (6.2%)	0	4	11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2023. 4. 12.와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4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자료(2023. 7. 14.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sup>229)</sup>

### 1)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개요

-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공공의료기관 및 국공립대학 등을 대상으로 매년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의 위법」) 제12조(기능),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및 제27조의3(조사·평가 결과의 공개)에 근거하여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동 근거에 따라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 기능, 자료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권한을 가짐.
  
-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양해진 부패유형과 새로운 법·제도를 반영·평가하고 국민 눈높이에 따라 청렴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21년까지 20년간 운영해 온 이원적 평가체계(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개편하여 2022년도 평가에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를 적용함.
  -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는 청렴체감도(외·내부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일반국민, 내부 직원의 부패인식과 경험을 설문조사로 측정)와 청렴노력도(각급 기관의 1년간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노력과 운영실적, 시책 추진 효과성을 정량·정성평가 및 설문조사하여 측정), 그리고 부패실태(평가기간 동안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반영)로 구성됨.
  - 종합청렴도 점수는 기존 방식을 개편하여 청렴체감도를 60%, 청렴노력도를 40%로 반영하고, 부패실태는 감점(최대 10%)으로 반영하며, 공공의료기관과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도 유사한 모델을 적용하되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부 항목을 재구성하였음.

229)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 2022. 5., 「2022년도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3. 1., 「2022년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3. 1. 및 기획재정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3. 1. 30. 참고

[그림 III-34] 20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도

종합청렴도 (100점 만점)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감점)
<b>&lt; 내용 &gt;</b> 외부업무, 내부 조직운영 과정에서 체감한 부패 인식·경험 *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고,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평가 모형·항목 재구성 * 부패경험 항목 반영방식 변경(감점화)	반부패 계획·인프라 등 추진체계와 추진실적 평가	부패방지 시책 효과성 평가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 현황 * 주요 부패사건 평가 강화 및 감점 확대
<b>&lt; 방식 &gt;</b> 민원인·내부직원 설문	내·외부 전문가 정량·정성평가	내부직원 설문	정량평가 + 주요 사건 등 정성평가
<b>&lt; 대상 &gt;</b> 매년 평가(중앙·지방 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공기업·준정부기관, 대규모·주요 국공립대학·공공의료기관 등) 기관 + 기본계획 상 선정기준에 따라 추가로 선정된 기관 등 573개 기관(잠정) ※ 교육지원청(176개) 전수 평가(시·도교육청 결과에 반영), 기초지자체 및 소규모 준정부기관 등은 단계별 평가지표를 적용해 평가			
※ 청렴 체감도·노력도 및 부패실태 평가 결과의 신뢰성·공정성 저해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 기존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21.) >**  
 ※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별도로 실시(이원적 평가 체계)

청렴도 (10점 만점)			부패방지 시책평가 (100점 만점)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부패사건 감점	
<b>&lt; 내용 &gt;</b> • 외부업무 과정에서의 부패인식과 부패경험	• 조직문화 및 부패통제 인식 • 내부업무 과정에서의 부패경험	•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 현황	반부패 계획·인프라 등 추진체계와 실적 평가 * '21년 기준 4개 영역 19개 지표  내·외부 전문가 정량·정성평가
<b>&lt; 방식 &gt;</b> 민원인 설문	내부직원 설문	정량평가 위주	
<b>&lt; 대상 &gt;</b> 매년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모두 받는 기관 : 250~270여 개 ※ 청렴도 측정 신뢰도 저해행위 시 감점 등 제재조치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2021. 12.

-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 기관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행정·공직유관(중앙, 지방, 교육청, 공직유관), 공공의료기관 등 크게 3가지 그룹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함.<sup>230)</sup>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가 포함되며, 「공운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대부분은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함.
  -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의 경우 법인격을 갖춘 공공의료기관이 대상이 되며, 「공운법」상 공공기관 중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국공립대학병원, 치과병원, 국립암센터, 원자력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 등이 그 대상이 됨.
    - 2022년도 모형에서는 국립대학병원(10개), 치과병원(4개), 국립암센터, 원자력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 등 총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단일유형의 청렴도 평가를 시행함.
  -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의 경우, 4년제 국공립대학 33개(법인대학 6개, 중앙부처 관할 국립대 26개, 공립대 1개) 등이 그 대상이 됨.
    - 2021년까지 「공운법」상 공공기관 중 교육기능을 수행하였던 4개 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은 2023년 1월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됨에 따라 청렴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20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 기관은 총 573개 기관으로, 이 중 169개 기관이 「공운법」상 공공기관에 해당됨.

〈표 III-71〉 20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유형별 대상기관 분포

종합청렴도 평가 유형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 기관	「공운법」상 공공기관 (2023년도 기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중앙행정기관	46	-
	지방자치단체	243	-
	교육청	17	-
	공직유관단체	199	152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		33	-

230)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 2022. 5., 「2022년도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3. 1., 「2022년도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3. 1., 「2022년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3. 1. 및 기획재정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3. 1. 30. 참고

〈표 III-71〉의 계속

종합청렴도 평가 유형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 기관	「공운법」상 공공기관 (2023년도 기준)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17	17
시도경찰청(시범) 종합청렴도 평가	18	-
합계	573	169

주: 1. 2021년 과소표본으로 종합청렴도가 산정되지 못한 5개 기관((재)우체국시설관리단,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 네트워크(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테크(주))은 평가에서 제외  
 2. 공직유관단체 평가대상 199개 기관 중 3개 기관(경기교통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제정정보원)은 설문 유효 표본 부족, 대구시설공단은 기관 통폐합을 이유로 등급을 미발표하여 등급이 발표된 기관은 총 195개 기관임  
 3. 연구원 유형은 격년 평가 원칙에 따라 2022년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4. 교육지원청(176개) 전수 평가하였으며 교육지원청 평가 결과는 시도 교육청 결과에 포함  
 5. 국립대학병원 중 기존 시책평가 미측정 4개 치과병원(경북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도 노력도 평가대상에 신규 포함됨  
 6. 시도경찰청은 시범평가 유형으로 다른 유형의 점수·등급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2022. 3.,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 2022. 5., 「2022년도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3. 1. 및 기획재정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3. 1. 30. 참고

2) 2022년도 평가 기본 방향 및 측정 모형<sup>231)</sup>

- 2022년도 평가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개편방안의 내용을 반영해 이원적 평가 체계를 통합한 종합평가 체계로 개편하고, 평가대상, 평가내용과 방식을 정비해 각급 기관의 종합청렴도를 평가함.
-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의 실적과 성과를 기관별 종합청렴도에 직접 반영하여 종합 평가를 실시함.
  -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위주의 청렴도 측정에서 나아가 기관별 개선노력 실적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객관적인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인 부패실태 평가를 강화함.
- 청렴도 측정은 2002년 최초 시행 이후 세 차례(2008년, 2012년, 2021년)의 개편을 통해 현재의 종합 청렴도 모형에 이르렀으며, 2021년도에는 기존 청렴도와 부패 방지 시책평가로 별도 운영되던 이원적 평가체제에서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로 통합하여 청렴도 향상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함.

231)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2022. 3.,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 2022. 5., 「2022년도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3. 1., 「2022년도 공공 의료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3. 1. 및 기획재정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3. 1. 30. 참고

- 평가내용의 경우 확장된 부패개념과 정비된 반부패 관련 법·제도 현황 등을 반영해 청렴체감도·노력도의 항목과 지표를 정비하고, 부패 실태 감점 반영 대상 사건범위 등을 검토하였음.
    - 기존에 매년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받지 않았던 기초자치단체나 신규·소규모 기관은 청렴노력도 지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공공의료기관은 체감도·노력도에 특화 항목과 지표를 적용하였음.
  - 평가 대상의 경우 중앙·지방·교육·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중 공기업, 준정부 기관은 전수 종합평가하고, 2021년 청렴도·시책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지방 공사·공단, 국공립대학 등을 추가로 종합평가함.<sup>232)</sup>
    -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등급 산정을 위한 기관 유형을 기관 규모(정원) 위주가 아닌 기관 성격, 매년 평가 여부 등을 반영해 재분류함.
- 종합청렴도 점수는 청렴체감도와 노력도를 각 100점으로 하고, 각 부문별 가중치 (6:4)에 따라 가중 합산하여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하고 부패실태에 대해서는 감점함. 기관유형별로 1~5등급으로 구분함.
- 청렴체감도란 공공기관의 업무를 경험한 민원인, 내부직원이 부패 인식과 경험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통해 외·내부 업무과정에서의 청렴 수준을 평가하는 것임.
  - 청렴노력도란 각급 기관의 1년간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노력과 운영 실적과 함께 시책 추진의 실제 효과성까지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함.
    - 반부패 계획, 인프라 등 추진체계와 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내·외부 전문가의 정량·정성평가를 주축으로 함.
  - 부패실태란 평가기간 동안의 객관적인 부패 사건 발생 현황에 대한 것으로 평가 결과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년에 비해 항목의 비중이 확대되고 반영 대상 또한 확대되었음.
  - 부패실태 평가 등 평가과정에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확인·소명 등의 소통을 강화하였음.

232) 2022년 지방선거 실시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의회는 2022년 평가 제외

〈표 III-72〉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

청렴체감도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부업무 및 조직내부 운영 전반에 대해 민원인·내부직원 대상 인식·경험 측정(설문조사)</li> <li>외부 8개, 내부 9개 항목 설문</li> </ul>
청렴노력도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년간 반부패 추진실적 및 노력을 미리 설정된 지표에 따라 평가(실적평가)</li> <li>'추진체계-실적' 2개 영역, 구성원에 대한 시책효과성 평가 포함 총 14개 지표, 기관유형별 맞춤형 평가체계 적용</li> </ul>
부패실태 감점 (10%+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패행위 징계, 감사·기소·재판 결과 등 기관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li> <li>감점 비중 및 대상사건 범위 확대(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포함, 성비위 고위직 → 전직원 확대 등)로 기관 부패실태 평가 강화</li> </ul>

주: 1. 신뢰도 저해행위 및 협조 의무 미이행 시 총점에 감점으로 반영

2. 청렴체감도(설문) + 청렴노력도(실적) - 부패실태 평가(발생 현황)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도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3. 1.

□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기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개편한 종합청렴도 평가모형을 최초로 적용함.

- 청렴체감도의 경우 민원인과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외부업무 및 조직내부 운영 전반에 대한 부패인식과 경험을 측정함.
- 청렴노력도의 경우 각급 기관의 1년간 반부패 추진실적 및 노력을 미리 설정된 지표에 따라 평가함.
- 부패실태 감점의 경우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 감사·기소·재판 결과, 리베이트 적발 내역 등 기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고 진료비 과다청구 내역을 점수화하여 반영하였음.

□ 개편된 종합청렴도 기본 평가체계를 따르되, 공공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해 청렴체감도·노력도·감점을 재구성함.

- 청렴체감도 측정업무, 측정항목, 조사대상 등을 전면 재구성함.
  - 그간 청렴도 측정을 받지 않았던 구매·공사·용역 등 일반 계약 등의 측정업무를 외부체감도 측정 대상 업무로 신규 추가함.
  - 설문조사 대상을 외부 업무상대방(계약상대방, 환자보호자)과 내부직원으로 구분하고 이·퇴직자, 관리·감독기관을 제외함.
  - 의료분야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리베이트 항목 등은 유지하되, 사익추구·소극행정 등 측정항목에 대한 신규항목을 반영함.

- 그간 부패경험을 측정하지 않았던 환자진료 업무 및 조직내부 운영을 포함하여 모든 업무에 대하여 부패경험을 측정함.
- 청렴노력도 평가대상 확대 및 특화지표 적용
  - 기존 시책평가 미측정 기관(4개 치과병원)도 노력도 평가대상에 신규 포함됨에 따라, 올해는 간소화된 지표를 적용(총 8개 지표)
- 부패실태 평가 강화
  - 감점 비중 및 대상사건 범위 확대(「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포함, 성비위 고위직 → 전 직원 확대 등)

〈표 III-73〉 2022년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

<b>청렴체감도 (60%)</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업무 및 조직내부 운영 전반에 대해 민원인·내부직원 대상 부패인식·경험 측정(설문조사)</li> </ul>
<b>청렴노력도 (40%)</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급기관의 1년간 반부패 추진실적 및 노력을 미리 설정된 지표에 따라 평가(실적평가)</li> </ul>
<b>부패실태 감점 (10%+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패행위 징계, 감사·기소·재판 결과, 리베이트 적발내역 등 기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점으로 반영</li> <li>• 진료비 과다청구 내역을 점수화하여 반영</li> </ul>

주: 신뢰도 저해행위 및 협조 의무 미이행 시 총점에 감점으로 반영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3. 1.

-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은 점차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되어 왔음.
  - 과거의 청렴도 사업주기를 고려하여 4년제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측정하되 전문대학 및 교육대학은 부정기적으로 청렴도를 측정함.
    - 2018년도의 경우 교육대학을 측정 대상에 포함하였으나, 2019년도와 2020년도에는 4년제 국공립대학에 대해서만 청렴도 측정을 실시함.
    - 2021년도 청렴도 측정은 시책평가 대상인 12개 국립대학과 국회 등에서 취약기관으로 지적된 4개 과학기술원 등 16개 기관으로 한정하여 측정을 실시함.
    - 20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2021년까지 「공운법」상 공공기관 중 교육기능을 수행하였던 4개 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이 2023년 1월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됨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평가 대상기관은 4년제 국공립대학 33개(법인대학 6개, 중앙부처 관할 국립대 26개, 공립대 1개)로 오히려 증가함.

-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도 기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개편한 종합 청렴도 평가 체계를 적용하였음.
  -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60%, 설문조사 결과), 청렴노력도(40%, 정량 및 정성평가)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실태 감점(10%+α)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함.
  - 청렴체감도 항목은 재구성하여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항목과 동일하게 구성하되, 부패 취약분야인 연구과정에서의 법령·규정 위반 관련 항목을 추가 측정하였으며, 조직내부 운영과정의 청렴의무 위반 부패경험률·빈도와 함께 국공립대학 취약분야인 연구비 관련 횡령·편취 경험률·빈도 측정함.
  - 청렴노력도 평가대상은 확대 및 특화지표를 적용하여 기존 시책평가 미측정 기관(17개 대학)도 노력도 평가대상에 신규 포함시키는 대신 간소화된 지표(총 8개 지표)를 적용함.
  - 부패실태 평가를 강화하여 기사·감사자료에 '연구 부정행위'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학술진흥법」에 의한 제재 처분을 받은 사건을 부패실태 감점에 포함하여 반영함.

〈표 III-74〉 2022년도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

<b>청렴체감도 (60%)</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항목과 동일하게 구성하되, 연구윤리 준수 정도, 연구비 위법·부당 집행 등 부패 취약분야인 연구과정에서의 법령·규정 위반 관련 항목을 추가 측정</li> <li>• 조직내부 운영과정의 청렴의무 위반 부패경험률·빈도와 함께 국공립대학 취약분야인 연구비 관련 횡령·편취 경험률·빈도 측정</li> </ul>
<b>청렴노력도 (40%)</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시책평가 미측정 기관(17개 대학)도 노력도 평가대상에 신규 포함됨에 따라, 올해는 간소화된 지표를 적용</li> <li>•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기관장·고위직 노력과 리더십,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기반 구축,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반부패·청렴 교육 실효성 제고,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가점, 반부패 시책에 대한 내부 구성원 인식 설문 결과(총 8개 지표)</li> </ul>
<b>부패실태 감점 (10%+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모형 부패실태 감점대상 자료 및 부패사건 기사·감사자료에 '연구 부정행위'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학술진흥법」에 의한 제재처분을 받은 사건을 부패실태 감점에 포함하여 반영</li> </ul>

주: 국공립대학은 특화지표만 적용되어 총점(최대 59점)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청렴노력도 비중(40%)에 따라 반영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도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3. 1.

3) 20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sup>233)</sup>

- 2023년도에 지정된 공공기관(347개) 중 2022년도 청렴도 측정을 수검한 기관은 총 169개 기관으로, 전체 대비 49% 정도가 청렴도 평가의 대상이 됨.<sup>234)</sup>
- 32개 공기업, 55개 준정부기관 및 82개 기타공공기관이 청렴도 평가의 대상이 됨.
  - 169개 기관 중 152개 기관이 공직유관단체에 분류되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수검함.
  -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평가의 대상이 되는 17개 기관은 모두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함.

〈표 III-75〉 20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 공공기관 분포

(단위: 개)

구분		「공운법」상 공공기관 (2023년도 기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 기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공직유관단체)	공기업	32	32
	준정부기관	55	55
	기타공공기관	260	65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타공공기관		17
합계		347	169

주: 1.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등 4개 과학기술원은 2023년 1월 공공기관지정에서 제외됨  
 2. 평가대상 169개 기관 중 2개 기관(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재정정보원)은 설문 유효표본 부족을 이유로 등급을 미발표하여 총 167개 기관의 등급이 발표됨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도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3. 1., 「2022년도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3. 1., 「2022년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3. 1. 및 기획재정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3. 1. 30. 참고

- 2022년도 청렴도 평가 대상 기관 수는 2021년도 162개 기관에서, 2022년도 169개 기관으로 전년 대비 7개 증가함.
- 기관규모(정원) 위주가 아닌 기관 성격, 매년 평가 여부 등을 반영하여 재분류함.
  - 2021년도 평가 시에는 준정부기관 중 정원 300명 미만 기관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했으나, 2022년도 평가에서는 제도개편으로 공공기관 유형 기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전수 종합평가대상으로 포함됨.<sup>235)</sup>

233)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 2022. 5., 「2022년도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3. 1., 「2022년도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3. 1., 「2022년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3. 1. 및 기획재정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3. 1. 30. 참고

234) 공공기관의 유형 분류는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3. 1. 30.에 따름

235) 2022년 공기업 36개, 4개(공기업 → 기타) 유형 변경, 2023년 기준 32개 공기업, 2022년 준정부 94개, 39개(준정부 → 기타) 유형 변경, 2023년 기준 55개 준정부기관

- 준정부기관의 경우 「공운법」상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정원 300명 기준을 적용하여 준정부일반 유형(300명 이상/공직유관단체2)과 준정부중소형 유형(300명 미만/공직유관단체3)으로 유형을 구분함.
- 「공운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 중 공기업(I 유형)과 준정부기관(Ⅱ, Ⅲ유형)은 전수평가를 원칙으로 함.
- 「공운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 중 중점평가기관(Ⅳ유형)은 반부패 정책 추진방향, 현안이슈 및 기관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원 500개 이상 기관과 2021년도 청렴도·시책평가 미흡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였음.
- 주식회사 에스알과 한국재정정보원의 경우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이나 설문 유효표본 부족으로 2022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제외됨.
- 공직유관단체 연구원 유형은 2020년부터 격년 평가로 변경됨에 따라 2021년에는 전수조사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6개 기관<sup>236)</sup>을 제외한 19개 기관이 조사를 수검하였으므로 2022년도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등 4개 과학기술원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하 분석에서는 제외함.
- 국립대학병원 중 기존 시책평가 미측정 4개 치과병원(경북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도 노력도 평가대상에 신규로 포함됨.

〈표 III-76〉 2021년 측정대상 공공기관 중 2022년 변동사항이 있는 기관

(단위: 개)

구분	해당 기관 수	내 용
조사미실시	2	주식회사 에스알
조사격년실시	19	공직유관단체 연구원 유형
2023년 지정해제	4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주: 1. 한국재정정보원의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설문 유효표본 부족으로 등급 미발표

2. 2022년 평가대상 선정기준이 충족되지 못한 2개 기관(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재정정보원)은 평가 제외

3. 2022년 조사 미실시 연구원(19개): 국방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도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3. 1., 「2022년도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3. 1., 「2022년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3. 1. 및 기획재정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3. 1. 30. 참고

236)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전문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청렴도 평가 결과는 유형 내 상대등급으로 산출되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등급 산정을 위한 기관유형을 기관 규모(정원) 위주가 아닌 기관 성격과 매년 평가 여부 등을 반영해 I~V유형으로 구분하여 결과가 발표됨.
  - 공직유관단체 I 유형(공기업), II 유형(중소형 제외 준정부기관), III 유형(중소형 준정부기관), IV 유형(중점평가기관), V 유형(지방 공사·공단)
- 결과 발표 시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평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포함한 전체 공공의료기관 유형 내 등급 산정 방식으로 발표하고, 국공립대학 청렴도 평가 또한 유형 구분 없이 하나의 유형으로 결과를 발표함.
- 그동안 청렴도 결과 발표 시 기관 등급과 함께 청렴도 점수가 발표되어 순위 위주의 보도가 양산되고, 기관 간 지나친 경쟁유발로 인한 우수사례 공유 저해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2018년도부터는 청렴도 등급만 발표하고 있음.

〈표 Ⅲ-77〉 2022년도 유형별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 공공기관

구분	유형	해당 공공기관명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공직 유관 단체)	I (36개)	<b>(공기업)</b> (주)강원랜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DN, 한전KPS(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해양환경공단 <b>(기타공공기관)</b>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II (57개)	<b>(준정부기관)</b>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표 III-77〉의 계속

구분	유형	해당 공공기관명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공직유관단체)	II (57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III (37개)	(기타공공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독립기념관, 서민금융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IV (22개)	(기타공공기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방기술품질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적십자사, 대한체육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은행, 코레일유통(주),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은행,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전MCS(주), 환경보전협회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국립대학병원, 국립의료원 등 (17개)	(기타공공기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주: 1. 2023년도 공공기관 유형을 기준으로 함

2. 주식회사 에스알과 한국재정정보원은 설문 유효표본 부족으로 등급 미발표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도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3. 1., 「2022년도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3. 1., 「2022년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3. 1. 및 기획재정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3. 1. 30. 참고

〈표 III-78〉 20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 유형 변경 현황

구분	유형	해당 공공기관명
공공 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sup>237)</sup> (공직 유관 단체)	I	<p>(<b>편입:</b> II→I) ㈜한국가스기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부동산원,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p> <p>(<b>편입:</b> III→I) 대한석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해양환경공단</p> <p>(<b>편입:</b> IV→I)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p>
	II	<p>(<b>편입:</b> 제도 개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p> <p>(<b>편입:</b> I→II)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환경공단</p> <p>(<b>편입:</b> III→II) (재)우체국금융개발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립생태원, 국토안전관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p> <p>(<b>편입:</b> IV→II)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p>
	III	<p>(<b>신규:</b> 제도 개편)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독립기념관, 서민금융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p> <p>(<b>편입:</b> IV→III)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p>

237)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 상향을 최초로 적용하여, 정원 300명 미만 ('22년 말 기준)인 43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함

〈표 III-78〉의 계속

구분	유형	해당 공공기관명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공직유관단체)	IV	(신규: 제도 개편) 한전MCS(주) (편입: I→IV) 대한적십자사, 중소기업은행,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산업은행 (편입: II→IV)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방기술품질원, 주택관리공단(주),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편입: III→IV) 대한법률구조공단, 코레일유통(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의료원 등	(신규: 제도 개편)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	4년제 대학	(제외: 2023년 공공기관 지정해제)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주: 1. 2022년도 종합청렴도 조사는 2022년 공공기관 유형을 기준으로 실시  
 2. 주식회사 에스알과 한국재정정보원의 경우, 설문 유효표본 부족으로 등급 미발표  
 3. '신규'로 분류된 기관은 조사대상 확대, 유형별 기준 변경 등 제도 개편의 영향으로 2021년도 조사는 수검하지 않았으나 2022년도 조사대상에 신규로 포함된 기관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도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3. 1., 「2022년도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3. 1., 「2022년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3. 1. 및 기획재정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3. 1. 30. 참고

4)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sup>238)</sup>

- 20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총 501개 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 평균은 100점 만점에 81.2점이었으며, 공공의료기관은 75.9점으로 나타남.
- 「공운법」상 공공기관이 대부분 속한 공직유관단체 유형의 종합청렴도는 85.7점으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238)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도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3. 1., 「2022년도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3. 1., 「2022년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3. 1. 및 기획재정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3. 1. 30. 참고

○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종합청렴도는 75.9점, 청렴체감도 77.7점, 청렴노력도 78.6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유형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남.

□ 2022년도 공공기관,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그중 「공운법」상 공공기관을 선별하여 분석한 결과, 3등급을 받은 기관이 62개로 가장 많았음.<sup>239)</sup>

○ 2022년도에 「공운법」상 공공기관 중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은 기관은 9개 기관으로, 2021년도에 비해 5개 증가함.

〈표 III-79〉 2021년도 및 2022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비교

(단위: 개)

구분	「공운법」상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대상 공공기관	등급 분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22년도	347	169	9	49	62	46	1
2021년도	350	162	4	56	62	34	6
증 감	△3	+7	+5	△7	-	+12	△5

주: 1. 「공운법」상 공공기관은 4개 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이 2023년 1월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되고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전년 대비 3개 감소하였음  
 2.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기타공공기관(한국특허정보원)의 부설기관에서 별도 법인으로 독립(22.8월)한 기관으로, 위탁사업 등으로 인한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여 신규 지정됨  
 3.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재정정보원은 2022년도 평가대상이었으나 설문 유효표본 부족으로 등급을 미발표함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도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3. 1., 「2022년도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3. 1., 「2022년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3. 1.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2021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2021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및 기획재정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3. 1. 30.

□ 청렴도 평가 유형별로 등급 분포를 살펴보면, 공직유관단체 I~IV유형과 공공의료기관 유형에서 등급별로 기관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 공직유관단체 I 유형에서 1등급을 받은 기관은 부산항만공사와 한국남동발전(주)이며, 5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음.

○ 공직유관단체 II유형에서 1등급을 받은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신용보증기금이며, 5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음.

239) 종합청렴도 등급 판정은 측정 대상기관 유형별로 다른 등급구간을 적용하는데, 종합청렴도 등급구간은 유형별로 유형 내 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설정함(1등급이 최상위 등급이고, 5등급이 최하위 등급임)

- 공직유관단체 III유형에서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며 5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음.
- 공직유관단체 IV유형에서는 1등급과 5등급을 받은 기관이 없음.
-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며, 5등급을 받은 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임.

〈표 III-80〉 2022년도 청렴도 평가 유형별 종합청렴도 등급 현황

구분	기관명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공직유관단체)	<p>I (35개)</p> <p><b>(1등급)</b> 부산항만공사, 한국남동발전(주)</p> <p><b>(2등급)</b>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부동산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전KPS(주), 한국수력원자력(주)</p> <p><b>(3등급)</b>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인천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전KDN, 해양환경공단</p> <p><b>(4등급)</b> (주)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p>
	<p>II (57개)</p> <p><b>(1등급)</b>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보증기금</p> <p><b>(2등급)</b>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환경공단</p> <p><b>(3등급)</b>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토안전관리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p> <p><b>(4등급)</b> 국가철도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p>

〈표 III-80〉의 계속

구분	기관명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공직 유관 단체)	<p><b>III (36개)</b></p> <p><b>(1등급)</b>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p> <p><b>(2등급)</b> 서민금융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특허전략개발원</p> <p><b>(3등급)</b>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독립기념관, 시청자미디어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p> <p><b>(4등급)</b>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창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p>
	<p><b>IV (22개)</b></p> <p><b>(2등급)</b> 대한적십자사, 중소기업은행,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산업은행,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전MCS(주)</p> <p><b>(3등급)</b> 국방기술품질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유통(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체육산업개발(주)</p> <p><b>(4등급)</b>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체육회,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환경보건협회</p>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평가	<p><b>국립 대학병원 및 국립 의료원 등 (17개)</b></p> <p><b>(1등급)</b> 서울대학교치과병원</p> <p><b>(2등급)</b>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p> <p><b>(3등급)</b>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p> <p><b>(4등급)</b>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p> <p><b>(5등급)</b> 서울대학교병원</p>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도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3. 1., 「2022년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3. 1. 참고

□ 「공운법」상 공공기관 지정 유형에 따라 종합청렴도 등급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준정부기관의 청렴도 수준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공기업의 경우, 3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이 64.5%에 해당하며, 1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남동발전(주)임.
- 준정부기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보증기금이 1등급을 받았고, 전체 평가 대상 준정부기관의 81.8%가 3등급 이상을 받아 청렴도 수준이 다른 유형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3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이 64.1%를 차지하며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부산항만공사,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임.
- 최하위등급(5등급)을 받은 기관은 기타공공기관 중 서울대학교병원 1개 기관이었음.

〈표 III-81〉 2022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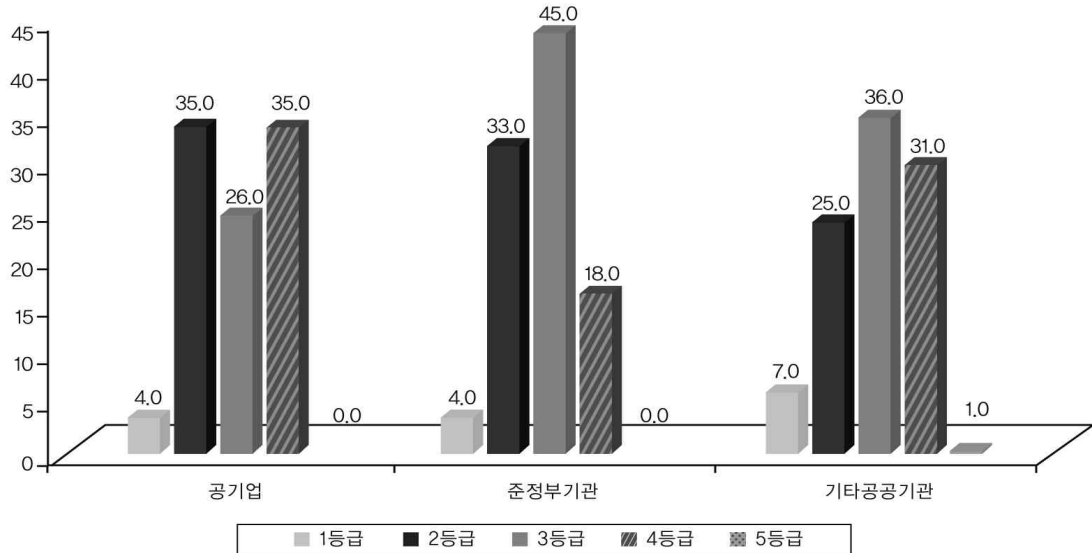
구분	종합청렴도 등급						
	평가 대상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공기업	시장형 (13)	13	1	6	2	4	0
	준시장형 (19)	18	0	5	6	7	0
	소계 (32)	31	1	11	8	11	0
준정부기관	기금관리 (11)	11	1	6	4	0	0
	위탁집행 (44)	44	1	12	21	10	0
	소계 (55)	55	2	18	25	10	0
기타공공기관 (260)		81	6	20	29	25	1
전체 (347)		167 (100%)	9 (5%)	49 (29%)	62 (37%)	46 (28%)	1 (1%)

- 주: 1. 공공기관이 수검한 청렴도 평가 종류(공공기관, 공공의료기관 등)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개별조사에서 측정된 청렴도 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함  
 2. 2023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22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를 모두 수검하고 점수결과를 공개한 16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함  
 3.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재정정보원의 경우, 설문 유효표본 부족으로 2022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제외됨.  
 4. 공직유관단체 연구원 유형은 2020년부터 격년 평가로 변경됨에 따라 2021년에는 전수조사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6개 기관을 제외한 19개 기관이 조사를 수검하였고, 2022년도에는 미 실시함  
 5. 국립대학병원 중 기존 시책평가 미측정 4개 치과병원(경북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도 노력도 평가대상에 신규 포함됨  
 6.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등 4개 과기원은 2023년도 1월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됨에 따라 이하 분석에서는 제외함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도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3. 1., 「2022년도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3. 1., 「2022년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3. 1. 및 기획재정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3. 1. 30.

[그림 III-35] 2022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단위: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도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3. 1., 「2022년도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3. 1., 「2022년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3. 1. 및 기획재정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3. 1. 30.

<표 III-82>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등급 현황

구분	기관명
1등급 (9개)	<p>(공기업) 한국남동발전(주)</p> <p>(준정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보증기금</p> <p>(기타공공기관)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부산항만공사,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p>
2등급 (49개)	<p>(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부동산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전KPS(주), 한국수력원자력(주)</p> <p>(준정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환경공단</p> <p>(기타공공기관)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민금융진흥원, 울산항만공사, 중소기업은행,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전MCS(주)</p>

〈표 III-82〉의 계속

구분	기관명
3등급 (62개)	<p><b>(공기업)</b>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전KDN, 해양환경공단</p> <p><b>(준정부기관)</b>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토안전관리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p> <p><b>(기타공공기관)</b> 국방기술품질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독립기념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인천항만공사,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주택관리공단(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코레일유통(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p>
4등급 (46개)	<p><b>(공기업)</b> (주)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p> <p><b>(준정부기관)</b> 국가철도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p> <p><b>(기타공공기관)</b>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체육회, 부산대학교병원, 여수광양항만공사, 제주대학교병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창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환경보건협회</p>
5등급 (1개)	<p><b>(기타공공기관)</b> 서울대학교병원</p>

주: 공공기관이 수검한 종합청렴도 평가 종류(공공기관, 공공의료기관 등)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개별조사에서 측정된 청렴도 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도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3. 1., 「2022년도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3. 1., 「2022년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3. 1. 및 기획재정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3. 1. 30.

□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부처별로 등급 분포에 따라 살펴보면 <표 Ⅲ-83>, <표 Ⅲ-84>와 같음.

<표 Ⅲ-83>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의 2022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단위: 개)

구분	종합청렴도 등급					
	소계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기획재정부	2	0	1	0	1	0
교육부	17	1	3	7	5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3	1	3	4	0
외교부	1	0	0	1	0	0
행정안전부	1	0	1	0	0	0
국가보훈부	2	0	0	2	0	0
문화체육관광부	9	0	2	3	4	0
농림축산식품부	7	0	0	3	4	0
산업통상자원부	33	2	16	8	7	0
보건복지부	12	1	5	3	3	0
환경부	7	0	1	4	2	0
고용노동부	7	0	2	5	0	0
여성가족부	3	0	0	1	2	0
국토교통부	17	0	4	8	5	0
해양수산부	9	1	2	3	3	0
중소벤처기업부	6	0	1	2	3	0
방송통신위원회	2	0	0	2	0	0
원자력안전위원회	1	0	1	0	0	0
금융위원회	7	1	4	2	0	0
공정거래위원회	1	0	0	1	0	0
인사혁신처	1	0	1	0	0	0
식품의약품안전처	1	0	0	1	0	0
방위사업청	1	0	0	1	0	0
경찰청	1	0	1	0	0	0
소방청	1	0	1	0	0	0
산림청	3	0	0	1	2	0
농촌진흥청	1	0	1	0	0	0
특허청	1	0	1	0	0	0
법무부	1	0	0	0	1	0
기상청	1	0	0	1	0	0
전 체	167	9	49	62	46	1

주: 1. 공공기관이 수검한 종합청렴도 평가 종류(공공기관, 공공의료기관 등)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개별조사에서 측정된 청렴도 등급을 기재함

2. 정부 부처 중 종합청렴도 평가 수검기관이 없는 부처는 제외하고 작성함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도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3. 1., 「2022년도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3. 1., 「2022년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3. 1. 및 기획재정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3. 1. 30.

〈표 III-84〉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의 2022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현황

주무부처	기관명
기획재정부 (2개)	(2등급) 한국수출입은행 (4등급) 한국조폐공사
교육부 (17개)	(1등급) 서울대학교치과병원 (2등급)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3등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4등급)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5등급) 서울대학교병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개)	(1등급)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2등급) 한국인터넷진흥원 (3등급)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4등급)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외교부 (1개)	(3등급) 한국국제협력단
행정안전부 (1개)	(2등급)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국가보훈부 (2개)	(3등급)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문화체육관광부 (9개)	(2등급)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관광공사 (3등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콘텐츠진흥원 (4등급)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체육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농림축산식품부 (7개)	(3등급)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등급)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표 Ⅲ-84〉의 계속

주무부처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33개)	(1등급)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등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주), 한전MCS(주), 한국수력원자력(주) (3등급)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전KDN (4등급) (주)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보건복지부 (12개)	(1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2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민연금공단, 대한적십자사 (3등급)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육진흥원 (4등급)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환경부 (7개)	(2등급) 한국환경공단 (3등급)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수자원공사 (4등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보전협회
고용노동부 (7개)	(2등급) 근로복지공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3등급)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성가족부 (3개)	(3등급) 한국건강가정진흥원 (4등급)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교통부 (17개)	(2등급)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3등급) 국토안전관리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주), 주택도시보증공사, 코레일유통(주),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4등급)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수산부 (9개)	(1등급) 부산항만공사 (2등급) 울산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3등급) 인천항만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환경공단 (4등급)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표 III-84〉의 계속

주무부처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6개)	(2등급) 기술보증기금 (3등급)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4등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창업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2개)	(3등급)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원자력안전위원회 (1개)	(2등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금융위원회 (7개)	(1등급) 신용보증기금, (2등급)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3등급)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정거래위원회 (1개)	(3등급) 한국소비자원
인사혁신처 (1개)	(2등급) 공무원연금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 (1개)	(3등급)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방위사업청 (1개)	(3등급) 국방기술품질원
경찰청 (1개)	(2등급) 도로교통공단
소방청 (1개)	(2등급)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농촌진흥청 (1개)	(2등급)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산림청 (3개)	(3등급) 한국임업진흥원 (4등급)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특허청 (1개)	(2등급)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법무부 (1개)	(4등급) 대한법률구조공단
기상청 (1개)	(3등급)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주: 1. 공공기관이 수검한 청렴도 평가 종류(공공기관, 공공의료기관 등)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개별조사에서 측정된 청렴도 등급을 기재함  
 2. 정부 부처 중 청렴도 평가 대상이 없는 부처는 제외함  
 3. ( ) 안은 부처별로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대상 중 등급을 공개한 기관 수를 의미함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도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3. 1., 「2022년도 국공립대학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 2023. 1., 「2022년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3. 1. 및 기획재정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3. 1. 30.

## 라.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sup>240)</sup>

### 1) 통합공시제도 개요

- 공공기관과 그 부설기관은 「공운법」 제11조 및 제12조에 근거하여 알리오시스템에 경영정보를 공시해야 함.
  - 2023년 9월 현재 경영공시 의무대상인 347개 공공기관과 15개 부설기관이 알리오 시스템에 최근 5년간 경영정보를 공시 중임.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이하 「통합공시기준」)」 제4조와 <별표 1>에 의거하여 5개 대항목 하위에 총 46개 항목에 대한 경영정보를 공시하고 있음.
  - <표 III-85>와 같이 통합공시기준 <별표 1>에 명시된 공시대상 항목과 항목별 공시기준은 「공운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제16호에 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는 공시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시주기(정기공시/수시공시) 및 항목의 중요도(중요항목/기타항목)를 기준으로 공시항목을 구분함.
    - 통합공시 매뉴얼에서는 통합공시 항목(46개)을 4개 대항목<sup>241)</sup>으로 구분하고 그 아래에 세항목과 세세항목을 두고 있음.
    - 4개 대항목에 대한 항목 체계와 공시주기 현황은 <표 III-86>과 같음.

240)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전자문서 작성지침」, 2023. 3. 24., 「'22년도 공공기관 경영공시 전년 보다 정확해졌다」, 보도자료, 2023. 4. 4. 및 「'22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3. 4. 4.을 참고하여 작성

241) 4개 대항목은 기관운영, ESG운영, 경영성과, 대내외·평가 등으로 구성

〈표 III-85〉 공공기관 통합공시항목 관련 「공운법」 조항 및 주요 변동내역

대분류	구분	「공운법」 조항 (제1조 제1항 각 호)	2022년 대비 변동사항
	공시항목명		
I. 기관운영	1. 일반현황	제1호	▪ 대분류 변경 (구.일반현황)
	2. 내부규정	제9호	
	3. 임직원 수	제3호	
	4. 임원 현황	제3호	
	5. 신규채용 현황	제3호	
	6. 임·직원 채용정보	제16호	
	7.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	제5호	▪ ‘투자 및 출자출연 현황’ 항목의 세항목에서 항목으로 변경 ▪ 세항목 신설 (7-2 남녀 이직자 비율)
	8. 징계 현황	제13호	
	9. 임원 국외출장 내역	제16호	
	10. 임원연봉	제3호, 제4호	
	11. 직원 평균보수	제4호	▪ 세항목 내용 추가 (‘11-1. 직원 평균보수’에 남녀 근로자 평균 임금비율 추가)
	12. 기관장 업무추진비	제16호	
	13. 복리후생비	제4호	
	14. 그 밖의 복리후생 제도 등의 운영 현황	제4호, 제16호	▪ 세항목 신설 (14-4. 복리후생 자체 점검 결과)
	15. 노동조합 관련 현황	제16호	▪ 세항목 통합 <sup>242)</sup> ▪ 2개 <sup>243)</sup> 세세항목 공시 제외
	16. 소송 및 법률자문 현황	제14호	
II. ESG운영	17. ESG 경영 현황	제16호	▪ 항목 신설
	18. 환경보호	제16호	▪ 대분류 변경 (구.기관운영) ▪ 세항목 내용 추가 (‘18-1.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Scope3 포함 공시)
	19. 안전관리 및 정보보호	제16호	▪ 대분류 변경 (구.기관운영) ▪ 세항목 내용 추가 (‘19-1. 안전 경영책임보고서’에 안전관리등급 관련 내용 추가)
	20. 사회공헌 활동	제16호	▪ 대분류 변경 (구.기관운영)
	21. 인권경영	제16호	▪ 대분류 변경 (구.기관운영)
	22.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 현황	제16호	▪ 대분류 변경 (구.기관운영) ▪ 6개 <sup>244)</sup> 세항목 공시 제외

242) ‘15-2.노사 합의사항’ 세항목은 2022년 기준 3개 세항목(‘18-2.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정보’, ‘18-3. 협약 정보’, ‘18-4. 경영/인사’(일부 세세항목은 제외))를 통합한 것임

243) ‘15. 노동조합 관련현황’ 항목 중 공시 제외된 세세항목(2개): 노조운영비 지원, 영리시설 및 장비 운영권 노조위탁

244) ‘22.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 현황’ 항목 중 공시 제외된 세항목(6개): 육아휴직 제도 현황, 출산휴가 제도 현황, 유산·사산휴가 제도현황, 임신기·육아기 단축 근무제 사용자 수, 가족돌봄휴가 제도 운영 현황, 가족돌봄휴직 제도 운영 현황

〈표 III-85〉의 계속

대분류	구분	「공운법」 조항 (제1조 제항 각 호)	2022년 대비 변동사항
	공시항목명		
II. ESG운영	23. 동반성장 평가결과	제16호	▪ 대분류 변경 (구.대내·외평가)
	24. 장애인 고용 현황	제16호	▪ 항목 신설
	25. 구매실적	제16호	▪ 대분류 변경 (구.정보공개) ▪ 항목명 변경 (구.계약정보) ▪ 세항목 신설 (25-3. 중소기업 생 산품 구매실적)
	26. 이사회	제9호, 제16호	▪ 대분류 변경 (구.기관운영) ▪ 항목명 변경 (구.이사회 회의록) ▪ 세항목 신설 (26-2. 개별 비상임 이사 활동내용, 26-3. ESG 운영 위원회)
	27. 자체 감사부서 현황	제16호	▪ 대분류 변경 (구.경영성과) ▪ ‘감사보고서’ 항목의 세항목에서 항목으로 변경
	28. 청렴도 평가결과	제16호	▪ 대분류 변경 (구.대내·외평가)
III. 경영성과	29. 요약 재무상태표	제2호	
	30. 요약 손익계산서 (또는 요약 포괄 손익계산서)	제2호	
	31. 수입·지출 현황	제1호, 제2호, 제4호	
	32. 자본금 및 주주 현황	제2호	
	33. 장단기 차입금 현황	제2호	
	34. 감사보고서	제2호, 10호	▪ ‘자체 감사부서 현황’ 세항목을 타 항목으로 분리
	35. 납세정보	제16호	
	36. 주요사업	제16호	
	37. 투자집행 내역	제16호	
	38. 투자 및 출자·출연 현황	제16호	▪ ‘퇴직 임·직원 재취업현황’ 세항목을 타 항목으로 분리
	39. 경영부담 비용추계	제16호	
40.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제15호		
41. 12개 주요기관의 상세부채 정보	제16호		
IV. 대내·외 평가 등	42. 경영평가 결과	제8호	▪ 공시대상기관 확대 (공기업·준정부기관→전체)
	43. 국회 등 외부평가	제8호, 제11호, 제12호	
	4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제6호	
	45. 계약정보	제16호	▪ 대분류 변경(구.정보공개)
	46. 연구보고서	제16호	▪ 대분류 변경(구.정보공개)

주: 2022년 대비 변동사항은 2023년 2월 통합공시기준 개정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전자문서 작성지침」, 2022. 3. 23. 및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전자  
 문서 작성지침」, 2023. 3. 24.,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3. 2. 3.을  
 참고하여 작성함

〈표 III-86〉 공공기관 통합공시항목 구분(2023년 9월 기준)

(단위: 개)

구분	항목별 하위 단위수준			공시주기(97개 세항목 기준)		
	항목	세항목	세세항목	정기공시		수시공시
				주요항목	기타항목	
	46	98	118	23	54	20
I. 기관운영	16	32	52	14	12	6
II. ESG운영	12	30	30	0	27	3
III. 경영성과	13	26	26	9	11	6
IV. 대내·외평가	5	10	10	0	4	5

주: 공시주기는 98개 세항목 중 공시주기가 혼재되어 있는 1개를 제외한 97개 세항목을 대상으로 구분함  
 - '42-1. 경영실적 평가결과' 세항목은 기관 유형별로 공시주기가 달라 분석에서 제외함(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정기공시(기타)에 해당, 기타공공기관은 수시공시에 해당)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전자문서 작성지침」, 2023. 3. 24.을 참고하여 작성함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관련 정책 현안과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공운법」 제11조 및 통합공시기준을 개정하고 공시항목과 항목별 공시 기준을 정비해 왔으며 최근 3년간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21년 2월에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구현과 정보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통합공시 항목의 신설 및 조정을 추진함.<sup>245)</sup>
  - '기타정보공개' 항목을 '사회공헌활동'으로 변경하여 하위 세항목에 '봉사활동 실적'을 신설하고 '연간 출연 및 증여' 항목에 있었던 '증여'를 '기부'로 명칭 변경하여 이동시킴.
  - 기존의 '안전관리' 항목을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로 항목명을 변경하고 '안전 경영책임보고서', '녹색제품 구매 실적',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 3개 세항목을 신설했으며, 기존 세항목 '사고현황', '안전관리 책임자'는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 포함시켜 공시하도록 개편함.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 현황' 항목에 '가족돌봄 휴가 및 휴직'과 관련된 4개 세항목을 추가함.
  - '복리후생비' 항목의 세세항목인 '보육비'에 포함되어 있던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를

245)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1. 2. 26.

별도 공시항목으로 분리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 현황' 항목의 세항목으로 이동시킴.

- 정부업무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지표에 반영되고 있으나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공시하지 않았던 혁신조달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계약정보' 항목의 세부항목으로 신설하여 공시하도록 함.
  - 정보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측면에서 유사 공시내용을 통폐합하고 일원화하기 위해 재무정보 관련 공시항목,<sup>246)</sup> 내·외부 감사 관련 공시항목,<sup>247)</sup> 기타항목<sup>248)</sup> 등을 정비함.
- 2022년 2월에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ESG 공시항목을 대폭 추가함.<sup>249)</sup>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용수 사용량 등 '환경보호' 항목을 대폭 확대함.
  - 정보보호·인권·상생협력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여 공공기관이 사회적 포용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진단에 필요한 '자체 감사부서 현황' 및 '청렴도 평가 결과' 공시항목을 추가하여 조직 자체적 반부패·청렴활동 쇄신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뒷받침하도록 함.
- 2022년 2월에는 ESG 공시항목 확대와 더불어 실효성이 약화된 항목을 폐지하고 유사 항목은 통합 및 재조정하는 등 전체 항목을 재검토함.
- 통합공시 항목 중 사실상 자율 공시로 운영 중인 '유가족 특별채용', '이사회 회의록 외 기타자료', '경영혁신사례' 등 3개 항목은 공시에서 제외함.
  - 국회, 감사원, 주무부처,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통합하고, 경영실적·감사직무실적 평가결과를 통합함.
  - 국민들의 통합공시 항목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 항목 수가 많은 기관운영(20개)과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13개) 항목에 대한 중분류를 신설함.

246) '투자 및 출자현황', '연간 출연 및 증여' 및 '경영부담비용 추계' 등 3개 공시항목을 통해 공시되던 '출자·출연'과 '보증' 관련 공시내용을 정비

247) 종전 '감사보고서' 및 '이사회회의록 및 내부감사결과' 등 2개 공시항목에 나누어 공시하던 내·외부감사결과를 '감사보고서' 항목에서 일원화하여 공시

248) '신규채용 현황' 항목에서 공시하던 유연근무 현황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 현황' 항목에서 공시하고 '그밖의 복리후생제도 등의 운영 현황' 항목에서 공시하던 노조 관련 공시내용을 '노동조합 관련현황' 항목에서 공시하기로 함

249) 기획재정부, 「통합공시를 통해 공공기관의 ESG 경영 선도」, 보도자료, 2022. 2. 4.

- 2023년 2월에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통합공시 분류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ESG와 관련된 공시항목을 확대함.<sup>250)</sup>
  - 국내외적으로 ESG 공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공시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 5개<sup>251)</sup> 대항목을 기관운영, ESG운영,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등 4개 대분류로 개편함.
  - 중분류 또한 기존 10개<sup>252)</sup>에서 일반현황, 인력관리, 보수관리, 복리후생, 노동조합, 소송 및 자문, ESG 현황,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재무성과, 사업 및 투자, 중장기 재무관리,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 15개로 세분화함.
  - 또한, 국제기구 및 주요국(EU, 미국)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ESG 국제 공시기준에 맞춰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현행 직·간접배출(Scope1·2)에서 외부배출(Scope3)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자율공시를 추진하고 '장애인 고용 현황', '중소기업 생산품 구매실적', '개별 비상임이사 활동 내용', 'ESG 운영위원회', 'ESG 경영 현황' 항목을 신설하는 등 ESG와 관련된 공시항목을 확대함.
  - 그 외에도 '남녀 이직자 비율', '남녀 근로자 임금비율', '복리후생 자체점검 결과' 등 항목을 신설하고 별도 구분이 불필요한 항목은 통합, 소수 기관만 공시 중인 항목은 폐지함.
  - '경영평가 결과' 항목은 공시 대상기관을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되, 기관별 여건을 고려하여 공시시기를 차별화함.
- 2023년 2월에는 공시 점검방식 및 기준, 후속조치 관련 기준 등 공시점검제도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짐.
  - 별점부과 중심의 점검방식을 보완하고 정책 점검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중 공시점검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공시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함.
  - 점검결과에 대한 기관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모호한 중과실 정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개정함.
  - 우수공시기관 지정요건이 공시향상기관과 일부 중첩되어 있어 기준을 명확하고 엄격하게 개선하고, 공시향상기관 지정요건은 해석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서 일관된 해석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화 함.

250)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전면 개편」, 보도자료, 2023. 2. 3. 및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3. 2. 3.를 참고하여 작성

251) 일반현황, 기관운영,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252) 일반현황, 인원, 보수, ESG 경영, 기타, 재무성과, 사업 및 투자, 중장기 재무관리, 대내외평가, 정보공개

- 경영평가 편람 개정으로 공시 별점 배점이 조정(1점→0.5점)됨에 따라 배점기준표(0점~0.5점)를 재설정함.

□ 기획재정부는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공시정보의 품질 관리를 위해 「통합공시기준」 제10조(공시정보의 확인·검증)에 따라 통합공시점검을 실시하여 공시정보 및 첨부자료의 정확성, 충분성, 적시성 등을 확인 및 검증하고 있음.

- 2006년 알리오시스템 구축과 2007년 최초 통합공시 이후 공시항목이 꾸준히 증가하고 공공기관 경영정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공시정보의 품질 관리가 중요해짐.
- 이에 기획재정부는 공시정보에 대한 검증 및 점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공시품질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을 꾸준히 추진함.
  - 2013년에 추진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부채, 복리후생 관련 공시정보가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성실히 공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2014년 초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초 실시됨.
  - 2015년에는 불성실공시에 대한 사후조치 기준을 개선하여 불성실공시를 공시 불이행, 허위공시, 공시변경으로 유형화하고 공시유형별로 위반수준에 따라 별점을 달리 부과하도록 별점체계를 전면 개편함.
  - 2016년에는 종전의 처벌위주 점검 체계를 개선하고자 「통합공시기준」에 우수공시기관 선정근거를 명문화하고 우수공시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시작함.<sup>253)</sup>
  - 2018년에는 우수공시기관의 선정기준<sup>254)</sup>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신규 공공기관 공시담당자 교육 실시, 정부-공공기관 공시담당자 간 Q&A코너 개설, 공시 미흡기관 현장 컨설팅 실시 등 공시품질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함.
  - 2019년에는 종전까지 연 1회 실시하던 공시점검을 연 2회로 확대하여 공시 오류의 신속한 수정을 위해 노력함.
  - 2020년에는 공시점검에 따른 기관 공시담당자 인사조치가 과도하여 담당자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담당자 개인에 대한 인사조치 요건을 강화하고 불성실공시 유형을 세분화하여 위반수준에 따른 별점 체계를 정비함.
  - 그리고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공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공공기관과 신규 지정 공공기관<sup>255)</sup>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 매뉴얼 교육, 멘토 지정 등

253) 2015년에는 우수공시기관에 대한 명문화된 근거 규정은 없었으나, 우수공시기관은 선정하여 발표하였음  
 254) ('16년) 무별점기관 → ('17년) 무별점기관이면서 최근 3년간('15~'17년) 별점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기관

- 공시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함.<sup>256)</sup>
- 2021년에는 국민이 직접 공시 오류를 점검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국민 100인으로 구성된 '온라인 점검단'이 공시·통계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 사항 제안할 수 있도록 함.
  - 2022년에는 전체교육 외에 신규지정·소규모·불성실 기관에 대한 상시 교육과정을 신설해 교육을 강화했으며, 공시오류 사례집 발간 및 동영상 매뉴얼을 제작해 기관의 학습기회를 확대 지원함.<sup>257)</sup>
  - 또한 공시 담당자를 위한 Q&A 커뮤니티를 신설하고, 공시 우수기관과 미흡기관 간 멘토-멘티 매칭을 확대하는 동시에 멘토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기관 간 소통을 활성화함.
  - 2023년에는 「공공기관 통합공시 우수사례집」 발간을 통해 그동안 여러 공공기관들이 발전시켜 온 우수한 통합공시 업무프로세스와 노하우를 기관 간 공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공시역량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자 함.
- 「통합공시기준」 제13조(불성실공시 별점부과)에 따라 공공기관이 불성실공시를 하는 경우 항목의 중요도 및 과실 정도에 따라 별점을 달리 부과함.
- 2020년 2월 통합공시기준 개정에 따라 불성실공시를 미공시(고의·중과실/경과실), 허위공시, 공시오류, 지연공시, 공시변경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함.
    - '허위공시'는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를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하여 외부에 적발된 경우로 한정하고 단순과실에 의한 수정은 '공시오류'로 분류하여 별점을 부과하도록 유형을 세분화함.
  - 위반 수준은 중과실과 경과실로 구분되는데, 중과실은 공시 오류로 인해 해당 항목의 의미상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이며, 경과실은 공시항목의 내용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 기재 오류를 의미함.
    - 수치 입력의 오류, 특별한 사유가 없는 미공시 등은 중과실에 해당하며 단순한 계산의 실수, 첨부파일 오류나 매뉴얼이 모호한 경우, 해석상 오류 등은 경과실 사례로 볼 수 있음.
  - 최근 경영공시 별점기준의 합리화를 위해 2020년 12월 통합공시기준 개정을 통해 '임·직원 채용정보' 항목과 '입찰정보' 항목과 같이 기관 부담이 큰 공시항목에

255) 2020년 상반기 통합공시 점검(2020. 3. 31.) 결과에 따라 총 25개 공공기관이 선정됨

256) 기획재정부, 「기재부, 공공기관 공시 역량 강화지원 프로그램 시행」, 보도자료, 2020. 6. 17.

257)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2. 2. 4.

한해 별점 기준을 달리 적용하도록 함.

- 구체적인 불성실공시에 대한 별점기준은 「통합공시기준」 <별표 2>에서 정하며, 이를 요약하면 <표 III-87>과 같음.

〈표 III-87〉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별점 부과 체계

분류	불성실공시 유형					
	미공시		허위공시	공시오류	지연공시	공시변경
	고의·중과실	경과실				
정기공시(주요)	5점	3점	5점	3점	-	0.5점
정기공시(기타)	3점	1.5점	3점	1.5점		
수시공시	3점		3점 (1.5점)	1.5점 (0.75점)	1~2.5점	0.1점 (0.1점×1/조정계수)

주: 1. 지연공시는 수시공시 항목에만 적용되며 공시시한 위반수준(위반일)에 따라 별점을 차등 적용함  
(1주일 이내 1점, 1주일 초과~1개월 이내 1.5점, 1개월 초과~6개월 이내 2점, 6개월 초과 2.5점)  
2. 수시공시항목인 '임·직원 채용정보' 항목에 한하여 허위공시와 공시오류에 대해 ( )의 별점을 적용함  
3. 수시공시항목인 '임·직원 채용정보' 항목과 '입찰정보'에 한하여 공시변경에 대해 ( )의 별점을 적용하며 조정계수는 상기 2개 항목의 공시건수의 합계에 따라 달리 적용함  
자료: 기획재정부, 「22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3. 4. 4.,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전자문서 작성지침」, 2023. 3. 24.

- 「통합공시기준」 제14조(불성실공시 사후조치 등)에 따라 점검결과 별점이 부과된 기관에 대해서는 별점 정도에 따라 정기공시 후 1년 이내에 사후조치로 '기관주의' 조치,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 및 관련자 인사조치 등을 실시함.
- 연간 누적별점이 20점을 초과한 기관의 경우 '기관주의' 조치의 대상이 되며, 연간 누적별점이 40점을 초과한 기관이거나 2년 연속 별점 20점을 초과하고 전년 대비 별점이 증가한 기관은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됨.
- '기관주의' 조치를 받은 기관과 '불성실공시기관'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불성실공시 예방교육을 받아야 함.
- '불성실공시기관'은 알리오시스템에 불성실공시기관 지정 내역이 3개월 간 게시되며, 전체 별점 중 담당자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별점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당자 인사조치를 요구받게 됨.

〈표 III-88〉 통합공시 점검 별점에 따른 사후조치

구분	지정요건	사후조치
불성실 공시기관	· 연간 별점 40점 초과 · 2년 연속 연간 별점 20점 초과한 기관 중 전년 대비 증가	· 개선계획서 제출 및 불성실공시 예방 교육 · 알리오에 지정 내역 게시 · 고의·중과실에 의한 별점이 50%를 초과한 경우, 관련자 인사조치 요구
기관주의	· 연간 별점 20점 초과	· 개선 계획서 제출 및 불성실공시 예방 교육 · 알리오에 지정 내역 게시

자료: 기획재정부, 「22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3. 4. 4.

- 이 외에도 ‘우수공시기관’은 알리오시스템에 게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경영실적평가에 점검결과를 반영함.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최근 3년간(기타공공기관<sup>258</sup>)은 최근 2년간) 별점이 0점이면 ‘우수공시기관’으로 지정됨.
  - ‘우수공시기관’에 대해서는 알리오시스템에 해당 기관 명단을 공개하고 차기 점검 1회에 한해 점검 대상에서 제외함.
- 최근 2년간 별점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된 경우 ‘공시향상기관’으로 지정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통합공시 점검결과를 경영실적평가 ‘국민소통’ 지표에 반영하여 평가함.
  - 기획재정부는 2020년 12월 「통합공시기준」 개정을 통해 우수공시기관과 공시향상기관에 경영실적평가상 인센티브를 강화<sup>259</sup>)한 바 있는데, 이는 2022년도에 실시하는 2021년도 경영실적평가부터 적용됨.
  - 2023년 실시하는 2022년도 경영실적평가부터는 ‘국민소통’ 지표의 가점이 1점에서 0.5점으로 낮아짐.
  -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에 점검결과를 통보하여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권고함.

258) 단,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기타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3년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제15조 제3항)

259)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 시 ‘국민소통’ 지표(계량, 1점)를 통해 통합공시 점검결과를 반영하는 것에 추가하여 우수공시기관에 한해 2021년도 경영실적평가부터 ‘혁신노력 및 성과’ 지표(비계량, 1점)를 통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공시향상기관에 대해서는 공시점검 관련 경영실적평가 득점(최대 1점 이내)에 최대 0.05점까지 추가 배점할 수 있도록 개선함

〈표 III-89〉 우수공시기관과 공시향상기관 지정 요건 및 사후조치

구분	점검 연도	지정 요건		사후조치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우수 공시 기관	~'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3년 연속 무별점</li> <li>• 점검연도 무별점기관 중, 최근 3년 별점이 지속 감소한 기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년도 공시점검 면제<sup>1)</sup></li> <li>• 알리오에 지정 내역 게시</li> <li>• 경영실적평가에 반영 또는 주무부처에 통보</li> </ul>
	'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3년 연속 무별점</li> <li>• 2년 연속 별점 하락 &amp; 점검연도 무별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2년 연속 무별점</li> <li>• 점검연도 무별점</li> </ul>	
	'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3년 연속 무별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2년 연속 무별점</li> </ul>	
공시 향상 기관	'21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3년간 별점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2년간 전년 대비 별점 50% 이상 감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무부처에 통보</li> </ul>
	'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2년 연속 별점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li> </ul>		

주: 1. 우수공시기관 중에서 밑줄 친 요건을 충족시킨 기관에 한해서만 차년도 공시점검을 면제해 줌  
 자료: 기획재정부, 「'21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4. 8., 「'22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3. 4. 4.을 참고하여 작성

## 2) 2022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 기획재정부는 2022년 경영공시 의무 대상인 340개<sup>260)</sup>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도 통합공시점검을 실시함.
- 2021년도 점검부터는 공공기관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점검 횟수를 매년 2차례에서 3차례로 확대해 실시하고 있음.
  - 기관이 제출한 공시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노무법인과 회계법인이 공동으로 서면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항목의 중요성과 과실 정도에 따라 별점을 부과함.
  - 1차 점검은 2022년 5~8월, 2차 점검은 2022년 10~12월, 3차 점검은 2023년 1~3월에 실시됨.
  - 통합공시점검 46개 항목 중 기관운영·노무 항목 7개와 재무 항목 10개, 총 17개 항목이 점검 항목으로 지정됨.

260) 2022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50개 기관 중 2021년도 점검 시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되어 2022년도 점검이 면제된 6개 기관(한국조폐공사, 한전KDN,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투자공사, 한국특허정보원)과 2023년 1월에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된 4개 기관(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 10개 기관을 제외한 340개 기관임

<표 III-90> 2022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항목

기관운영·노무 항목(7개)	재무 항목(10개)
신규채용 현황, 임직원 채용정보(2회), 임원연봉, 복리후생비, 그 밖의 복리후생제도, 안전관리 및 정보보호, <u>환경보호(2회)</u>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수입·지출현황, 장단기 차입금현황, <u>감사보고서(2회)</u> , <u>투자 및 출자·출연 현황(2회)</u> , <u>경영부담 비용추계(2회)</u> , 동반성장 평가결과, 청렴도 평가결과, 계약정보(3회)

주: 굵은 글씨로 된 항목은 주요항목, 밑줄 친 항목은 2회 이상 점검한 항목임  
 자료: 기획재정부, 「22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3. 4. 4.

- 2014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통합공시점검에 따른 별점 현황과 사후조치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III-91>과 같음.
- 2022년도 점검결과에 따르면, 평균별점(3.2점)과 사후조치 대상기관의 수(1개)가 통합공시점검이 최초로 실시된 2013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남.
  - 2013년도부터 2022년도 점검까지 평균별점과 사후조치 대상기관 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8년도 점검에서는 공시점검 2회 실시, 점검 대상항목 확대<sup>261)</sup> 및 채용정보 중점 점검의 영향으로 별점과 사후조치 대상기관 수가 다소 증가함.
  - 2021년도에 이어 2022년도에도 불성실공시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은 없었으며, 기관주의 조치에 해당하는 기관은 2021년도 2개에서 2022년도 1개로 줄어 사후조치대상 기관 수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남.
  - 2021년도에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우수공시기관 지정요건이 완화되어 우수공시기관 수가 35개로 정점을 찍었으나 2022년도에는 다시 지정요건을 강화하여 우수공시기관 수가 12개로 감소함.
  - 2021년도에 신설된 공시향상기관 수는 2021년도 21개에서 2022년도 41개로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에 대한 공시향상기관 지정요건이 완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261) (2017) 14개 항목 점검 → (2018) 18개 항목 점검

〈표 III-91〉 공공기관 통합공시 별점 현황(2014~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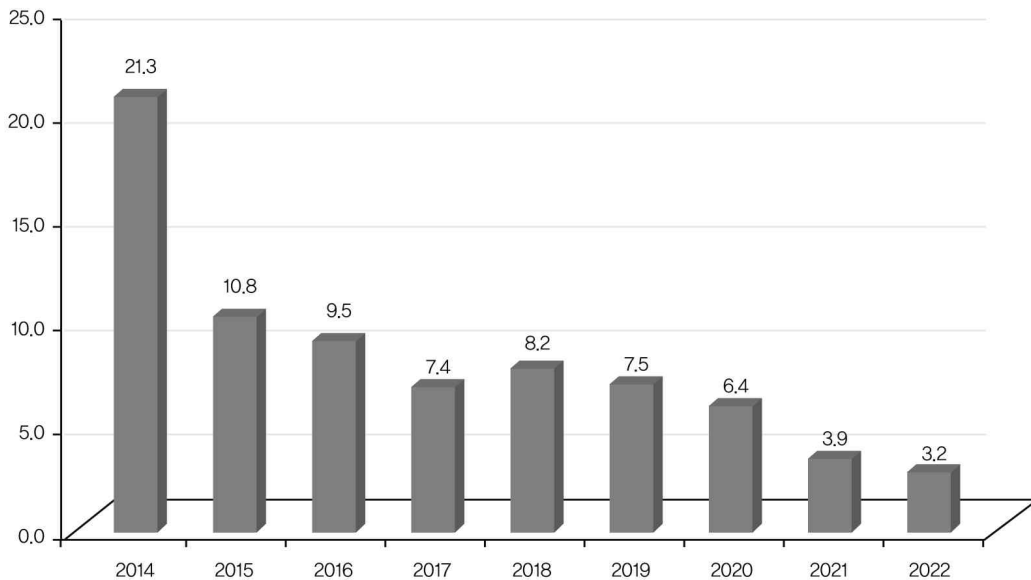
(단위: 개, 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소계	공기업	준정부	기타
점검 대상	296	311	319	329	335	331	331	348	340	34	94	212
평균 별점	21.3	10.8	9.5	7.4	8.2	7.5	6.4	3.9	3.2	1.6	1.9	4
우수공시기관	3	16	18	22	35	22	15	35	12	0	6	6
공시향상기관	-							21	41	6	14	21
사후조치대상	151	43	26	20	27	20	8	2	1	0	0	1
불성실공시기관	22	8	3	3	7	4	2	0	0	0	0	0
기관주의	129	35	23	17	20	16	6	2	1	0	0	1

주: 1. 2014년도 기관주의 및 불성실공시기관의 수는 2014년 당시 별점기준으로 지정된 사후조치 대상기관이 아닌 2015년도에 개정된 별점 기준을 적용한 결과임  
 2. 공공기관 유형은 해당 연도 공공기관 지정결과를 기준으로 함  
 3. 공시향상기관 선정은 2021년도 점검부터 실시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8. 3. 21. 및 「21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4. 8., 「22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3. 4. 4. 을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I-36] 공공기관 통합공시 평균 별점(2014~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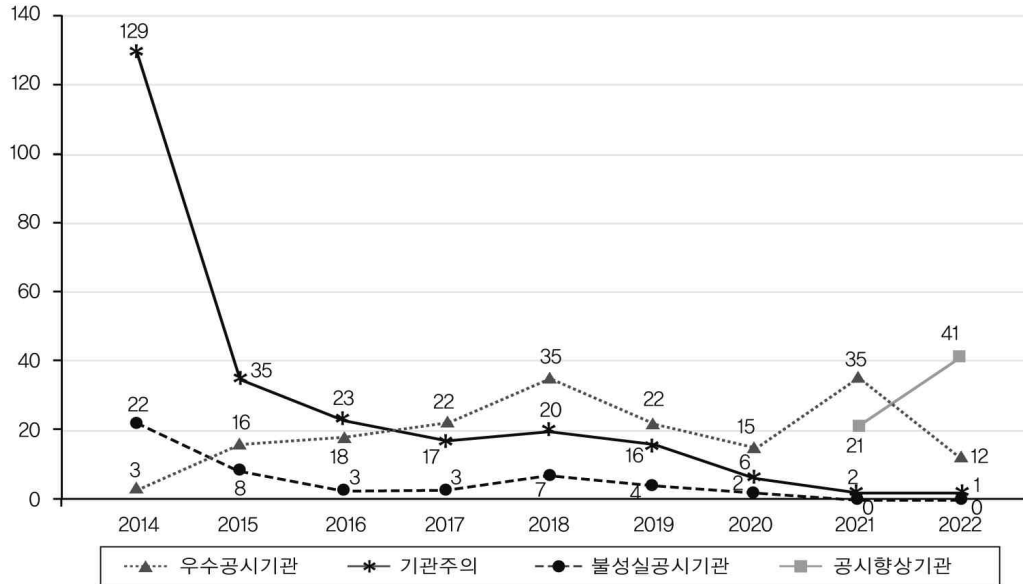
(단위: 점)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8. 3. 21. 및 「21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4. 8., 「22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3. 4. 4. 을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I-37]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현황(2014~2022년)

(단위: 개)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8. 3. 21. 및 「21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4. 8., 「22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3. 4. 4.을 참고하여 작성

- 2022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에 따르면, 총 12개 기관이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알리오시스템과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우수공시기관임을 게시함.
  - 최근 3년 연속으로 무별점인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6개 기관으로 모두 준정부기관 유형에 해당함.
  - 최근 2년 연속으로 무별점인 기관은 국립광주과학관, 태권도진흥재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6개 기관임.
- 2022년도 공시향상기관은 총 41개 기관으로 2021년도 21개 기관보다 큰 폭으로 증가함.
  - 2021년도에는 21개 기관이 모두 기타공공기관에 해당되었으나 2022년도에는 공기업 6개 기관, 준정부기관 14개 기관, 기타공공기관 21개 기관으로 기타공공기관 유형 외 다른 유형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
    -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의 경우 2021년도에는 '최근 3년간' 전년 대비 별점이

50% 이상 감소해야한다는 조건이었으나 2022년도에는 기타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최근 2년간'으로 조건이 완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 2022년도 불성실공시기관 및 기관주의 등 사후조치 대상기관은 총 1개 기관임.
  - 불성실공시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은 없었으며 전년과 동일함.
  - 경북대학교병원은 2021년 3.35점에서 2022년 25.6점으로 별점이 크게 증가하여 기관주의 조치를 받음.

〈표 III-92〉 2022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구분	판단기준	기관명	후속조치
우수 공시 기관 (12개)	3년 연속 무별점 (6개)	( <b>준정부: 6개</b> ) 국민연금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력거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년도 점검면제</li> <li>▪ 경영실적평가 반영 또는 주무부처 통보</li> <li>▪ 알리오시스템에 게시 및 담당자에 대한 표창 등 지원</li> </ul>
	2년 연속 무별점 (6개)	( <b>기타: 6개</b> ) 국립광주과학관, 태권도진흥재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공시 향상 기관 (41개)	최근 2년간 전년 대비 별점 50% 이상 감소	<p>(<b>공기업: 6개</b>) (주)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여수광양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p> <p>(<b>준정부: 14개</b>) 도로교통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p> <p>(<b>기타: 21개</b>)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강원대학교병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아동권리보장원,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코레일유통(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무부처 통보</li> <li>▪ 알리오시스템에 게시 및 담당자에 대한 표창 등 지원</li> </ul>

〈표 III-92〉의 계속

구분	판단기준	기관명	후속조치
공시 향상 기관 (41개)	최근 2년간 전년 대비 별점 50% 이상 감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무부처 통보</li> <li>▪ 알리오시스템에 게시 및 담당자에 대한 표창 등 지원</li> </ul>
불성실공시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선계획서 제출</li> <li>▪ 공시책임자 교육</li> <li>▪ 고의·중과실 별점 50% 이상 시 인사조치</li> <li>▪ 알리오시스템 및 기관 홈페이지 게시</li> </ul>
기관주의		(기타: 1개) 경북대학교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선계획서 제출</li> <li>▪ 공시책임자 교육</li> <li>▪ 알리오시스템 및 기관 홈페이지 게시</li> </ul>

주: 공공기관 유형은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결과를 기준으로 함  
 자료: 기획재정부, 「22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3. 4. 4.

□ 2022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에 따른 별점 구간별 기관 분포를 살펴보면, <표 III-93>과 같음.

- 2022년도 점검대상인 340개 기관 중 별점 0점인 기관은 81개(23.8%)이고 사후조치 대상이 되는 별점 20점 초과<sup>262)</sup> 기관은 1개(0.3%)임.
  - 대부분의 공공기관(245개, 72.1%)은 별점 0점 초과~10점 이하 구간에 분포함.
- 공기업 유형과 준정부기관 유형은 대체로 유사한 분포 형태를 보임.
  - 각 유형에서 별점 0점인 구간과 별점 0점 초과~10점 이하 구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40~50%대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별점 10점 초과~20점 이하 구간 비중은 3% 미만으로 나타남.
- 기타공공기관은 별점 0점 초과~10점 이하 구간의 비중이 83.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별점 0점 구간의 비중이 10.8%, 별점 10점 초과~20점 이하 구간은 5.2%, 20점 초과~30점 미만 구간 비중은 0.5%로 나타남.

262) 기관주의 조치 별점기준

〈표 Ⅲ-93〉 2022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별점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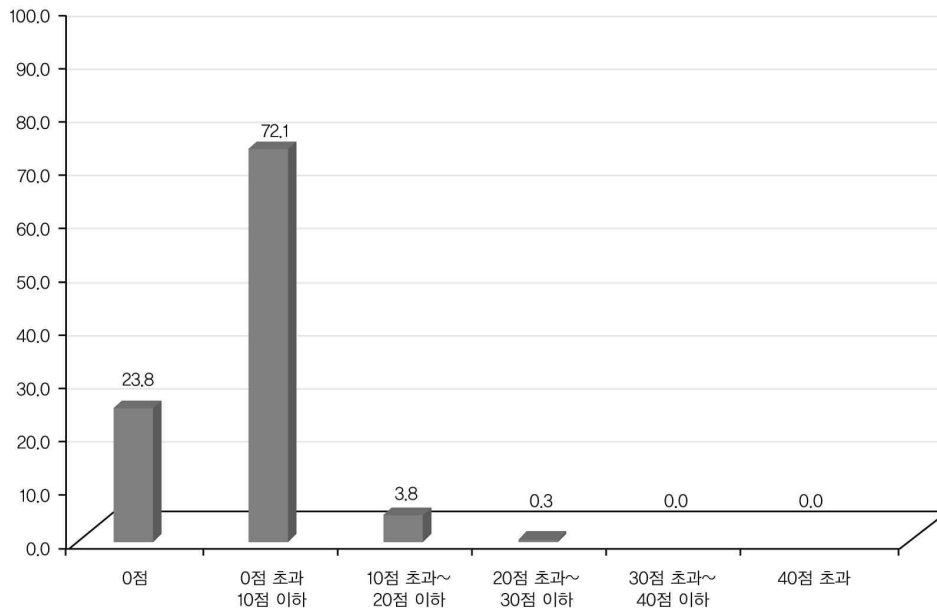
(단위: 개, %)

구분	소계	0점	0점 초과 ~ 10점 이하	10점 초과~ 20점 이하	20점 초과~ 30점 이하	30점 초과~ 40점 이하	40점 초과
공기업	34 (100)	18 (52.9)	15 (44.1)	1 (2.9)	0 (-)	0 (-)	0 (-)
준정부기관	94 (100)	40 (42.6)	53 (56.4)	1 (1.1)	0 (-)	0 (-)	0 (-)
기타공공기관	212 (100)	23 (10.8)	177 (83.5)	11 (5.2)	1 (0.5)	0 (-)	0 (-)
합계	340 (100)	81 (23.8)	245 (72.1)	13 (3.8)	1 (0.3)	0 (-)	0 (-)

주: 1. ( ) 안은 비중 표시임  
 2. 2년간 별점이 20점을 연속 초과하여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결과를 해당 표를 통해서는 파악할 수 없음  
 3. 공공기관 유형은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결과를 기준으로 함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2. 1. 28. 및 「22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3. 4. 4.을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Ⅲ-38] 2022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별점 분포 현황(전체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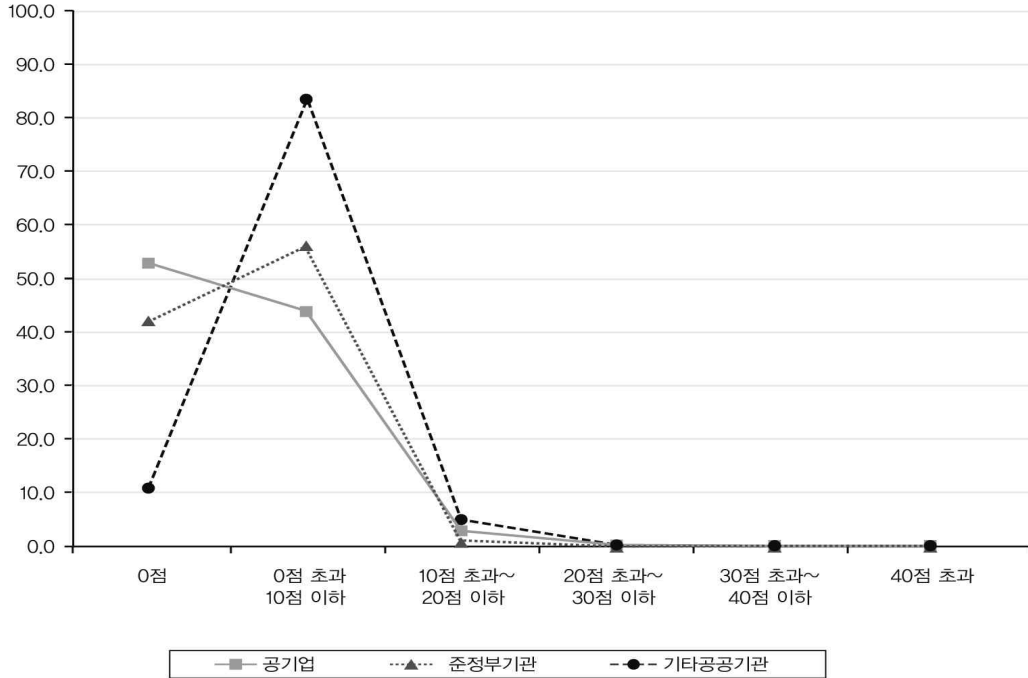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2. 1. 28. 및 「22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3. 4. 4.을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I-39] 2022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별점 분포 현황(유형별)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2. 1. 28. 및 「22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 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3. 4. 4.을 참고하여 작성

□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의 별점 구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III-94>와 같음.

<표 III-94>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의 2022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별점 분포

(단위: 개)

구분	소계	0점	0점 초과 ~ 10점 이하	10점 초과 ~ 20점 이하	20점 초과 ~ 30점 이하	30점 초과 ~ 40점 이하	40점 초과
기획재정부	2	1	1	0	0	0	0
교육부	22	2	19	0	1	0	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2	4	37	1	0	0	0
외교부	3	0	3	0	0	0	0
통일부	2	0	2	0	0	0	0
법무부	3	2	1	0	0	0	0
국방부	3	0	2	1	0	0	0
행정안전부	3	1	2	0	0	0	0
국가보훈부	3	1	1	1	0	0	0
문화체육관광부	31	9	22	0	0	0	0

〈표 Ⅲ-94〉의 계속

(단위: 개)

구분	소계	0점	0점 초과 ~ 10점 이하	10점 초과 ~ 20점 이하	20점 초과 ~ 30점 이하	30점 초과 ~ 40점 이하	40점 초과
농림축산식품부	12	1	11	0	0	0	0
산업통상자원부	40	19	18	3	0	0	0
보건복지부	27	5	20	2	0	0	0
환경부	12	3	9	0	0	0	0
고용노동부	12	4	7	1	0	0	0
여성가족부	5	3	2	0	0	0	0
국토교통부	28	10	18	0	0	0	0
해양수산부	17	4	13	0	0	0	0
중소벤처기업부	11	2	8	1	0	0	0
국무조정실	25	2	21	2	0	0	0
방송통신위원회	2	0	2	0	0	0	0
원자력안전위원회	3	0	2	1	0	0	0
금융위원회	7	2	5	0	0	0	0
공정거래위원회	2	0	2	0	0	0	0
인사혁신처	1	1	0	0	0	0	0
관세청	1	1	0	0	0	0	0
방위사업청	2	0	2	0	0	0	0
문화재청	1	0	1	0	0	0	0
농촌진흥청	1	0	1	0	0	0	0
산림청	4	0	4	0	0	0	0
특허청	4	1	3	0	0	0	0
식품의약품안전처	4	2	2	0	0	0	0
기상청	3	0	3	0	0	0	0
경찰청	1	1	0	0	0	0	0
소방청	1	0	1	0	0	0	0
합계	340	81	245	13	1	0	0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2. 1. 28. 및 「'22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 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3. 4. 4.을 참고하여 작성

- 2022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전년 대비 변동 현황에 따르면, 전체 통합공시점검 대상기관 340개 중 45개 기관이 전년도에 비해 후속조치 수준이 개선된 반면 40개 기관은 후속조치 수준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후속조치 수준이 전년 대비 1단계 개선된 기관은 39개 기관으로, 2021년 점검 결과상 사후조치대상이 아니었다가 공시향상기관이 된 37개 기관이 큰 비중을 차지했고, 기관주의에서 사후조치대상이 아니게 된 기관도 2개 있었음.
  - 2022년도 점검부터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공시향상기관 지정요건이 완화<sup>263)</sup>됨에 따라 1단계 개선된 기관의 수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함.
- 전년 대비 후속조치 수준이 2단계 이상 개선된 기관은 6개 기관으로, 모두 사후조치대상이 아니었다가 우수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임.
- 후속조치 수준이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한 기관은 17개 기관으로, 공시향상기관이었다가 사후조치대상이 아니게 된 기관이 16개, 사후조치대상이 아니었다가 기관주의 대상이 된 기관이 1개임.
- 전년 대비 후속조치 수준이 2단계 하락한 기관은 23개로, 모두 2021년도에는 우수공시기관이었으나 2022년도에는 사후조치대상이 아니게 된 기관이었음.
- 사후조치대상이 아니었다가 우수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수(6개)보다 우수공시기관이었으나 사후조치대상이 아니게 된 기관 수(23개)가 더 많음.
  - 이는 2021년도 점검 시에는 우수공시기관에 대한 지정요건이 완화되었으나 2022년도 점검 시에는 다시 강화됨에 따른 영향으로 보임.<sup>264)</sup>

〈표 III-95〉 2022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전년 대비 변동 현황

구분		기관명
개선된 기관 (45개)	1단계 개선 (39개)	<b>[사후조치대상 아님 → 공시향상기관(37개)]</b>
		(공기업: 6개)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여수광양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준정부: 14개) 도로교통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63) <표 III-89> 우수공시기관과 공시향상기관 지정 요건 및 사후조치 참고

264) <표 III-89> 우수공시기관과 공시향상기관 지정 요건 및 사후조치 참고

〈표 III-95〉의 계속

구분	기관명
개선된 기관 (45개)	<p>(기타: 17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강원대학교병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아동권리보장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p>
	<p><b>[기관주의 → 사후조치대상 아님(2개)]</b> (기타: 2개) (재)축산환경관리원,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p>
2단계 개선 (6개)	<p><b>[사후조치대상 아님 → 우수공시기관(6개)]</b> (준정부: 6개) 국민연금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력거래소</p>
하락한 기관 (17개)	<p><b>[공시향상기관 → 사후조치대상 아님(16개)]</b> (기타: 16개)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주)공영홈쇼핑,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토연구원, 노사발전재단,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전략물자관리원, 중소기업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문화재단,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p>
	<p><b>[사후조치대상 아님 → 기관주의(1개)]</b> (기타: 1개) 경북대학교병원</p>
하락한 기관 (40개)	<p><b>[우수공시기관 → 사후조치대상 아님(23개)]</b> (공기업: 2개) 한국중부발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정부: 8개)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p>
	<p>(기타: 13개)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부산과학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재외동포재단,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p>

주: 1. 공공기관 유형은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결과를 기준으로 함  
 2. 밑줄 친 기관은 전년 대비 점검결과 수준은 하락하였으나, 실제 별점 수준은 전년 대비 개선(별점 감소)된 기관임  
 자료: 기획재정부, 「21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4. 8. 및 「22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3. 4. 4.을 참고하여 작성을 참고하여 작성

## 참고문헌

-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2022. 3.
- \_\_\_\_\_,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 2022. 5.
- \_\_\_\_\_, 「2022년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3. 1.
- \_\_\_\_\_, 「2022년도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3. 1.
- \_\_\_\_\_, 「2022년도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3. 1.
- 국토교통부, 「'기상청+3개 공공기관' 대전 이전 확정」, 보도자료, 2021. 10. 25.
- \_\_\_\_\_, 「2022년 지역발전 추진실적 및 2023년 추진계획」, 2023. 4. 24.
- \_\_\_\_\_,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 발표」, 보도자료, 2021. 6. 7.
- 기획재정부, 「'21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4. 8.
- \_\_\_\_\_, 「'22년도 공공기관 경영공시 전년보다 정확해졌다」, 보도자료, 2023. 4. 4.
- \_\_\_\_\_, 「'22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3. 4. 4.
- \_\_\_\_\_, 「2016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6. 7. 1.
- \_\_\_\_\_, 「2017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8. 3. 21.
- \_\_\_\_\_, 「2018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8. 8. 24.
- \_\_\_\_\_,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6. 19.
- \_\_\_\_\_,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보도자료, 2021. 6. 18.
- \_\_\_\_\_,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6. 25.
- \_\_\_\_\_,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보도자료, 2022. 6. 20.
- \_\_\_\_\_,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6. 20.
- \_\_\_\_\_, 「202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7. 29.

- \_\_\_\_\_, 「202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2. 4. 12.
- \_\_\_\_\_, 「2022년 정부 출자주식 배당금 2조 4,541억 원 확정」, 보도자료, 2022. 5. 31.
- \_\_\_\_\_,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재무성과 따라 '희비' 엇갈렸다」, 보도자료, 2023. 6. 16.
- \_\_\_\_\_,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3. 6. 16.
- \_\_\_\_\_,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실시계획」,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3. 2. 27.
- \_\_\_\_\_,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23. 4. 28.
- \_\_\_\_\_,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10. 6.
- \_\_\_\_\_, 「202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 2022. 8.
- \_\_\_\_\_, 「202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3. 4. 12.
- \_\_\_\_\_,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2. 1. 28.
- \_\_\_\_\_, 「2022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3. 4. 25.
- \_\_\_\_\_, 「2023년 정부 출자주식 배당금 1조 2,387억 원 확정」, 보도자료, 2023. 5. 26.
- \_\_\_\_\_,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3. 1. 30.
- \_\_\_\_\_,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3. 1. 30.
- \_\_\_\_\_,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2022. 12. 19.
- \_\_\_\_\_,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2022. 12. 19.
- \_\_\_\_\_, 「347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23. 4. 28.
- \_\_\_\_\_,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마련」, 보도자료, 2022. 8. 18.
- \_\_\_\_\_,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전자문서 작성지침」, 2022. 3. 23.
- \_\_\_\_\_,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전자문서 작성지침」, 2023. 3. 24.
- \_\_\_\_\_, 「공공기관 통합공시 전면 개편」, 보도자료, 2023. 2. 3.
- \_\_\_\_\_, 「공공기관 혁신 본격화 한다 -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 확정」, 보도자료, 2022. 11. 11.
- \_\_\_\_\_,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예산효율화·복리후생 개선 계획」,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10. 17
- \_\_\_\_\_,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예산효율화·복리후생 개선 계획 확정」, 보도자료, 2022. 10. 17
- \_\_\_\_\_,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11. 11.

- \_\_\_\_\_, 「공공기관 혁신계획 최종안 확정」, 보도자료, 2022. 12. 26.
- \_\_\_\_\_, 「공공기관 혁신계획은 차질없이 추진중입니다 - 공공기관 혁신계획 '23년 1분기 이행실적 점검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3. 4. 20.
- \_\_\_\_\_,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2. 4.
- \_\_\_\_\_,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3. 2. 3.
- \_\_\_\_\_,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2. 26.
- \_\_\_\_\_,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11. 3.
- \_\_\_\_\_,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2022. 11. 3.
- \_\_\_\_\_,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 부칙수정」, 2022. 12. 19.
- \_\_\_\_\_,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 일부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12. 17.
- \_\_\_\_\_,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 전면개정안」, 2018. 3. 8.
- \_\_\_\_\_,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10. 17.
- \_\_\_\_\_, 「기재부, 공공기관 공시 역량 강화지원 프로그램 시행」, 보도자료, 2020. 6. 17.
- \_\_\_\_\_,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9. 23.
- \_\_\_\_\_,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3. 2. 27.
- \_\_\_\_\_,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확정」, 보도자료, 2022. 7. 29.
- \_\_\_\_\_,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보도자료, 2016. 6. 14.
- \_\_\_\_\_, 「자율·책임·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8. 18.
- \_\_\_\_\_, 「재외동포재단 지정해제 및 재외동포협력센터 신규지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3. 6. 9.
- \_\_\_\_\_,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 마련」, 보도자료, 2023. 2. 3.
- \_\_\_\_\_,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3. 2. 3.

- \_\_\_\_\_,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35개 → 55개로 확대」, 보도자료, 2023. 4. 26.
- \_\_\_\_\_, 「통합공시를 통해 공공기관의 ESG 경영 선도」, 보도자료, 2022. 2. 4.
- \_\_\_\_\_,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기획재정부, 2021. 10.
- \_\_\_\_\_,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2022. 10.
- \_\_\_\_\_, 『2022년도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보고서(공기업)』, 2023. 9.
- \_\_\_\_\_, 『2022년도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기금관리형)』, 2023. 9.
- \_\_\_\_\_, 『2022년도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위탁집행형)』, 2023. 9.
- \_\_\_\_\_, 『2022년도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중소형)』, 2023. 9.
-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공공기관 현황 편람』, 2022. 11.
- 산업통상자원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 2020. 12. 28.
- 한국마사회, 「2022년 주요업무 성과 발표」, 보도자료, 2022. 12. 15.
-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 2022년~2026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22. 8.
- \_\_\_\_\_, 「2022년 당기순이익 3,130억 원 시현」, 보도자료, 2023. 3. 2.
- 행정안전부, 「제 28회 국무회의 회의록」, 국무·차관회의 회의록, 2023. 7. 11.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시스템), <http://www.alio.go.kr>
-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자료실,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INTG>
-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홈페이지, <http://innocity.molit.go.kr>
-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





# 부 록

---

부록 1.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현황

부록 2. 공공기관 일반현황

부록 3.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 현황

부록 4. 2022년도 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체계



## 부 록 1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현황(347개, 2023. 9월 현재)

(단위: 개)

주무부처	공기업(32)		준정부기관(55)		기타공공기관(260)
	시장형(13)	준시장형(19)	기금관리형(11)	위탁집행형(44)	
기획재정부 (4)		한국조폐공사 (1)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한국투자공사 (3)
교육부 (22)				한국장학재단 (1)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2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43)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6)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산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37)

주무부처	공기업(32)		준정부기관(55)		기타공공기관(260)
	시장형(13)	준시장형(19)	기금관리형(11)	위탁집행형(44)	
외교부 (2)				한국국제협력단 (1)	한국국제교류재단 (1)
통일부 (2)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
법무부 (3)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3)
국방부 (3)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3)
행정안전부 (3)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
국가보훈부 (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	88관광개발(주), 독립기념관 (2)
문화체육관광부 (31)		그랜드코리아레저(주) (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1)	한국관광공사	(1)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단법인 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화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인문진흥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28)

주무부처	공기업(32)		준정부기관(55)		기타공공기관(260)
	시장형(13)	준시장형(19)	기금관리형(11)	위탁집행형(44)	
농림축산식품부 (12)		한국마사회 (1)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3)	(제)축산환경관리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식진흥원 (8)
산업통상자원부 (41)	(주)강원랜드,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11)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 한전KPS(주) (6)	한국무역보험공사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10)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국제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전MCS(주) (13)
보건복지부 (28)			국민연금공단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제)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이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원은행,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원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학진흥원 (24)

주무부처	공기업(32)		준정부기관(55)		기타공공기관(260)
	시장형(13)	준시장형(19)	기금관리형(11)	위탁집행형(44)	
환경부 (12)		한국수자원공사 (1)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자원환경산업진흥원,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환경보전협회 (7)
고용노동부 (12)			근로복지공단 (1)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7)
여성가족부 (5)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5)
국토교통부 (28)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7)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4)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새만금개발공사,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항공안전기술원 (15)
해양수산부 (17)		해양환경공단 (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5)

주무부처	공기업(32)		준정부기관(55)		기타공공기관(260)
	시장형(13)	준시장형(19)	기금관리형(11)	위탁집행형(44)	
중소벤처기업부 (11)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	(주)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8)
국무조정실 (25)					건축공간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25)
방송통신위원회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			시청자미디어재단 (1)
원자력안전위원회 (3)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
금융위원회 (7)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4)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3)
공정거래위원회 (2)				한국소비자원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
인사혁신처 (1)			공무원연금공단 (1)		

주무부처	공기업(32)		준정부기관(55)		기타공공기관(260)
	시장형(13)	준시장형(19)	기금관리형(11)	위탁집행형(44)	
식품의약품안전처 (4)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4)
관세청 (1)					한국원산지정보원(구.(재)국제원산지정보원) <sup>265)</sup> (1)
재외동포청 (1)					재외동포협력센터(구.재외동포재단) <sup>266)</sup> (1)
경찰청 (1)				도로교통공단 (1)	
소방청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
방위사업청 (2)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2)
문화재청 (1)					한국문화재단 (1)
농촌진흥청 (1)					한국농업기술진흥원 (1)
산림청 (4)				한국산림복지진흥원 (1)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3)
특허청 (6)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정보원 (6)
기상청 (3)					(재)APEC기후센터,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3)

265) 한국원산지정보원은 2023년 7월 개정 「관세법」 시행에 따라 「민법」상 재단법인이었던 (재)국제원산지정보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여 신규 출범한 기관임

266) 재외동포협력센터는 구.재외동포재단(외교부 산하) 해산 후 「재외동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재외동포청 산하에 신설된 기관으로 2023년 6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수시지정된 기관임

## 부 록 2 공공기관 일반현황(2023. 9월 기준)<sup>267)</sup>

### 1] 공기업(32개)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1] 시장형 공기업(13개)						
(주)강원랜드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및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1998.06.29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폐광지역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함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kangwonland.high1. com
인천국제공항공사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1999.02.01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 리운영하고 세계적인 공항전문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원활한 항공운송과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www.airport.kr
한국가스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한국가스공사법」	1983.08.18	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국민생활 편익과 공공복리 향상에 기여함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www.kogas.or.kr
한국공항공사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법」	2002.03.02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하고, 항공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www.airport.co.kr
한국남동발전(주)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및 「(舊)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 에 관한 법률」	2001.04.02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 는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함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32(충무공동)	www.koenergy.kr

267) 2023년 1월 지정 공공기관(347개)과 그 부설기관(15개)을 포함(2023년 신규 지정된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포함)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남부발전(주)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및 「(舊)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 에관한법률」	2001.04.02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창출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4층, 30~35층	www.kospo.co.kr
한국동서발전(주)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및 「(舊)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 에관한법률」	2001.04.02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 및 이와 관련 되는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함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95	www.ewp.co.kr
한국서부발전(주)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및 「(舊)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 에관한법률」	2001.04.02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기사용 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게 하여 전력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285	www.iwest.co.kr
한국석유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한국석유공사법」	1979.03.03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 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 함과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05	www.knoc.co.kr
한국전력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한국전력공사법」	1961.07.01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 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함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www.kepco.co.kr
한국중부발전(주)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및 「(舊)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 에관한법률」	2001.04.02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 안정적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함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북로 160(대천동)	www.komipo.co.kr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	1985.11.01	효율적인 집단에너지 공급을 통해 기후 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 및 국민생활의 편의 증진에 기여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	www.kdhc.co.kr
한국수력원자력(주)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및 「(舊)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 에관한법률」	2001.04.02	친환경, 고품질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우수기술의 공유를 통해 국가 에너 지 경쟁력과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 여하고자 함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www.khnp.co.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b>[2] 준시장형 공기업(19개)</b>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및 「한국가스공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1993.05.27	천연가스 생산기지 및 전국 주배관망 등 천연가스 설비의 예방점검과 책임정 비를 통해 천연가스의 안전하고 안정적 인 생산·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1227	www.kogas-tech.or.kr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문화체육 관광부	「상법」 및 카지노 영업허가	2005.09.06	외국 관광객 유치증진 및 외화획득증 대, 한국카지노 산업의 투명성 및 국제 경쟁력 제고, 이익금의 관광인프라 구 축 및 주주 가치의 극대화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 행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10	www.grandkorea.com
대한석탄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대한석탄공사법」	1950.11.01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 산·가공·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게 하여 석탄의 수요와 공급을 안정시킴으 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 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배울로 85	www.kocoal.or.kr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국토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	2002.05.15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 함으로써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발 전에 이바지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영평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	www.jdcenter.com
주식회사 에스알	국토교통부	「상법 및 철도사업법」 제5조	2013.12.27	이용자의 고속철도 서비스 선택권 확대 와 합리적 경쟁을 통한 철도산업 발전 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56길 12	www.srail.or.kr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법」 제16조	1993.04.24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 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 행과 주택도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 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함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www.khug.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광해광업공단	산업통상 자원부	「한국광해광업공단법」	2021.09.10.	체계적인 광해관리와 광물자원산업의 육성·지원으로 지역 및 국민경제 활성화와 자원안보에 기여함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199	www.komir.or.kr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법」	1969.02.15	도로의 설치 및 관리와 이에 관련된 사업을 통해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www.ex.co.kr
한국마사회	농림축산 식품부	「한국마사회법」	1949.09.29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	경기도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www.kra.co.kr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통신 위원회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	2012.05.23	광고판매 대행, 방송광고 균형발전, 방송통신광고 진흥사업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25)	www.kobaco.co.kr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법」	1969.04.25	부동산 시장의 조사·관리 및 부동산의 가격 공시와 통계·정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부동산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www.reb.or.kr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법」	1967.11.16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www.kwater.or.kr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1975.10.01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에너지산업을 선도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69 (울곡동)	www.kepco-enc.com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조폐공사	기획재정부	「한국조폐공사법」	1951.10.01	은행권, 주화, 국·공채, 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특수제품의 제조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www.komsco.com
한국철도공사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법」	2005.01.01	철도 운영에 관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www.korail.com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09.10.01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www.lh.or.kr
한전KDN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1992.01.23	전력사업과 관련된 시스템 통합(SI) 및 시스템운영(SM) 사업 수행,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수행, 지능형 전력망(Smart-Grid) 관련 사업 수행 등을 목적으로 함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61	www.kdn.com
한전KPS(주)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1984.04.01	발전·송전 등 전력설비 성능과 신뢰도 제고로 전력의 안정적 공급 및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함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11	www.kps.co.kr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	2008.01.21	해양환경의 보전·관리·개선 및 해양오염 방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깨끗하고 풍요로운 해양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녹색실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www.koem.or.kr

② 준정부기관(55개, 부설기관 4개 별도)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b>[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1개)</b>						
공무원연금공단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법」 제1조 및 제4조	1982.02.01	공무원의 퇴직,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www.geps.or.kr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제24조	1987.09.18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www.nps.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1995.05.01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과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및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으로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www.comwel.or.kr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	1989.04.01	기술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www.kibo.or.kr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	1989.04.20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문화센터	www.kspo.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법」	1976.06.01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	www.kodit.co.kr
예금보험공사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제3조	1996.06.01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www.kdic.or.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1979.01.30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 주역으로 육성함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충무공동)	www.kosmes.or.kr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보험법」 제37조	1992.07.07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4 (서린동)	www.ksure.or.kr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1962.04.06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부실자산의 정리 촉진과 부실장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등의 지원,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재산의 관리·처리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www.kamco.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004.03.01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통화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1229-1) 부산국제금융센터	www.hf.go.kr

[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44개, 부설기관 4개)

(재)우체국금융개발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민법」 제32조	1966.04.30	우체국금융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체국예금보험 사업의 향상 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 6(당산동4가)	www.posid.or.kr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민법」 제32조	1980.08.26	안전·신속·정확한 우편물류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76	www.pol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2000.07.01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보장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www.hira.or.kr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법」	2004.01.01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www.kr.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국립공원공단	환경부	「국립공원공단법」	1987.07.01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문화경관 및 지형·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립공원 등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22(반곡동)	www.knps.or.kr
국립생태원	환경부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3.10.28	생태와 생태계 조사·연구·전시 및 대국민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올바른 환경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금강로 1210	www.nie.re.kr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2000.07.01	건강보험사업과 장기요양사업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보건 및 사회보장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	www.nhis.or.kr
(부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업무 등) 제1항 제7호 '의료시설의 운영'	2000.03.03	보험자 직영 병원으로서 가입자의 의료이용편의 도모, 보건의료 수요 충족, 임상의학연구와 건강보험 전반의 각종 조사 분석을 통하여 국민 보건의료 수준 향상과 건강보험 제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	www.nhimc.or.kr
(부설) 서울요양원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제2항제13호	2014.11.1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개발 및 급여비용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 수준 향상과 장기요양 기관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 590길 50 (세곡동 520번지)	www.서울요양원.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국토안전관리원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법」	2020.12.10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보장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4	www.kalis.or.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1962.06.21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전문인력의 유치 및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릉로 13	www.kotra.or.kr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도로교통법」 제120조	1954.02.12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기술 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예방하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2(반곡동)	www.koroad.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2014.01.01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흥동) 대림빌딩 2~3, 11, 16, 18층	www.semas.or.kr
(부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8조(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 등)	2014.03.31	국가 SW정책 중앙연구소로서 SW를 활용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혁신을 도모하는 정책대안을 수립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12번길 22 글로벌 R&D센터 연구동(A) 4층	https://www.spri.kr/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법」 제36조	2001.07.27	축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의 원활 및 가축개량의 축진을 통하여 국내산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에 기여하고자 함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www.ekape.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	1974.01.11	가스안전기술의 개발 및 가스안전관리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 으로써 가스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 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가스안전산업 발전에 기여함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www.kgs.or.kr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2006.03.31	고용·직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인력 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고용관련 통계의 작성·보급 등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 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함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www.keis.or.kr
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 관광부	「한국관광공사법」	1962.06.26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진흥,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의 연구·개발 및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훈련에 관한 사 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 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10	knto.or.kr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법」	1981.07.01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통체 계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 행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 고,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 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울곡동)	www.kotsa.or.kr
한국국제협력단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법」	1991.04.01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 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 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 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 여 각종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하계 함 으로써 국제협력증진에 이바지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www.koica.go.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2조	1977.07.01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공간정보와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 개발 및 지적측량 등 수행을 목적으로 함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0	www.lx.or.kr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	1967.12.01	농수산물식품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수급을 안정시키고, 식품산업을 육성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빛가람동)	www.at.or.kr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2000.01.01	환경친화적인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 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www.ekr.or.kr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법」 제66조	1972.07.21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방송·통신·전파의 진흥 및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전파이용 기회 확대와 방송·통신·전파 진흥에 기여함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0	www.kca.kr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보훈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1981.11.02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에 대한 의학적·정신적 재활 및 직업재활을 행하여 그 자립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40(반곡동)	www.bohun.or.kr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	2009.12.07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지원 및 법령에 의해 위탁받은 사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인 사회보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www.ssis.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청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	2016.04.18	국민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2층(둔산동 아너스빌)	www.fowi.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	2009.05.04	산업기술혁신 촉진 및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여 산업기술 강국 실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2-7, 12-14, 16-17층	www.kiat.or.kr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	2009.05.04	산업기술개발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업기술의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과 국가 혁신 역량 제고에 기여함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	www.keit.re.kr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	1997.01.10	산업단지의 조성 및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과 기업체의 산업활동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통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www.kicox.or.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1987.12.09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재해예방에 힘쓰도록 하여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함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www.kosha.or.kr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법」	1982.03.18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통해 산업인력 양성 및 공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교동)	www.hrdkorea.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석유관리원	산업통상 자원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	1983.11.1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유통관 리, 연구개발, 시험조사 등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위탁 또는 지정받은 사 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일반의 이익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1207	www.kpetro.or.kr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 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제33조	1987.07.01	「소비자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소비 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 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함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www.kca.go.kr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관리법」 제55조	2016.07.01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과 승강 기 안전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함 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한 생활과 행복 실현을 목 적으로 함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02	www.koelsa.or.kr
한국에너지공단	산업통상 자원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	1980.07.04	에너지 효율 향상과 신재생에너지 보 급·확산 및 산업 육성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유도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우정동)	www.energy.or.kr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법」	2009.06.26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 하게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학술 및 과학 기술 진흥과 연구역량 제고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www.nrf.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부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정보통신 융합 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2014.04.01	ICT R&D지원을 통한 정보통신기술 및 산업진흥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a href="http://www.iitp.kr">http://www.iitp.kr</a>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산업통상 자원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8조	2009.01.01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천길 19	<a href="http://www.korad.or.kr">www.korad.or.kr</a>
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2009.07.23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와 안전한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와 관련한 국제 협력·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임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a href="http://www.kisa.or.kr">www.kisa.or.kr</a>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1990.09.01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59(구미동)	<a href="http://www.kead.or.kr">www.kead.or.kr</a>
한국장학재단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009.05.07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학자금 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육성에 기여함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신암동)	<a href="http://www.kosaf.go.kr">www.kosaf.go.kr</a>
한국전기안전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	1974.06.07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 및 전기안전에 관한 연구·홍보 등을 통해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함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11	<a href="http://www.kesco.or.kr">www.kesco.or.kr</a>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전력거래소	산업통상 자원부	「전기사업법」 제35조	2001.04.02	전력시장의 공정한 운영과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추진함으로써 전력산업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25	www.kpx.or.kr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능정보화기본법」 제12조	1987.01.30	지능정보사회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가기관 등의 지능정보사회 시책 및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구광역시 동구 침단로 53	www.nia.or.kr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2019.07.01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함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	www.komsa.or.kr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한국환경공단법」	2010.01.01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함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종합환경연구단지	www.keco.or.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2009.04.08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한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 및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www.keiti.re.kr

### ③ 기타공공기관(260개, 부설기관 11개 별도)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사)남북교류협력 지원협회	통일부	「민법」 제32조	2007.05.18	정부 위탁업무 수행 및 정책건의,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사·연구 및 분석 등을 통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97, 고려대연각센터빌딩 601호	www.sonosa.or.kr
(재)APEC기후센터	기상청	「민법」 제32조	2005.06.09	아·태 지역의 기후변화 및 변동의 파급 효과를 경감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이상기후 감시 및 최적의 기후예측정보를 생산함으로써 아·태 지역의 번영 실현에 이바지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7로 12	www.apcc21.org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체육관광부	「민법」 제32조	2006.01.12	예술유통의 활성화와 예술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예술현장의 자생력 제고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57길 (연건동) 홍익대학교 대학로캠퍼스 교육동 12층	www.gokams.or.kr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법」 제32조	2000.11.23	우정사업조직에 속한 부동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우정자산의 적극적 활용 및 가치향상을 도모, 우정시설의 최적화와 국민의 우체국 이용편의 및 우정사업 종사자에 대한 복지증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 2 (구의동) 동서울우편물류센터 4층	www.poma.or.kr
(재)일제강제동원 피해지원재단	행정안전부	「민법」 제32조 및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2014.06.03	일제강제동원 피해·희생자 추모사업 및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조사·연구 등 피해구제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603호	www.fomo.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재)축산환경관리원	농림축산 식품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8조의2	2015.05.08	친환경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 및 가 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이용촉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환경과 조화 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 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7층(나성동, 한림프라자)	www.lemi.or.kr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복지부	「민법」 제32조	2019.09.24.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표준 마련 및 표준의 적용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 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품질향상 을 통한 환자안전 및 환자 진료의 연 속성 지원 등 보건의료정보와 관련된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36	www.k-his.or.kr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민법」 제32조	1930.12.03	우편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우정문화 를 창달함으로써 우정사업 발전과 국민 문화 생활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83 (영등포동 7가)	www.posa.or.kr
(주)공영흡소평	중소벤처 기업부	「상법」	2015.03.05	중소기업 상품 및 농축수산물의 홍보 와 판로개척을 지원함으로써 합리적 소비문화와 국민경제 견인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34 (상암동)	www.gongyoung.kr
88관광개발(주)	국가보훈부	「상법」 및 「보훈기금법」 제7조 제6항	1987.07.30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에 소요되는 보 훈기금 증식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된 88골프장을 운영·관리하기 위해 설립됨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석성로 521번길 169(청덕동)	www.88countryclub. co.kr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림축산 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	2003.06.27	효율적인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관리 및 수입식용축산물 검역을 통해 축산 물의 위생·안전성을 향상시켜 국민보 건 향상에 기여하고 양축농가의 소득 증대 및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www.lhca.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교육부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1997.05.07	치의학에 관한 연구와 진료를 하게 함으로써 치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죽헌길 7	www.gwnudh.or.kr
강원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2000.05.18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학, 치의학 및 간호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백령로 156	www.knuh.or.kr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1997.12.0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공제사업,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 및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사업 등을 실시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국제빌딩 10층	www.cw.or.kr
건축공간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2020.11.20	건축과 도시공간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민 복리의 향상과 국가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43, KT&G 세종타워B 7~9층	www.auri.re.kr
게임물관리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2013.12.23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www.grac.or.kr
경북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1907.02.10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 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	www.knuh.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교육부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2016.06.01	「고등교육법」에 의한 치의학 및 치의학 관련 학문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치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75	www.knudh.kr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1987.02.21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79	www.gnuh.co.kr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2005.07.01	경제·인문사회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국가의 연구사업 정책의 지원 및 지식산업발전에 이바지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 3,4,8,9층	www.nrc.re.kr
(부설) 육아정책연구소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관」 제4조의2 및 「한국교육개발원 정관」 제5조의2	2005.09.30	국가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육아정책개발 관련 연구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육아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함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9층	www.kicce.re.kr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토교통부	「민법」 제32조	2019.11.2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와 공간정보 품질 관련 정책 및 연구 개발 등을 통해 공간 정보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양산로 91, 1209호, 1404호(당산동3가, 리드원센터)	www.siqms.or.kr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 구.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민법」 제32조	2012.12.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연구 개발 사업성과의 활용·확산을 지원하여 과학기술 진흥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70(NH타워) 17층, 20층	www.compa.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7.01.05	과학기술 및 관련 혁신에 대한 제반문제를 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B동) 5,6,7층, 연구지원동(A동) 3층	www.stepi.re.kr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2014.06.3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연구사업 정책의 지원 및 지식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 5,6,7층	www.nst.re.kr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보건복지부	「민법」 제32조	2011.12.27	생명윤리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의생명과학 및 그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안전하게 연구, 개발, 이용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조성과 관리를 추구하고, 연명의료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하는 등 생명윤리정책 구현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함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별관 2층	www.nibp.kr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부	「평생교육법」 제19조	2008.02.15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	www.nile.or.kr
국립광주과학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2013.07.23	과학기술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전시·교육함으로써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35	www.sciencecenter.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환경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2015.06.03	국가 생물주권의 조기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	경상북도 상주시 도남2길 137	www.nmibr.re.kr
국립대구과학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2013.06.24	과학기술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 지식을 보급함으로써 과학기술 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기여함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테크노대로 6길 20	www.dnsm.or.kr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문화체육 관광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5조	2004.07.20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이용촉진과 박물관문화·예술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증진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www.nmf.or.kr
국립부산과학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2015.07.13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기여하고 과학기술 문화를 창달, 과학기술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며 동남권 지역의 과학문화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 밖 과학교육 활성화에 기여함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산관광6로 59	www.sciport.or.kr
국립암센터	보건복지부	「암관리법」 제27조	2000.03.22	「암관리법」에 따라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www.ncc.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국립중앙의료원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0.04.02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육성하여 공공의료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과 국가 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5	www.nmc.or.kr
국립항공박물관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법」	2019.12.23	항공문화와 항공산업의 유산을 발굴·보존·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항공문화의 진흥과 항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77(공항동)	www.aviation.or.kr
국립해양과학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설립)	2020.05.20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각종 해양과학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양에 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해양산업 발전에 이바지함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해양과학길8	www.kosm.or.kr
국립해양박물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박물관법」	2015.04.20	해양문화와 해양산업의 유산을 발굴·보존·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해양문화의 진흥과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45	www.mmk.or.kr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5.04.20	해양생물자원의 수집·보존·전시 및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의 보전 및 해양수산업 발전에 기여함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101번길 75	www.mabik.re.kr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환경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2020.08.21	도서·연안 생물자원과 그 다양성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전시·교육 등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국가 생물주권의 확보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도안길 99	hnibr.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법」	1970.08.06	국방에 필요한 병기·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연구·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연구 및 시험 등을 담당하고 민·군기술협력 사업과 민간장비의 시험·평가 지원 사업을 수행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www.add.re.kr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사업청	「방위사업법」 제32조	2006.02.02	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기술 기획, 연구와 기술 정보의 확보, 유통, 관리, 품질보증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 국방의 완수에 기여하고자 함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20(충무공동)	www.dtaq.re.kr
국방전직교육원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법」	2015.01.01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과 취업지원을 함으로써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사회복귀에 기여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대로 83(창곡동)	www.moti.or.kr
국제방송교류재단	문화체육 관광부	「민법」 제32조	1996.04.10	방송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와 우호 친선을 도모하고, 방송영상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지원해 방송·영상·광고 산업의 진흥 및 문화예술의 선양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51	www.arirang.com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축산 식품부	「식물방역법」 제29조의2	2012.02.22	미국, 캐나다, 칠레 및 뉴질랜드 등으로 출항하는 선박에 대한 아시아메미나방(AGM)검사 및 증명서 발급으로 국내 수출산업을 지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탁받은 식물검역 및 방제 업무를 통해서 국내 농림업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제903호	www.ipab.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제16조	2002.12.30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신기술 심사·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토교통기술 발전·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www.kaia.re.kr
국토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8.10.04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함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www.krihs.re.kr
기초과학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2011.11.21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 및 기초과학 기반 순수 기초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창조적 지식 및 원천기술 확보와 우수 연구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5 (도룡동 3-1)	www.ibs.re.kr
(부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 및 「기초과학연구원 정관」 제37조의2	2005.10.01	전문적인 수학연구를 통해 수학분야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수학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및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89번길 70	www.nims.re.kr
노사발전재단	고용노동부	「민법」 제32조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2007.04.05	노사공동 사업을 통한 노사자율의 상생적인 노사관계 발전 도모, 노사공동의 고용안정, 전직지원, 일터혁신, 노사관계 관련 업무의 전문적 수행, 우리나라와 외국의 노사관계 제도, 관행에 대한 국제적 상호 이해 촉진과 민간노동 외교 활성화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www.nosa.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농림수산물교육 문화정보원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	2012.05.23	농업 인적자원의 육성, 농식품·농촌 정 보화의 촉진, 농촌 문화의 가치 확산 및 홍보, 농업경영체의 역량 제고, 농산물 의 안전정보 제고 등을 효율적으로 추 진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 5로 19 (반곡동 772-3)	www.epis.or.kr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축산 식품부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2009.10.02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 발사업 기획·관리 및 평가의 효율적 지원을 목적으로 함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45 (빛가람동 352-1)	www.ipet.re.kr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63조의2	2004.05.19	정부의 농업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운 용·관리 및 감독함으로써 농식품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2층	www.apfs.kr
대구경북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	보건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2010.12.14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 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 성화 및 연구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 으로써 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 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 의 발전에 이바지함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88	www.kmedihub.re. 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9.12.29	대외경제정책과 관련한 문제를 조사· 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의 대외경제정 책 수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반곡동)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www.kiep.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부	「법률구조법」 제8조	1987.09.01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 변호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2로 26	www.klac.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대한장애인체육회	문화체육 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2005.11.25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중 목별 경기단체,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및 시·도 지회를 지원·육성하고 유형 별 장애인체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 모하며 우수한 경기인을 양성하여 국 위선양 및 국제스포츠 교류활동을 통 한 국제 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벨로드롬 1층	www.koreanpc.kr
대한적십자사	보건복지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1905.10.27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 사업의 원활 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 정신 의 이상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하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50	www.redcross.or.kr
대한체육회	문화체육 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1920.07.13	체육운동 범국민화로 국민 건강과 체 력증진, 여가선용,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국위선 양에 기여하며 올림픽주의 원칙과 가치 확산, 스포츠를 통한 국제친선과 세계 평화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문화(올림픽컨벤션)센터	www.sports.or.kr
독립기념관	국가보훈부	「독립기념관법」	1986.08.20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에 관한 자료 를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	www.i815.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동북아역사재단	교육부	「동북아역사재단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006.09.22	동북아시아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지속적·종합적 연구 및 분석을 실시하고, 체계적·전략적 정책을 개발하며, 홍보·교육활동과 교류·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바른역사인식을 공유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NH농협생명빌딩 서관	www.nahf.or.k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행정안전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2001.11.12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www.kdemo.or.kr
부산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1956.11.01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학·치의학·한의학·약학·간호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www.pnuh.or.kr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교육부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2011.09.01	치의학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함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으로 20	www.pnudh.co.kr
부산항만공사	해양수산부	「항만공사법」	2004.01.16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부산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중앙동6가)	www.busanpa.com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2010.09.2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 및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7, 4-5-14층	www.koreahana.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조	1974.01.11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 사망 및 직 무상 질병, 부상, 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 (빛가람동)	www.tp.or.kr
산업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6.01.07	국내외의 산업·기술에 관련된 각종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조사하고 연구하여 이와 관련된 국가의 정책수립에 이바지하고 이를 널리 보급·활용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과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www.kiet.re.kr
새만금개발공사	국토교통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	2018.09.21	새만금사업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www.sdco.or.kr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2016.09.23	서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안정과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4, 그랜드센트럴 9~12, 14층	www.kinfa.or.kr
서울대학교병원	교육부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1978.07.15	서울대학교병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www.snuh.org
(부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육부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제3조 및 「서울대학교병원 정관」 제4조	2003.04.15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	www.snubh.org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교육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2004.09.01	치의학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www.snudh.org
세종학당재단	문화체육관광부	「국어기본법」 제19조의2	2012.10.24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 서초평화빌딩 7, 11, 12층	www.ksif.or.kr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000.07.22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순환로 170 (백석동)	www.slc.or.kr
수자원 환경산업진흥(주)	환경부	「상법」	2011.04.26	벉길경관유지·관리, 마리나 운영, 강문화관 운영·관리 및 관광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옥로 270번길 74	www.kweco.or.kr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제90조의2	2015.05.15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해 시청자 미디어 교육·체험·홍보, 미디어 교육 확대와 미디어 격차 해소,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 지원,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 등의 사업을 통해 국가 미디어 사업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4, 3~5층	www.kcmf.or.kr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제67조	2009.06.25	식품안전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 사업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 식품안전관리 향상과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36, 5층, 11층(원남동, 보령빌딩)	www.foodinfo.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벤처 기업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	2000.08.07	17개 신용보증재단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도모, 재보증업무 수행을 통한 지역경제발전 및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나라키움대전센터 15층 (월평동)	www.koreg.or.kr
아동권리보장원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제10조의2	2019.07.16	아동정책 및 아동복지 관련 사업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지하1층, 5층 일부, 6층, 7층 (수송동, 광화문G타워)	www.ncrc.or.kr
에너지경제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6.09.01	에너지 시장 및 산업의 국내외 환경변화를 조사·분석하고 에너지 정책 연구를 포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405-11	www.keei.re.kr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양수산부	「항만공사법」	2011.08.19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여수항과 광양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대로 465	www.ygpa.or.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2005.09.01	연구개발특구 혁신생태계 육성과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www.innopolis.or.kr
영상물등급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	1999.06.07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을 연령별로 등급분류함으로써 영상물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1, 3층	www.kmrb.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1973.04.03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30 (우동)	www.kofic.or.kr
예술의전당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예술진흥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1987.01.07	문화예술의 창달과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공간의 운영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www.sac.or.kr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 재단	보건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2010.12.15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 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첨단의료복 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 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 산업의 발 전에 이바지함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23	www.kbiohealth.kr
울산항만공사	해양수산부	「항만공사법」	2007.07.05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울산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 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울산항마린센터	www.upa.or.kr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보건복지부	「의료법」 제58조의 11	2010.10.26	의료기관 인증 및 평가 통합, 환자안 전활동 지원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 함으로써 보건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안전 수준 제고를 통하여 국 민 건강을 유지·증진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10, 10층	www.koiha.or.kr
인천항만공사	해양수산부	「항만공사법」	2005.07.11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인천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 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www.icpa.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국토교통부	「민법」 제32조	1978.04.18	국가기간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위탁교육 등 포함)을 대행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함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88	www.kicte.or.kr
재단법인 국악방송	문화체육 관광부	「민법」 제32조	2000.02.14	방송을 통해 국악 및 한국전통문화예술을 국민에 홍보·보급·교육함으로써 국악의 진흥을 도모하는 한편, 한국전통문화예술의 발전 및 지역문화복지향상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컴북로 54길12 7, 10~12층	www.igbf.kr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국토교통부	「민법」 제32조	1997.12.23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와 성능평가 등을 통한 안전기술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54	www.kcesi.or.kr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벤처 기업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2008.02.19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으로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제고 및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www.debc.or.kr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보건복지부	「민법」 제32조	2017.06.27	인체조직의 채취, 가공 및 분배 등을 공익적으로 수행하여 조직의 적정한 수급과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62번길 37, 1006호	kptb.kr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산업통상 자원부	「민법」 제32조	2006.12.26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하고 에너지 관련 분야의 상호 협력 증진과, 정책홍보, 국제협력 등의 사업을 통하여 에너지산업 발전과 진흥에 기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152	www.koref.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	2019.07.16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 요한 사업을 수행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35, 충정빌딩 9층, 10층	www.kdissw.or.kr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보건복지부	「민법」 제32조	2017.04.01	뇌사 또는 사망자의 송고한 기증 정신을 바탕으로 윤리적이고 안전한 기증의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과 의학 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6 국민연금공단충정로사옥 5층	www.koda1458.kr
재외동포협력센터 <sup>268)</sup> * 구.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청	「재외동포기본법」 제11조	2023.06.05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www.okocc.or.kr
전남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1993.03.27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학, 치의학 및 간호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보 건 향상에 이바지함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42	www.cnuh.com
전략물자관리원	산업통상 자원부	「대외무역법」 제29조	2007.06.05	전략물자의 수출입업무와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 16층	www.kosti.or.kr
전북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1994.07.04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학, 치의학 및 간호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www.jbuh.co.kr

268) 재외동포협력센터는 구.재외동포재단(외교부 산하) 해산 후 「재외동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재외동포청 산하에 신설된 기관으로 2023년 6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수시지정된 기관임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전쟁기념사업회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법」 제3조	1989.01.31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 예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용산동 1가 8)	www.warmemo.or.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6조	2009.08.24	정보통신산업의 효율적 지원과 진흥기반 조성을 통해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 10	www.nipa.kr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5.02.04	국내·외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방송분야의 정책·제도·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이를 보급·활용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보통신정책의 수립과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정통로 18	www.kisdi.re.kr
정부법무공단	법무부	「정부법무공단법」	2008.02.15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8길 12	www.kgls.or.kr
제주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2001.11.01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학, 치의학 및 간호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 및 제주지역의 보건·의료사업에 이바지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 13길 15	www.jejunuh.co.kr
주택관리공단(주)	국토교통부	「상법」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2항	1998.09.28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주택관리 및 임대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함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37 (충무공동 225-8)	www.kohom.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	2002.01.22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 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함으로써 경영혁신과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 여하고자 함	세종특별자치시 집현중앙로 79	www.tipa.or.kr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1995.12.21	중소기업제품 판매시설의 설치와 운영, 도·소매, 홍보·전시, 통신판매·전자상 거래 등 중소기업 판로지원 종합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목동)	www.sbdc.or.kr
중소기업은행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은행법」	1961.08.01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	www.ibk.co.kr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기본법」제25조의2	2004.07.01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예 의하여 국내외 중소벤처기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연구, 평가를 통 해 이와 관련된 국가의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 이를 널리 보급·활용하거 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건전한 발전 과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함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 1가길 77	www.kosi.re.kr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 사업단	기상청	「민법」 제32조	2020.09.01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모델을 개발함 으로써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35 파크스퀘어 4F	www.kiaps.org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1조	2019.10.24.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며,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술·서비스혁신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	세종특별자치시 집현중앙7로 16	www.kised.or.kr
충남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1972.07.01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www.cnuh.co.kr
충북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1991.07.20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학, 치의학, 간호학, 약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www.cbnuh.or.kr
코레일관광개발(주)	국토교통부	「상법」 및 「(舊)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	2004.08.11	철도 인프라와 민간관광 전문경영 노하우 접목을 통한 고품격 서비스 제공으로 철도 부가수의 창출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78	www.korailtravel.com
코레일네트웍스(주)	국토교통부	「상법」 및 「(舊)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	2004.09.21	철도인프라를 활용한 부대수의 창출 및 사업다각화로 철도 경영개선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69(한강로 2가 391) 용산푸르지오씨밋 13층, 14층	www.korailnetworks.com
코레일로지스(주)	국토교통부	「상법」 및 「(舊)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	2003.12.31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등 국가물류장애 발생 시 적극적 대응 조치를 통한 물류대란 최소화 및 철도수송의 약점인 일관수송(Door-to-Door) 서비스 구축으로 고객편의 및 철도수송량 증대를 목적으로 함	경기도 의왕시 오봉로 175	www.koraillogis.com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코레일유통(주)	국토교통부	「상법」 및 「(舊)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	2004.12.02	철도 역사 구내영업과 광고사업의 체계적인 개발운영을 통해 철도고객의 니즈 충족 및 한국철도공사 수익경영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www.korailretail.com
코레일테크(주)	국토교통부	「상법」 및 「(舊)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	2004.12.09	안정적인 철도시설물 유지관리 및 KTX 차량 등 정비 외주화 위탁업무 수행으로 철도공사 인력효율화와 경영개선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476	www.korailtech.com
태권도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2005.07.01	태권도원 조성·운영 및 태권도 진흥에 기여함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태권도원	www.tpf.or.kr
통일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91.02.02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제반 사항을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여 국가의 통일 및 대북정책 수립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www.kinu.or.kr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고용노동부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9조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	1998.02.05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기능기술자, 기능장 등 기술·기능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산학협력사업, 지역산업인력개발 및 취약계층 직업능력개발·교육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함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www.kopo.ac.kr
한국개발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1.03.11	국내외 경제사회 현상에 관한 종합적 연구 및 이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정책 수립과 경제발전 전에 이바지함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www.kdi.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부설) KDI국제정책대학원	국무조정실	「한국개발연구원 정관」 제27조	1997.12.05	개발 및 공공정책, 공공관리 분야의 국내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www.kdischool.ac.kr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여성가족부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	2015.01.01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족서비스 전달 체계 지원으로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가족역량 강화 도모에 기여하 고자 함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지상 21, 24층	www.kihf.or.kr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	2014.07.29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 하여 필요한 정책수립의 지원과 사업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30-80 보건복지행정타운 8~10층	www.khepi.or.kr/kps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3.06.11	건설 및 국토관리 분야의 원천기술 개 발과 성과 확산을 통해 건설산업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국가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함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www.kict.re.kr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고용노동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2020.10.05	노사관계 당사자,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 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폭넓게 하고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 자의 전문성 및 노동관계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제고하여 노사갈등을 예방 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광주시 봉골길 229 (문형동)	www.keli.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고전번역원	교육부	「한국고전번역원법」	2007.11.23	고전문헌을 수집·정리·번역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1로 85	www.itkc.or.kr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민법」 제32조	2010.04.01	창의적인 공예문화, 디자인문화, 전통 생활문화의 확산과 진흥을 통하여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53 해영회관 4~5층	www.kcdf.or.kr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	2007.12.03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해결하고 새로이 발생하는 산업분야 및 거래행태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법집행의 효율성을 지원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9층	www.kofair.or.kr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	1999.02.01	과학기술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조사·분석·평가와 예산의 배분·조정, 과학기술 국제협력 등에 관한 연구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과학기술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39	www.kistep.re.kr
(부설)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관」 제3조	2007.11.01	과학기술인력의 자기계발과 변화·혁신에 필요한 교육 제공 및 조사·연구를 통해 국가R&D 투자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4길 45	www.kird.re.kr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66.02.10	국가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창조적 원천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그 성과를 확산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4길 5	www.kist.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부설) 국가녹색기술연구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관」 제32조의2	2013.02.01	녹색기술 연구개발 정책수립과 녹색기술 관련 국가 간 연계·협력 등을 지원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포스트타워 14층	www.nigt.re.kr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62.01.01	국가 과학·기술 정보 분야의 전문 연구 기관으로서 국가 과학기술 진흥과 산업 의 발전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5	www.kisti.re.kr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2	1967.12.21	과학기술문화의 창달과 창의적 인재육성 체제의 구축을 지원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역삼동, 과학기술회관 2관)	www.kofac.re.kr
한국교육개발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2.08.30	한국 교육이 당면한 제반 문제 해결과 미래 교육을 위한 종합적·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혁신적 교육체제를 개발함으 로써 교육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와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7	www.kedi.re.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98.01.0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을 연구·개발하며 각종 교육평가를 연 구·시행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적 향 상 및 국가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8	www.kice.re.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1999.04.22	교육과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 작·조사·수집하고, 교육정보제공체 를 구축·운영함으로써, 교육 및 학술연 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가교육의 발 전에 이바지함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 (동내동) KERIS 빌딩	www.keris.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교통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7.08.25	교통·물류 정책과 기술에 관한 종합적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교통 정보 및 데이터를 수집·분석·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발전에 기여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www.koti.re.kr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법」	1987.03.02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37	www.kida.re.kr
한국국제교류재단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1991.12.30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 증진을 목적으로 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	www.kf.or.kr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보건복지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2006.08.18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www.kofih.org
한국기계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6.12.30	기계분야의 연구개발, 성과확산, 신뢰성평가 등을 통해 국가 및 산업계의 발전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56	www.kimm.re.kr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청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	2009.12.30.	기상산업의 진흥·발전,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및 유통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산업·경제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35, 충정빌딩 13층~15층	www.kmiti.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부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52조의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	1991.11.02	고급기술·기능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이론과 현장실기 및 학습조직화 능력을 겸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인력개발담당자 및 실천공학기술자의 양성」에 기여함	충청남도 천안시 병천면 충절로 1600	www.koreatech.ac.kr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8.08.01	국가과학기술발전의 기반이 되는 기초 과학 진흥을 위한 연구 시설·장비 및 분석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 연구지원 및 공동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www.kbsi.re.kr
한국나노기술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2003.12.23	나노소자, 화합물 반도체분야의 연구개발 및 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나노기술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함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9	www.kanc.re.kr
한국노동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8.05.09	고용·노동과 관련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연구·분석하고, 이와 함께 고용·노동·사회정책을 개발하며, 국민인식을 제고함으로써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를 지향함을 목적으로 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www.kli.re.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보건복지부	「민법」 제32조 및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2005.12.27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종사자 및 참여자 교육, 조사 및 연구사업, 노인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	www.kordi.or.kr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촌진흥청	「농촌진흥법」 제33조	2009.09.07	정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민간 등의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적 진흥을 목적으로 함	전북 익산시 평동로 457 (송학동 381)	www.koat.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8.04.01	농촌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www.krei.re.kr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민법」 제32조	1993.02.04	데이터 산업의 성장과 데이터의 사회적 활용 증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사회의 혁신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42 부영빌딩 7~8층	www.kdata.or.kr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국토교통부	「상법」 및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	2019.05.09	유료도로 이용료 수납 및 이에 관련된 콜센터와 교통방송 제공 등을 통해 이용고객의 편의 증진에 기여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57번길 11 2층	www.exservice.co.kr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문화체육 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	2013.08.28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예방 및 치유·재활 사업과 활동을 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건전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남산스퀘어 8층	www.kcgp.or.kr
한국등산·트레킹 지원센터	산림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2008.07.21	건전한 등산·트레킹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등산·트레킹활동 지원에 이바지함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상로67 (비래동)	www.komount.or.kr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	1970.05.19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www.kidp.or.kr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산업통상 자원부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 41조	2010.06.24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함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	www.kiria.org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문학번역원	문화체육 관광부	「문학진흥법」 제13조	1996.05.06	체계적인 한국문학의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 및 교류를 통하여 한국문학의 발전 및 세계화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12길 32(삼성동)	www.ltikorea.or.kr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기본법」 제11조의2	2002.12.04	문화예술의 발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 추진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www.kcti.re.kr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	2005.02.03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효율적 지원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YTN 뉴스퀘어 11~12층	www.arte.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	2005.08.26	훌륭한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함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www.arko.or.kr
한국문화재단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제9조	1980.04.01	우리의 문화재를 보호·보존하고, 전통 생활문화를 창조적으로 계발하여 이를 보급, 활용함으로써 우수한 우리의 민족 문화를 널리 보전 선양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 (삼성동)	www.chf.or.kr
한국문화정보원	문화체육 관광부	「민법」 제32조	2002.12.23	문화의 가치가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 개발과 사업추진을 지원함으로써 창의적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구축 및 문화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6층/8층	www.kcisa.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문화체육 관광부	「상법」 제288조	1984.01.24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광주시 삼지곡길 95 (삼동)	www.newseoulgolf. co.kr
한국발명진흥회	특허청	「발명진흥법」 제52조	1994.12.26	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 진하고 발명가의 이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업계의 기술혁신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www.kipa.org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1953.03.05.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 및 재범방지 활동을 통해 안전한 공동체를 구현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1로 86 (율곡동)	www.koreha.or.kr
한국법제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90.07.30	국내외 법제 및 관련 데이터를 전문적 으로 조사·분석하는 등 입법연구 플랫폼 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 써 국가의 입법정책을 지원하고 법률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www.klri.re.kr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 기업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1	2005.06.29	창업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성장 발전을 위한 투자의 촉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한국벤처투자빌딩	www.kvic.or.kr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2007.04.04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등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해당 업무 종사자 등에 게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기회를 제공 하고, 보건복지분야의 발전을 도모하 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www.kohi.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0.07.20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인구·사회·경제 상황을 조사하고 연구·분석하며, 사회정책 및 사회보장제도를 수립·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로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www.kihasa.re.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1999.02.06	보건산업의 육성·발전과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www.khidi.or.kr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9조	2008.12.23	의약품·의료기기·의료기술의 임상적 안전성·유효성 및 경제적 효과 등에 관한 과학적 근거를 분석·제공하여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보건의료정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하여 건강보험 및 의료재원 투자의 합리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3~5층	www.neca.re.kr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1992.04.20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전문적·객관적으로 운영하고 국내의 시험제도에 대한 조사·연구·개발을 통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배출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5	www.kuksiwon.or.kr
한국보육진흥원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제8조	2009.12.23	보육·양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양육정책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영유아와 부모, 보육교직원 등 수요자의 만족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3,4,5,6층	www.kcpi.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1989.12.04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경영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대로 345	www.kasfo.or.kr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1952.02.15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협의·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공덕동) 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www.bokji.net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0조	2010.12.31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새마을금고빌딩(6~8층)	www.socialenterprise.or.kr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1조	1966.04.13	기술혁신성과물에 대한 시험평가 및 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함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0 (충무공동)	www.ktl.re.kr
한국산업은행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법」	1954.04.01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함으로써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www.kdb.co.kr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부	「수도법」 제56조	2002.01.21	회원 간 소통과 교류를 통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하여 공공복리증진, 물산업 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244(대림동 651-5)	www.kwwa.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5.02.01	생명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공 공인프라 구축·운영을 통해 국가생명 과학기술, 산업 발전 및 국가·사회현안 해결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www.kribb.re.kr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9.10.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 거로 생산기술 분야의 산업원천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지원 및 성과확산 등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양대기로길 89	www.kitech.re.kr
한국세라믹기술원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의2	2009.05.04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분석·평가, 기술 지원 및 정책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 세라믹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01	www.kicet.re.kr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1977.06.01	소방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소방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소방제품 및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 성과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대국민 소방 안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www.kfi.or.kr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산림청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4	2017.05.17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위 해 기후 및 식생대별로 조성한 국립수 목원을 운영·관리하고,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 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 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3층	www.koagi.or.kr
한국수산자원공단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	2010.11.18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 수산자원 관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함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이동길 4	www.fira.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환경부	「민법」 제32조	2017.12.20	건전한 물 순환과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물 관련 재해 피해 최소화 등에 필요한 정확하고 공정한 수자원 기초 자료의 생산, 분석, 제공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킨텍스 제2전시장 오피스동 8~9층, 11~13층, 9홀	www.kihs.re.kr
한국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법」	1976.07.01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	www.koreaexim.go.kr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	2011.02.25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참여기업·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추진함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로 100	www.foodpolis.kr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7.02.13	식품·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 및 식품·건강기능식품·축산물·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156	www.haccp.or.kr
한국식품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7.12.31	식품 분야의 연구개발, 공익가치창출, 성과확산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해 국가 산업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245	www.kfri.re.kr
(부설) 세계김치연구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치산업진흥법」 제13조 및 「한국식품연구원 정관」 제32조의2	2010.01.01	김치중주국의 위상 제고와 글로벌 김치 문화 창진(倉進)을 위해 김치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김치 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광주광역시 남구 김치로 86 (임암동)	www.wikim.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	2003.03.05	양성평등교육 및 성인지 교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킴으로써 우리사회의 남녀 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기반의 조성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	www.kigepe.or.kr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수산부	「어촌·어항법」 제57조	1994.03.30	어촌 및 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연구, 관광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한라시그마벨리 12층	www.fipa.or.kr
한국언론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2010.02.01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읽기문화 확산 및 신문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www.kpf.or.kr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7.09.07	에너지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성과 확산 등을 통해 국가 성장동력 창출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52	www.kier.re.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법」 제13조	2009.05.04	에너지기술개발 및 에너지기술 혁신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국가에너지 공급구조 실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www.ketep.re.kr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산업통상자원부	「민법」 제32조	1992.03.25	원자력, 신재생, 석탄, LNG 등 전력사업 및 에너지와 관련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의 보급 확산을 통하여 국민의 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에너지문화를 진흥시킴으로써 사회의 공익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418	www.keia.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육성재단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2013.01.04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활성화 및 제도·환경 개선을 통해 우수 여성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활용하여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2관 6층	www.wiset.or.kr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	2019.12.19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예방·방 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등 우리 사회의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제반 활동을 통해 성 평등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보호되는 사회실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 3층	www.stop.or.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3.04.21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의 성평 등 정책 수립과 국민 행복의 향상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	www.kwdi.re.kr
한국영상자료원	문화체육 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1974.01.18.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음 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예술적·역사적·교 육적인 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www.koreafilm.or. kr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체육 관광부	「예술인 복지법」 제8조	2012.11.19	재단은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 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 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 2층	www.kawf.kr
한국원산지정보원 * 구(재)국제원산지정보원	관세청	「관세법」 제233조의2	2010.01.22	「관세법」, 「FTA관세법」 및 조약·협정 등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과 활용 및 검증 지원 등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www.origin.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제6조	2006.06.30	원자력통제 전문기관으로서 원자력 활동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통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418	www.kinac.re.kr
한국원자력의학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	1963.12.17	방사선 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와 암 진료, 국가적인 방사선비상 진료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및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75	www.kiram.s.re.kr
(부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 3	2010.07.16	정부의 과학기술진흥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확대와 핵심연구기능의 지방분산 정책을 시행하고, 방사능 재난 시 현장 비상진료기능 및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길 40	www.dirams.re.kr
한국원자력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59.02.03	원자력의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학술의 진보, 에너지 확보 및 원자력의 이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111	www.kaeri.re.kr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	2012.11.06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에 관한 정책과 제도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연구사업 및 국제협력에 기획, 관리하여 원자력·방사선 안전기반 조성에 이바지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길 49	www.kofons.or.kr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료기기법」 제42조	2012.05.18	국내·외 신개발 의료기기 동향 및 임상정보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기술 지원 등으로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고 의료기기 안전관리 향상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마리오타워 305호	www.nids.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보건복지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2012.04.09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남대문로 5가) 서울시티타워 20층	www.k-medi.or.kr
한국약품안전관리원	식품의약품 안전처	「약사법」 제68조의3	2012.01.06	의약품 등으로 인한 부작용 및 품목허가정보·품목신고정보 등 의약품 등의 안전과 관련한 각종 정보의 수집·관리·분석·평가·제공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30 4~6층	www.drugsafe.or.kr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2012.01.26	산림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와 임산물의 생산·유통·정보제공 등을 통한 산림소득증대 및 산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www.kofpi.or.kr
한국잡월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2	2011.11.03	청소년 및 청년 등에게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직업선택 지원에 기여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501	www.koreajobworld.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	1989.04.28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평가 및 정책개발, 복지진흥, 자립지원 등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 복지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5층	www.koddi.or.kr
한국전력국제원자력 대학원대학교	산업통상 자원부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제30조	2011.09.19	전력 및 원자력산업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실무형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을 선도하여 세계적인 에너지변화 흐름에 앞장서며, 국제적 인적 네트워크를 육성하여 한국 원전의 해외수출에 이바지함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해맞이로 658-91	www.kings.ac.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재료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6.12.30	소재분야의 연구개발, 성과확산, 시험 평가, 기술지원 등을 통해 국가 소재 연구개발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 소재산업 발전 및 국가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함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97	www.kims.re.kr
한국재정정보원	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법」	2016.07.0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정책 개발을 지원함으 로써 국가재정 업무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재정정보화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남대문로 5가)	www.fis.kr
한국저작권보호원	문화체육 관광부	「저작권법」 제122조2	2016.09.30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사항 심 의, 저작권 침해실태조사 및 저작권보 호기술 연구 등의 수행을 통하여 저작 권산업 발전과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마포구월드컵북로 400 서울경제진흥원 4층, 9층, 10층	www.kcopa.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저작권법」 제112조	2009.07.23	저작권과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조정하며, 권리자의 권익증진 및 저작물 등의 공 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함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17	www.copyright.or. kr
한국전기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6.12.29	전력·전기 관련 연구개발,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가 전력·전기산업 발전예 기여함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로 10번길 12	www.keri.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1990.02.14	원자력의 생산 및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 보전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62	www.kins.re.kr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6.12.30	정보, 통신, 전자, 방송 및 관련 융합기술 분야의 핵심·미래기술의 연구개발, 성장동력 창출 및 성과확산을 통해 국가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www.etri.re.kr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	2018.09.21.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기업이 안전한 제품을 제조·유통하도록 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향로 16 양재 하이브랜드 17층	www.kips.kr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92.07.15	조세·재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재정·공공기관의 운영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www.kipf.re.kr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청	「발명진흥법」 제55조의2	2020.08.05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지원 사업을 통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www.koipa.re.kr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청	「발명진흥법」 제51조	2005.12.09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내외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세우고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동향 분석과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3, 9층	www.kiip.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48.09.13	국내외 육상·해저 지질조사, 지하자원 의 탐사·개발·활용, 지질재해 및 지구 환경변화 대응 연구개발 및 성과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4	www.kigam.re.kr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97.09.10	직업교육훈련정책 및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등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직업교육훈 련의 활성화 및 국민의 직업능력 향상 에 기여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반곡동)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www.krivet.re.kr
한국천문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4.09.13	천문우주과학의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여 천문우주 과학의 국가적 발전을 달성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776	www.kasi.re.kr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96.03.02	철도, 대중교통, 물류 등 공공교통 분 야의 연구개발 및 성과확산을 통해 국 가 및 산업계 발전에 기여함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월암동)	www.krri.re.kr
한국청소년상담복지 개발원	여성가족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2조	1993.02.15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을 통해 청소 년의 올바른 인격 형성과 조화로운 성 장을 목적으로 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센텀사이언스파크	www.kyci.or.k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9.06.17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잠재력 개발, 청소년의 디지털·글로벌 역량 강 화, 청소년 인권과 참여를 위한 사회 환경 개선, 소외계층 청소년 복지·지원 등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와 정책연구를 통하여, 미래사회의 새로운 국가발전 동력 창조에 기여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www.nypi.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	2010.08.18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진양빌딩 2, 5층	www.kywa.or.kr
한국체육산업개발(주)	문화체육관광부	「상법」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정관」 제55조	1990.07.25	88 서울올림픽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복합문화 및 스포츠·레저공간 제공으로 국민건강과 행복 증진, 다양한 수익사업 운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역도경기장	www.ksponco.or.kr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	2012.07.27	출판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출판문화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흥함으로써 국가 지식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	www.kpipa.or.kr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	2009.05.07	콘텐츠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도모하고, 콘텐츠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	www.kocca.kr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2021.03.0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육성·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탄소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에 이바지함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11	www.kcarbon.or.kr
한국투자공사	기획재정부	「한국투자공사법」	2005.07.01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 남산 15,17,18,19층	www.kic.kr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특허청	「민법」 제32조	2002.01.02	지식재산 심사행정을 종합지원하고, 지식재산 활용·확산을 선도하여 국가 산업 기술 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48(탄방동) 8층	www.kipro.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청	「발명진흥법」 제55조의5	2012.12.21	정부 및 민간의 연구개발 과정에 고도의 지식재산 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식재산 연계 사업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와 국가 발전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540 유안타증권빌딩 14층, 15층	www.kista.re.kr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청	「발명진흥법」 제20조의3	1995.07.07	산업계, 연구소, 학계 등에 국내·외 지식재산권 및 기술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정보화하고 보급함으로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 발전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37, 5층(둔산동, KDB빌딩)	www.kipi.or.kr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5.12.24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국가측정표 준 대표기관으로서 국가표준제도의 확 립 및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을 수행 하고, 그 성과를 보급함으로써 국가 경제발전과 과학기술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67	www.kriss.re.kr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육부	「민법」 제32조	1978.06.30	한국문화의 심층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한국학을 진흥하고, 나아가 미래 한국 의 좌표를 탐구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www.aks.ac.kr
한국한의학진흥원	보건복지부	「한의학육성법」 제13조	2019.06.12	한의학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하고 한의 약 기술 개발 및 산업진흥을 통해 국 민 건강증진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	경상북도 경산시 화랑로 94 (갑제동)	www.nikom.or.kr
한국한의학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94.08.06	한의학 이론 및 기술, 한의의료행위 등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확산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국민보건향상에 이바 지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www.kiom.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9.10.10	항공우주과학기술영역의 새로운 탐구, 기술선도,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국 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84	www.kari.re.kr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해양수산부	「항로표지법」 제41조	2018.07.18	항로표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항로표 지 관련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함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9 다올비즈니스센터 601호~603호	www.katon.or.kr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2012.07.01	해양과 해양수산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관리와 이용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함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85	www.kiost.ac.kr
(부설) 극지연구소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관」 제50조	2004.04.16	남·북극이 갖는 정치, 경제, 환경적 중 요성 증대에 따른 극지활동의 확대와 국제수준의 극지연구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26	www.kopri.re.kr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4조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관」 제46조	2013.10.28	선박해양플랜트 분야 원천기술 개발, 응용 및 실용화 연구 등 종합연구역량 확보를 통하여 국가 현안문제를 해결 하고,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창조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312번길 32	www.kriso.re.kr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97.04.18	해양, 수산, 해운, 항만 및 그와 관련된 물류 산업의 발전과 이와 관련된 제 부문의 과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연 구·개발하고, 각종 동향과 정보를 신속 히 수집·분석하여 이를 널리 보급·활 용하게 함으로써 국가발전 및 국민편 익 증진에 이바지함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www.kmi.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1998.01.01	해양수산 인력의 교육·기술훈련 등을 통한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 도모에 기여함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 (동삼동)	www.seaman.or.kr
한국해양조사협회	해양수산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2006.01.31	해양조사에 관한 기술·제도의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해양에 관한 자료의 수집·제공을 위함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70, 1305호 (호서대벤처타워)	www.khra.kr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2018.07.05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해운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의 해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 씨1동 7층 (우동, 해운대아이파크)	www.kobc.or.kr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국토교통부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2	2018.06.08	해외인프라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 발굴, 개발, 금융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살기 좋은 지구촌 건설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50층 (여의도동, Three IFC)	www.kindkorea.or.kr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2020.11.20.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www.kfe.re.kr
한국행정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91.09.27	행정체제의 발전과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정책 수립과 행정 분야 발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www.kipa.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9.03.16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그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이바지하며, 법무분야에 대한 실증적·종합적인 분석·연구를 통해 법무정책의 수립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www.kicj.re.kr
한국화학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6.09.02	화학 및 관련 융·복합 기술분야의 연구개발과 공공인프라 서비스를 통해 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www.kRICT.re.kr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화학연구원 정관」 제32조의2	2002.01.01	화학·바이오 등 각종 물질에 대한 안전성평가연구, 관련 기술개발, 산학연 지원 등을 통한 국가산업 발전 및 국민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www.kitox.re.kr
한국환경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93.01.29	환경과 관련된 정책 및 기술의 연구개발과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제고를 통하여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기여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B동 8층~11층	www.kei.re.kr
한식진흥원	농림축산 식품부	「한식진흥법」 제16조	2010.03.10	한식, 식문화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18	www.hansik.or.kr
한전MCS(주)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2019.03.25	전력 현장서비스 및 전력량계 연관사업 수행을 통한 전력산업 필수 지원역할 수행과 대국민 전기 관련 공공서비스 제고를 통해 국민의 효율적인 전기 사용에 기여함	전라남도 나주시 상야1길 7, 506호(빛가람동, 예가람타워)	www.kepcomcs.co.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1982.11.11	고품질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연료를 생산·공급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자립에 이바지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242(덕진동)	www.knfc.co.kr
항공안전기술원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법」	2013.04.19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항공 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시험·연구·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함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www.kiast.or.kr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	2005.11.16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의 기획·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및 해양수산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0 동원에프앤비빌딩 8~10층	www.kimst.re.kr
환경보전협회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	1978.10.06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교육·홍보 및 생태복원 등을 수행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켜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YD빌딩 4, 6, 8층	www.epa.or.kr

**부록 3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 현황(2023년 기준, 68개)<sup>269)270)</sup>**

**1 사회보험성 기금(6개)**

기금명	설치근거	설치연도	주무부처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법」 제78조	1995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
공무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법」 제76조	1960년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법」 제101조	1988년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군인연금기금	「군인연금법」 제47조	1960년	국방부	국방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3조의2	1974년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1항	2002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

269) 기획재정부, 『2023 기금현황』, 2023. 5. 18.을 참고하여 작성

270) 밑줄 친 기금은 공공기관이 직접 또는 위탁관리하는 기금으로 총 36개임

## ② 금융성 기금(8개)

기금명	설치근거	설치연도	주무부처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 제1조	1989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4조 제1항	1972년	금융위원회	농협중앙회	-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	1985년	금융위원회	-	한국은행
무역보험기금	「무역보험법」 제30조	1969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	1994년	기획재정부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1976년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	2003년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5조 및 제59조의2	1987년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

③ 사업성 기금(49개)

기금명	설치근거	설치연도	주무부처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	1992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1972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	1995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계정)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1972년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1972년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	한국도박문제예방 치유원
국유재산관리기금	「국유재산법」 제26조의2	2011년	기획재정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제교류기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3조	1991년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
국제질병퇴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3조	2017년	외교부	-	한국국제협력단
군인복지기금	「군인복지기금법」 제1조	1996년	국방부	국방부	-
근로복지진흥기금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	1993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금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2002년	환경부	금강수계관리위원회	-

기금명	설치근거	설치연도	주무부처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기후대응기금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	2022년	기획재정부	-	한국환경공단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2002년	환경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
남북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법」 제3조	1991년	통일부	-	한국수출입은행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1966년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어업재해보험기금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1조	2005년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장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	농협경제지주
농지관리기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	1981년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
대외경제협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3조	1986년	기획재정부	-	한국수출입은행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1973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보호기금법」 제3조	2010년	문화재청	문화재청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28조	2009년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기금명	설치근거	설치연도	주무부처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	2000년 <sup>271)</sup>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3조	2011년	법무부	법무부	-
보훈기금	「보훈기금법」 제1조 및 제3조	1981년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공탁법」 제28조	2016년	대법원	법원행정처	-
사학진흥기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	1989년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 촉진기금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7조의2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석면피해구제기금	「석면피해구제법」 제24조 제1항	2011년	환경부	환경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2015년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산발전기금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46조	1999년	해양수산부	-	수협중앙회 (수산발전기금 사무국)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1967년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	-

271) 2000년 1월 기금설치 이후 2011년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확대 개편

기금명	설치근거	설치연도	주무부처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제1항	1996년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
언론진흥기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
영산강·섬진강수계 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2002년	환경부	영산강·섬진강수계 관리위원회	-
영화발전기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원자력진흥법」 제17조	1996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원자력진흥법」 제17조	2016년	원자력안전위원회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응급의료기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	1994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
임금채권보장기금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	1998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의11	2016년	국토교통부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 기금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2004년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8조	1991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

기금명	설치근거	설치연도	주무부처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전력산업기반기금	「전기사업법」 제48조	2001년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
정보통신진흥기금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1조	1993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	1981년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1978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3조	2004년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기본법」 제53조	1989년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
축산발전기금	「축산법」 제43조	1974년	농림축산식품부	-	농협경제지주 (축산발전기금사무국)
한강수계관리기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1999년	환경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

#### 4 계정성 기금(5개)

기금명	설치근거	설치연도	주무부처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공공자금관리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	1994년	기획재정부	-	한국은행
공적자금상환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 제1항	2003년	금융위원회	-	한국은행
복권기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1조	2004년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양곡증권정리기금	「양곡관리법」 제25조	1994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
외국환평형기금	「외국환거래법」 제13조 제1항	1967년	기획재정부	-	한국은행

**부 록 4** 2022년도 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체계<sup>272)273)274)275)</sup>

① 공기업 유형의 지표 및 가중치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55)	1. 경영전략	9	8	1
	- 리더십	2	2	
	-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5	5	
	- 국민소통	2	1	1
	2. 사회적 책임	15	8.5	6.5
	-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5	3	2
	- 안전 및 재난관리	2	1	1
	- 친환경·탄소중립	1.5	1	0.5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4	2	2
	- 윤리경영	2.5	1.5	1
	3. 재무성과관리	20	3	17
	-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3 (1)	3 (1)	
	- 재무예산성과 (재정건전화계획) <sup>276)</sup> (일반관리비 관리)	11 (4) (3)		11 (4) (3)
	- 효율성 관리	6		6
	4.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4	4	
-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2	2		
- 노사관계	2	2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7	4	3	
- 보수 및 복리후생	4	4		
- 총인건비관리	3		3	
소 계	55	27.5	27.5	
주요사업 (45)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	45	21	24
	소 계	45	21	24
합 계		100	48.5	51.5
가점	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 가점	5	5	

272)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2022. 10.

273) 평가지표체계는 평가유형(공기업,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강소형)에 따라 평가지표와 지표별 가중치가 다르게 구성

274)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2. 7. 29.)에 따른 기관별 공공혁신계획 수립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기관에 가점을 부여

275) 재무예산관리지표 중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대한 평가는 「공운법」 제39조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에만 적용

276) 재무위험기관에만 적용

②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의 지표 및 가중치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45)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9	8	1
	- 리더십	2	2	
	-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5	5	
	- 국민소통	2	1	1
	2. 사회적 책임	12	5.5	6.5
	-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	1	2
	- 안전 및 재난관리	2	1	1
	- 친환경·탄소중립	1.5	1	0.5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1	2
	- 윤리경영	2.5	1.5	1
	3. 재무성과관리	13	2	11
	-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2 (1)	2 (1)	
	- 재무예산성과 (일반관리비 관리)	7 (3)		7 (3)
- 효율성 관리	4		4	
4.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4	4		
-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2	2		
- 노사관계	2	2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7	4	3	
- 보수 및 복리후생	4	4		
- 총인건비관리	3		3	
	소 계	45	23.5	21.5
주요사업 (55)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	55	24	31
	소 계	55	24	31
합 계		100	47.5	52.5
가점	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 가점	5	5	

③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의 지표 및 가중치 기준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45)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9	8	1
	- 리더십	2	2	
	-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5	5	
	- 국민소통	2	1	1
	2. 사회적 책임	12	5.5	6.5
	-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	1	2
	- 안전 및 재난관리	2	1	1
	- 친환경·탄소중립	1.5	1	0.5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1	2
	- 윤리경영	2.5	1.5	1
	3. 재무성과관리	18	3	15
	-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3 (1)	3 (1)	
	- 재무예산성과 (기금운용성과) <sup>277)</sup> (일반관리비 관리)	11 (6) (3)		11 (6) (3)
	- 효율성 관리	4		4
	4.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4	4	
-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2	2		
- 노사관계	2	2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7	4	3	
- 보수 및 복리후생	4	4		
- 총인건비관리	3		3	
	소 계	50	24.5	25.5
주요사업 (55)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	50	24	26
	소 계	50	24	26
합 계		100	48.5	51.5
가점	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 가점	5	5	

277) 「국가재정법」에 의한 평가 중 ‘기금운용평가’ 결과는 비계량·계량을 구분하지 않고 종합점수를 ‘기금운용 관리 및 성과’ 지표의 점수로 활용

## 연구총괄

- 변민정 (공공기관연구센터 공공정책부 정책사업팀장)

## 분야별 집필진

- 강석훈 (공공기관연구센터 공공정책부 정책사업팀 선임연구원)
- 강선희 (공공기관연구센터 공공정책부 공공정책2팀 연구원)
- 곽원욱 (재정성과평가센터 사회문화성과관리팀 연구원)
- 김달유 (공공기관연구센터 공공정책부 공공정책2팀 연구원)
- 남지현 (공공기관연구센터 공공정책부 정책사업팀 선임연구원)
- 송경호 (공공기관연구센터 선임연구원)
- 신우상 (공공기관연구센터 공공정책부 공공정책1팀 연구원)
- 오윤미 (공공기관연구센터 공공정책부 정책사업팀 선임연구원)
- 유승현 (공공기관연구센터 공공정책부 정책사업팀 선임연구원)
- 이부연 (공공기관연구센터 공공정책부 정책사업팀 연구원)
- 이 슬 (공공기관연구센터 공공정책부 정책사업팀 선임연구원)
- 허민영 (공공기관연구센터 경영평가부 경영컨설팅팀 선임연구원)

문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044-414-2306)

이 보고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s://www.kipf.re.kr/soe/>)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2023 공공기관 현황편람

---

---

발행일 : 2023. 11.

발행처 : 기획재정부

(044) 215-551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044) 414-2306

인쇄 : 일지사(044-865-6971)

---

---



**2023**  
**공공기관 현황편람**